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오욱찬

김수진·김현경·이원진·오다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책임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오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43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인 조 흥 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발|간|사

한 국가에서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려면 장애인이 누리고 있는 삶의 수준을 비장애인의 수준과 비교하게 된다. 장애인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삶의 수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 결국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확인하는 것이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진단하는 수단이 되고,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복합적이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삶의 수준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여러 삶의 영역 중 하나에서 발생한 박탈이 연쇄적으로 다른 박탈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컨대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되고 주거 불안정과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삶의 여러 차원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박탈 경험을 가지는 장애인에게 이러한 복합성은 더욱 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정책은 영역별로 분절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격차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이른바 ‘다중격차’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물론 단일 영역에서의 격차의 수준이나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주요 정책 영역, 즉 소득, 노동, 주거, 건강에서의 장애인-비장애인의 격차를 분석하고, 이 영역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격차를 다룬다.

이 연구의 구성과 각 장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소득 영역은 이원진 부연구위원, 노동 영역은 김현경 연구위원, 건강 영역은 김수진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주거 영역과 다차원 빈곤은 오욱찬 부연구위원과 오다은 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제1장 서론 (오욱찬)

제2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이원진)

제3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김현경)

제4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오욱찬)

제5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김수진)

제6장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오욱찬, 오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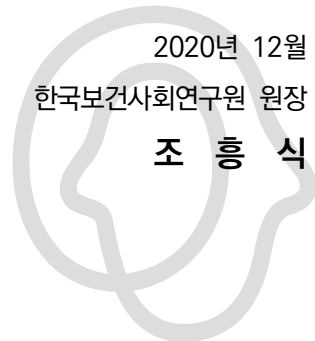
제7장 결론 및 제언 (오욱찬)

이 연구의 결과는 현 시대 한국 장애인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며,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분석 결과에 토대를 둔 정책 제안들이 향후 장애인이 삶에서 겪는 복합적 박탈을 해소하고 비장애인과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2
제3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25
제1절 소득 분야 격차 지표	27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의 실태와 변화	33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58
제4절 시사점	80
 제3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83
제1절 노동 분야 격차 지표	85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의 실태와 변화	91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분해	106
제4절 시사점	128
 제4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131
제1절 주거 분야 격차 지표	133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의 실태와 변화	145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분해	164
제4절 시사점	189
제5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193
제1절 건강 분야 격차 지표	195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의 실태와 변화	205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분해	220
제4절 시사점	267
제6장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273
제1절 다차원 빈곤의 차원 및 지표	275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280
제3절 다차원 빈곤의 지속과 이행	298
제4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 분해	309
제7장 결론 및 제언	32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323
제2절 정책 제언	330
제3절 연구의 한계	337
참고문헌	339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소득의 정의	29
〈표 2-2〉 소득 격차 지표의 선정	31
〈표 2-3〉 소득 격차 분해 모형	32
〈표 2-4〉 소득 원천별 평균	35
〈표 2-5〉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40
〈표 2-6〉 소득별 평균	46
〈표 2-7〉 가처분소득 빈곤	49
〈표 2-8〉 소득원천별 빈곤을 감소효과(빈곤선: 중위소득 50%)	52
〈표 2-9〉 소득원천별 빈곤을 감소효과(빈곤선: 중위소득 30%)	56
〈표 2-10〉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변화	59
〈표 2-11〉 소득 격차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60
〈표 2-12〉 로그 가처분소득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62
〈표 2-13〉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64
〈표 2-14〉 소득 격차 모형 기술통계(18~64세)	67
〈표 2-15〉 로그 가처분소득 모형 추정 결과(18~64세)	68
〈표 2-16〉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69
〈표 2-17〉 소득 격차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70
〈표 2-18〉 로그 가처분소득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71
〈표 2-19〉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72
〈표 2-20〉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74
〈표 2-21〉 빈곤을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75
〈표 2-22〉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64세)	76
〈표 2-23〉 빈곤을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77
〈표 2-24〉 빈곤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78
〈표 2-25〉 빈곤을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79
〈표 3-1〉 노동 격차 지표의 선정	87
〈표 3-2〉 노동 격차 분해 모형	90

〈표 3-3〉 경제활동 지표	92
〈표 3-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한 경제활동 지표	94
〈표 3-5〉 시간당 임금 및 저임금 비율	95
〈표 3-6〉 임금근로자 비율과 고용형태 분포	97
〈표 3-7〉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종사상 지위 분포	100
〈표 3-8〉 취업 안정성	101
〈표 3-9〉 시간제 근로 비율	102
〈표 3-10〉 사업장 규모 분포	104
〈표 3-11〉 사회보험 가입률	105
〈표 3-12〉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변화	107
〈표 3-13〉 고용률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109
〈표 3-14〉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110
〈표 3-15〉 고용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111
〈표 3-16〉 고용률 모형 기술통계(18~64세)	113
〈표 3-17〉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18~64세)	114
〈표 3-18〉 고용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115
〈표 3-19〉 고용률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116
〈표 3-20〉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117
〈표 3-21〉 고용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118
〈표 3-22〉 저임금 비율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121
〈표 3-23〉 저임금 비율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122
〈표 3-24〉 저임금 비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123
〈표 3-25〉 저임금 비율 모형 기술통계(18~64세)	125
〈표 3-26〉 저임금 비율 모형 추정 결과(18~64세)	126
〈표 3-27〉 저임금 비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128
〈표 4-1〉 주거 적절성의 개념	134
〈표 4-2〉 국내 연구에서의 주거 적절성 지표	135



〈표 4-3〉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최저주거기준)	137
〈표 4-4〉 주거 격차 지표의 선정	142
〈표 4-5〉 주거 격차 분해 모형	144
〈표 4-6〉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145
〈표 4-7〉 최저주거기준: 면적 및 방 개수 미달	148
〈표 4-8〉 가구원 수	149
〈표 4-9〉 최저주거기준: 필수 설비 기준 미달	150
〈표 4-10〉 최저주거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152
〈표 4-11〉 주택 유형: 아파트 거주 비율	154
〈표 4-12〉 주택 유형: 유형별 아파트 거주 비율	155
〈표 4-13〉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 및 주거비 과부담 비율	157
〈표 4-14〉 점유 형태: 자가 비율	159
〈표 4-15〉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결합	161
〈표 4-16〉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의 결합	163
〈표 4-17〉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변화(18세 이상)	165
〈표 4-18〉 최저주거기준 모형의 기술통계(18세 이상)	167
〈표 4-19〉 최저주거기준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168
〈표 4-20〉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170
〈표 4-21〉 최저주거기준 모형의 기술통계(18~64세)	172
〈표 4-22〉 최저주거기준 모형 추정 결과(18~64세)	173
〈표 4-23〉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174
〈표 4-24〉 최저주거기준 모형의 기술통계(65세 이상)	175
〈표 4-25〉 최저주거기준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176
〈표 4-2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177
〈표 4-27〉 주거비 과부담 모형의 기술통계(18세 이상)	179
〈표 4-28〉 주거비 과부담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180
〈표 4-29〉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182

〈표 4-30〉 주거비 과부담 모형의 기술통계(18~64세)	183
〈표 4-31〉 주거비 과부담 모형 추정 결과(18~64세)	184
〈표 4-32〉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185
〈표 4-33〉 주거비 과부담 모형의 기술통계(65세 이상)	186
〈표 4-34〉 주거비 과부담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187
〈표 4-35〉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189
〈표 5-1〉 건강 격차 지표의 선정	201
〈표 5-2〉 건강 격차 분해 모형	204
〈표 5-3〉 의료서비스 이용	207
〈표 5-4〉 건강검진 수진율	208
〈표 5-5〉 미충족 의료 경험	210
〈표 5-6〉 재난적 의료비 경험: 지불능력 대비 비율	213
〈표 5-7〉 재난적 의료비 경험: 소득 대비 비율	214
〈표 5-8〉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215
〈표 5-9〉 만성질환 보유	216
〈표 5-10〉 우울 점수 및 우울 증상 경험	217
〈표 5-11〉 자살 생각, 계획, 시도	219
〈표 5-12〉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변화	222
〈표 5-13〉 미충족 의료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224
〈표 5-14〉 미충족 의료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225
〈표 5-15〉 미충족 의료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226
〈표 5-16〉 미충족 의료 모형 기술통계(18~64세)	227
〈표 5-17〉 미충족 의료 모형 추정 결과(18~64세)	228
〈표 5-18〉 미충족 의료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229
〈표 5-19〉 미충족 의료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231
〈표 5-20〉 미충족 의료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232
〈표 5-21〉 미충족 의료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233



〈표 5-22〉 재난적 의료비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236
〈표 5-23〉 재난적 의료비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237
〈표 5-24〉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238
〈표 5-25〉 재난적 의료비 모형 기술통계(18~64세)	240
〈표 5-26〉 재난적 의료비 모형 추정 결과(18~64세)	241
〈표 5-27〉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242
〈표 5-28〉 재난적 의료비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243
〈표 5-29〉 재난적 의료비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244
〈표 5-30〉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245
〈표 5-31〉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247
〈표 5-32〉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248
〈표 5-33〉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249
〈표 5-34〉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기술통계(18~64세)	251
〈표 5-35〉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추정 결과(18~64세)	252
〈표 5-36〉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253
〈표 5-37〉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254
〈표 5-38〉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255
〈표 5-39〉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256
〈표 5-40〉 우울 증상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257
〈표 5-41〉 우울 증상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258
〈표 5-42〉 우울 증상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260
〈표 5-43〉 우울 증상 모형 기술통계(18~64세)	261
〈표 5-44〉 우울 증상 모형 추정 결과(18~64세)	262
〈표 5-45〉 우울 증상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263
〈표 5-46〉 우울 증상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265
〈표 5-47〉 우울 증상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266
〈표 5-48〉 우울 증상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267

〈표 6-1〉 선행연구의 다차원 빈곤 차원 구성	276
〈표 6-2〉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	277
〈표 6-3〉 차원별 박탈 비율	280
〈표 6-4〉 장애인-비장애인의 차원별 박탈 비율(전체)	281
〈표 6-5〉 장애인-비장애인의 차원별 박탈 비율(18~64세)	282
〈표 6-6〉 장애인-비장애인의 차원별 박탈 비율(65세 이상)	283
〈표 6-7〉 평균 박탈 개수	284
〈표 6-8〉 박탈 개수의 분포	286
〈표 6-9〉 소득 박탈과 다른 차원 박탈의 관계	286
〈표 6-10〉 차원 결핍 간 상관관계	287
〈표 6-11〉 차원빈곤선(k)별 다차원 빈곤율	288
〈표 6-12〉 차원빈곤선(k) 설정을 위한 통계적 근거	289
〈표 6-13〉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290
〈표 6-14〉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	293
〈표 6-15〉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	294
〈표 6-16〉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인구 하위 집단별 기여: 비장애인	296
〈표 6-17〉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인구 하위 집단별 기여: 장애인	297
〈표 6-18〉 다차원 빈곤의 경험 기간(2011~2018년)	298
〈표 6-19〉 집단별 다차원 빈곤의 경험 기간(2011~2018년)	299
〈표 6-20〉 장기 다차원 빈곤	300
〈표 6-21〉 집단별 장기 다차원 빈곤(2013~2018년)	302
〈표 6-22〉 다차원 빈곤의 이행	303
〈표 6-23〉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의 이행	304
〈표 6-24〉 다차원 빈곤 이행과 차원별 박탈 이행의 관계(2012~2018년)	306
〈표 6-25〉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 이행과 차원별 박탈 이행의 관계(2012~2018년)	307
〈표 6-26〉 집단별 다차원 빈곤의 이행(2012~2018년)	308
〈표 6-27〉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 변화(18세 이상)	309



〈표 6-28〉 다차원 빈곤 모형의 기술통계(18세 이상)	310
〈표 6-29〉 다차원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311
〈표 6-30〉 다차원 빈곤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312
〈표 6-31〉 다차원 빈곤 모형의 기술통계(18~64세)	314
〈표 6-32〉 다차원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64세)	315
〈표 6-33〉 다차원 빈곤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316
〈표 6-34〉 다차원 빈곤 모형의 기술통계(65세 이상)	317
〈표 6-35〉 다차원 빈곤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318
〈표 6-36〉 다차원 빈곤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319

그림 목차

[그림 2-1] 소득 원천별 평균	34
[그림 2-2]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42
[그림 2-3] 소득별 평균	45
[그림 2-4] 가처분소득 빈곤	50
[그림 2-5] 소득별 빈곤율(빈곤선: 중위소득 50%)	54
[그림 2-6] 소득별 빈곤율(빈곤선: 중위소득 30%)	55
[그림 3-1] 경제활동 지표	93
[그림 3-2] 저임금 비율의 비교: OECD 통계와 한국복지패널	96
[그림 3-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분포	98
[그림 4-1]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146
[그림 4-2]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과 주거비 과부담 비율	158
[그림 5-1]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196
[그림 5-2] 미충족 의료 경험	209
[그림 5-3] 재난적 의료비 경험	212
[그림 5-4]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215
[그림 5-5] 우울 점수 및 우울 증상 경험	218
[그림 6-1] 차원 박탈 평균 개수	285
[그림 6-2]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291
[그림 6-3] 장기 다차원 빈곤	301



Abstract

Multiple Disparities and Social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Project Head: Oh, Ukchan

This study explored the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PDWs and non-PWDs) in various policy dimensions in Korea. The analysis of this gap was conducted in the four policy areas with high social demands of PWDs; income, labor, housing, and health. In addition, education, assets, and social security were added to analyze multidimensional poverty consisting of seven dimensions.

The 7th~14th (2011~2018)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As an analysis method, Oaxaca-Blinder's decomposition method was used, which divides the gap into explained and unexplained gaps. Additionally, Alkire-Foster's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was us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lthough the labor income gap between PDWs and non-PWDs is gradually widening, public transfer income ha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narrowing the gap. As a result of decomposing the income gap, characteristics effects accounted for about 60% of the gap, and about 54% of the gap in poverty rates. The gap in the 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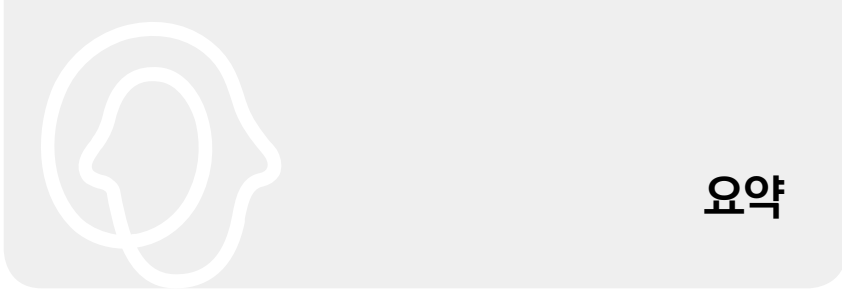
2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ployment rate between PDWs and non-PWDs has recently increased, while the gap in the low-wage rate is gradually decreasing. A large part of the labor gap is represented by coefficients effects, therefore the problem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ppears to be serious. In the housing area, the gap in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the overburdened housing cost is gradually narrowing. The gap in unmet healthcare needs,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subjective health, and depression is also found to be large, and income levels explain a large part of the gap.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gap between PDWs and non-PWDs was also large. And the dura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PDWs was long and the rate of transition was low. Moreover, th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was deeply related to the transition of deprivation of health, labor and housing. In the decomposition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gap between PDWs and non-PWDs, a significant part of the gap was found to be coefficients effects that was explained by social structural caus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vidual responses in four areas of income, labor, housing, and health, and responses to complex structures in multiple dimensions were suggested to reduce the gap between PDWs and non-PWDs.

*Key words: persons with disabilities, multiple disparities, multidimensional poverty, inequality, capability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으로 제시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주목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제시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장애인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첩적·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존 연구와 정책은 단일 영역의 진단과 대응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다. 단일 차원에 대한 연구로는 정책 영역별 격차의 중첩과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첩적·복합적 격차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다중격차’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 그 수준과 변화, 그리고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정책 영역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4대 정책 영역은 소득, 노동, 주거, 건강으로 선정하였고, 다차원적 격차는 여기에 교육, 자산, 사회보장을 포함해 7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표본이 모두 포함된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7~14차(2011~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였고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Oaxaca-Blinder의 격차 분해법, 그리고 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네 개의 핵심 정책 영역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득 영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소득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그 격차를 완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었다.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급여보다는 일반 공공부조의 역할이 컸고, 65세 이상 장애인은 공적연금의 성숙에 따른 영향이 적었다. 빈곤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매우 컸으나 극빈층에서는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격차 분해 결과에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의 약 60%, 빈곤율 격차의 약 54%를 특성 효과가 차지했으며, 학력과 연령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노동의 양을 보여주는 고용률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크고 최근 증가한 반면, 노동의 질을 보여주는 저임금 비율은 격차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 노동 격차의 상당 부분은 양 집단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계수 효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성 효과에서는 건강상태, 연령, 학력의 영향이 컸다.

주거의 물리적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주거의 경제적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거비 과부담 비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는 그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격차 분해 결과에서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모두 크기가 작았으며, 특성 효

과에서는 가구원 수, 연령 등의 영향이 컸다.

건강 지표 중 미충족 의료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경제적 제약과 이동성 제약으로 인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매우 컸는데, 65세 이상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도 매우 높아 고령층의 격차가 오히려 작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의 영역인 우울 증상 비율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격차 분해 결과에서는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계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특성 효과에서는 소득 수준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다차원 빈곤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큰 격차가 확인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박탈 경험을 동시에 가지는 다차원 빈곤율이 높는데, 비장애인이 자산과 사회보장 박탈의 기여가 큰 반면 장애인은 건강 박탈의 기여가 컸다. 또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다차원 빈곤의 지속기간이 길며, 다차원 빈곤 진입률이 높고 이탈률은 낮았다. 장애인은 다차원 빈곤 상태에 진입할 경우 건강, 노동, 주거의 박탈 진입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반대로 다차원 빈곤에서 이탈할 때에도 건강, 노동, 주거의 박탈 이탈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 세 차원의 연관성이 높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 분해에서는 상당 부분의 격차가 사회구조적 원인으로 설명되는 계수 효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노동, 주거, 건강 네 영역에서의 개별적 대응과 여러 영역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우선 소득 영역에서는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급여 강화의 필요성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장애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점진적인 개편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노동 영역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주거 영역에서는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집중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의료접근성 강화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실효적이며 구체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차원 빈곤 분석에 따른 정책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노동-주거의 연쇄적인 박탈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여러 정책 영역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기획과 집행에서 부처 간 연계의 구조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선 전달체계에서는 장애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 전달체계 내에 장애인이 중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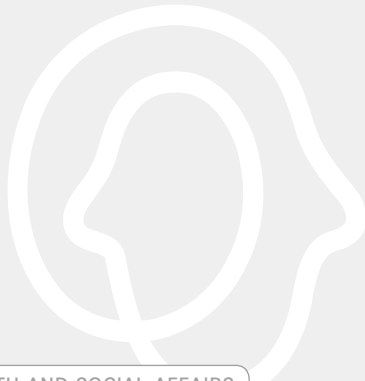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요 용어:** 장애인, 다중격차, 다차원 빈곤, 불평등, 실현능력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주목한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UN)의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장애인이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고 완전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 2006). 이 때 장애인의 불완전한 권리 향유와 사회참여 수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비장애인과 ‘격차’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의 완전한 시민권의 획득 및 사회참여를 달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서 향후 5년간의 장애인정책 비전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총괄 정책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관계부처합동, 2018).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사업의 목표량을 제시했던 과거의 종합계획과 달리, 건강, 문화, 소득,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정책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총괄 지표를 제시하고, 비교 가능한 전체 국민의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영역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문제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이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그러한 격차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서는 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의 지위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첩적·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물론 정책 또한 단일 영역의 진단과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 단일 차원의 정책영역에 대한 연구로는 정책영역별 격차의 중첩과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첩적·복합적 격차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중격차’ 또는 ‘다중적 불평등’은 단지 사회경제적 격차가 다차원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 격차 차원 간의 상호작용과 체계적 연관성, 각 격차 기제의 상대적 자율성과 고유한 제도적 진화 경로, 그리고 격차에 관련된 주체 위치와 정체성의 교차성을 압축하는 개념이다(신진욱, 정세은, 장지연, 2016, p. 81). 불평등의 다차원적 병존을 넘어 다차원적 불평등의 체계적 중첩 구조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차원적 빈곤’(multidimensional poverty) 혹은 ‘다차원적 불평등’(multidimensional inequality)과 ‘다중격차’의 개념을 차별화하여 제시하기도 한다(황규성, 2016). 특히 격차 혹은 불평등의 중첩 및 다차원성이 체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고유한 작동방식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황규성, 2016, p. 20), 그러한 상호작용의 구조를 규명해야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 단일 영역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과 달리 다중격차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의 대응은 핵심 격차에 집중하는 대응, 다중격차의 응축 지대에 대한 대응, 다중격차의 고도복잡성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신진욱 외, 2016, pp. 93-100).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타 소수 집단과 주류 집단 사이의 격차와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그 심각성이 높다는 점에 더해, 그리

한 격차의 중복성, 응축성, 복잡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다중격차 관점의 접근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장애가 가지는 ‘손상’, 그리고 ‘차별’이라는 특수성에 크게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소수 집단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사회경제적 수준이 주류 집단에 비해 낮을 수 있는데, 장애인은 여기에 더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이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유발하는 제약으로 인해 비장애인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한국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정책 영역에서 나타나는 장애인-비장애인 격차의 수준, 변화,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정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주요 정책 영역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분석한다. 이 때 정책 영역은 소득, 노동,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이다. 소득보장 41.0%, 의료보장 및 건강관리 33.6%, 고용보장 9.2%, 주거보장 5.1%의 순이었다(김성희 외, 2017a, p. 460). 일부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다룬 자산과 지출(소비)은 별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고 위의 네 가지 영역 내에 일부 지표로 포함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 영역에 대해 우선 해당 영역에서의 삶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선정한다. 각 영역별로 핵심 지표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는 이 보고서의 2~5장에서 1절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지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준이 어떠한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또한 격차 분해 방법(decomposition method)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탐색하고, 핵심 격차에 집중하는 대응으로서의 사회적

책의 대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다차원 빈곤 개념에 입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중격차를 분석한다. 우선 다차원 빈곤을 구성하는 차원은 전통적인 소득 빈곤을 포함하여 경제적, 비경제적 박탈 상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으로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핵심 정책 영역으로 선정한 소득, 노동,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영역 외에도 교육, 자산, 사회보장의 영역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일곱 가지 차원과 각 차원을 구성하는 지표는 선행연구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이 보고서의 6장 1절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각 차원에서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박탈 수준과 변화를 탐색하고, 각 차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 빈곤 상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빈곤 지수를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수준을 비교한다. 이러한 다차원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을 차원별, 인구 하위 집단별로 분해하여 그 원인을 탐색한다. 또한 다차원 빈곤의 지속(duration)과 이행(transition) 실태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한다. 이와 함께 다차원 빈곤 측정치에 격차 분해 방법을 적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주요 정책 영역별로 세부적인 격차 분석과 함께, 여러 정책 영역을 종합한 다차원 빈곤 분석을 통해 장애인 다중격차의 수준과 변화,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과 함께 그러한 다중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Sen(1980, 1985)이 불평등의 다차원성과 실현능력(capability) 개념을 제기한 이후, 소득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차원적 빈곤 혹은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국내외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김문길 외, 2017; 백승주, 금현섭, 2013; 서병수, 권종희, 2013;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정준호, 전병유, 2016; 최균, 서병수, 권종희, 2011; Alkire & Foster, 2011; Araar, 2009). 또한 서로 다른 두 차원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무수히 수행되었으며, 다차원적 빈곤이나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차원 간의 관계나 집단별, 차원별 기여도를 평가하는 연구(백승주, 금현섭, 2013; 서병수, 권종희, 2013;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최균 외, 2011; Jung, Kim, & Ahn, 2014)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중격차 혹은 다중적 불평등의 고유한 작동구조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며(황규성, 2016), 이는 장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장애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건강, 소득, 노동, 주거, 교육 등 개별 사회정책 영역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에 주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소득 영역에서는 이선우(2009), 김태완(2010), 조운화(2014) 등의 연구가, 노동 영역에서는 어수봉(1996), 유동철(2000), 황수경(2003), 강동욱(2004), 오욱찬(2011, 2013) 등의 연구가, 건강 영역에서 이한나(2012), 유창민(2016), 유동철(2016), 김유진, 김경미, 유동철(2017), 최민혁, 김아름, 윤태호(2018a), 최민혁, 황인경, 윤태호(2018b)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소득, 노동, 건강 영역을 제외한 타 사회정책 영역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연구는 비교적 적은데, 주거 영역의 이선우(2010), 교육 영역의 남찬섭(2009) 등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다중격차, 혹은 다차원적 빈곤이나 불평등과 다소 차별화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분야에서도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빈곤과 달리 사회경제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정치, 문화, 심리의

측면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동태적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동기, 이웅, 2012). 특히 대부분의 연구는 주관적 응답에 의한 사회적 배제 척도를 개발하고, 측정 결과와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이다(김경미, 김동기, 유동철, 신유리, 2013; 유동철, 김동기, 김경미, 2016; 유동철, 홍현정, 김경미, 김동기, 신유리, 2013; Kim, Kim, & Yoo, 2016). 예외적으로 배화옥, 김유경(2009)이 사회경제적 영역 중심의 객관적인 지표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였지만, 그 수준과 소득 빈곤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쳤다. 국외 연구로 드물게 다차원적 빈곤 개념에 입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격차를 분석한 연구(Mitra, Posarac, & Vick, 2013)가 있지만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국에 큰 시사점을 주기는 어렵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개별 정책 영역에서 다루어져왔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간의 다차원적 빈곤 연구가 빈곤의 다차원적 병존을 밝히는데 그쳐왔던 한계를 인식하고, 다차원적 빈곤의 체계적 중첩 구조에 주목하여 다중격차의 개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의 다중격차 실태를 밝히는 것을 넘어 다중격차의 특성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사회정책적 대응방안의 제시를 시도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 전반적인 분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 관점에서 이루어지므로 분석 자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표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은 물론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동시에 필요하다. 정책 영역별 분석에서는 별도의 특화 자료 사용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지만(예: 소득 영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건강 영역의 한국의료패널), 이는 다양한 영역 사이의 비교나 통합적인 분석을 어렵게 한다.

현재 이러한 조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이라 할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시작되어 측정 기간이 길고, 장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 노동, 주거, 건강, 소비, 자산,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하고 있어 장애인 표본이 비교적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다만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에서 신규 패널이 추가되어, 시계열 추세의 안정적 산출을 위하여 7~14차(조사 기준연도 2011~2018년)로 분석대상을 제한한다. 각 정책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2011~2018년에 나타나는 변화를 연도별로 모두 제시하였다. 다만 격차 분해에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횡단적인 격차를 분해하는데, 특정 연도의 값이 안정적이지 않아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격차 분해에서 한 개 연도의 장애인 표본 수가 많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분석 초기인 2011~2013년과 후기인 2016~2018년 자료를 결합(pooling)하여 두 시점에서의 격차를 분해하였다.

이 연구에서 모든 분석은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고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면 하위 집단을 구분하여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로는 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하위 집단 표본이 확보되지 않아 연령 집단(18~64세, 65세 이상)을 주된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은 18세 이상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18~64세는 ‘근로연령층’, 65세 이상은 ‘고령층’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모든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개인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 Oaxaca-Blinder 분해법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책 영역별 격차를 Oaxaca-Blinder의 방법을 적용하여 분해한다(Blinder, 1973; Oaxaca, 1973). 분해 방법은 크게 평균 격차 분해법과 분포(불평등)의 분해법으로 구분되나, 장애인 내부의 불평등도나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장애인 집단의 영향은 전체 인구에서 장애인 집단이 차지하는 규모를 고려할 때 함의가 크지 않으므로 이 연구는 비장애인과와의 평균 격차 비교에 초점을 둔다.

Oaxaca-Blinder 분해법의 목적은 양 집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크게 특성 효과(characteristics effects)와 계수 효과(coefficients effects)로 분해하는 것이다. 특성 효과는 구성 효과(composition effects) 혹은 설명된 격차(explained gap)로도 불리며, 계수 효과는 구조 효과(structure effects) 혹은 설명되지 않은 격차(unexplained gap)로도 불린다. 또한 계수 효과는 개인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차별(discrimination)로 의미 부여가 되기도 한다(Blinder, 1973). 이 연구에서는 각각을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칭한다.

Oaxaca-Blinder 분해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 격차를 분해할 때, 비장애인의 임금 함수는

$Y_i^N = \beta^N X_i^N + e_i$, 장애인의 임금 함수는 $Y_i^D = \beta^D X_i^D + e_i$ 라고 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임금 격차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overline{Y^N} - \overline{Y^D} &= \beta^N \overline{X^N} - \beta^D \overline{X^D} \\ &= \beta^* (\overline{X^N} - \overline{X^D}) + [(\beta^N - \beta^*) \overline{X^N} + (\beta^* - \beta^D) \overline{X^D}]\end{aligned}$$

이 때 오른쪽 변에서 첫 번째 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성 효과’, 두 번째 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계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수 효과’이다. 이 때 β^* 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혹은 기타 다양한 이유로 임금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조적 차이를 유발하는 배경이 없었더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졌어야 할 계수이다. 이에 따라 계수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부분($(\beta^N - \beta^*) \overline{X^N}$)은 비장애인이 β^* 보다 높은 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특혜 (premium or advantage)로 해석되고, 두 번째 부분($(\beta^* - \beta^D) \overline{X^D}$)은 장애인이 β^* 보다 낮은 계수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일종의 불이익 (penalty or disadvantage)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Oaxaca-Blinder 분해법에서는 계수 효과가 전혀 없을 경우의 상황인 β^* , 이른바 비차별 구조(nondiscriminatory structure) 또는 가상적 구조(counterfactual structure)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β^* 에 대한 가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β^* 에 대한 가정에는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β^* 를 비장애인의 계수인 β^N 이나 장애인의 계수인 β^D 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다. β^N 을 이러한 준거 계수(reference co-

efficient)로 설정한다면 계수 효과는 모두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으로만 구성된다는 의미이고, β^D 를 준거 계수로 설정한다면 계수 효과는 모두 비장애인에 대한 특혜로만 구성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β^* 를 β^N 과 β^D 의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법(Reimers, 1983), 표본에서 양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용하여 β^N 과 β^D 의 가중 평균으로 사용하는 방법(Cotton, 1988), 양 집단을 모두 포함하여 동일한 모형을 추정했을 때 산출되는 계수로 설정하는 방법(Jann, 2008; Neumark, 1988; Oaxaca & Ransom, 1994) 등이 제시되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분해에 Oaxaca-Blinder의 방법을 적용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준거 계수를 비장애인의 계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또한 그러한 기준을 따랐다(Baldwin & Johnson, 1994, 1995; Kidd, Sloane, & Ferko, 2000).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비장애인이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eta^* = \beta^N$ 으로 설정한다면 앞의 분해 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된다. 이때 가상적 상황은 $\beta^N \overline{X^D}$ 이 되는데 장애인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구조적 요인이 해소된다면, 혹은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면 양 집단이 동일하게 받을 임금이 된다.

$$\overline{Y^N} - \overline{Y^D} = \beta^N(\overline{X^N} - \overline{X^D}) + (\beta^N - \beta^D)\overline{X^D}$$

Oaxaca-Blinder 분해법은 양 집단의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하며 추정 모형에 특성 변수가 하나만 고려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각 특성 변수별로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에 대한 기여가 산출된다. 이렇게 격차의 세부

분해(detailed decomposition)가 가능하다는 것은 Oaxaca-Blinder 분해법의 장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히 계수 효과에 대한 세부 분해는 특성 변수의 형태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다. 특히 특성 변수가 절대영점을 포함하는 비율척도(ratio scale)가 아닐 경우 변수의 단위에 따라, 그리고 범주형 변수에서 기준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따라 계수 효과의 세부 분해 결과가 달라진다(Fortin, Lemieux, & Firpo, 2010, pp. 39-43). 범주형 변수에서 기준 범주 설정의 문제는 Gardeazabal and Ugidos(2004)와 Yun(2005)이 기준 범주를 차례로 바꿨을 때 산출되는 지표별 회귀계수를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애초의 범주 설정에 민감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부 분해는 실시하되, 계수 효과는 제외하고 특성 효과에 대한 세부 분해 결과만을 제시한다.

Oaxaca-Blinder 분해법에서 또 하나의 이슈는 비선형(nonlinear) 모형을 바탕으로 한 격차 분해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격차 분해의 대상이 되는 종속변수 중에 이항(binary) 변수가 많다. 비선형 모형에서는 선형 모형과 달리 $\bar{Y} = F(\beta\bar{X})$ 가 성립하지 않아 앞의 분해 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특성의 대푯값인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개인 사례의 예측 확률을 구하여 총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하다(Fairlie, 2005). 하지만 비선형 모형의 세부 분해에는 선형 모형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선형 모형에서 세부 분해는 Yun(2004)이나 Fairlie(2005)가 제안한 방법이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표준화된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속변수가 이항 변수인 경우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적용한다.

이 연구에서 다수의 격차 분해 지표는 장애인의 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부정적 지표(예: 빈곤, 저임금, 최저주거기준 미달, 의료비 과부담 등)이다. 이때 격차는 장애인의 값에서 비장애인의 값을 빼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양의 격차는 장애인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음의 격차는 장애인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3. Alkire-Foster 다차원 빈곤 지수

소득 빈곤의 차원을 넘어 비경제적 차원까지 포함한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중 Alkire and Foster(2011)가 제안한 다차원 빈곤 지수는 빈곤 지수가 갖추어야 할 여러 공리(axiom)를 충족하여 다양한 국가에서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Alkire and Foster(2011)가 제안한 방식은 차원 내에서의 박탈 경계선과 함께 여러 차원 사이에서의 빈곤 경계선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중 경계선 방식(dual cutoff method)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차원에서의 빈곤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차원에서 박탈 상태인 사람을 다차원 빈자로 구분하는 합집합 방식(union approach)이나 모든 차원에서 박탈 상태인 사람을 다차원 빈자로 구분하는 교집합 방식(intersection approach)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왔는데, Alkire and Foster(2011)는 박탈 차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는 집계 방식(counting approach)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다차원 빈곤의 경계선을 정하는 단일한 원칙은 제시된 바 없다. 다만 차원 내에서의 박탈이 매우 심각한 상태를 측정하는 것일 때 차원 경계선은 낮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Alkire & Foster, 2011, p. 483). 결국은 정책 목표나 규범에 의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차원 수의 40%

라는 기준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Mitra et al., 2013). 다만 빈자와 비빈자 집단 간 차이를 최대화하고 집단 내 차이를 최소화하는 차원 빈곤선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하에 통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빈곤 측정 영역인 소득과의 관련성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다차원 빈곤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산분석(ANOVA)을 했을 때 가장 높은 F 값이 나오는 경우, 혹은 다차원 빈곤을 종속변수로 하고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을 때 가장 높은 모형 카이제곱이 나오는 경우를 차원 빈곤선으로 삼는 것이다(Gordon, 2006, p. 66).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박탈 개수를 종속변수로, 다차원 빈곤을 독립변수로 한 분산분석(ANOVA)에서 가장 높은 F 값이 나오는 경우를 차원 빈곤선의 기준으로 선택한 연구가 있다(김경혜, 김준현, 박은철, 2010).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통계적 기준에 따라 차원 빈곤선을 설정한다.

Alkire and Foster(2011)가 제안한 빈곤 지수의 개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차원의 수가 d 개, 개인의 박탈 차원 수를 $c_i(0 \leq c_i \leq d)$, 차원 빈곤선을 k 이상으로 설정하면 다차원 빈곤율(headcount ratio) H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 때 n 은 전체 인구 수, $q(k)$ 는 $c_i \geq k$ 인 다차원 빈자의 수이다. 즉 다차원 빈곤율은 일반적인 빈곤율 지수와 같이 전체 인구에서 다차원 빈자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H = q(k)/n$$

그런데 이러한 다차원 빈곤율은 다차원 빈자가 다른 차원에서 추가적인 결핍을 경험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의 빈자가 새로운 차원에서 추가적인 결핍을 경험할 때 빈곤 수준도 증가해야 한다는 이른바

‘차원 단조성’(dimensional monotonicity) 공리를 충족하지 않는다(Alkire & Foster, 2011, p. 479). 이를 위해 Alkire and Foster(2011)는 다차원 빈곤율 H 에 박탈 경험의 너비(breadth)를 반영하였다. 어떤 다차원 빈자가 경험 가능한 전체 박탈 차원의 수 대비 실제 경험한 박탈 차원의 수의 비(ratio)를 $c_i(k)/d$ 라 하면, 이 값에 대한 전체 다차원 빈자의 평균을 ‘평균 박탈비’(average deprivation share) A 라 할 수 있다(Alkire & Foster, 2011). 이러한 평균 박탈비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차원 빈자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원별 박탈 총 개수 대비 실제 다차원 빈자가 경험하고 있는 차원별 박탈 총 개수의 비로 계산된다.

$$A = \sum_{i=1}^q c_i(k)/(q(k)*d)$$

다차원 빈곤의 출현율을 의미하는 H 와 다차원 빈자의 평균 박탈 정도를 의미하는 A 를 모두 반영한 다차원 빈곤율은 ‘조정 다차원 빈곤율’(adjusted headcount ratio)이라 부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Alkire & Foster, 2011). 즉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는 전체 인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박탈 차원의 개수에서 다차원 빈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박탈 차원의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M_0 = HA = \sum_{i=1}^q c_i(k)/(nd)$$

이러한 조정 다차원 빈곤 지수 M_0 는 빈곤 지수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공리인 분해 가능성(decomposability)이 확보된다(Alkire & Santos,

2013, p. 245). 즉 조정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인구 하위 집단별, 차원별 분해가 가능한 것이다. 우선 앞서 제시한 조정 다차원 빈곤 지수 M_0 를 전체 인구 n 에 대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¹⁾

$$M_0 = \frac{1}{nd} \sum_{i=1}^n \sum_{j=1}^d c_{ij}(k)$$

이 식을 바탕으로 인구 집단별 분해가 가능한데, 모든 개인이 동일하게 $1/n$ 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간단히 계산된다. 인구 하위 집단 I 가 있을 때, 전체 인구에서 I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에 I 집단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을 곱하면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대한 기여가 된다(Alkire & Santos, 2013, p. 245). 또한 각 하위 집단의 기여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인구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된다.

$$C_I = (n_I/n)M_0^I$$

차원별 분해 역시 가능하다.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는 다차원 빈자의 모든 차원별 박탈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다차원 빈자를 차원별 박탈 상태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서 J 차원의 기여는 전체 인구에서 J 차원에 박탈 상태인 다차원 빈자의 비율을 차원 개수 d 로 나눈 것과 같다. 이러한 차원별 기여를 모두 더하면 전체 인구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와 같다. 전체 인구에서 해당 차원에 박탈 상태인 다차원 빈자의 비율을 H_j 라 할 경우 전체 인구의 조

1) 이때 다차원 빈자가 아닌 자의 $c_{ij}(k)$ 는 0으로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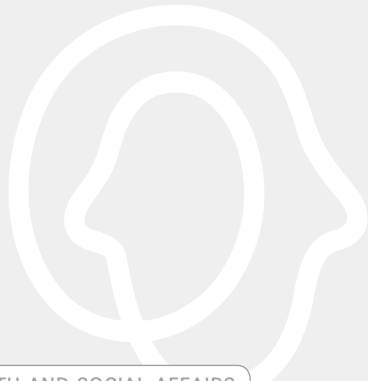
정 다차원 빈곤율 M_0 은 차원별 H_j 의 평균이 되는 것이다(Alkire & Foster, 2011, p. 484).

$$C_j = \left(\frac{1}{n} \sum_{i=1}^n c_{ij}(k) \right) / d = H_j / d$$

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에서는 차원별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다. 차원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둔다는 것은 상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항상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차원에 동일하게 1의 가중치를 부여한 셈인데, 차원별 동일 가중치는 다차원 빈곤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각 차원이 상대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선택되었다면 이러한 가중치 부여가 정당화될 수 있다(Alkire & Foster, 2011, p. 479).

Alkire & Foster(2011)는 다차원 빈곤의 규모와 너비를 반영한 조정 다차원 빈곤 지수 M_0 에 더해, 차원별 박탈의 깊이(depth)까지 반영하는 다차원 빈곤 지수까지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각 차원별 박탈 상태는 소득 빈곤과 같이 모두 연속적 분포를 가진 지표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탈의 깊이를 반영한 다차원 빈곤 지수로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Alkire and Foster(2011)가 제시한 다차원 빈곤율 H 와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인구 하위 집단별, 차원별 분해도 적용하였다.



제2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제1절 소득 분야 격차 지표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의 실태와 변화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제4절 시사점

제2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제1절 소득 분야 격차 지표

1. 소득 및 빈곤의 정의

이 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살펴본다. 한국에서 비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김태완, 2010; 유완식, 2007; 윤상용, 김태완, 2009; 이선우, 2009),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집단 내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하였다(조윤화, 2014).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2011~2018년의 최근 추이를 분석한다.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2018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등 최근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최근 십여 년간의 소득보장제도 변화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둘째, 근로연령층(18~64세)과 고령층(65세 이상)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경제활동 연령 인구나 은퇴 연령 인구의 소득 수준 및 구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같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 소득보장제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장

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적 이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한 분석의 필요성이 크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및 빈곤 격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의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소득 원천 관점에서 노동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개별 소득 원천의 실태와 영향을 살펴본다. 둘째, 집단 특성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차이가 집단 간 소득 및 빈곤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Oaxaca-Blinder 분해법을 활용하여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가구 구성 등과 같은 특성의 집단 간 차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요컨대, 이 장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및 빈곤 격차는 얼마나 큰가? 둘째,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소득 수준이 낮고 빈곤한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와 그 영향 요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가?

분석 방법에서 언급할 것은 이 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개인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분석을 개인가중치를 적용하여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가구 단위로 측정되지만 가구소득을 균등화하여 개인에게 할당한 소득을 개인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장은 이러한 접근을 따른다.²⁾ 단, 비장애인과 장애인

2) 다수의 선행연구는 장애인 가구와 비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는 접근을 따르지만(박혜원, 김원호, 2019; 유완식, 2007; 윤상용, 김태완, 2009; 이동영, 2017; 이선우, 2009; 이한나, 박단비, 2012), 이 연구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을 비교하는 접근을 따른 선행연구도 소수 존재한다(김태완, 2010; 조윤화, 2014).

이 동거하는 가구가 존재하므로 장애인의 균등화 가구소득에 비장애인의 노동소득이 포함될 수 있고, 비장애인의 균등화 가구소득에 장애인이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 소득의 정의

개인 노동소득	가구 노동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 총소득	가처분 소득
농림축산업·어업 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험료 (-)					

주: 개인 노동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 항목은 가구 단위로 조사되었음. 구체적인 소득 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음. 고용주·자영자 소득, 농림축산업 소득, 어업소득, 가처분소득의 음수는 0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 개인 노동소득³⁾: 가구원별로 조사된 근로자 소득, 고용주·자영자 소득, 기타 근로소득의 합
- 가구 노동소득: 개인 노동소득의 가구 내 합산액과 농림축산업·어업소득의 합
-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민간단체로부터의 보조금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고용보험 관련 급여, 산재보험 관련 급여, 장애 관련 급여,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2018년), 학비지원, 국가유공자 보조금,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2015년 이후), 급식비지원, 에너지 감면·보조, 통신비 감면·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기타 정부보조금
-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부동산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수집한 각종 소득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표 2-1〉과 같이 여러 소득 항목을 정의하였다. 우선 가구원별로 조사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개인 노동소득으로 정의하였다. 장

3) 개인 노동소득이 연간 십억 원(명목가격 기준)을 넘는 6개 인년(person-year) 사례 등 소수의 극단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분석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개인 노동소득이 존재하는 사례의 중위값의 10배로 개인 노동소득을 톱코딩(top coding) 하였다.

개인-비장애인 개인 노동소득 격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 등의 일자리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⁴⁾ 다음으로 개인 노동소득을 가구 내에서 합산하고 가구 단위로 조사된 농림축산업·어업 소득을 더하여 가구 노동소득으로 정의하였다. 개인 노동소득이 가구 노동소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가구 내 다른 경제활동 참여 가구원의 존재와 가구 규모 등의 가구 구성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구 노동소득에 재산소득을 합산하여 일차소득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 참여를 통해 획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일차소득에 부모, 자녀, 민간단체로부터의 보조금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시장소득으로 정의하였고, 추가적으로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경상총소득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총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을 최종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한다. 모든 소득 항목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여 분석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 노동소득은 개인 단위로 측정된 값이므로 비균등화 소득의 평균을 보고한다.

빈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한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와 30%로 설정하였다.⁵⁾ 빈곤율은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였다.⁶⁾

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체적인 경제활동 특성은 제3장에서 살펴본다. 이 장에서는 경제활동 특성에 따라 결정된 개인 노동소득을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5) 이 장에서는 18세 이상 개인을 분석하지만, 빈곤선은 18세 미만을 포함한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였다. 2011~2018년 중위 50% 기준 빈곤선은 연 1283만 원에서 1573만 원으로, 중위 30% 기준 빈곤선은 770만 원에서 944만 원으로 증가하였다(2018년 실질가격 기준).

6) 통계청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통계에서는 이를 ‘평균 빈곤갭’으로 부른다(통계청, 2020a, p. 10).

〈표 2-2〉 소득 격차 지표의 선정

구분	지표	측정	실태 분석	격차 분해
소득	소득 원천	개인 노동소득, 가구 노동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사회보험료	○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	○	×
	유형별 소득	가구 노동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총 소득, 가처분소득	○	×
	가처분소득	경상총소득 - 세금·사회보험료	○	○
빈곤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	○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30% 미만	○	×
빈곤갭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갭	(빈곤선 - 빈곤층 평균소득) / 빈곤선	○	×
	중위소득 30% 기준 빈곤갭	(빈곤선 - 빈곤층 평균소득) / 빈곤선	○	×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2. 소득 격차 분해 모형

가구의 소득이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등 가구 단위 특성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강병구, 강신욱, 윤명수, 2008; 구인회, 2005; 김환준, 2013). 중·고령층 장애인 가구의 빈곤 결정요인을 비장애인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한 박혜원, 김원호(2019) 역시 가구주의 성, 연령, 학력, 경제활동 상태, 배우자 유무와 지역 변수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구주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 특성을 설명변수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남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빈곤을 격차를 분석할 수도 있지만, 남성 개인과 여성 개인의 빈곤을 격차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구의 주된 생계부양자인 가구주의 특성이 가구의 소득과 빈곤을 더 잘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구주 지위는 가구 구성과 가구 내 경제활동-가사노동 분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반영된 결과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개인 특성보다 가구주 특성이 더 내생적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 가구주에게 장애가 발생하면 여성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가구주 지위를 대신하는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주 성별 차이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개인 성별 차이가 소득 및 빈곤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접근이 인과적 관점에서 더 분명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표 2-3〉 소득 격차 분해 모형

변수	측정	로그 가처분소득	중위 50% 기준 빈곤
성별	여성(ref.), 남성	○	○
연령	연속변수(만 나이)	○	○
연령 제곱	연속변수(연령×연령)	○	○
가구원 수	연속변수(명)	○	○
배우자	없음(ref.), 있음	○	○
학력	중졸 이하(ref.), 고졸, 전문대졸 이상(졸업 기준 최종학력)	○	○
경제활동	미취업(ref.), 취업	○	○
거주지역	대도시(ref.), 중소도시, 농어촌	○	○
연도	2011/2016(ref.), 2012/2017, 2013/2018	○	○

주: ref.는 기준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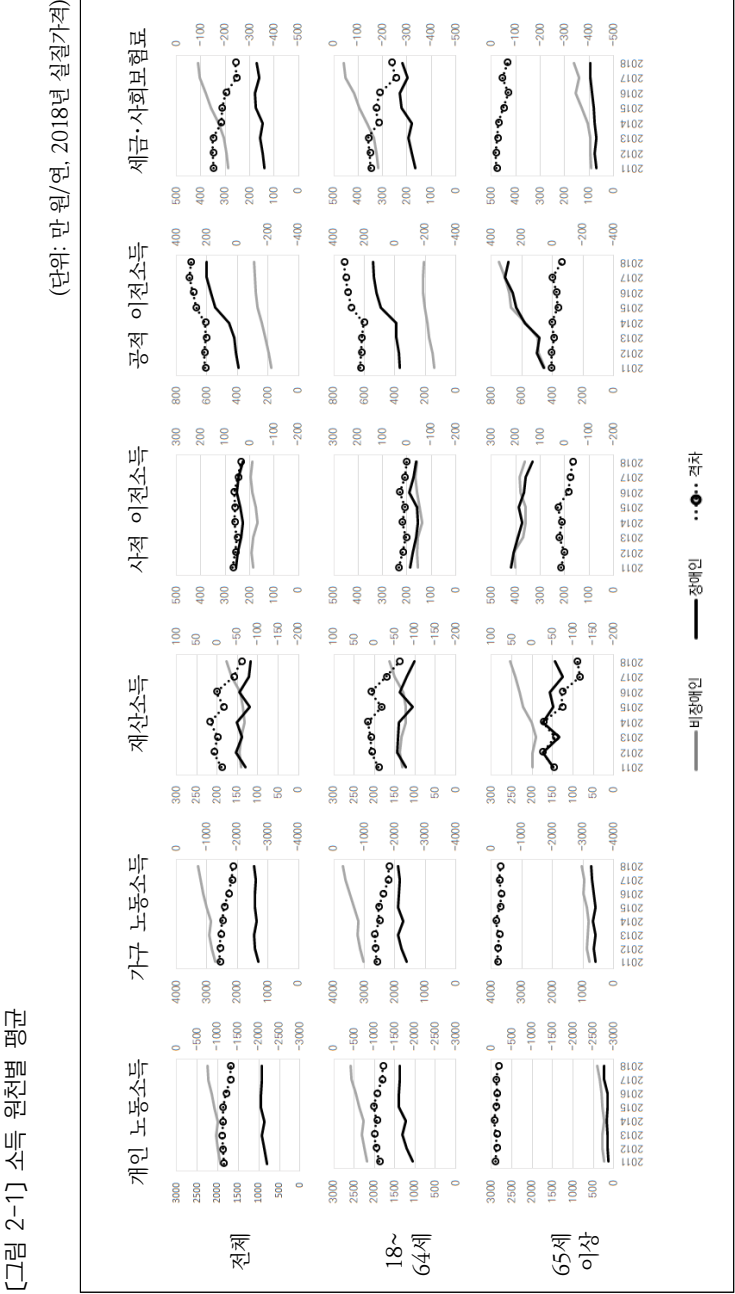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개인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경제활동 상태를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소득 모형과 빈곤 모형을 분석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홍백의, 김혜연(2007) 역시 개인의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노동형태를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빈곤 결정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그밖에 가구원 수, 거주지역, 연도 더미를 함께 모형에 투입한다.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의 실태와 변화

이하에서는 2011~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실태를 분석한다. 모든 분석 결과는 장애 유무, 연도, 연령 집단에 따라 세분하여 보고하였다. 이때 연령 집단별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라 연령 구성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근로연령대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각각의 소득 분포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고령자 비율 증가가 전체 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1~2018년 비장애인의 65세 이상 비율은 12.86%에서 15.25%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의 65세 이상 비율은 29.23%에서 38.44%로 증가하였다.

우선 [그림 2-1]과 <표 2-4>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개별 소득 원천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전체 집단의 개인 노동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2011~2018년 비장애인은 연 1936만 원에서 2245만 원으로, 장애인은 연 797만 원에서 934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증가량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연 1139만 원에서 1311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즉,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보다 월 100만 원 정도 낮고 이러한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연 980~1205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만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연 65~167만 원으로 훨씬 작았다.



주: 격차는 장애인 수지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음의 격차는 추세선이 하행할 때 격차가 커지는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4〉 소득 원천별 평균

(단위: 만 원/년, 2018년 실질가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개인 노동 소득	(A) 비장애인	1936	1992	2040	1995	2080	2152	2235	2245
		(B) 장애인	797	872	936	872	957	955	938	934
		(B)-(A)	-1139	-1120	-1104	-1123	-1123	-1197	-1297	-1311
	가구 노동 소득	(A) 비장애인	2742	2845	2918	2878	3003	3128	3223	3287
		(B) 장애인	1324	1429	1471	1371	1438	1430	1409	1448
		(B)-(A)	-1417	-1415	-1447	-1507	-1566	-1697	-1813	-1839
	재산 소득	(A) 비장애인	141	145	141	134	136	143	163	178
		(B) 장애인	130	154	140	151	121	145	123	119
		(B)-(A)	-11	9	-1	18	-16	2	-41	-59
	사적 이전 소득	(A) 비장애인	186	191	185	167	177	189	197	190
		(B) 장애인	256	250	237	229	238	253	245	226
		(B)-(A)	70	59	52	62	61	64	48	37
	공적 이전 소득	(A) 비장애인	180	194	216	241	271	280	288	294
		(B) 장애인	394	412	423	454	544	572	604	601
		(B)-(A)	214	218	207	214	273	292	316	307
	세금· 사회 보험료	(A) 비장애인	290	297	305	328	360	379	405	413
		(B) 장애인	139	148	156	146	174	178	160	172
		(B)-(A)	-151	-149	-149	-182	-185	-202	-246	-241
18~ 64세	개인 노동 소득	(A) 비장애인	2187	2242	2308	2269	2372	2458	2560	2578
		(B) 장애인	1068	1199	1318	1220	1392	1404	1369	1373
		(B)-(A)	-1120	-1043	-990	-1049	-980	-1054	-1191	-1205
	가구 노동 소득	(A) 비장애인	3028	3134	3229	3198	3344	3479	3611	3692
		(B) 장애인	1622	1777	1887	1714	1884	1863	1830	1890
		(B)-(A)	-1405	-1357	-1342	-1484	-1460	-1617	-1781	-1802
	재산 소득	(A) 비장애인	132	137	134	123	123	129	150	164
		(B) 장애인	123	144	143	140	105	138	122	102
		(B)-(A)	-10	7	9	16	-17	9	-28	-61
	사적 이전 소득	(A) 비장애인	154	160	157	137	148	158	165	159
		(B) 장애인	188	178	161	157	157	189	174	161
		(B)-(A)	34	18	4	20	10	31	10	2
	공적 이전 소득	(A) 비장애인	141	151	173	188	206	213	215	212
		(B) 장애인	368	372	391	391	492	522	537	544
		(B)-(A)	227	221	218	203	286	309	322	333
	세금· 사회 보험료	(A) 비장애인	319	326	336	362	396	416	451	458
		(B) 장애인	167	179	196	179	223	228	198	220
		(B)-(A)	-152	-147	-140	-183	-173	-188	-253	-238

36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5세 이상	개인 노동소득	(A) 비장애인	233	275	269	243	272	292	347	398
		(B) 장애인	141	146	145	178	153	160	232	231
		(B)-(A)	-92	-129	-124	-65	-119	-133	-115	-167
	가구 노동소득	(A) 비장애인	803	868	862	834	890	993	968	1037
		(B) 장애인	603	660	609	688	611	666	720	739
		(B)-(A)	-201	-208	-253	-146	-279	-327	-247	-298
	재산소득	(A) 비장애인	200	200	190	201	222	231	241	255
		(B) 장애인	148	174	134	174	149	158	124	144
		(B)-(A)	-52	-26	-56	-27	-73	-73	-116	-110
	사적 이전소득	(A) 비장애인	404	408	370	360	359	380	384	363
		(B) 장애인	421	411	393	373	388	366	362	331
		(B)-(A)	17	3	23	13	29	-14	-22	-32
	공적 이전소득	(A) 비장애인	450	493	496	575	672	686	711	750
		(B) 장애인	458	501	488	579	640	661	714	691
		(B)-(A)	7	8	-8	4	-33	-24	3	-59
	세금·사회보험료	(A) 비장애인	93	96	97	107	132	157	142	162
		(B) 장애인	71	78	73	78	83	88	98	97
		(B)-(A)	-22	-18	-25	-29	-49	-69	-44	-66

주: 개인 노동소득은 균등화하지 않은 소득, 나머지 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으로 가구 노동소득 평균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시간에 따른 증가량이 훨씬 컸기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2011년 연 1417만 원에서 2018년 연 1839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노동시장 외부의 공적 개입이 없다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연 1405만 원에서 1802만 원으로 확대된 반면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연 201만 원에서 298만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세금 및 사회보험료는 가구 노동소득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먼저 재산소득 평균을 분석한 결과 2011~2018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평균이 각각 연 134~178만 원, 연 119~154만 원으로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산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평균이 크게 나타나, 생애 과정에서 축적한 자산에 의존하는 재산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노후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 평균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반면 비장애인 평균이 최근 증가하여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확대되었다. 단, 재산소득의 규모가 크지 않고 시간에 따른 변동이 커서 추이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적 이전소득 평균을 살펴보면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집단 내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사적 이전소득을 많이 받는 고령층의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높기 때문에 전체 집단의 경우 장애인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이 비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사적 이전소득은 전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일정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장애인의 사적 이전소득 평균 감소량이 비장애인보다 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에 따른 사적 부양 약화에 따라 전반적인 사적 이전소득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 역시 점차 약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적 이전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특히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비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과 같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 분석 결과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근로연령층 분석 결과를 횡단적으로 살펴보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평

균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많은 공적 이전소득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는데, 특히 2014~2015년에 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평균이 연 391만 원에서 492만 원으로 약 100만 원이나 증가한 결과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연 203만 원에서 286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근로연령층 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표 2-5>와 [그림 2-2]에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근로연령층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을 더 많이 받고, 공적연금을 제외한 여러 항목 평균의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대체로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십여 년간의 소득보장제도 강화가 근로연령대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였음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2011~2018년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축소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기초보장급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급여 수준이 증가하였는데,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은 수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반면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기초보장급여 평균은 2014년 연 106만 원, 2015년 연 130만 원, 2016년 연 143만 원, 2017년 연 16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4년 7월에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급여 수준이 최대 월 20만 원으로 크게 인상되었고,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급여 수준 역시 동일하게 인상되었다. 이에 2013~2015년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장애 관련 급여 평균은 연 36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 평균은 연 13

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증가하였다.⁷⁾ 그밖에 2014~2015년에는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기타 공적 이전소득과 공적연금 평균이 각각 연 34만 원, 20만 원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변화가 누적된 결과 2014~2015년에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공적 이전소득 평균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고령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횡단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평균이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경력을 가진 비장애인이 노년기에 더 많은 공적연금을 받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 장애인이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을 받는 효과가 서로를 상쇄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공적 이전소득 평균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세부 항목 별로 살펴보면 고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증가의 원인이 상이하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비장애인은 2011~2018년 공적연금 평균이 연 305만 원에서 연 498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장애인은 2015년 이후 공적연금 평균이 약 연 300만 원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간에 따른 공적연금의 성숙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대신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기초(노령)연금, 장애 관련 급여, 기초보장급여, 기타 공적 이전소득과 같이 소득조사를 수반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3~2015년 급여 인상의 영향은 대체로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유사하였지만, 2018년 급여 인상의 영향

7) 65세 미만 장애인이 직접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는 없지만, 노인 배우자나 노인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 장애인이 조금 더 컸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2015~2018년 고령 장애인의 기초보장급여 평균이 연 55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증가하였지만 비장애인의 기초보장급여 평균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다시 <표 2-4>에서 마지막으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평균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러한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조세제도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표 2-5>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단위: 만 원/연, 2018년 실질가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공적 연금	(A) 비장애인	103	107	116	127	142	148	152	156
		(B) 장애인	144	160	160	173	194	189	195	186
		(B)-(A)	41	53	43	46	52	41	43	30
	기초 (노령) 연금	(A) 비장애인	15	15	15	23	32	33	33	37
		(B) 장애인	35	34	36	56	76	80	87	98
		(B)-(A)	20	19	21	33	44	48	54	61
	장애 관련 급여	(A) 비장애인	1	1	1	2	2	2	2	2
		(B) 장애인	27	25	29	35	47	47	49	51
		(B)-(A)	25	24	28	33	44	45	47	49
	기초 보장 급여	(A) 비장애인	14	14	15	14	15	16	16	16
		(B) 장애인	94	91	87	86	103	119	131	125
		(B)-(A)	80	77	72	72	89	103	114	109
	기타 공적 이전	(A) 비장애인	48	58	68	75	80	81	85	83
		(B) 장애인	94	102	111	104	124	136	142	141
		(B)-(A)	47	45	43	29	43	56	57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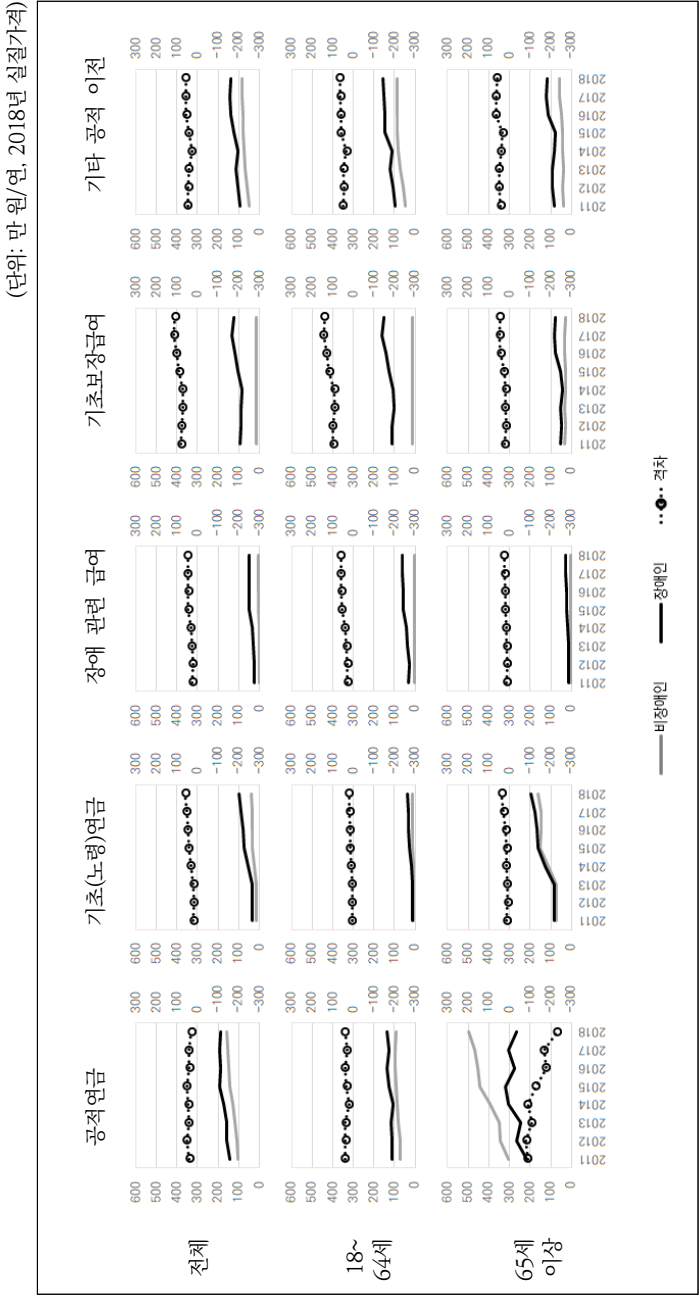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 64세	공적 연금	(A) 비장애인	73	72	81	85	93	98	97	95
		(B) 장애인	114	112	119	107	127	139	128	136
		(B)-(A)	41	40	38	22	34	41	31	41
	기초 (노령) 연금	(A) 비장애인	6	6	7	9	13	13	13	15
		(B) 장애인	14	12	13	20	29	31	32	36
		(B)-(A)	7	6	6	11	16	18	19	21
	장애 관련 급여	(A) 비장애인	1	1	1	2	2	2	2	2
		(B) 장애인	31	30	36	43	58	60	63	63
		(B)-(A)	30	29	34	42	56	58	61	61
	기초 보장 급여	(A) 비장애인	11	11	12	12	12	13	13	13
		(B) 장애인	110	111	103	106	130	143	160	154
		(B)-(A)	99	100	91	95	117	130	146	141
	기타 공적 이전	(A) 비장애인	49	60	72	81	86	86	90	87
		(B) 장애인	99	106	121	114	149	149	154	155
		(B)-(A)	50	46	49	34	62	62	65	67
65세 이상	공적 연금	(A) 비장애인	305	344	350	392	446	453	470	498
		(B) 장애인	218	264	244	304	318	278	305	267
		(B)-(A)	-87	-79	-106	-88	-128	-175	-165	-231
	기초 (노령) 연금	(A) 비장애인	72	72	72	111	150	149	146	161
		(B) 장애인	86	82	84	128	164	167	175	198
		(B)-(A)	13	9	12	17	14	18	29	38
	장애 관련 급여	(A) 비장애인	2	2	2	3	3	3	4	3
		(B) 장애인	16	14	16	19	25	24	27	31
		(B)-(A)	14	12	13	16	21	21	24	27
	기초 보장 급여	(A) 비장애인	32	31	32	27	28	33	34	30
		(B) 장애인	55	46	52	45	55	77	84	77
		(B)-(A)	23	16	20	18	27	44	50	47
	기타 공적 이전	(A) 비장애인	38	44	41	42	45	48	56	57
		(B) 장애인	83	94	92	84	78	115	122	118
		(B)-(A)	45	50	52	42	33	67	66	61

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구체적인 소득 항목별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 기초(노령)연금: 2014년 6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2014년 7월 이후 기초연금
- 장애 관련 급여: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기초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2015년 6월 이전 현금급여 총액, 2015년 7월 이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2-2] 공적 이전소득 항목별 평균



주: 격차는 장애인 수지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음의 격차는 추세선이 하향할 때 격차가 커지는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으로 [그림 2-3]과 <표 2-6>에는 가구 노동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 경상총소득, 가처분소득의 평균을 제시하였다. 전체 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1471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44~50%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결과 가구 노동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이 2013년 50%에서 2018년 44%로 감소하였다. 즉,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가구 소득 격차가 201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것이다.

다음으로 가구 노동소득에 재산소득을 합산한 일차소득의 평균을 살펴보자. <표 2-4>에서 확인하였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재산소득 평균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산소득을 합산하면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소득 평균 비율이 연도별로 1~3%포인트 증가한 45~53%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산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감소시켰지만, 시간에 따라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고령층의 경우에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재산소득 평균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표 2-4> 참조) 2017~2018년에는 재산소득이 고령 장애인과 고령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적 이전소득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감소시켰다. 예를 들어 2011년 일차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50%였지만,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56%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이 2011년 56%에서 2018년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오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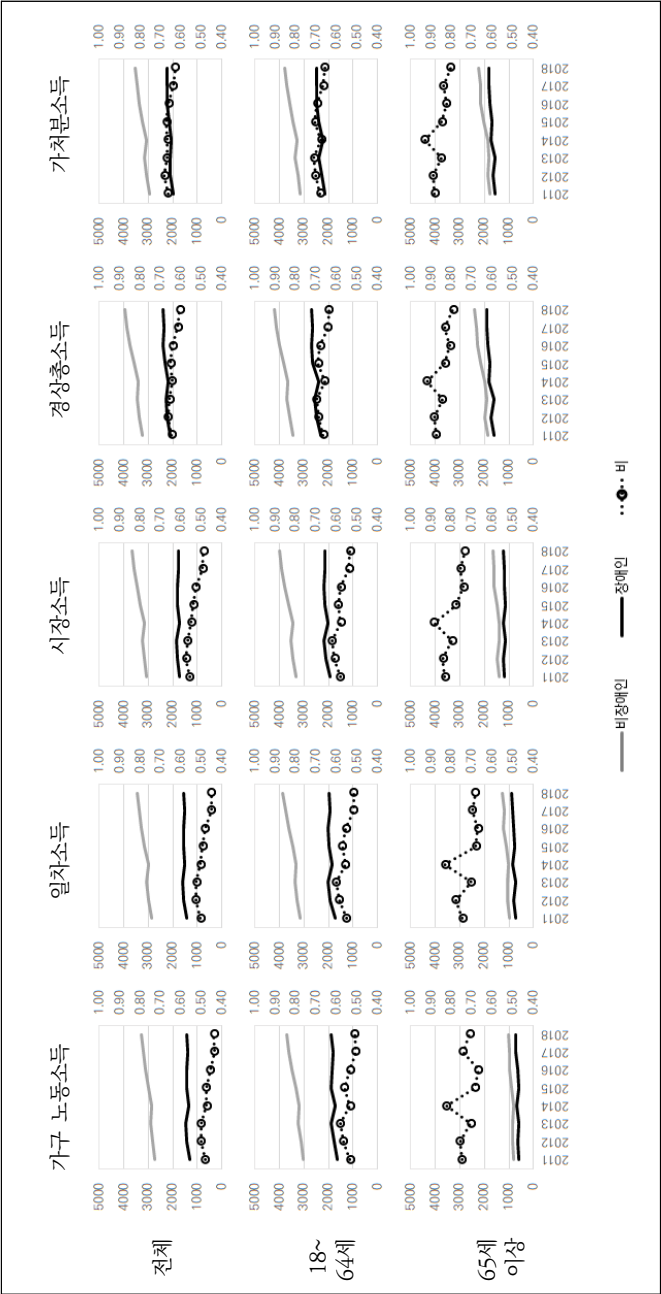
약간 강화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특히 고령층 시장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이 2011년 83%에서 2018년 73%로 10%포인트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표 2-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고령층의 사적 이전 평균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상총소득 평균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보다 더 크게 감소시켰다. 경상총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61~67%로 시장소득 평균에 비해 9~12%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둘째,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다소 완화한다. 2011~2018년 시장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56%에서 49%로 7%포인트 감소하였지만, 경상총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65%에서 61%로 4%포인트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총소득에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조금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평균의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비율은 2011년 66%에서 2018년 63%로 약 3%포인트 감소하였다. 요컨대,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 1966~2224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60%대 중반 수준이고, 주로 노동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3] 소득별 평균

(단위: 만 원/연, 2018년 실질가액)



주: 비(ratio)는 장애인 비장애인 수치로 나눈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추세선이 하행할 때 장애인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46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표 2-6〉 소득별 평균

(단위: 만 원/년, 2018년 실질가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가구 노동 소득	(A) 비장애인	2742	2845	2918	2878	3003	3128	3223	3287
		(B) 장애인	1324	1429	1471	1371	1438	1430	1409	1448
		(B)/(A)	0.48	0.50	0.50	0.48	0.48	0.46	0.44	0.44
	일차 소득	(A) 비장애인	2883	2990	3059	3012	3140	3271	3386	3465
		(B) 장애인	1454	1583	1611	1522	1558	1576	1532	1566
		(B)/(A)	0.50	0.53	0.53	0.51	0.50	0.48	0.45	0.45
	시장 소득	(A) 비장애인	3069	3181	3245	3179	3317	3460	3583	3655
		(B) 장애인	1711	1833	1848	1752	1797	1829	1778	1793
		(B)/(A)	0.56	0.58	0.57	0.55	0.54	0.53	0.50	0.49
	경상 총소득	(A) 비장애인	3250	3376	3460	3420	3587	3740	3871	3948
		(B) 장애인	2105	2246	2270	2206	2340	2401	2382	2393
		(B)/(A)	0.65	0.67	0.66	0.65	0.65	0.64	0.62	0.61
	가처분 소득	(A) 비장애인	2960	3079	3156	3094	3233	3363	3472	3537
		(B) 장애인	1966	2098	2115	2060	2169	2224	2222	2223
		(B)/(A)	0.66	0.68	0.67	0.67	0.67	0.66	0.64	0.63
18~ 64세	가구 노동 소득	(A) 비장애인	3028	3134	3229	3198	3344	3479	3611	3692
		(B) 장애인	1622	1777	1887	1714	1884	1863	1830	1890
		(B)/(A)	0.54	0.57	0.58	0.54	0.56	0.54	0.51	0.51
	일차 소득	(A) 비장애인	3160	3271	3363	3321	3466	3608	3761	3856
		(B) 장애인	1745	1921	2030	1853	1989	2001	1952	1992
		(B)/(A)	0.55	0.59	0.60	0.56	0.57	0.55	0.52	0.52
	시장 소득	(A) 비장애인	3314	3430	3520	3458	3614	3766	3926	4014
		(B) 장애인	1933	2099	2191	2010	2147	2190	2126	2153
		(B)/(A)	0.58	0.61	0.62	0.58	0.59	0.58	0.54	0.54
	경상 총소득	(A) 비장애인	3455	3581	3693	3646	3820	3979	4141	4226
		(B) 장애인	2301	2471	2583	2402	2639	2712	2663	2698
		(B)/(A)	0.67	0.69	0.70	0.66	0.69	0.68	0.64	0.64
	가처분 소득	(A) 비장애인	3136	3255	3357	3285	3429	3566	3697	3768
		(B) 장애인	2134	2292	2387	2223	2420	2484	2465	2480
		(B)/(A)	0.68	0.70	0.71	0.68	0.71	0.70	0.67	0.66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5세 이상	가구 노동 소득	(A) 비장애인	803	868	862	834	890	993	968	1037
		(B) 장애인	603	660	609	688	611	666	720	739
		(B)/(A)	0.75	0.76	0.71	0.82	0.69	0.67	0.74	0.71
	일차 소득	(A) 비장애인	1003	1067	1052	1035	1113	1224	1208	1292
		(B) 장애인	751	834	743	863	760	824	845	884
		(B)/(A)	0.75	0.78	0.71	0.83	0.68	0.67	0.70	0.68
	시장 소득	(A) 비장애인	1407	1476	1422	1395	1471	1604	1592	1655
		(B) 장애인	1172	1244	1136	1236	1148	1190	1206	1215
		(B)/(A)	0.83	0.84	0.80	0.89	0.78	0.74	0.76	0.73
	경상 총소득	(A) 비장애인	1858	1969	1918	1970	2143	2290	2303	2405
		(B) 장애인	1629	1745	1623	1815	1788	1851	1920	1906
		(B)/(A)	0.88	0.89	0.85	0.92	0.83	0.81	0.83	0.79
	가처분 소득	(A) 비장애인	1765	1873	1821	1867	2012	2134	2170	2254
		(B) 장애인	1558	1668	1551	1736	1705	1765	1823	1813
		(B)/(A)	0.88	0.89	0.85	0.93	0.85	0.83	0.84	0.80

주: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가구소득의 개인 단위 분포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7〉과 [그림 2-4]에서는 가처분소득의 빈곤율과 빈곤갭을 분석하였다. 우선 중위 50% 기준 빈곤율을 살펴보면 비장애인은 약 13~14%로 시간에 따라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 장애인은 2011년 38.47%에서 2018년 42.81%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2011년 25.25%포인트에서 2018년 30.15%포인트로 확대되었다. 중위 30% 기준 빈곤율은 중위 50% 기준 빈곤율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은 낮지만 장애인-비장애인 격차의 횡단적·시계열적 패턴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장애인 빈곤율의 시간에 따른 변동이 크고 특히 2018년의 증가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자료의 불안정으로 인해 추이가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 양상에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첫째, 횡단적 관점에서

근로연령층보다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훨씬 작다. 예를 들어 2011~2018년 근로연령층의 중위 50% 기준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는 약 22~26%포인트이지만 고령층은 약 6~15%포인트이다. 즉, 전 생애에 걸쳐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빈곤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비장애인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노년기에는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둘째, 시계열적 관점에서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지만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는 시간에 따라 상당히 확대되었다. 중위 50% 기준 빈곤율을 살펴보면, 고령 비장애인의 빈곤율은 주로 공적연금의 성숙에 힘입어 2011년 46.81%에서 2018년 42.84%로 약 4%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령 장애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2011년 53.35%에서 2018년 57.82%로 약 4%포인트 증가하였다. 즉, 최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시기에 노인 빈곤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으로 빈곤갭을 살펴본다. 이 연구가 정의한 빈곤갭은 빈곤층의 평균 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빈곤율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빈곤율이 극히 낮아도 극소수 빈곤층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다면 빈곤갭은 매우 큰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빈곤율과 달리 빈곤갭은 장애인-비장애인 격차의 패턴이 빈곤선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 관찰된다. 우선 중위 50% 기준 빈곤갭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약 30%로 유사하게 나타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빈곤율 격차는 크지만 빈곤한 집단의 평균 소득은 대체로 빈곤선의 약 70%로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보다 고령층의 빈곤갭이 조금 더 컸는데, 이는 근로연령대 빈곤층보다 고령 빈곤층의 소득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애인-비장애인 빈곤갭 격차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크지 않았다.

〈표 2-7〉 가처분소득 빈곤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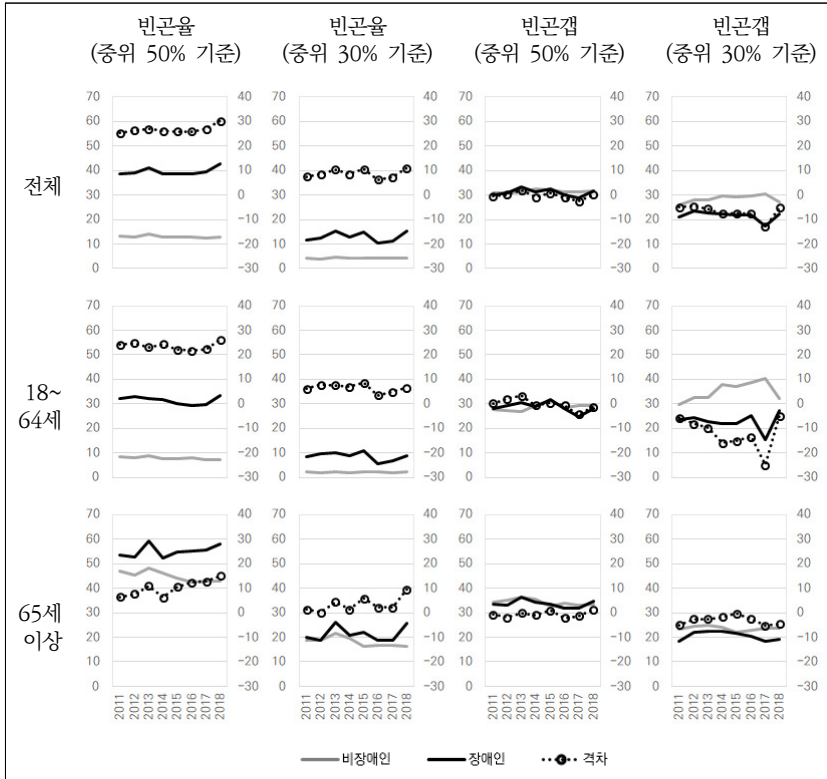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빈곤율 (중위 50%)	(A) 비장애인	13.22	12.89	14.08	12.70	12.76	12.73	12.51	12.66
		(B) 장애인	38.47	39.18	40.92	38.73	38.57	38.68	39.42	42.81
		(B)-(A)	25.25	26.29	26.84	26.03	25.81	25.95	26.91	30.15
	빈곤갭 (중위 50%)	(A) 비장애인	30.65	30.68	31.28	32.37	31.96	31.18	31.16	31.47
		(B) 장애인	30.17	30.85	33.23	31.39	32.60	30.07	28.63	31.59
		(B)-(A)	-0.48	0.16	1.94	-0.98	0.64	-1.11	-2.54	0.12
	빈곤율 (중위 30%)	(A) 비장애인	4.27	4.07	4.84	4.42	4.33	4.14	4.10	4.25
		(B) 장애인	11.71	12.49	15.16	12.90	14.92	10.43	11.33	15.16
		(B)-(A)	7.44	8.42	10.33	8.49	10.59	6.29	7.23	10.92
	빈곤갭 (중위 30%)	(A) 비장애인	26.02	27.95	28.09	29.79	29.22	29.72	30.30	27.34
		(B) 장애인	21.04	23.40	22.57	22.23	21.87	22.02	17.29	22.11
		(B)-(A)	-4.98	-4.55	-5.51	-7.56	-7.35	-7.70	-13.01	-5.23
18~ 64세	빈곤율 (중위 50%)	(A) 비장애인	8.27	8.17	8.93	7.45	7.70	7.81	7.30	7.23
		(B) 장애인	32.32	33.00	32.14	31.85	29.91	29.47	29.55	33.44
		(B)-(A)	24.06	24.83	23.21	24.40	22.21	21.66	22.25	26.21
	빈곤갭 (중위 50%)	(A) 비장애인	27.56	27.25	27.03	29.48	31.22	28.62	29.16	29.28
		(B) 장애인	27.88	29.25	30.33	28.88	31.60	28.06	24.95	28.07
		(B)-(A)	0.31	1.99	3.30	-0.60	0.38	-0.56	-4.21	-1.21
	빈곤율 (중위 30%)	(A) 비장애인	2.14	1.95	2.29	2.06	2.39	2.08	1.94	2.10
		(B) 장애인	8.22	9.73	9.89	8.97	11.03	5.65	6.82	8.63
		(B)-(A)	6.09	7.78	7.60	6.92	8.64	3.57	4.88	6.53
	빈곤갭 (중위 30%)	(A) 비장애인	29.51	32.58	32.49	37.97	37.25	38.85	40.16	32.32
		(B) 장애인	23.70	24.46	22.72	21.96	22.05	25.27	15.26	27.42
		(B)-(A)	-5.81	-8.13	-9.76	-16.01	-15.20	-13.57	-24.90	-4.90
65세 이상	빈곤율 (중위 50%)	(A) 비장애인	46.81	45.19	48.09	46.30	44.15	42.62	42.74	42.84
		(B) 장애인	53.35	52.88	59.11	52.47	54.59	54.96	55.59	57.82
		(B)-(A)	6.55	7.69	11.02	6.18	10.44	12.33	12.85	14.98
	빈곤갭 (중위 50%)	(A) 비장애인	34.34	34.93	36.52	35.35	32.77	34.03	33.15	33.52
		(B) 장애인	33.53	33.07	36.49	34.44	33.62	31.97	31.83	34.85
		(B)-(A)	-0.81	-1.87	-0.02	-0.91	0.85	-2.06	-1.33	1.32
	빈곤율 (중위 30%)	(A) 비장애인	18.72	18.60	21.71	19.51	16.36	16.63	16.62	16.17
		(B) 장애인	20.14	18.63	26.10	20.75	22.13	18.86	18.71	25.62
		(B)-(A)	1.42	0.02	4.38	1.24	5.77	2.23	2.09	9.45
	빈곤갭 (중위 30%)	(A) 비장애인	23.33	24.63	25.02	24.28	21.92	22.78	23.61	23.74
		(B) 장애인	18.41	22.17	22.45	22.47	21.71	20.29	18.50	19.24
		(B)-(A)	-4.91	-2.46	-2.57	-1.81	-0.21	-2.49	-5.10	-4.50

주: 균등화소득의 개인 단위 빈곤임. 빈곤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30%로 설정하였음.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층 평균 소득의 차이를 빈곤선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2-4] 가처분소득 빈곤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런데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30%로 낮추면 빈곤갭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장애인 보다 비장애인의 빈곤갭이 컸는데, 특히 근로연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빈곤갭이 약 30~40%로 장애인의 빈곤갭인 약 15~27%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연령대 비장애인 극빈층이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근로연령대 장애인 극빈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같은 장애 관련 급여를 추가적으로 받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공적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노년기에는 장애인-비장애인 빈곤갭 격차가 감소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장애 관련 급여의 일부가 공제되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고령 비장애인 빈곤층보다 장애인 빈곤층의 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빈곤갭의 시간에 따른 변동이 커 그 추이를 분명하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으로는 소득원천별 빈곤율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중위 50% 기준 빈곤율을 분석한 <표 2-8>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2011년 전체 장애인 중 일차소득이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은 58.66%이다. 그런데 일차소득에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의 빈곤율은 51.78%이므로, 사적 이전소득이 빈곤율을 6.87%포인트 감소시킨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면 빈곤율이 16.16%포인트 감소하고,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면 2.85%포인트 증가한다. 이때 각 단계에서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고정된 상태에서 빈곤율을 계산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 2-8>과 [그림 2-5]를 살펴보면 개별 소득 원천이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는 비장애인이 약 3~4%포인트, 장애인이 약 3~7%포인트로 나타나 사적 이전소득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빈곤율을 좀 더 크게 감소시킨다. 시계열적 관점에서는 뚜렷한 패턴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는 비장애인이 약 5~6%포인트, 장애인

이 약 13~19%포인트로 공적 이전소득이 장애인의 빈곤율을 훨씬 더 많이 감소시켰다. 그런데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3~4%포인트, 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11~18%포인트 감소시켰고,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15~23%포인트, 장애인의 빈곤율을 약 15~22%포인트 감소시켰다. 즉,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적 이전이 이루어지는 근로연령대에는 공적 이전소득이 장애인의 빈곤율을 더 크게 감소시키지만, 비장애인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는 노년기에는 공적 이전소득 빈곤 감소 효과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거의 사라진다. 게다가 2014년 이후에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시간에 따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공적연금 성숙이 주로 고령 비장애인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8〉 소득원천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중위소득 50%)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 장 애 인	일차소득	21.08	20.66	22.07	21.23	21.15	20.97	20.47	20.51
		+사적 이전소득	16.90	16.53	18.27	17.61	17.37	17.33	17.00	17.33
		-4.18	-4.13	-3.80	-3.62	-3.78	-3.63	-3.47	-3.18	
		+공적 이전소득	11.88	11.47	12.15	11.51	11.14	11.28	10.71	11.40
		-5.02	-5.06	-6.13	-6.10	-6.23	-6.05	-6.28	-5.93	
	장 애 인	-세금· 사회보험료	13.22	12.89	14.08	12.70	12.76	12.73	12.51	12.66
		1.34	1.42	1.93	1.19	1.62	1.45	1.80	1.26	
		일차소득	58.66	55.41	56.79	57.77	59.12	59.24	60.16	59.70
		+사적 이전소득	51.78	49.85	51.82	53.28	52.68	54.46	55.89	56.25
		-6.87	-5.56	-4.97	-4.49	-6.44	-4.77	-4.28	-3.46	
		+공적 이전소득	35.62	37.23	38.87	37.84	36.49	37.25	37.17	40.93
		-16.16	-12.62	-12.95	-15.45	-16.19	-17.21	-18.72	-15.32	
		-세금· 사회보험료	38.47	39.18	40.92	38.73	38.57	38.68	39.42	42.81
		2.85	1.94	2.04	0.90	2.07	1.42	2.25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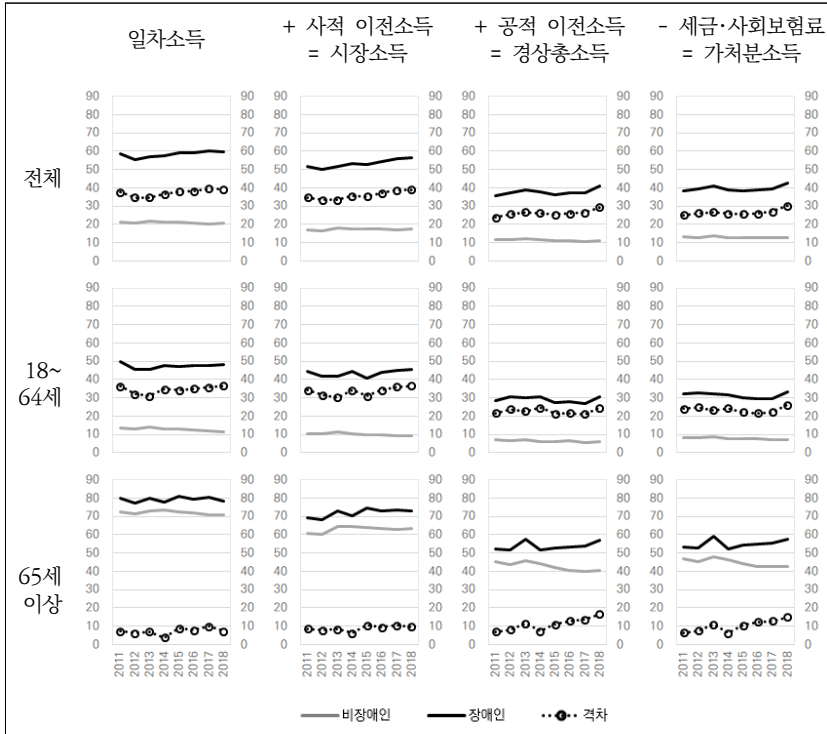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64세	비장애인	일차소득	13.48	13.25	14.33	13.02	12.91	12.58	11.83	11.44	
		+사적 이전소득	10.45	10.14	11.26	10.31	9.87	9.73	9.11	9.06	
		-3.03	-3.12	-3.07	-2.71	-3.04	-2.85	-2.72	-2.38		
		+공적 이전소득	6.94	6.78	7.02	6.36	6.19	6.44	5.64	6.15	
		-3.51	-3.35	-4.24	-3.95	-3.68	-3.29	-3.46	-2.91		
	-세금·사회보험료	8.27	8.17	8.93	7.45	7.70	7.81	7.30	7.23		
		1.33	1.39	1.92	1.09	1.51	1.37	1.66	1.08		
		장애인	일차소득	49.87	45.46	45.51	47.83	47.15	47.66	47.61	48.17
			+사적 이전소득	44.58	41.60	41.62	44.64	40.91	44.03	45.18	45.83
			-5.28	-3.86	-3.89	-3.19	-6.23	-3.63	-2.43	-2.33	
+공적 이전소득	28.74		30.72	29.89	30.91	27.60	28.04	26.91	30.79		
-15.84	-10.88		-11.73	-13.73	-13.31	-15.99	-18.27	-15.04			
-세금·사회보험료	32.32	33.00	32.14	31.85	29.91	29.47	29.55	33.44			
	3.58	2.28	2.25	0.94	2.31	1.43	2.64	2.65			
	65세 이상	비장애인	일차소득	72.54	71.34	73.21	73.76	72.34	71.89	70.67	70.87
			+사적 이전소득	60.62	60.32	64.64	64.34	63.93	63.50	62.83	63.28
			-11.92	-11.02	-8.57	-9.42	-8.41	-8.38	-7.84	-7.59	
+공적 이전소득			45.34	43.57	46.05	44.48	41.90	40.71	40.18	40.58	
-15.28			-16.75	-18.59	-19.86	-22.03	-22.80	-22.65	-22.70		
-세금·사회보험료		46.81	45.19	48.09	46.30	44.15	42.62	42.74	42.84		
		1.46	1.62	2.04	1.82	2.25	1.92	2.56	2.25		
		장애인	일차소득	79.93	77.47	80.19	77.61	81.29	79.70	80.73	78.18
			+사적 이전소득	69.21	68.16	72.99	70.53	74.48	72.91	73.43	72.92
			-10.73	-9.32	-7.20	-7.08	-6.81	-6.79	-7.30	-5.26	
+공적 이전소득	52.30		51.69	57.51	51.66	52.95	53.54	53.99	57.17		
-16.91	-16.47		-15.48	-18.87	-21.52	-19.37	-19.44	-15.75			
-세금·사회보험료	53.35	52.88	59.11	52.47	54.59	54.96	55.59	57.82			
	1.06	1.19	1.60	0.82	1.64	1.41	1.60	0.64			

주: 균등화소득의 개인 단위 빈곤임.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로 고정한 상태에서 각 소득의 빈곤율을 계산하였음. 하단의 수치는 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2-5] 소득별 빈곤율(빈곤선: 중위소득 50%)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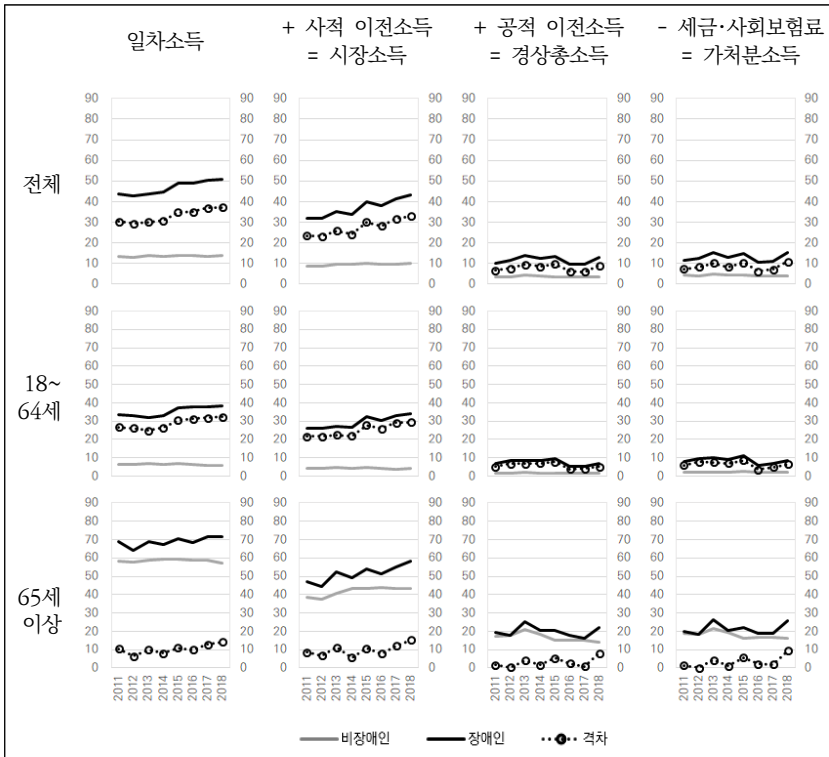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2-6]과 <표 2-9>에서는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30%로 설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일차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비장애인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약 13~14%로 대체로 유지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일차소득 빈곤율은 2011년 43.72%에서 2018년 51.09%로 증가하였다. 사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에도 이러한 격차의 추이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2011~2018년 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32.14%에서 43.44%로

약 11%포인트나 증가한 반면, 비장애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8.57%에서 10.40%로 약 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소득보장제도의 개입이 없다면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시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령 집단별 분석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한 패턴이 관찰된다.

[그림 2-6] 소득별 빈곤율(빈곤선: 중위소득 30%)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56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표 2-9〉 소득원천별 빈곤율 감소효과(빈곤선: 중위소득 30%)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 장 애 인	일차소득	13.28	13.14	13.88	13.65	14.16	13.85	13.60	13.82
		+사적 이전소득	8.57	8.57	9.52	9.72	10.03	9.69	9.73	10.40
		-4.70	-4.57	-4.36	-3.93	-4.13	-4.16	-3.87	-3.42	
		+공적 이전소득	3.66	3.71	4.44	4.02	3.56	3.50	3.51	3.64
		-4.91	-4.87	-5.08	-5.70	-6.47	-6.19	-6.22	-6.76	
		-세금· 사회보험료	4.27	4.07	4.84	4.42	4.33	4.14	4.10	4.25
	0.61	0.37	0.40	0.40	0.77	0.64	0.59	0.61		
	장 애 인	일차소득	43.72	42.67	44.00	44.57	49.07	48.87	50.56	51.09
		+사적 이전소득	32.14	31.83	35.39	33.94	40.14	37.87	41.50	43.44
		-11.58	-10.84	-8.61	-10.63	-8.93	-11.00	-9.06	-7.65	
		+공적 이전소득	10.40	11.36	14.02	12.57	13.34	9.80	9.54	12.79
		-21.75	-20.46	-21.37	-21.37	-26.81	-28.07	-31.96	-30.65	
		-세금· 사회보험료	11.71	12.49	15.16	12.90	14.92	10.43	11.33	15.16
	1.31	1.13	1.14	0.34	1.59	0.62	1.79	2.37		
18~ 64세	비 장 애 인	일차소득	6.60	6.63	7.06	6.53	6.84	6.46	5.82	6.01
		+사적 이전소득	4.16	4.31	4.78	4.45	4.64	4.09	3.97	4.49
		-2.44	-2.32	-2.28	-2.07	-2.20	-2.37	-1.85	-1.53	
		+공적 이전소득	1.63	1.66	1.95	1.75	1.68	1.60	1.49	1.72
		-2.53	-2.65	-2.83	-2.71	-2.96	-2.49	-2.48	-2.76	
		-세금· 사회보험료	2.14	1.95	2.29	2.06	2.39	2.08	1.94	2.10
	0.51	0.28	0.34	0.31	0.71	0.48	0.46	0.37		
	장 애 인	일차소득	33.28	32.97	31.97	33.10	37.36	37.68	37.62	38.39
		+사적 이전소득	25.93	26.06	27.24	26.38	32.52	30.11	33.06	34.02
		-7.35	-6.91	-4.73	-6.71	-4.84	-7.57	-4.57	-4.37	
		+공적 이전소득	6.72	8.38	8.71	8.67	9.42	5.36	5.51	6.82
		-19.21	-17.68	-18.54	-17.72	-23.10	-24.75	-27.54	-27.20	
		-세금· 사회보험료	8.22	9.73	9.89	8.97	11.03	5.65	6.82	8.63
	1.50	1.35	1.18	0.31	1.61	0.29	1.31	1.82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5세 이상	비 장 애 인	일차소득	58.49	57.69	58.97	59.22	59.58	58.75	58.78	57.18
		+사적 이전소득	38.49	37.73	40.89	43.40	43.49	43.68	43.17	43.23
			-20.00	-19.96	-18.08	-15.82	-16.09	-15.07	-15.61	-13.95
		+공적 이전소득	17.45	17.68	20.94	18.52	15.24	15.07	15.26	14.26
			-21.05	-20.05	-19.95	-24.88	-28.25	-28.62	-27.92	-28.97
	장 애 인	-세금· 사회보험료	18.72	18.60	21.71	19.51	16.36	16.63	16.62	16.17
			1.28	0.93	0.77	1.00	1.12	1.57	1.36	1.91
		일차소득	69.00	64.17	68.93	67.45	70.76	68.65	71.75	71.42
		+사적 이전소득	47.18	44.61	52.27	49.01	54.26	51.58	55.33	58.53
			-21.82	-19.56	-16.65	-18.45	-16.50	-17.07	-16.42	-12.89
		+공적 이전소득	19.29	17.99	25.04	20.35	20.58	17.65	16.13	22.35
			-27.89	-26.62	-27.23	-28.66	-33.68	-33.93	-39.20	-36.18
		-세금· 사회보험료	20.14	18.63	26.10	20.75	22.13	18.86	18.71	25.62
			0.86	0.64	1.06	0.40	1.55	1.21	2.58	3.26

주: 균등화소득의 개인 단위 빈곤인. 빈곤선을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30%로 고정된 상태에서 각 소득의 빈곤율을 계산하였음. 하단의 수치는 전 단계 빈곤율과의 차이를 의미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공적 이전소득은 횡단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를 크게 축소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근로연령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빈곤 감소 효과는 약 2~3%포인트에 그쳤지만 장애인의 공적 이전소득 빈곤 감소 효과는 2011년 19.21%포인트에서 27.20%포인트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극빈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한 후 대체로 사라진다. 고령층의 경우 시장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약 6~15%포인트였으나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면 경상총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약 0~8%포인트로 감소한다. 한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상총소득 빈곤율이 16.13%에서 22.35%로 약 6%포인트나 증가하였는데, 데이터 불안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추이인지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한 추이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1.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변화

다음으로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Oaxaca-Blinder 분해를 실시한다. 분해의 결과변수는 소득 분포를 대표하는 지표인 균등화 가처분소득(로그변환)과 중위 50% 기준 빈곤으로 설정하였다.⁸⁾ 우선 <표 2-10>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1~2013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은 각각 7.8516, 7.4074이고 그 차이는 0.4442이다.⁹⁾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한 결과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0.4442에서 0.4740으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된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가 시간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한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표 2-10>에서 중위 50% 기준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2011~2013년 26.13%포인트에서 2016~2018년 27.66%포인트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의 확대는 주로 고령 비장애인의 빈곤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지만 고령 장애인의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

8) 소수의 0을 연 1만 원으로 치환하여 로그변환하였다.

9)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과 그 격차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2013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을 각각 지수변환(exponential)하면 연 2570만 원, 1648만 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기하평균을 의미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차이인 0.4442를 지수변환하면 1.56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처분소득 기하평균의 비(2570/1648)를 의미한다. 즉, 이는 비장애인의 가처분소득 기하평균이 장애인보다 56% 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로그 평균의 차이가 0에 가까울 때는 지수변환하지 않은 로그 평균의 차이를 대략적인 퍼센트 격차로 해석할 수 있다.

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고령 비장애인의 빈곤율은 46.71%에서 42.74%로 감소하였지만 고령 장애인의 빈곤율은 55.24%에서 56.14%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고, 그 결과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가 8.52%포인트에서 13.40%포인트로 증가하였다.

〈표 2-10〉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변화

(단위: 로그 만 원/년, %, %포인트)

구분		로그 가처분소득			빈곤율		
		2011~2013	2016~2018	변화	2011~2013	2016~2018	변화
전체 (18세 이상)	비장애인	7.8516	7.9749	0.1233	13.40	12.63	-0.77
	장애인	7.4074	7.5009	0.0935	39.53	40.29	0.76
	격차	-0.4442	-0.4740	-0.0298	26.13	27.66	1.52
18~64세	비장애인	7.9380	8.0644	0.1265	8.46	7.45	-1.01
	장애인	7.5154	7.6162	0.1007	32.49	30.79	-1.70
	격차	-0.4225	-0.4483	-0.0257	24.03	23.34	-0.69
65세 이상	비장애인	7.2693	7.4553	0.1860	46.71	42.74	-3.98
	장애인	7.1667	7.3088	0.1421	55.24	56.14	0.90
	격차	-0.1026	-0.1465	-0.0439	8.52	13.40	4.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 장애인-비장애인의 소득 격차 분해

가. 로그 가처분소득

이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분석한다. 이 분석의 목적은 2011~2013년과 2016~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인 0.4442, 0.4740을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표 2-11〉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 농어촌 거주 비율이 높고, 가구 규모가 작으며, 연령 수준이 높다. 이처럼 장애인은 고연령, 무배우, 저학력, 미취업 등 저소득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가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일정하게 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1〉 소득 격차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32	0.4154	0.5088	0.4140
	남성	0.4868	0.5846	0.4912	0.5860
연령		44.14	56.05	45.90	58.10
연령 제곱		2220.60	3382.29	2394.00	3638.14
가구원 수		3.3098	2.7317	3.1765	2.5746
배우자	없음	0.3805	0.3811	0.3963	0.4497
	있음	0.6195	0.6189	0.6037	0.5503
학력	중졸 이하	0.2342	0.5492	0.2028	0.5015
	고졸	0.4059	0.3010	0.3891	0.3276
	전문대졸 이상	0.3599	0.1498	0.4081	0.1709
경제활동	미취업	0.3697	0.5964	0.3627	0.6250
	취업	0.6303	0.4036	0.6373	0.3750
거주지역	대도시	0.4528	0.4364	0.4346	0.4433
	중소도시	0.4615	0.4471	0.4807	0.4478
	농어촌	0.0856	0.1166	0.0847	0.1088
연도	2011/2016	0.3286	0.3279	0.3302	0.3359
	2012/2017	0.3338	0.3339	0.3329	0.3335
	2013/2018	0.3376	0.3381	0.3369	0.3306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12〉에는 로그 가처분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표를 살펴보면 우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

비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3~4%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여성 가구원과 남성 가구의 동거가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성별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의 성별이 아니라 가구의 성별을 투입하여 모형을 다시 분석해보면 남성 가구주보다 여성 가구주의 소득 수준이 낮은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둘째, 남성보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학력과 경제활동을 통제하면 여성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인 성별만 투입한 무조건부 모형을 분석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다. 홍백의, 김혜연(2007, p. 139) 역시 연령, 교육수준, 고용형태, 결혼상태 등을 통제했을 때 남성보다 여성의 빈곤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단, 표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성별 소득 격차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원 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가구 규모가 클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가구원 수와 소득의 정적 관계는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큰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상태의 영향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존재가 비장애인의 소득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무배우 가구에 비해 유배우 가구에서 경제활동과 가사 및 돌봄노동의 분업이 용이하고 맞벌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 2011~2013년에는 배우자의 존재가 소득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6~2018년에는 이러한 영향이 약해지고 통계적 유의도가 사라졌다.

〈표 2-12〉 로그 가처분소득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263 ** (0.009)	-0.0603 (0.038)	-0.0428 *** (0.012)	-0.0134 (0.043)
연령	-0.0043 (0.002)	-0.0117 (0.008)	-0.0045 (0.003)	-0.0025 (0.007)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1 (0.000)	-0.0000 (0.000)	0.0000 (0.000)
가구원 수	0.0715 *** (0.007)	0.1599 *** (0.017)	0.0739 *** (0.011)	0.1604 *** (0.024)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1441 *** (0.018)	0.1658 *** (0.043)	0.1426 *** (0.023)	0.0471 (0.047)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2180 *** (0.018)	0.0968 (0.056)	0.2009 *** (0.021)	0.0707 (0.058)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3891 *** (0.022)	0.3411 *** (0.076)	0.2938 *** (0.026)	0.2502 *** (0.070)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1708 *** (0.014)	0.3420 *** (0.038)	0.2488 *** (0.019)	0.3771 *** (0.043)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106 (0.019)	-0.0310 (0.045)	-0.0116 (0.022)	0.0020 (0.051)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878 ** (0.028)	-0.1273 * (0.050)	-0.1120 *** (0.029)	-0.0544 (0.048)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356 *** (0.009)	0.0448 * (0.020)	0.0370 * (0.015)	0.0418 (0.030)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499 *** (0.009)	0.0465 * (0.021)	0.0722 *** (0.013)	-0.0033 (0.040)
상수	7.4363 *** (0.053)	7.0211 *** (0.232)	7.5450 *** (0.064)	6.9433 *** (0.219)
F	271.03 ***	36.73 ***	193.49 ***	16.23 ***
R제곱	0.2192	0.2701	0.1681	0.2223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 p<0.05. ** p<0.01. *** p<0.001

주: OLS 추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학력은 전반적으로 소득에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구체적인 패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작지 않은 차이가 관찰된다. 비장애인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 고졸과 전문대졸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특히 중졸 이하와 고졸의 차이가 큰 반면, 장애인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고졸과 전문대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¹⁰⁾ 이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획득할 때 소득 수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소득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경제활동은 가구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취업과 소득의 정적 관계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욱 크게 나타난다. 장애인이 존재하는 가구는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구 내 돌봄 부담이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 본인의 경제활동이 소득 수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은 두 시점 모두 농어촌의 소득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은 2011~2013년에만 농어촌과 대도시의 소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 더미의 회귀계수는 대체로 시간에 따라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장애인은 이러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표 2-13〉에는 〈표 2-11〉과 〈표 2-12〉의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는 각각 0.2726, 0.2829로, 총 격차의 61%, 60%를 차지한다.

10) 기준범주를 변경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였다. 이하의 서술에서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 결과를 함께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즉,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의 약 60%는 장애인-비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것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이 저소득과 정적 관계를 갖는 특성을 강하게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약 2011~2013년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은 7.8516에서 7.5790으로 0.2726만큼 감소하였을 것이다. 즉, 장애인의 특성을 비장애인의 특성으로 대체하는 변화는 가처분소득의 기하평균을 31%($=\exp(0.2726)-1$) 증가시키는 것이다.

〈표 2-13〉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4442 (0.025) ***	-0.4740 (0.027) ***
	특성 효과	-0.2726 (0.013) ***	-0.2829 (0.015) ***
	계수 효과	-0.1715 (0.022) ***	-0.1911 (0.024)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26 (0.001) **	-0.0041 (0.001) **
	연령	-0.0828 (0.007) ***	-0.0766 (0.009) ***
	가구원 수	-0.0413 (0.005) ***	-0.0445 (0.008) ***
	배우자	-0.0001 (0.003)	-0.0076 (0.003) *
	학력	-0.1046 (0.009) ***	-0.0820 (0.009) ***
	경제활동	-0.0387 (0.004) ***	-0.0653 (0.007) ***
	거주지역	-0.0026 (0.001) *	-0.0023 (0.001)
	연도	0.0000 (0.000)	-0.0004 (0.000)

* $p<0.05$, ** $p<0.01$, *** $p<0.001$

주: OLS 추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계수 효과의 크기는 2011~2013년과 2016~2018년 각각 0.1715, 0.1911로 횡단적으로 특성 효과보다 작지만 시간에 따른 격차의 증가량은 특성 효과보다 조금 더 크다. 계수 효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회귀

계수 차이로 인한 소득 격차를 의미하며, 노동시장 차별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임금 격차, 고령 장애인과 고령 비장애인의 공적연금 격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 중 계수 효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주로 장애인-비장애인 노동소득 격차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비장애인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차별, 장애인과 동거하는 비장애인 가구원이 돌봄 부담으로 인해 더 적게 일하거나 불안정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 등 다양한 노동시장 격차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자세히 탐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분석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특성의 장애인-비장애인 차이로 인한 영향 역시 계수 효과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 계수 효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특성 효과를 세부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2013년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할 때 비장애인의 로그 가처분소득이 0.0715 증가하는데(〈표 2-12〉 참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가구원 수 평균은 각각 3.3098명, 2.7317명이므로(〈표 2-11〉 참조), 비장애인의 가구원 수가 장애인과 같다면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이 0.0413만큼 감소할 것이다($=0.0715 \times (3.3098 - 2.7317)$).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를 살펴보면 우선 학력의 특성 효과가 0.1046, 0.0820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가장 크게 설명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학력, 특히 전문대졸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밖에도 장애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 비율과 작은 가구 규모, 높은 연령 수준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성별의 특성 효과

는 0.0026, 0.00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 수준이 낮고 장애인의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성비 차이가 소득 격차를 확대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혼상태의 특성효과는 2016~2018년에만, 거주지역의 특성효과는 2011~2013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하여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분석한다. 먼저 <표 2-14>에는 근로연령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일 가능성이 크고, 연령 수준이 높으며, 가구원 수가 작고, 농어촌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표 2-15>에는 근로연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로그 가처분소득을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는 전체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분석 결과(<표 2-12>)와 대체로 유사하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유배우, 고학력, 취업 상태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한편 비장애인은 2011~2013년과 2016~2018년 모두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 수준이 낮았지만, 장애인은 2011~2013년에만 여성보다 남성의 소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2-12>와 <표 2-15>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연령이다. <표 2-12>에서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장애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된 반면 <표 2-15>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대체로 20대에서 40~50대까지 소득 수준이 감소하다가 60대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표 2-16>에는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분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로 인한 소득 격차는 각각 0.1980, 0.2059로 총 격차의 47%, 46%

를 차지한다. 세부 분해 결과에서 특성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변수는 학력이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학력 수준이 상당히 낮은데, 이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 학력 차이로 인한 소득 격차는 0.1156, 0.0791로 크게 나타났다. 그밖에 장애인-비장애인 성비와 가구원 수, 취업 비율 격차가 소득 격차를 일정하게 설명하였고, 2016~2018년에는 유배우 비율의 격차도 소득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표 2-14〉 소득 격차 모형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12	0.3711	0.4947	0.3627
	남성	0.4988	0.6289	0.5053	0.6373
연령		39.78	48.37	41.06	48.53
연령 제곱		1741.43	2482.31	1855.42	2505.03
가구원 수		3.4655	2.9727	3.3588	2.8776
배우자	없음	0.3787	0.3998	0.4002	0.4987
	있음	0.6213	0.6002	0.5998	0.5013
학력	중졸 이하	0.1569	0.4325	0.1168	0.3481
	고졸	0.4435	0.3831	0.4233	0.4257
	전문대졸 이상	0.3996	0.1844	0.4598	0.2262
경제활동	미취업	0.3202	0.5134	0.3075	0.5288
	취업	0.6798	0.4866	0.6925	0.4712
거주지역	대도시	0.4604	0.4774	0.4391	0.4705
	중소도시	0.4652	0.4309	0.4865	0.4469
	농어촌	0.0743	0.0918	0.0745	0.0826
연도	2011/2016	0.3288	0.3362	0.3323	0.3432
	2012/2017	0.3344	0.3334	0.3330	0.3313
	2013/2018	0.3367	0.3305	0.3347	0.3255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15〉 로그 가처분소득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321 ** (0.010)	-0.1047 * (0.049)	-0.0560 *** (0.013)	-0.0446 (0.061)
연령	-0.0552 *** (0.004)	-0.0605 *** (0.014)	-0.0510 *** (0.005)	-0.0442 ** (0.015)
연령 제곱	0.0006 *** (0.000)	0.0006 *** (0.000)	0.0006 *** (0.000)	0.0005 ** (0.000)
가구원 수	0.0452 *** (0.007)	0.1102 *** (0.023)	0.0500 *** (0.012)	0.0965 ** (0.032)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2103 *** (0.019)	0.2726 *** (0.061)	0.1878 *** (0.026)	0.1482 * (0.072)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2599 *** (0.021)	0.0921 (0.062)	0.2122 *** (0.025)	0.0530 (0.075)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4642 *** (0.026)	0.3279 *** (0.082)	0.3407 *** (0.031)	0.2226 ** (0.079)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1932 *** (0.016)	0.4091 *** (0.046)	0.2777 *** (0.022)	0.4487 *** (0.055)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28 (0.020)	-0.0105 (0.055)	-0.0112 (0.023)	0.0557 (0.071)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646 * (0.033)	-0.1083 (0.072)	-0.0830 * (0.034)	-0.0054 (0.069)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317 ** (0.010)	0.0503 * (0.020)	0.0365 * (0.018)	0.0375 (0.045)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489 *** (0.010)	0.0708 * (0.028)	0.0725 *** (0.014)	-0.0159 (0.062)
상수	8.3249 *** (0.076)	8.0882 *** (0.315)	8.3948 *** (0.094)	7.9612 *** (0.355)
F	87.40 ***	25.00 ***	54.65 ***	13.16 ***
R제곱	0.1241	0.2829	0.0844	0.1916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 p<0.05, ** p<0.01, *** p<0.001

주: OLS 추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16〉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4225 (0.031) ***	-0.4483 (0.036) ***
	특성 효과	-0.1980 (0.015) ***	-0.2059 (0.018) ***
	계수 효과	-0.2246 (0.028) ***	-0.2424 (0.033)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42 (0.001) **	-0.0074 (0.002) **
	연령	-0.0128 (0.008)	-0.0145 (0.009)
	가구원 수	-0.0223 (0.004) ***	-0.0240 (0.007) ***
	배우자	-0.0044 (0.005)	-0.0185 (0.006) **
	학력	-0.1156 (0.011) ***	-0.0791 (0.010) ***
	경제활동	-0.0373 (0.005) ***	-0.0614 (0.009) ***
	거주지역	-0.0010 (0.001)	-0.0002 (0.001)
	연도	-0.0003 (0.000)	-0.0007 (0.000)

* p<0.05, ** p<0.01, *** p<0.001

주: OLS 추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분석한다. 〈표 2-14〉와 〈표 2-17〉을 비교하면 근로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의 남성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13%포인트 높지만, 고령층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남성 비율 격차는 8~9%포인트로 나타난다.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은 비슷하고, 가구원 수의 차이도 크지 않다.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유배우 비율이 낮지만, 고령 장애인의 유배우 비율은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조금 높다. 고령 장애인의 학력 수준은 여전히 비장애인보다 낮지만,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학력 차이는 근로연령층과 비교할 때 상당히 작은 편이다. 한편 노년기에는 비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장애인-비장애인 취업 비율 차이 역시 근로연령층은 19~22%포인트인 데 반해 고령층은 8~10%포인트로 훨씬 작다.

〈표 2-17〉 소득 격차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0	0.5142	0.5907	0.4995
	남성	0.4060	0.4858	0.4093	0.5005
연령		73.55	73.17	73.98	74.06
연령 제곱		5451.71	5388.35	5519.80	5528.07
가구원 수		2.2604	2.1945	2.1184	2.0691
배우자	없음	0.3924	0.3392	0.3738	0.3681
	있음	0.6076	0.6608	0.6262	0.6319
학력	중졸 이하	0.7554	0.8093	0.7019	0.7573
	고졸	0.1523	0.1181	0.1901	0.1640
	전문대졸 이상	0.0923	0.0726	0.1080	0.0787
경제활동	미취업	0.7036	0.7813	0.6830	0.7855
	취업	0.2964	0.2187	0.3170	0.2145
거주지역	대도시	0.4018	0.3450	0.4085	0.3980
	중소도시	0.4364	0.4832	0.4474	0.4494
	농어촌	0.1618	0.1718	0.1441	0.1526
연도	2011/2016	0.3272	0.3095	0.3177	0.3238
	2012/2017	0.3295	0.3352	0.3327	0.3372
	2013/2018	0.3433	0.3553	0.3496	0.3390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18〉에서는 다음은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로그 가처분소득을 회귀분석 하였다. 비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원 수가 작을수록,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이고 농어촌에 거주할 때 소득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역시 대체로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지만, 연령과 거주지역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근로연령층과 달리 고령층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존재가 소득 수준에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그 효과는 2011~2013년 비장애인과 2016~2018년 장애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18〉 로그 가처분소득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42 (0.021)	0.0492 (0.072)	-0.0017 (0.024)	0.0039 (0.045)
연령	-0.2208 *** (0.025)	-0.1037 (0.106)	-0.2105 *** (0.031)	-0.1099 (0.069)
연령 제곱	0.0013 *** (0.000)	0.0007 (0.001)	0.0013 *** (0.000)	0.0007 (0.000)
가구원 수	0.2285 *** (0.012)	0.2472 *** (0.018)	0.2547 *** (0.016)	0.2572 *** (0.022)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606 * (0.029)	-0.0649 (0.053)	-0.0463 (0.032)	-0.1190 * (0.048)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2696 *** (0.033)	0.1285 (0.157)	0.2187 *** (0.033)	0.1380 (0.087)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6213 *** (0.065)	0.5425 *** (0.164)	0.5388 *** (0.072)	0.5018 *** (0.093)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1272 *** (0.023)	0.1667 *** (0.047)	0.1691 *** (0.027)	0.2188 *** (0.046)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204 (0.028)	-0.0634 (0.062)	0.0016 (0.034)	-0.0586 (0.049)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709 * (0.028)	-0.0729 (0.057)	-0.1179 *** (0.034)	-0.0479 (0.059)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457 ** (0.015)	0.0345 (0.037)	0.0400 * (0.017)	0.0434 (0.025)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329 * (0.014)	-0.0033 (0.023)	0.0577 * (0.022)	0.0189 (0.032)
상수	15.6820 *** (0.970)	10.5182 ** (3.978)	15.4048 *** (1.202)	11.1596 *** (2.612)
F	88.16 ***	23.64 ***	71.71 ***	19.20 ***
R제곱	0.2992	0.2188	0.2548	0.2838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 p<0.05, ** p<0.01, *** p<0.001

주: OLS 추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이를 토대로 <표 2-19>에서는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분해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로 인한 소득 격차는 각각 0.0510, 0.0598로 총 격차의 50%, 41%를 차지한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가 0.1026에서 0.1465로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분해 결과에 따르면 이는 주로 계수 효과의 확대로 설명된다. 개별 변수 중에서는 학력과 경제활동의 특성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령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고령 장애인의 학력 수준과 취업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고령 장애인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2-19> 로그 가처분소득 평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026 (0.031) **	-0.1465 (0.031) ***
	특성 효과	-0.0510 (0.017) **	-0.0598 (0.022) **
	계수 효과	-0.0516 (0.027)	-0.0866 (0.025)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3 (0.002)	-0.0002 (0.002)
	연령	-0.0000 (0.007)	-0.0066 (0.007)
	가구원 수	-0.0151 (0.013)	-0.0126 (0.015)
	배우자	-0.0032 (0.002)	-0.0003 (0.001)
	학력	-0.0215 (0.011) *	-0.0215 (0.010) *
	경제활동	-0.0099 (0.003) ***	-0.0173 (0.004) ***
	거주지역	-0.0017 (0.002)	-0.0010 (0.002)
	연도	0.0007 (0.000) *	-0.0004 (0.000)

* p<0.05, ** p<0.01, *** p<0.001

주: OLS 추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 (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나. 빈곤

다음으로는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를 살펴본다. 우선 <표 2-20>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선형확률모형(LPM)으로 추정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먼저 비장애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고 가구 규모가 작을수록,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이거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때 빈곤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이 빈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의 빈곤 확률은 10%포인트, 전문대졸의 빈곤 확률은 11~12%포인트 낮았다. 성별은 2016~2018년 비장애인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빈곤 확률이 0.9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가구원 수와 경제활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이 1명 증가할 때 비장애인의 빈곤 확률은 4%포인트 감소하지만 장애인의 빈곤 확률은 12~13%포인트 감소한다. 그리고 비장애인의 취업은 빈곤 확률을 9~11%포인트 감소시키지만 장애인의 취업은 빈곤 확률을 19~23%포인트 감소시킨다. 그리고 소득 모형 추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은 중졸 이하와 고졸의 빈곤 확률 차이가 크지만 장애인은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의 빈곤 확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존재가 장애인의 빈곤을 감소시키는 영향은 2011~2013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21>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를 분해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빈곤율 격차는 각각 14.33%포인트, 14.80%포인트로 총 격차의 55%, 54%를 차지한다. 이는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의 약 절반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만약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빈곤율은 14~15%포인트 증가하였을 것이다.

74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표 2-20〉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55 (0.004)	0.0153 (0.023)	0.0093 * (0.005)	0.0066 (0.028)
연령	-0.0008 (0.001)	0.0031 (0.005)	-0.0023 (0.001)	-0.0031 (0.005)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0 (0.000)	0.0001 *** (0.000)	0.0000 (0.000)
가구원 수	-0.0423 *** (0.003)	-0.1288 *** (0.011)	-0.0409 *** (0.003)	-0.1223 *** (0.013)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827 *** (0.008)	-0.0981 ** (0.031)	-0.0699 *** (0.009)	-0.0481 (0.033)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1030 *** (0.009)	-0.0465 (0.038)	-0.1044 *** (0.011)	-0.0484 (0.038)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231 *** (0.010)	-0.1389 ** (0.043)	-0.1103 *** (0.012)	-0.1663 *** (0.045)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893 *** (0.007)	-0.1905 *** (0.027)	-0.1102 *** (0.008)	-0.2337 *** (0.031)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140 * (0.007)	0.0180 (0.031)	0.0087 (0.007)	-0.0111 (0.034)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551 *** (0.012)	0.0508 (0.034)	0.0558 *** (0.012)	0.0233 (0.041)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14 (0.005)	0.0069 (0.016)	-0.0043 (0.005)	-0.0003 (0.016)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74 (0.005)	0.0206 (0.017)	-0.0057 (0.005)	0.0310 (0.019)
상수	0.3539 *** (0.023)	0.7741 *** (0.156)	0.3883 *** (0.026)	0.9009 *** (0.145)
F	268.10 ***	44.79 ***	187.57 ***	48.94 ***
R제곱	0.2343	0.2351	0.2302	0.2572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특성 효과 중에서는 연령의 효과가 6%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연령이 상당히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빈곤 확

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빈곤을 격차에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다. 그밖에 가구원 수, 학력, 경제활동 차이가 빈곤을 격차를 각각 2~4%포인트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상대적으로 작은 가구 규모, 낮은 학력 및 취업 비율이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을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주지역의 특성 효과는 2011~2013년에만, 결혼상태의 특성 효과는 2016~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2-21〉 빈곤을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2613	(0.016) ***	0.2766	(0.018) ***
	특성 효과	0.1433	(0.007) ***	0.1480	(0.008) ***
	계수 효과	0.1180	(0.015) ***	0.1286	(0.016)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5	(0.000)	0.0009	(0.000)
	연령	0.0599	(0.004) ***	0.0562	(0.005) ***
	가구원 수	0.0245	(0.002) ***	0.0246	(0.003) ***
	배우자	0.0000	(0.002)	0.0037	(0.002) *
	학력	0.0367	(0.004) ***	0.0326	(0.004) ***
	경제활동	0.0202	(0.002) ***	0.0289	(0.003) ***
	거주지역	0.0015	(0.001) *	0.0011	(0.001)
	연도	0.0000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을 격차를 분해한다. 우선 〈표 2-22〉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은 남성, 무배우, 저학력, 미취업, 농어촌 거주와 작은 가구 규모가 빈곤 확률을 증가시킨다. 근로연령대 장애인도 대체로 비슷하지만, 성별과 거주지역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의 영향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빈곤 확률이 대체로 20대에서 50대까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준다.

76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표 2-22〉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101 *	0.0064	0.0171 ***	0.0112
	(0.005)	(0.030)	(0.005)	(0.038)
연령	0.0160 ***	0.0292 **	0.0152 ***	0.0240 *
	(0.002)	(0.009)	(0.002)	(0.010)
연령 제곱	-0.0001 ***	-0.0003 **	-0.0001 ***	-0.0003 *
	(0.000)	(0.000)	(0.000)	(0.000)
가구원 수	-0.0238 ***	-0.0903 ***	-0.0253 ***	-0.0853 ***
	(0.002)	(0.015)	(0.003)	(0.018)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1122 ***	-0.1961 ***	-0.0897 ***	-0.1303 **
	(0.009)	(0.044)	(0.010)	(0.048)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941 ***	-0.0136	-0.0807 ***	0.0011
	(0.010)	(0.044)	(0.013)	(0.047)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234 ***	-0.1082 *	-0.0993 ***	-0.1167 *
	(0.011)	(0.049)	(0.014)	(0.052)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967 ***	-0.2076 ***	-0.1172 ***	-0.2630 ***
	(0.008)	(0.034)	(0.009)	(0.039)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85	-0.0129	0.0066	-0.0399
	(0.007)	(0.040)	(0.007)	(0.043)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336 *	0.0269	0.0307 **	0.0141
	(0.013)	(0.049)	(0.012)	(0.059)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06	0.0085	-0.0055	0.0009
	(0.005)	(0.021)	(0.005)	(0.023)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69	0.0022	-0.0062	0.0369
	(0.005)	(0.023)	(0.005)	(0.028)
상수	0.0023	0.1547	0.0168	0.2302
	(0.031)	(0.213)	(0.037)	(0.236)
F	58.21 ***	24.88 ***	34.76 ***	21.36 ***
R제곱	0.1045	0.2253	0.0950	0.2515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23〉에는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를 분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로 인한 빈곤율 격차는 각각 9.35%포인트, 8.92%포인트로 총 격차의 39%, 38%를 차지한다. 세부 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가구원 수, 학력, 경제활동의 특성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 고연령, 저학력, 미취업일 가능성이 크고 가구 규모가 작는데, 이러한 특성이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빈곤율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 한편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상대적으로 낮은 유배우 비율은 2016~2018년에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표 2-23〉 빈곤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2403 (0.020) ***	0.2334 (0.023) ***
	특성 효과	0.0935 (0.007) ***	0.0892 (0.008) ***
	계수 효과	0.1468 (0.019) ***	0.1442 (0.022)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13 (0.001) *	0.0023 (0.001) **
	연령	0.0269 (0.004) ***	0.0170 (0.003) ***
	가구원 수	0.0117 (0.002) ***	0.0122 (0.002) ***
	배우자	0.0024 (0.003)	0.0088 (0.003) **
	학력	0.0322 (0.004) ***	0.0230 (0.004) ***
	경제활동	0.0187 (0.003) ***	0.0259 (0.004) ***
	거주지역	0.0003 (0.000)	-0.0000 (0.000)
	연도	-0.0000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78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표 2-24〉 빈곤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04 (0.013)	0.0251 (0.034)	-0.0024 (0.015)	0.0257 (0.037)
연령	0.1315 *** (0.019)	0.0684 (0.053)	0.1657 *** (0.019)	0.0687 (0.053)
연령 제곱	-0.0008 *** (0.000)	-0.0004 (0.000)	-0.0010 *** (0.000)	-0.0004 (0.000)
가구원 수	-0.1489 *** (0.006)	-0.2010 *** (0.010)	-0.1583 *** (0.008)	-0.1758 *** (0.014)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289 (0.018)	0.0699 * (0.035)	0.0387 (0.021)	0.0741 (0.039)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2075 *** (0.021)	-0.1833 * (0.071)	-0.1689 *** (0.022)	-0.1754 * (0.070)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3260 *** (0.028)	-0.3513 *** (0.089)	-0.3277 *** (0.030)	-0.3769 *** (0.066)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888 *** (0.017)	-0.1448 *** (0.037)	-0.1168 *** (0.018)	-0.1502 *** (0.041)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320 (0.019)	0.0770 * (0.039)	0.0149 (0.020)	0.0121 (0.041)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767 *** (0.019)	0.0527 (0.042)	0.0994 *** (0.023)	-0.0097 (0.050)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04 (0.010)	0.0030 (0.020)	0.0023 (0.011)	0.0003 (0.022)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46 (0.012)	0.0563 * (0.022)	0.0027 (0.011)	0.0194 (0.023)
상수	-4.5636 *** (0.726)	-1.7714 (1.971)	-5.9122 *** (0.737)	-1.8310 (2.038)
F	124.06 ***	43.64 ***	97.50 ***	23.04 ***
R제곱	0.2594	0.2369	0.2571	0.2168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으로 <표 2-24>에서는 고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하였다.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모두 가구 규모가 크고 학력 수준이 높거나 취업 상태일 때 빈곤 확률이 낮다. 고령 비장애인의 경우 연령과 거주지역의 영향이 추가적으로 관찰되는데, 연령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의 빈곤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5> 빈곤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852 (0.021) ***	0.1340 (0.023) ***
	특성 효과	0.0339 (0.011) **	0.0397 (0.014) **
	계수 효과	0.0514 (0.018) **	0.0943 (0.020)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0 (0.001)	-0.0002 (0.001)
	연령	-0.0003 (0.004)	0.0051 (0.005)
	가구원 수	0.0098 (0.008)	0.0078 (0.009)
	배우자	0.0015 (0.001)	0.0002 (0.001)
	학력	0.0135 (0.006) *	0.0140 (0.007) *
	경제활동	0.0069 (0.002) ***	0.0120 (0.003) ***
	거주지역	0.0023 (0.001)	0.0009 (0.001)
	연도	0.0001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2-25>에서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를 분해한 결과를 보면, 2011~2013년과 2016~2018년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율 격차 중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은 각각 3.39%포인트, 3.97%포인트로 총 격차의 40%, 30%를 차지한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특성 효과의 절대적인 크기는 크게 변화하지 않은 반면 계수 효과는 5.14%포인트에서 9.43%포인트로 증가한 결과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을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 중에서는 학력과 경제 활동의 특성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령 비장애인에 비해 고령 장애인의 학력 수준과 취업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빈곤을 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제4절 시사점

이 장에서는 2011~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와 그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소득 평균과 시장소득 빈곤율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크고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사적 이전소득이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작고 사적 부양의 축소에 따라 향후 더욱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중 2011~2018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추이를 완화한 소득 원천은 공적 이전소득뿐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적 이전의 역할 없이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완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둘째, 공적연금과 조세방식 소득보장제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의 성숙은 노후소득보장을 크게 강화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와 중위 50% 기준 빈곤 격차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2011~2018년에 공적연금의 확대는 고령 비장애인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공적 이전소득은 시간에 따라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위 50% 기준 빈곤율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고령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조세방식 소득보장제도는 제도 확대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장애인의 극빈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적 이전소득은 장애인의 중위 30% 기준 빈곤율을 20~32%포인트 감소시킨다. 또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극빈 가능성이 크지만 장애인 극빈층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 극빈층보다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하는 비장애인 극빈층은 노인이 되더라도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지 못하지만, 장애인 수급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과 같은 장애 관련 급여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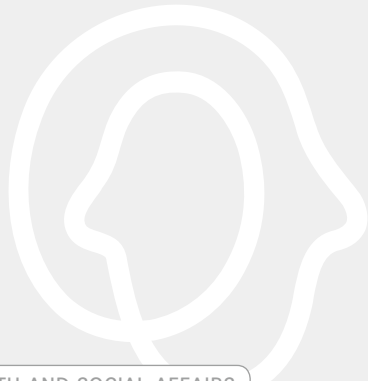
단, 현재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중위 50% 기준 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공적 이전소득이 지급된 후에도 장애인의 중위 50% 기준 빈곤율은 36~4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은 공공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제도만으로 중위 50% 기준 빈곤을 크게 완화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와 공적연금 수급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같이 장애인을 표적화한 소득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확대 역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축소에 크게 기여한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거하

는 장애인 가구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장애인보다 빈곤율이 높은 장애인의 소득을 더 크게 증가시킨다.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표적화 하는 제도와 비장애인을 포괄하는 제도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 조합을 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과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학력 수준과 고용률이 낮고, 이러한 특성 차이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영향은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 축소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소득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장애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역시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증가하고 빈곤 확률이 감소하는 효과는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격차 분해에 따르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가구 규모가 작아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및 빈곤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구 내 경제활동참여 가구원의 존재가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같이 장애인 가구 내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가구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제1절 노동 분야 격차 지표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 노동 격차의 실태와 변화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분해

제4절 시사점

제3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제1절 노동 분야 격차 지표

1. 노동 격차 지표 선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를 드러내는 지표는 크게 고용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와 고용의 질을 드러내는 지표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로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이나 구직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 경제활동 인구 중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 수의 비율,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한 인구의 비율이다. 각 지표가 모두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참여하는지 양적인 성과를 드러내지만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분야 격차를 탐구하기 위해 고용률을 첫 번째 핵심적인 지표로 삼는다. 이는 잠재적 실업 인구가 드러내는 문제와 같이 구직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개인 중 상당수가 노동 수요와 경제활동을 둘러싼 제반의 조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통계청, 2020b, p. 6)이라는 점 때문이다. 경제활동 인구와 실업 인구를 정의하고 집계하는 데 발생하는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전체 생산가능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보여주는 고용률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가 실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 취업자 수에 기반을 둔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유지(retention)와 일자리 접근성(entry of work)이 모두 포함되어 고용의 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석의 여지가 풍부하다(Jones, 2016).

고용의 질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개인의 고용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임금 또는 보상, 근로시간 또는 근무조건, 고용안정성, 사회보장, 직업훈련, 직업 특성·위세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방하남, 이영면, 김기현, 김한준, 이상호, 2007; 최옥금, 2006). 이 연구는 임금, 고용안정성, 근로시간, 사회보장 4개의 차원에 해당하는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임금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과 저임금 비율 지표를 사용한다. 임금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임금에 각종 급여가 포함된 총 보수(total compensation)를 사용하기도 하지만(Hallock, Jin, & Barrington, 2014), 조사 자료의 특성상 임금(wage)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직관적이고 정확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월 임금을 비교할 수 있지만 월 임금에는 시간당 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한 달에 일한 일 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복지패널의 특성상 월 임금은 지난해 근로소득을 12로 나눠 역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간 근로소득 격차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고, 시간당 임금이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인 비율인 저임금 비율을 두 번째 핵심 지표로 이용하고자 한다.

고용안정은 고용의 질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가 고용안정성을 반영하므로 종사상 지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정규 고용형태의 하나로 분류되는 시간제 일자리의 비율도 비교해 본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에 그치지 않고 취업자 전체의 취업지위와 취업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별 연간 취업개월 수, 월 취

업일수, 연간 근로시간 평균값을 얻는다. 그리고 사회적 보호 격차를 드러내기 위해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사용한다. 이 외에 한국 노동 시장에서는 특히 고용의 질을 잘 대변하는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비율도 살펴본다.

〈표 3-1〉 노동 격차 지표의 선정

구분	지표	측정	실태 분석	격차 분해
고용의 양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 실업자) / 18세 이상 인구	○	×
	실업률	실업자 /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
	고용률	취업자 / 18세 이상 인구	○	○
고용의 질	시간당 임금	총 임금 / 총 근로시간	○	×
	저임금	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	○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	×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	×
	취업 안정성	연간 취업 개월수, 월 취업 일수, 연간 근로시간	○	×
	시간제 근로	파트타임, 동일 사업장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미만	○	×
	사회보험 가입	산재보험 가입, 고용보험 가입	○	×

주: 경제활동지표의 기준은 15세 이상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을 분석 대상으로 함.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2. 노동 격차 분해 모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를 분해할 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격차를 설명하는 이론과 이를 실증 분석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Schur et al.(2017, pp. 483-484)에 따르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

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설명은 크게 비차별 이론(non-discrimination theories)과 차별 이론(discrimination theories)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은 비차별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의 유보 임금(reservation wage)이 고용주가 제안하는 수준보다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취업 시 수급하기 쉬운 장애인 대상의 공적이전, 교통비, 의료비 등 취업 추가 비용이 취업할 의사가 있는 가장 낮은 임금인 유보 임금을 증가시키고 취업 의사를 감소시킨다는 설명이다(Schur et al., 2017, p. 483). 다른 하나의 설명은 장애인이 의료 수요 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다른 일자리에 대한 선호를 가진다는 설명, 즉, 근로시간 유연성 등을 얻기 위해 낮은 임금을 수용한다는 설명이다(Schur et al., 2017, p. 484).

비차별 이론에 배경을 둔 다른 접근에 따르면 장애인의 낮은 임금은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 결과로 장애에 대한 ‘차별’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다. 즉,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 훈련 경험, 신체능력, 건강수준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적 자본 수준이 비장애인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Schur et al., 2017, p. 483). 이 이론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과 임금의 격차를 설명할 때는 교육수준, 노동시장 경험 등 취업과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한 후의 격차를 장애인 차별로 인한 차이로 본다. 하지만 교육 수준과 훈련경험 등이 장애 여부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 또한 장애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향후 격차 분해 및 해석의 과정에서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별 이론은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보수가 고용주들의 낙인과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Becker's model of taste-based discrimination) 또는 장애인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더 낮다고 믿는 데서 오는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의 결과라는 설명이다(Schur et al., 2017,

p. 484). 많은 현장 실험과 연구가 이 이론을 뒷받침하며, 이 연구에서도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과 보수를 생산성 격차와 차별의 결과로 분해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이직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직이 어려워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는 고용주 권력 이론도 차별 이론의 하나이다(Schur et al., 2017, p. 485).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 및 취업,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하여 취업 모형과 저임금 모형을 설정한다. 또한 오욱찬(2011, 2013)의 연구와 같은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모형을 참고하였다. 두 모형의 추정과 격차 분해의 목표는 장애 여부에 의한 노동시장 성과에서의 격차의 크기를 추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과 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과제이다.

취업 모형에서는 성별과 연령이라는 인적 특성 외에 결혼상태(배우자 유무), 가구주 여부, 본인의 연간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2018년 실질가격 기준, 자연로그값)과 같은 가구 특성을 추가로 통제했다. 일반적으로 기혼일 때, 가구주일 때, 그리고 본인 이외의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부양 책임으로 인해 취업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오욱찬, 2011).¹¹⁾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 변수로 학력과 건강상태를 통제했는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건강상태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여 장애로 인한 영향을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되 이를 감안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적자본 특성에 노동시장 경험

11)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부양책임이 커질 수도 있지만(오욱찬, 2011), 경제활동이 가능한 타 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할 필요나 의사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는 가구원 수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구소득과 같은 역할을 순자산이 대신할 수 있는데, 소득이 적을 경우 자산을 처분하여 소득활동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 또는 금융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고 순자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순자산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는 총 경력이 포함되는데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이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이 외에 연도 더미로 집단의 각 시기별 노동시장 고유 상황을 통제한다.

〈표 3-2〉 노동 격차 분해 모형

변수	측정	고용률	저임금 비율
성별	여성(ref.), 남성	○	○
연령	연속변수(만 나이)	○	○
연령 제곱	연속변수(연령×연령)	○	○
배우자	없음(ref.), 있음	○	×
가구주	비가구주(ref.), 가구주	○	×
가구소득	연속변수(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의 로그값)	○	×
학력	중졸 이하(ref.), 고졸, 전문대졸 이상(졸업 기준 최종학력)	○	○
건강상태	좋음(ref.), 보통, 나쁨	○	×
근속기간	연속변수(현 직장 근속연수)	×	○
사업체 규모	1~4인(ref.), 5~9인, 10~49인, 50~299인, 300인 이상	×	○
산업	제조업(ref.), 도소매·운수업,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	○
직종	전문가(ref.),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	×	○
종사상 지위	상용직(ref.), 임시직, 일용직	×	○
연도	2011/2016(ref.), 2012/2017, 2013/2018	○	○

주: ref.는 기준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저임금 모형에서도 성별과 연령과 같은 인적 특성은 공통적인 통제요인이다. 여기에 노동시장 진입 과정 또는 진입 후의 속성으로 장애의 결과변수라고도 볼 수 있는 통제변수(오욱찬, 2013), 즉, 교육수준, 근속기간, 사업체 규모,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도 추가로 통제한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으로 범주화하였고, 근속기간은 근무 시작 시점부터 조사시점 지난해 말까지의 기간을 연수로 환산한 값을 연속변수로 사용했다. 사업체 규모는 장애인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5

인 미만, 5~9인)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 기준(5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 기준인 300인을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다섯 개로 범주화하였다. 산업은 제조업, 도소매·운수업,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의 네 개로, 직종은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의 다섯 개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의 실태와 변화

우선 <표 3-3>과 [그림 3-1]에는 경제활동의 양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2018년 현재 18세 이상 비장애인 고용률은 64.32%, 장애인 38.72%로 25.60%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2011~2018년 이 격차는 21.80~27.22%포인트로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다. 2018년 근로연령대 비장애인 고용률은 69.99%, 장애인은 48.37%로 18세 이상 전체보다는 다소 작은 21.6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으며 추세적 변화를 보이지 않고 20%포인트 초반에서 등락해왔다.¹²⁾ 고령층에서는 비장애인 고용률은 30% 전후, 장애인은 20%대 초반으로 약 10%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고령층 고용률이 매우 낮고, 고령인구 취업에는 노동시장의 특성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보다는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의 국가 간 비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1년 유럽연합 국가에서 장애를 활동제약으로 측정하면 장애인-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가 19.6%포인트인데, 장애를 노동제약으로 측정하면 격차가 29.6%포인트로 나타난다(Jones, 2016). 의학적이며 행정적인 기준으로 측정한 장애 변수를 사용한 이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92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표 3-3〉 경제활동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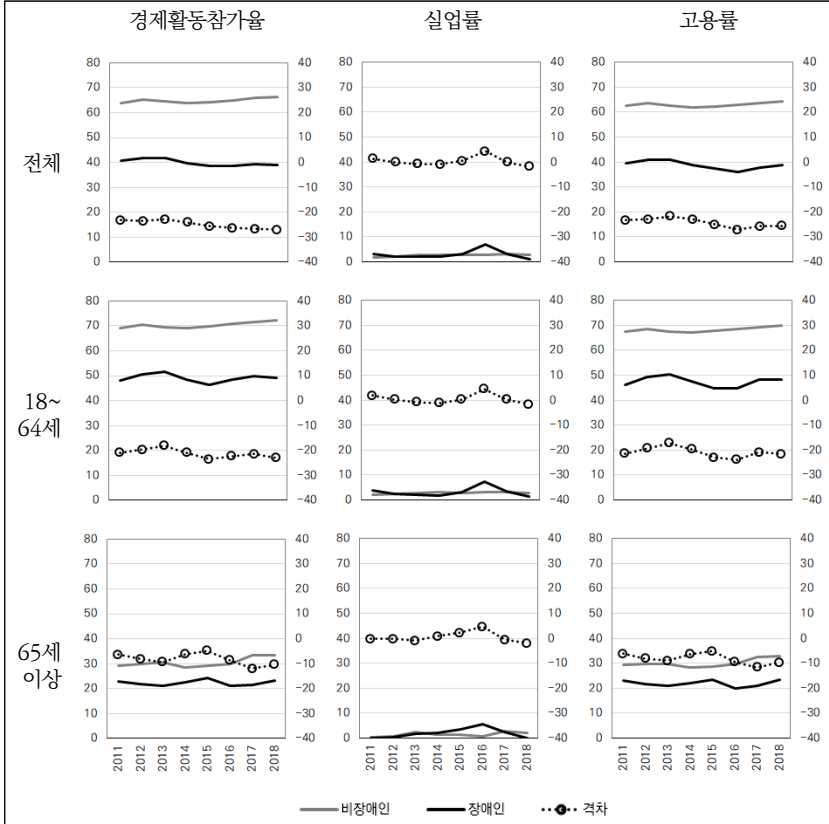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경제 활동 참가율	비장애인	63.94	65.18	64.42	63.74	64.09	64.92	65.89	66.21
		장애인	40.78	41.71	41.67	39.74	38.55	38.61	39.21	39.14
		격차	-23.16	-23.47	-22.75	-24.00	-25.54	-26.31	-26.68	-27.07
		전체	62.24	63.46	62.75	61.96	62.19	62.94	63.91	64.24
	실업률	비장애인	1.90	2.18	2.83	2.92	2.72	2.82	3.21	2.84
		장애인	3.19	2.22	2.08	1.94	3.16	7.09	3.25	1.08
		격차	1.29	0.04	-0.75	-0.98	0.44	4.27	0.04	-1.76
		전체	1.96	2.19	2.80	2.87	2.74	3.02	3.21	2.76
	고용률	비장애인	62.72	63.76	62.60	61.88	62.35	63.09	63.77	64.32
		장애인	39.48	40.79	40.80	38.97	37.33	35.87	37.94	38.72
		격차	-23.24	-22.97	-21.80	-22.91	-25.02	-27.22	-25.83	-25.60
		전체	61.02	62.07	60.99	60.18	60.48	61.04	61.86	62.46
18~ 64세	경제 활동 참가율	비장애인	69.05	70.33	69.53	69.24	69.74	70.70	71.47	72.08
		장애인	48.11	50.67	51.50	48.45	46.23	48.44	50.01	49.04
		격차	-20.94	-19.66	-18.03	-20.79	-23.51	-22.26	-21.46	-23.04
		전체	67.78	69.17	68.48	68.04	68.39	69.43	70.29	70.84
	실업률	비장애인	2.01	2.28	2.86	3.03	2.81	2.96	3.23	2.90
		장애인	3.82	2.57	2.18	1.89	3.06	7.47	3.46	1.36
		격차	1.81	0.29	-0.68	-1.14	0.25	4.51	0.23	-1.54
		전체	2.09	2.29	2.83	2.98	2.82	3.14	3.24	2.84
	고용률	비장애인	67.66	68.73	67.54	67.15	67.77	68.60	69.16	69.99
		장애인	46.27	49.36	50.38	47.53	44.82	44.82	48.29	48.37
		격차	-21.39	-19.37	-17.16	-19.62	-22.95	-23.78	-20.87	-21.62
		전체	66.37	67.58	66.55	66.01	66.46	67.25	68.01	68.82
65세 이상	경제 활동 참가율	비장애인	29.31	29.97	30.63	28.50	29.04	29.84	33.47	33.57
		장애인	23.06	21.86	21.27	22.38	24.31	21.25	21.50	23.28
		격차	-6.25	-8.11	-9.36	-6.12	-4.73	-8.59	-11.97	-10.29
		전체	28.36	28.66	29.09	27.49	28.24	28.36	31.42	31.87
	실업률	비장애인	0.22	0.64	2.44	1.21	1.34	0.78	2.94	2.15
		장애인	0.00	0.42	1.59	2.12	3.50	5.55	2.46	0.12
		격차	-0.22	-0.22	-0.85	0.91	2.16	4.77	-0.48	-2.03
		전체	0.19	0.61	2.34	1.33	1.66	1.40	2.88	1.90
	고용률	비장애인	29.25	29.78	29.88	28.16	28.65	29.61	32.49	32.85
		장애인	23.06	21.77	20.93	21.90	23.46	20.07	20.97	23.26
		격차	-6.19	-8.01	-8.95	-6.26	-5.19	-9.54	-11.52	-9.59
		전체	28.31	28.48	28.41	27.12	27.78	27.97	30.52	31.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3-1] 경제활동 지표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음의 격차는 추세선이 하향할 때 격차가 커지는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4〉는 한국복지패널이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만한 자료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표의 수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공식 통계라 할 수 있다(김호진 외, 2019). 이를 한국복지패널

의 고용률과 비교해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한국복지패널 62.46%, 경제활동인구조사 61.3%, 근로연령층 고용률은 한국복지패널 68.82%, 경제활동인구조사 67.0%로 상당히 유사하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이보다 약간 차이가 나지만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한국복지패널 38.72%,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34.5%, 근로연령층 장애인 고용률은 한국복지패널 48.37%,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49.0%로 근사하다. 한국복지패널은 18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복지패널의 고용률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다.

〈표 3-4〉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한 경제활동 지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	38.5	38.7	37.0
		전체	63.4	63.7	63.9
	실업률	장애인	6.5	5.7	6.6
		전체	3.6	3.6	4.0
	고용률	장애인	36.1	36.5	34.5
		전체	61.1	61.5	61.3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	장애인	53.8	52.2	52.5
		전체	68.9	69.6	69.9
	실업률	장애인	6.7	5.8	6.8
		전체	3.8	3.7	4.2
	고용률	장애인	50.2	49.2	49.0
		전체	66.3	67.0	67.0

주: '장애인'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전체'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출처로 함.

자료: 김호진 외. (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pp. 112~113.

〈표 3-5〉에는 임금 격차를 제시하였다. 2011~2017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시간당 임금 격차는 약 2500~4600원, 2018년 약 3600원

이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이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임금이 최저 시급의 절반만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근로연령층 임금 격차는 전체 연령 보다는 다소 낮은 3천 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해 왔다.

〈표 3-5〉 시간당 임금 및 저임금 비율

(단위: 천 원,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간당 임금	전체	비장애인	13.87	16.50	15.31	14.92	15.68	15.87	17.09	17.52
		장애인	10.24	11.91	12.53	12.38	12.60	12.90	12.69	13.89
		격차	-3.63	-4.59	-2.78	-2.54	-3.08	-2.97	-4.40	-3.63
	18~ 64세	비장애인	14.07	16.79	15.52	15.16	15.86	16.16	17.44	17.97
		장애인	10.91	12.60	13.42	13.22	13.73	14.06	13.24	14.84
		격차	-3.16	-4.19	-2.10	-1.94	-2.13	-2.10	-4.20	-3.13
	65세 이상	비장애인	7.24	7.88	9.55	8.13	10.75	9.11	10.36	9.79
		장애인	4.64	6.46	6.91	7.35	6.57	6.02	9.96	9.90
		격차	-2.60	-1.42	-2.64	-0.78	-4.18	-3.09	-0.40	0.11
저임금 비율	전체	비장애인	26.86	24.89	24.52	23.39	23.01	21.59	21.21	18.85
		장애인	47.92	40.41	41.08	38.70	39.99	41.70	38.93	36.22
		격차	21.06	15.52	16.56	15.31	16.98	20.11	17.72	17.37
	18~ 64세	비장애인	25.31	23.28	22.87	21.70	21.34	19.49	18.80	16.36
		장애인	43.13	35.67	35.24	35.20	33.43	35.42	34.90	28.05
		격차	17.82	12.39	12.37	13.50	12.09	15.93	16.10	11.69
	65세 이상	비장애인	76.94	73.64	70.29	70.72	67.66	70.47	67.90	61.18
		장애인	87.88	77.90	78.18	59.58	75.09	78.71	58.73	70.83
		격차	10.94	4.26	7.89	-11.14	7.43	8.24	-9.17	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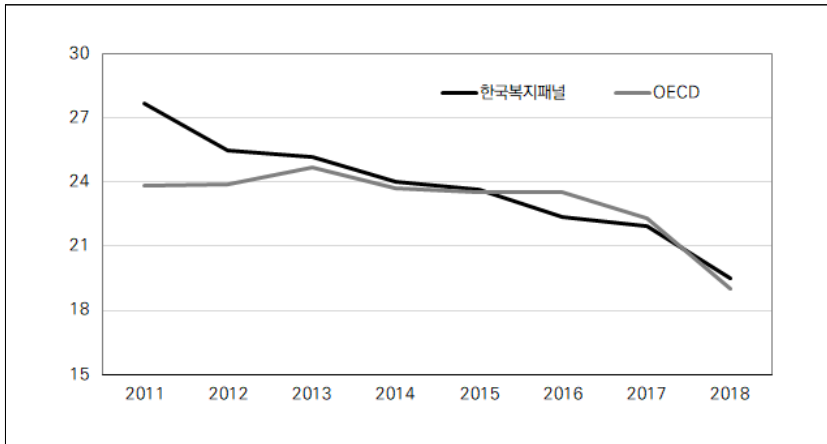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저임금 비율도 꾸준한 격차를 보인다. [그림 3-2]는 OECD의 한국 통계와 한국복지패널로 추정한 저임금 비율을 비교한 것으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2016년 약 23.5%로 일정한 비율을 기록하다 2017년 22.3%로 다소 감소한 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년 19.04%로 급격히 감소했다(OECD, 2020). 한국복지패널

의 저임금 비율 또한 2015~2018년 추이와 값이 매우 근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의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로 다시 돌아오면 비장애인의 저임금 비율은 2015년 23.01%에서 2018년 18.85%로 감소했고, 장애인 39.99%에서 36.22%로 감소했다. 격차는 큰 추세를 보이지 않고 17%포인트 근방에서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저임금 비율의 비교: OECD 통계와 한국복지패널

(단위: %)



주: OECD의 한국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산출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OECD, (2020). Gross earnings: Decile ratios: Incidence of low pa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oi: 10.1787/lfs-data-en

<표 3-6>과 [그림 3-3]은 임금근로자 비율과 임금근로자 전체에서 상용직·임시직·일용직의 비중을 보여준다. 장애인이 자영업과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Jones, 2016, p, 6),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도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비해 임금근로의 비율이 높다. 하지만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임금근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임금근로자 비율의 격차도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3-6〉 임금근로자 비율과 고용형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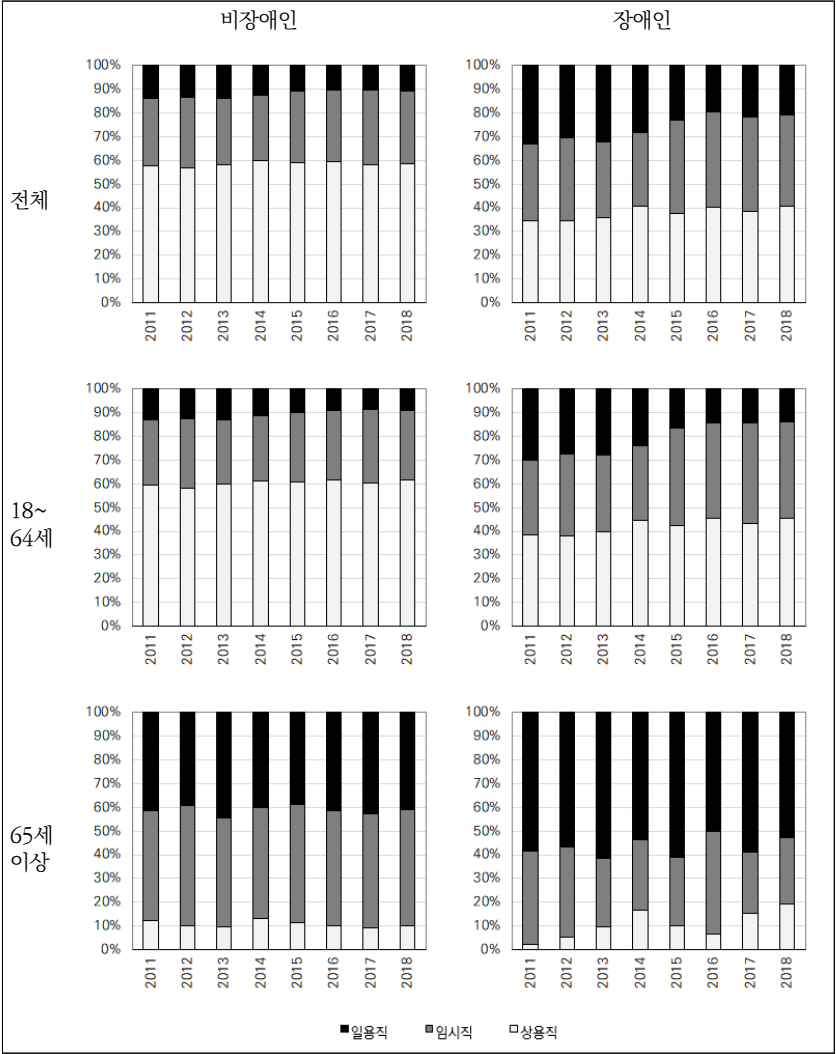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임금 근로자 비율	비장애인	77.44	78.21	77.88	78.58	79.42	79.99	80.72	81.30
		장애인	63.70	65.47	67.66	68.97	70.30	71.09	76.60	72.96
		격차	-13.74	-12.74	-10.22	-9.61	-9.12	-8.90	-4.12	-8.34
	상용·직 비율	비장애인	57.85	56.81	58.04	59.75	58.86	59.50	57.96	58.67
		장애인	34.75	34.50	35.92	40.77	37.51	40.00	38.49	40.62
		격차	-23.10	-22.31	-22.12	-18.98	-21.35	-19.50	-19.47	-18.05
	임시·직 비율	비장애인	28.37	29.84	27.97	27.85	30.36	30.16	31.75	30.63
		장애인	32.32	35.05	31.96	31.14	39.34	40.51	39.84	38.39
		격차	3.95	5.21	3.99	3.29	8.98	10.35	8.09	7.76
	일용·직 비율	비장애인	13.77	13.35	13.99	12.40	10.78	10.35	10.29	10.70
		장애인	32.93	30.45	32.12	28.09	23.15	19.48	21.67	21.00
		격차	19.16	17.10	18.13	15.69	12.37	9.13	11.38	10.30
18~ 64세	임금 근로자 비율	비장애인	79.92	80.51	80.19	80.85	81.77	82.16	82.99	83.28
		장애인	68.70	70.12	70.61	72.98	76.84	76.47	80.86	77.26
		격차	-11.22	-10.39	-9.58	-7.87	-4.93	-5.69	-2.13	-6.02
	상용·직 비율	비장애인	59.26	58.35	59.79	61.41	60.64	61.62	60.46	61.53
		장애인	38.59	38.00	39.87	44.72	42.25	45.50	43.13	45.49
		격차	-20.67	-20.35	-19.92	-16.69	-18.39	-16.12	-17.33	-16.04
	임시·직 비율	비장애인	27.81	29.15	27.33	27.17	29.62	29.36	30.91	29.54
		장애인	31.50	34.68	32.40	31.34	41.18	40.08	42.61	40.76
		격차	3.69	5.53	5.07	4.17	11.56	10.72	11.70	11.22
	일용·직 비율	비장애인	12.93	12.50	12.88	11.41	9.75	9.02	8.63	8.93
		장애인	29.91	27.32	27.73	23.94	16.57	14.42	14.26	13.75
		격차	16.98	14.82	14.85	12.53	6.82	5.40	5.63	4.82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 비율	비장애인	38.62	41.87	43.40	43.93	44.82	49.53	52.68	57.78
		장애인	39.44	42.09	52.92	51.59	47.17	49.85	60.53	58.63
		격차	0.82	0.22	9.52	7.66	2.35	0.32	7.85	0.85
	상용·직 비율	비장애인	12.14	10.20	9.70	13.11	11.19	9.91	9.33	9.89
		장애인	2.23	5.15	9.56	16.54	10.21	6.71	15.10	19.21
		격차	-9.91	-5.05	-0.14	3.43	-0.98	-3.20	5.77	9.32
	임시·직 비율	비장애인	46.63	50.72	45.62	46.94	50.20	48.80	48.11	49.29
		장애인	39.30	38.20	29.06	29.89	28.72	43.16	25.88	27.98
		격차	-7.33	-12.52	-16.56	-17.05	-21.48	-5.64	-22.23	-21.31
	일용·직 비율	비장애인	41.23	39.08	44.68	39.95	38.61	41.29	42.56	40.82
		장애인	58.47	56.64	61.38	53.57	61.07	50.13	59.02	52.81
		격차	17.24	17.56	16.70	13.62	22.46	8.84	16.46	11.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3-3]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분포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하지만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분포는 확연한 격차를 보인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상용직 비율이 평균 20%포인트 가량 낮은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상대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18세 이상의 전체 연령대 기준으로 2011~2014년 장애인의 임시직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3~5%포인트, 일용직 비율이 16~19%포인트 높았는데, 이 격차는 2015~2018년 각각 8~10%포인트, 9~12%포인트로 격차의 양상이 변화했다. 가장 불안정한 일용직 비중의 격차가 약 7%포인트 감소한 반면, 임시직 비중이 약 5%포인트 증가했고,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에 상용직의 비중이 약 5%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안정성이 개선되었음을 말해 준다.

다음 <표 3-7>은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을 보여준다. 장애인의 비임금근로 비율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며, 비장애인의 경우 자영자 비율이 60%를 약간 상회하는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장애인은 70% 전후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연령별로 격차의 방향이 다르고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도 안정감 있는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다.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지위 내에서 장애인이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고, 고용주보다 자영자 비율이 높지만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더 높은 것에 대해 장애인이 더 열악한 취업지위에 놓인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Schur et al.(2017)에 따르면 일자리 선호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에 있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임금근로를 덜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3-7〉 비임금근로자 비율과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임금 근로자 비율	비장애인	22.56	21.79	22.12	21.42	20.58	20.01	19.28	18.70
		장애인	36.30	34.53	32.34	31.03	29.70	28.91	23.40	27.04
		격차	13.74	12.74	10.22	9.61	9.12	8.90	4.12	8.34
	고용주 비율	비장애인	18.17	15.40	16.78	16.27	17.36	18.89	19.25	21.37
		장애인	9.29	12.00	9.27	12.20	9.81	10.03	14.74	13.33
		격차	-8.88	-3.40	-7.51	-4.07	-7.55	-8.86	-4.51	-8.04
	자영자 비율	비장애인	61.66	63.83	62.06	63.34	62.32	61.65	62.00	60.86
		장애인	67.24	64.71	70.39	59.92	65.07	68.42	71.75	73.08
		격차	5.58	0.88	8.33	-3.42	2.75	6.77	9.75	12.22
	무급가 족종사 자비율	비장애인	20.18	20.76	21.16	20.39	20.32	19.46	18.76	17.77
		장애인	23.47	23.29	20.34	27.89	25.12	21.55	13.51	13.60
		격차	3.29	2.53	-0.82	7.50	4.80	2.09	-5.25	-4.17
18~ 64세	비임금 근로자 비율	비장애인	20.08	19.49	19.81	19.15	18.23	17.84	17.01	16.72
		장애인	31.30	29.88	29.39	27.02	23.16	23.53	19.14	22.74
		격차	11.22	10.39	9.58	7.87	4.93	5.69	2.13	6.02
	고용주 비율	비장애인	21.36	17.89	19.64	18.97	20.32	22.04	22.71	24.70
		장애인	11.28	16.44	11.88	16.38	15.71	14.82	22.12	20.61
		격차	-10.08	-1.45	-7.76	-2.59	-4.61	-7.22	-0.59	-4.09
	자영자 비율	비장애인	59.13	62.03	59.56	61.04	59.85	59.40	58.91	57.92
		장애인	66.33	61.43	69.24	54.20	58.51	63.44	68.69	67.77
		격차	7.20	-0.60	9.68	-6.84	-1.34	4.04	9.78	9.85
	무급가 족종사 자비율	비장애인	19.52	20.09	20.79	19.99	19.84	18.56	18.38	17.38
		장애인	22.38	22.13	18.88	29.42	25.78	21.74	9.19	11.62
		격차	2.86	2.04	-1.91	9.43	5.94	3.18	-9.19	-5.76
65세 이상	비임금 근로자 비율	비장애인	61.38	58.13	56.60	56.07	55.18	50.47	47.32	42.22
		장애인	60.56	57.91	47.08	48.41	52.83	50.15	39.47	41.37
		격차	-0.82	-0.22	-9.52	-7.66	-2.35	-0.32	-7.85	-0.85
	고용주 비율	비장애인	1.81	2.26	1.84	2.20	3.00	3.21	3.83	5.77
		장애인	4.29	0.47	1.14	2.07	0.68	1.16	1.24	0.00
		격차	2.48	-1.79	-0.70	-0.13	-2.32	-2.05	-2.59	-5.77
	자영자 비율	비장애인	74.64	73.39	75.09	75.35	74.33	72.84	75.72	74.66
		장애인	69.51	73.23	73.98	73.75	75.23	77.64	77.35	82.79
		격차	-5.13	-0.16	-1.11	-1.60	0.90	4.80	1.63	8.13
	무급가 족종사 자비율	비장애인	23.55	24.35	23.07	22.45	22.66	23.96	20.44	19.58
		장애인	26.21	26.30	24.88	24.18	24.10	21.20	21.42	17.21
		격차	2.66	1.95	1.81	1.73	1.44	-2.76	0.98	-2.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8〉 취업 안정성

(단위: 개월, 일, 시간)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공공·노인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사자
연간 취업 개월 수	전체	비장애인	11.57	10.88	10.59	9.39	11.81	11.78	11.76
		장애인	11.75	11.27	10.88	9.79	11.82	11.67	11.88
		격차	0.18	0.39	0.29	0.40	0.01	-0.11	0.12
	18~ 64세	비장애인	11.56	10.84	10.56	10.21	11.80	11.74	11.73
		장애인	11.77	11.32	10.88	10.72	11.81	11.55	11.86
		격차	0.21	0.48	0.32	0.51	0.01	-0.19	0.13
	65세 이상	비장애인	11.90	11.43	10.94	8.90	11.94	11.92	11.92
		장애인	11.38	10.95	10.90	9.18	12.00	11.89	11.90
		격차	-0.52	-0.48	-0.04	0.28	0.06	-0.03	-0.02
월 취업 일수	전체	비장애인	21.35	21.10	17.85	15.27	24.21	21.95	22.27
		장애인	21.58	21.14	17.17	16.24	23.91	20.88	21.82
		격차	0.23	0.04	-0.68	0.97	-0.30	-1.07	-0.45
	18~ 64세	비장애인	21.35	21.19	17.92	20.02	24.25	22.56	23.14
		장애인	21.60	21.33	16.92	19.99	23.89	22.10	23.12
		격차	0.25	0.14	-1.00	-0.03	-0.36	-0.46	-0.02
	65세 이상	비장애인	20.97	19.87	17.09	12.45	22.78	19.52	18.54
		장애인	21.12	19.91	18.23	13.82	24.32	18.62	19.27
		격차	0.15	0.04	1.14	1.37	1.54	-0.90	0.73
연간 근로 시간	전체	비장애인	2240.9	1955.4	1528.9	806.6	2765.0	2230.6	2033.3
		장애인	2306.2	2126.1	1466.4	788.4	2482.9	2008.1	1873.1
		격차	65.3	170.7	-62.5	-18.2	-282.2	-222.5	-160.2
	18~ 64세	비장애인	2241.2	1940.1	1550.1	1475.4	2774.7	2376.9	2199.9
		장애인	2315.4	2089.7	1501.8	1365.1	2495.3	2304.7	2180.0
		격차	74.1	149.6	-48.3	-110.2	-279.4	-72.2	-20.0
	65세 이상	비장애인	2190.3	2177.5	1284.7	408.7	2428.8	1646.3	1315.4
		장애인	2111.1	2358.9	1316.0	416.4	2154.0	1458.8	1270.6
		격차	-79.2	181.4	31.3	7.7	-274.8	-187.5	-4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14차 원자료.

〈표 3-8〉에서는 개인의 노동소득 및 취업안정성 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간 취업 개월 수, 월평균 취업 일수, 연간 근로시

간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연간 취업 개월 수, 월평균 취업 일수 격차가 거의 없다. 연간 근로시간의 경우, 임금근로자 상용직과 임시직은 장애인의 연간 근로시간이 오히려 길다. 비임금 근로자인 경우만 장애인의 연간 근로시간이 짧는데 이는 비장애인 자영자의 근로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 노동소득의 격차는 노동공급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시간당 보수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지만 근로안정성 측면에서도 비장애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에 제시한 바와 같이 시간제 일자리 비율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시간제 비율이 높지만 근로유연성에 대한 선호가 더 큰 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 해석이 단순하지 않다.

〈표 3-9〉 시간제 근로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8.21	8.31	9.61	9.25	9.16	9.46	10.96	13.11
	장애인	13.70	14.98	13.62	12.24	15.37	19.00	22.49	25.59
	격차	5.49	6.67	4.01	2.99	6.21	9.54	11.53	12.48
18~64세	비장애인	7.85	7.80	8.78	8.48	8.39	8.12	9.17	11.06
	장애인	10.95	12.78	8.97	7.83	8.98	14.08	18.14	18.19
	격차	3.10	4.98	0.19	-0.65	0.59	5.96	8.97	7.13
65세 이상	비장애인	19.96	23.82	32.59	31.07	29.84	40.94	45.81	48.01
	장애인	36.91	33.45	44.63	39.31	52.22	48.80	44.38	58.08
	격차	16.95	9.63	12.04	8.24	22.38	7.86	-1.43	10.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한국 노동시장에서 사업체 규모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대기업과 그 종사자가 가지는 우월한 지위와 영세사업장의 낮은 생존율이 임금과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분

포는 장애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중요하다. <표 3-10>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업장 규모별 임금근로자 분포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기준으로 삼는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비율과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 기준인 50인 이상 및 장애인 의무고용제 부담금 징수 기준인 100인 이상 기업 종사자, 그리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장애인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011~2018년 비장애인에 비해 6~12%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장애인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비장애인에 비해 5~13%포인트 높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취약한 지위와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50인 이상,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비율도 같은 기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각각 4~18%포인트, 8~15%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이 가장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뿐 아니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 50인 이상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그리고 안정적인 추세로 증가하는 것은 장애인의 임금근로자의 취업 지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애인의 상용직 및 임시직 증가, 일용직 비율 감소라는 종사상 지위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사업장 규모별 분포는 종사상 지위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다양한 요소가 임금이라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고 다음의 격차 분해에서는 저임금 비율을 사용한다.

〈표 3-10〉 사업장 규모 분포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300인 이상	비장애인	20.82	20.63	19.50	18.75	17.33	17.99	18.17	19.26
		장애인	8.71	10.31	9.98	11.74	9.36	9.37	10.27	13.34
		격차	-12.11	-10.32	-9.52	-7.01	-7.97	-8.62	-7.90	-5.92
	100인 이상	비장애인	27.76	28.37	26.68	27.02	26.03	26.10	26.65	28.38
		장애인	13.55	13.39	13.24	15.81	12.64	16.11	16.59	20.51
		격차	-14.21	-14.98	-13.44	-11.21	-13.39	-9.99	-10.06	-7.87
	50인 이상	비장애인	34.17	34.64	33.86	34.73	33.36	33.38	34.24	36.05
		장애인	18.49	16.99	18.98	19.44	17.26	23.82	24.84	32.24
		격차	-15.68	-17.65	-14.88	-15.29	-16.10	-9.56	-9.40	-3.81
	5인 미만	비장애인	34.91	34.15	34.88	33.76	32.70	31.63	30.90	30.75
		장애인	47.91	47.37	45.40	42.11	38.72	38.23	36.11	36.62
		격차	13.00	13.22	10.52	8.35	6.02	6.60	5.21	5.87
18~64세	300인 이상	비장애인	22.05	21.74	20.67	19.85	18.32	19.13	19.37	20.29
		장애인	10.23	12.05	11.81	13.50	10.69	10.85	11.65	14.59
		격차	-11.82	-9.69	-8.86	-6.35	-7.63	-8.28	-7.72	-5.70
	100인 이상	비장애인	29.31	29.66	28.11	28.45	27.39	27.46	28.11	29.58
		장애인	15.70	15.44	15.68	17.23	14.04	17.58	17.72	22.57
		격차	-13.61	-14.22	-12.43	-11.22	-13.35	-9.88	-10.39	-7.01
	50인 이상	비장애인	36.02	36.17	35.52	36.46	35.01	34.94	35.93	37.34
		장애인	20.82	18.58	21.63	21.58	18.94	25.39	26.88	34.64
		격차	-15.20	-17.59	-13.89	-14.88	-16.07	-9.55	-9.05	-2.70
	5인 미만	비장애인	32.24	31.81	32.34	31.51	30.29	29.31	28.51	28.64
		장애인	42.41	42.47	41.20	36.82	31.39	31.03	32.27	32.69
		격차	10.17	10.66	8.86	5.31	1.10	1.72	3.76	4.05
65세 이상	300인 이상	비장애인	1.36	2.96	1.95	2.02	2.70	1.96	3.39	7.02
		장애인	1.17	1.41	0.88	4.10	4.71	3.50	5.05	9.16
		격차	-0.19	-1.55	-1.07	2.08	2.01	1.54	1.66	2.14
	100인 이상	비장애인	3.35	7.92	5.30	5.24	6.07	6.86	8.56	14.20
		장애인	2.84	2.89	1.05	9.63	7.71	10.33	12.32	13.65
		격차	-0.51	-5.03	-4.25	4.39	1.64	3.47	3.76	-0.55
	50인 이상	비장애인	5.15	10.56	9.06	8.30	8.97	11.40	13.32	20.76
		장애인	6.88	8.86	5.71	10.21	11.35	17.65	17.15	24.23
		격차	1.73	-1.70	-3.35	1.91	2.38	6.25	3.83	3.47
	5인 미만	비장애인	77.09	71.18	72.85	67.99	68.32	64.40	60.47	55.72
		장애인	75.23	72.49	66.34	65.03	64.42	66.64	50.61	49.73
		격차	-1.86	1.31	-6.51	-2.96	-3.90	2.24	-9.86	-5.99

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부담금 징수 기준은 100인 이상, 의무고용제 적용 기준은 50인 이상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마지막으로 <표 3-11>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보호를 반영하는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를 살펴본다. 사회적 보호, 복지 혜택의 차이를 보기 위해 주로 사회보험 가입률, 육아휴직 사용률, 유급휴가·병가 적용률 등을 주로 살펴보는데 육아휴직이나 유급휴가 적용률 등은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노동자의 지위 차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임금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 격차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연령층 위주로 살펴본다.

<표 3-11>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산재보험	비장애인	47.94	49.29	50.08	51.63	53.43	54.68	55.43	56.32
		장애인	35.97	37.43	42.36	47.76	45.77	47.35	51.39	47.68
		격차	-11.97	-11.86	-7.72	-3.87	-7.66	-7.33	-4.04	-8.64
	고용보험	비장애인	45.24	47.12	48.62	49.53	51.38	52.18	53.10	53.57
		장애인	29.91	31.75	37.76	41.21	41.34	42.99	44.46	40.81
		격차	-15.33	-15.37	-10.86	-8.32	-10.04	-9.19	-8.64	-12.76
18~64세	산재보험	비장애인	50.08	51.46	52.43	53.91	55.91	57.21	58.11	59.16
		장애인	41.69	42.44	47.74	54.38	55.18	56.26	59.93	54.87
		격차	-8.39	-9.02	-4.69	0.47	-0.73	-0.95	1.82	-4.29
	고용보험	비장애인	48.12	50.11	51.42	52.36	54.50	55.46	56.76	57.26
		장애인	36.07	38.07	43.75	50.00	51.82	52.78	54.13	51.86
		격차	-12.05	-12.04	-7.67	-2.36	-2.68	-2.68	-2.63	-5.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11>에서 근로연령층 산재보험 가입률 격차를 보면 장애인 가입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간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도별로 가입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1%포인트 미만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

는 종사상 지위나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분포로 예측이 가능하고 그 격차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분해

1.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변화

2011~2013년, 2016~2018년 두 시기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저임금 비율 격차와 그 변화는 <표 3-12>와 같다. 고용률 격차 변화를 살펴보면, 2011~2013년 22.66%포인트였던 격차는 2016~2018년 26.23%포인트로 커졌다. 근로연령층과 고령층도 고용률 격차가 커지는 유사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연령대와 무관하게 비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한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일관되게 감소한 까닭이다.

저임금 비율의 격차 변화를 살펴보면, 2011~2013년 17.59%포인트 이던 격차는 2016~2018년 18.37%포인트로 약간 더 커졌다. 2018년 저임금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쳐 두 시기 비장애인의 저임금 비율은 4.88%포인트, 장애인은 4.11%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장애인의 저임금 비율 감소폭이 비장애인보다 약간 적은 탓에 저임금 비율 격차는 소폭 증가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18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에게 나타난 변화는 근로연령층 저임금 비율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저임금 비율의 대폭 감소와 저임금 비율 격차의 소폭 증가가 그것이다. 하지만 고령층의 저임금 비율 변화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저임금 비율은 장애인

과 비장애인 모두에게서 크게 감소하지만 장애인의 저임금 비율 감소가 훨씬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고령층 저임금 비율 격차는 오히려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근로연령층의 비중이 크고 고령 장애인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불안정하고(40%대에서 58%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 관측치가 적기 때문에 전체 저임금 비율 격차는 근로연령층의 변화를 반영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고용률			저임금 비율		
		2011~2013	2016~2018	변화	2011~2013	2016~2018	변화
전체 (18세 이상)	비장애인	63.03	63.73	0.71	25.41	20.52	-4.88
	장애인	40.36	37.50	-2.86	43.00	38.89	-4.11
	격차	-22.66	-26.23	-3.57	17.59	18.37	0.77
18~64세	비장애인	67.98	69.25	1.28	23.80	18.20	-5.61
	장애인	48.66	47.12	-1.53	37.89	32.83	-5.06
	격차	-19.32	-22.13	-2.81	14.09	14.64	0.55
65세 이상	비장애인	29.64	31.70	2.06	73.42	65.98	-7.45
	장애인	21.87	21.45	-0.42	80.83	68.66	-12.17
	격차	-7.77	-10.24	-2.47	7.40	2.68	-4.72

주: 격차 분해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제한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 장애인-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분해

가. 고용률

고용률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Oaxaca-Blinder 격차 분해 결과를 〈표 3-15〉에 제시하였다. 2011~2013년 장애인의 고용률은 비장애

인에 비해 22.66%포인트 낮는데, 이 중에서 8.24%포인트는 특성 효과, 14.42%포인트는 계수 효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 중 약 36%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발생하며, 나머지 약 64%는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을 포함한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2016~2018년의 고용률 격차는 26.23%포인트로 2011~2013년보다 격차가 더 커졌으며, 이중 10.86%포인트는 특성 효과, 15.37%포인트는 계수 효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계수 효과의 기여율이 이전 시기보다 약간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격차의 59%를 설명한다. 두 시기 간 취업률 격차는 증가했으며, 특성 차이를 제외한 차별 효과의 영향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반의 격차를 설명한다.

두 시기 모두 특성 효과에서 건강상태, 연령, 학력이 격차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건강상태 기여율이 가장 높는데 <표 3-13>의 기술통계를 보면 비장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10%인데 비해 장애인은 41~44%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11~2013년보다 2016~2018년에 이 분포의 차이가 다소 감소했으나 건강상태 차이로 인한 고용률 격차는 각각 6.10%포인트와 6.61%포인트로 매우 크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 불가피하고 이것이 낮은 고용률을 설명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건강상태의 높은 고용률 격차 설명력은 고용률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중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으로 <표 3-13>의 기술통계를 보면 비장애인 평균 연령은 44~46세, 장애인은 56~58세로 평균 연령 차이가 약 12세다. 장애인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높는데, 이 특성 차이가 고용률 격차를 상당 부분 설명한다. <표 3-14>의 고용률 모형에서 장애인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률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비장애인의 경우 연령과 연령 제곱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부(-)의 효과를 보여 널리 알려진 2차 함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학력 수준 또한 격차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장애인에 비해 비장애인이 고용률이 높은 전문대졸 이상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연령과 학력, 건강상태 모두 비장애인 모형 추정 결과 및 분해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다.

〈표 3-13〉 고용률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32	0.4154	0.5088	0.4140
	남성	0.4868	0.5846	0.4912	0.5860
연령		44.14	56.05	45.90	58.10
연령 제곱		2220.60	3382.29	2394.00	3638.14
배우자	없음	0.3805	0.3811	0.3963	0.4497
	있음	0.6195	0.6189	0.6037	0.5503
가구주	비가구주	0.5806	0.4359	0.5708	0.4479
	가구주	0.4194	0.5641	0.4292	0.5521
로그 가구소득		7.14	7.16	7.33	7.35
학력	중졸 이하	0.2342	0.5492	0.2028	0.5015
	고졸	0.4059	0.3010	0.3891	0.3276
	전문대졸 이상	0.3599	0.1498	0.4081	0.1709
건강상태	좋음	0.7489	0.3034	0.7453	0.3269
	보통	0.1487	0.2522	0.1584	0.2677
	나쁨	0.1024	0.4444	0.0963	0.4053
연도	2011/2016	0.3286	0.3279	0.3302	0.3359
	2012/2017	0.3338	0.3339	0.3329	0.3335
	2013/2018	0.3376	0.3381	0.3369	0.3306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14〉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625 *** (0.011)	0.0567 (0.035)	0.0528 *** (0.011)	0.0223 (0.038)
연령	0.0443 *** (0.002)	0.0087 (0.006)	0.0446 *** (0.002)	0.0021 (0.006)
연령 제곱	-0.0005 *** (0.000)	-0.0001 ** (0.000)	-0.0005 *** (0.000)	-0.0001 *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021 (0.011)	0.1856 *** (0.031)	0.0050 (0.012)	0.2379 *** (0.032)
가구주 (ref. 비가구주)	0.1583 *** (0.011)	0.1396 *** (0.034)	0.1520 *** (0.012)	0.1925 *** (0.035)
로그 가구소득	-0.0226 *** (0.001)	-0.0400 *** (0.007)	-0.0209 *** (0.001)	-0.0388 *** (0.007)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096 (0.012)	0.0049 (0.036)	0.0015 (0.013)	-0.0496 (0.037)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810 *** (0.013)	0.0138 (0.047)	0.0604 *** (0.015)	0.0294 (0.050)
건강상태 보통 (ref. 좋음)	-0.0516 *** (0.009)	-0.0862 ** (0.031)	-0.0646 *** (0.011)	-0.1036 ** (0.034)
건강상태 나쁨 (ref. 좋음)	-0.1627 *** (0.012)	-0.2825 *** (0.032)	-0.1912 *** (0.014)	-0.2559 *** (0.035)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18 * (0.005)	0.0230 (0.014)	0.0044 (0.005)	0.0219 (0.016)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39 (0.006)	0.0274 (0.017)	0.0191 ** (0.006)	0.0476 ** (0.018)
상수	-0.1954 *** (0.037)	0.5640 ** (0.174)	-0.2101 *** (0.038)	0.7372 *** (0.173)
F	728.87 ***	67.25 ***	589.87 ***	72.06 ***
R제곱	0.2655	0.2578	0.2563	0.2683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15〉 고용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2266	(0.017) ***	-0.2623	(0.019) ***
	특성 효과	-0.0824	(0.010) ***	-0.1086	(0.011) ***
	계수 효과	-0.1442	(0.016) ***	-0.1537	(0.017)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61	(0.002) ***	0.0050	(0.001) **
	연령	-0.0341	(0.007) ***	-0.0509	(0.008) ***
	배우자	0.0000	(0.000)	-0.0003	(0.001)
	가구주	0.0229	(0.003) ***	0.0187	(0.004) ***
	가구소득	-0.0004	(0.002)	-0.0004	(0.001)
	학력	-0.0160	(0.004) ***	-0.0144	(0.004) **
	건강상태	-0.0610	(0.005) ***	-0.0661	(0.006) ***
	연도	0.0000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영향력이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본인을 제외한 가구소득의 영향도 격차를 크게 하는 요인이다. 〈표 3-14〉의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소득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클수록 고용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영향은 장애인에게 더욱 커 본인 제외 가구소득이 클수록 장애인 본인의 고용률은 낮다는 가설에 부합한다. 〈표 3-13〉의 기술통계에서 가구소득의 로그값은 장애인 가구에서 두 시기 모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격차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률 격차를 낮추는 요인은 가구주 여부와 성별이다. 장애인이 가구주인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12~14%포인트 높고 추정 모형 결과 가구주일수록 고용 확률도 높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성별은 효과가 크지 않지만 고용률이 높은 남성의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서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해 결과가 도출된다.

정리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취업률 격차는 22.66~26.23%포인트로 두 시기에 다소 증가했다. 여기서 특성 효과가 설명하는 부분은 전체 격차의 3분의 1에서 5분의 2 정도이고,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효과가 과반이다. 이 중 장애와 인과성이 없는 성과 연령을 제외하고는 특성 효과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학력과 건강상태는 장애의 결과변수라고도 볼 수 있어 고용률 격차에서 장애차별의 영향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18>에서 근로연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고용률 격차를 보면 2011~2013년 19.32%포인트에서 2016~2018년 22.13%포인트로 2.81%포인트 증가했다.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와 격차 분해 결과를 전체 연령과 비교해보면, 전체 고용률 격차는 전체 연령층 격차보다는 약간 작다. 하지만 격차가 특성 효과로 설명되는 비율이 전체 격차에서 14.33~16.67%로 전체 연령층의 특성 효과(36.36~41.41%)보다 훨씬 작다. 즉 고용률 격차를 낳는 노동시장의 장애차별 또는 특성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효과가 더 크다는 의미다.

근로연령층 고용률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건강상태와 학력이다. 건강상태는 전체 격차의 3분의 1, 특성 효과의 2배 가량을 설명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이는 모형 추정 결과 건강상태가 고용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비장애인 중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80% 이상을 구성하는 등 특성의 차이가 18세 이상 전체 연령보다 더 큰 까닭이다. 학력 역시 격차를 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두 시기 동일한 크기의 격차(1.43%포인트)를 설명한다. 다만 전체 연령보다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커졌으나, 2016~2018년 장애인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까닭에 2011~2013년보다 격차를 만드는 데 기여한 비중이 약간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표 3-16〉 고용률 모형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12	0.3711	0.4947	0.3627
	남성	0.4988	0.6289	0.5053	0.6373
연령		39.78	48.37	41.06	48.53
연령 제곱		1741.43	2482.31	1855.42	2505.03
배우자	없음	0.3787	0.3998	0.4002	0.4987
	있음	0.6213	0.6002	0.5998	0.5013
가구주	비가구주	0.6098	0.4669	0.6073	0.5016
	가구주	0.3902	0.5331	0.3927	0.4984
로그 가구소득		7.11	7.08	7.29	7.26
학력	중졸 이하	0.1569	0.4325	0.1168	0.3481
	고졸	0.4435	0.3831	0.4233	0.4257
	전문대졸 이상	0.3996	0.1844	0.4598	0.2262
건강상태	좋음	0.8173	0.3771	0.8217	0.4223
	보통	0.1245	0.2603	0.1268	0.2591
	나쁨	0.0582	0.3626	0.0515	0.3186
연도	2011/2016	0.3288	0.3362	0.3323	0.3432
	2012/2017	0.3344	0.3334	0.3330	0.3313
	2013/2018	0.3367	0.3305	0.3347	0.3255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가구주 여부, 연령, 성별 등인데, 가구주 여부와 성별은 전체 연령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고용률이 높은 가구주와 남성의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에게서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연령에서는 나이가 격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반해 근로연령층에서는 격차를 완화시키는 요인인데, 근로연령층에서도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비장애인보다 7~8세 높지만 고용률이 높은 중장년층 비중이 높아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본인을 제외한 가구의 가처분소득 역시 분해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전체 연

령과 달리 격차를 완화하는 요인이다. 장애인의 본인 제외 가구소득이 비 장애인보다 더 낮다는 차이 때문이다.

〈표 3-17〉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519 *** (0.012)	0.1169 * (0.046)	0.0449 *** (0.013)	0.1017 (0.055)
연령	0.0590 *** (0.003)	0.0234 * (0.010)	0.0599 *** (0.003)	-0.0047 (0.012)
연령 제곱	-0.0007 *** (0.000)	-0.0003 *** (0.000)	-0.0007 *** (0.000)	0.0000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357 ** (0.012)	0.2209 *** (0.040)	-0.0292 * (0.013)	0.2999 *** (0.047)
가구주 (ref. 비가구주)	0.1957 *** (0.013)	0.1361 ** (0.048)	0.1859 *** (0.014)	0.1945 *** (0.053)
로그 가구소득	-0.0169 *** (0.001)	-0.0337 *** (0.007)	-0.0154 *** (0.001)	-0.0352 *** (0.008)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161 (0.014)	0.0111 (0.043)	0.0081 (0.016)	-0.0141 (0.049)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710 *** (0.015)	0.0227 (0.057)	0.0615 *** (0.019)	0.0540 (0.063)
건강상태 보통 (ref. 좋음)	-0.0428 *** (0.010)	-0.0749 * (0.038)	-0.0541 *** (0.014)	-0.0680 (0.044)
건강상태 나쁨 (ref. 좋음)	-0.1982 *** (0.018)	-0.2928 *** (0.041)	-0.2360 *** (0.020)	-0.2319 *** (0.051)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25 * (0.005)	0.0314 (0.020)	0.0020 (0.006)	0.0410 (0.023)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31 (0.006)	0.0425 (0.024)	0.0170 * (0.007)	0.0580 * (0.027)
상수	-0.4855 *** (0.052)	0.1692 (0.235)	-0.5276 *** (0.055)	0.7075 * (0.275)
F	350.58 ***	39.20 ***	278.31 ***	37.83 ***
R제곱	0.2351	0.2602	0.2204	0.2746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18〉 고용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932 (0.023) ***	-0.2213 (0.026) ***
	특성 효과	-0.0277 (0.012) *	-0.0369 (0.014) **
	계수 효과	-0.1655 (0.022) ***	-0.1844 (0.025)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67 (0.002) ***	0.0059 (0.002) **
	연령	0.0169 (0.007) *	0.0189 (0.007) *
	배우자	0.0008 (0.001)	0.0029 (0.002)
	가구주	0.0280 (0.005) ***	0.0196 (0.006) **
	가구소득	0.0005 (0.002)	0.0004 (0.002)
	학력	-0.0143 (0.004) **	-0.0143 (0.005) **
	건강상태	-0.0662 (0.007) ***	-0.0702 (0.008) ***
	연도	0.0000 (0.000)	-0.0002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21〉에서 고령층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와 격차 분해 결과를 전체 연령과 비교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는 7.77~10.24%포인트로 훨씬 작다. 대부분의 격차는 특성 차이가 설명하지 못하는 계수 효과다.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의 차이가 고용률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그리고 성별도 다른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격차를 완화하는데, 고령층에서는 고용률이 더 높은 비장애인 남성 비중은 감소하고, 고용률이 더 높은 장애인 여성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령과 학력은 분해 결과 유의하지 않지만 격차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 3-20〉의 모형 추정 결과에서도 연령과 학력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연령층과는 반대로 나타난다. 비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감소하고 비장애인 고학력자의 경우 은퇴 연령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근로연령층과 차이를 드

러낸다.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구분하여 고용률 모형을 추정하고 격차 분해한 결과, 고용률 결정에 있어서 두 연령 집단은 매우 다른 결정 방식을 가진다. 따라서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두 집단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고용률 격차를 완화할 필요성은 근로연령층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근로연령층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3-19〉 고용률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0	0.5142	0.5907	0.4995
	남성	0.4060	0.4858	0.4093	0.5005
연령		73.55	73.17	73.98	74.06
연령 제곱		5451.71	5388.35	5519.80	5528.07
배우자	없음	0.3924	0.3392	0.3738	0.3681
	있음	0.6076	0.6608	0.6262	0.6319
가구주	비가가구주	0.3840	0.3668	0.3590	0.3584
	가구주	0.6160	0.6332	0.6410	0.6416
로그 가구소득		7.39	7.34	7.61	7.51
학력	중졸 이하	0.7554	0.8093	0.7019	0.7573
	고졸	0.1523	0.1181	0.1901	0.1640
	전문대졸 이상	0.0923	0.0726	0.1080	0.0787
건강상태	좋음	0.2872	0.1392	0.3018	0.1678
	보통	0.3119	0.2343	0.3420	0.2821
	나쁨	0.4009	0.6266	0.3562	0.5501
연도	2011/2016	0.3272	0.3095	0.3177	0.3238
	2012/2017	0.3295	0.3352	0.3327	0.3372
	2013/2018	0.3433	0.3553	0.3496	0.3390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20〉 고용률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1195 *** (0.019)	-0.0167 (0.035)	0.0971 *** (0.024)	-0.0512 (0.033)
연령	-0.1172 *** (0.016)	-0.0019 (0.043)	-0.0724 *** (0.018)	0.0100 (0.041)
연령 제곱	0.0007 *** (0.000)	0.0000 (0.000)	0.0004 *** (0.000)	-0.0001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955 *** (0.019)	0.1472 *** (0.032)	0.0880 *** (0.022)	0.1527 *** (0.035)
가구주 (ref. 비가구주)	0.0497 *** (0.018)	0.1345 *** (0.033)	0.0878 *** (0.022)	0.1558 *** (0.036)
로그 가구소득	-0.0610 *** (0.008)	-0.0340 (0.020)	-0.0398 *** (0.009)	-0.0218 (0.019)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487 * (0.023)	-0.0611 (0.048)	-0.0327 (0.026)	-0.0982 * (0.047)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545 *** (0.032)	-0.0721 (0.078)	-0.2133 *** (0.033)	0.0191 (0.090)
건강상태 보통 (ref. 좋음)	-0.0304 (0.016)	-0.0645 (0.042)	-0.0452 * (0.018)	-0.1349 ** (0.051)
건강상태 나쁨 (ref. 좋음)	-0.1059 *** (0.016)	-0.2138 *** (0.041)	-0.1419 *** (0.019)	-0.2656 *** (0.046)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10 (0.007)	-0.0038 (0.013)	0.0227 ** (0.008)	-0.0046 (0.015)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48 (0.009)	-0.0134 (0.018)	0.0370 *** (0.010)	0.0335 (0.018)
상수	5.7257 *** (0.621)	0.7259 (1.653)	3.9033 *** (0.706)	0.3693 (1.617)
F	63.84 ***	9.85 ***	64.90 ***	10.88 ***
R제곱	0.1570	0.1077	0.1604	0.1444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21〉 고용률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777 (0.017) ***	-0.1024 (0.020) ***
	특성 효과	0.0047 (0.009)	-0.0078 (0.010)
	계수 효과	-0.0824 (0.017) ***	-0.0947 (0.019)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95 (0.003) **	0.0089 (0.003) **
	연령	0.0030 (0.005)	-0.0029 (0.006)
	배우자	0.0051 (0.002) *	0.0005 (0.002)
	가구주	0.0009 (0.001)	0.0001 (0.002)
	가구소득	0.0029 (0.003)	0.0037 (0.002) *
	학력	0.0047 (0.003)	0.0071 (0.004)
	건강상태	-0.0215 (0.003) ***	-0.0248 (0.004) ***
	연도	0.0002 (0.000)	-0.0003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근로연령층에서 격차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상태와 학력 차이이다. 건강상태의 경우 장애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어 정책적 개입에 한계가 있지만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며, 재활을 통한 장애 정도 완화 및 고용서비스에 건강관리 요소를 연계해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학력 차이는 많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고령층의 고용률 격차에 대한 이해는 근로연령층과는 다를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저학력, 저소득 장애 노인이 원치 않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애 여부보다 고령층의 취업 전체를 하나의 틀거리에서 접근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저임금 비율

다음 <표 3-24>는 저임금 비율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분해 결과를 제시했다. 2011~2013년 장애인의 저임금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17.67%포인트 높으며, 이중 12.25%포인트는 특성 효과, 5.42%포인트는 계수 효과로 각각 69%, 31%의 기여율을 차지한다. 2016~2018년에는 격차가 18.33%포인트로 소폭 증가했으며, 10.07%포인트는 특성 효과, 8.26%포인트는 계수 효과로 각각 55%, 45%의 기여율을 차지한다. 2011~2013년에 비해 저임금 비율 격차는 더 커졌고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계수 효과의 기여도는 31%에서 45%로 증가해 임금 결정에 있어 장애로 인한 차별은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성 효과에서 장애인이 저임금일 확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학력,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가 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저임금 확률 또한 연령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곡선 형태이므로 평균적으로 저임금일 위험이 높아지는 중장년 연령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2018년에 장애인, 비장애인 임금근로자 모두 고령화되어 연령이 격차를 심화하는 효과가 증가하였다.

장애인은 학력이 낮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확률이 비장애인의 2배 이상 높으며(전문직 비율 낮음), 임시·일용직 비율 및 10인 미만 사업체에 분포할 확률이 뚜렷이 높다. 학력,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는 추정 모형에서 두 시기 모두 매우 유의하게 저임금 비율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 네 가지 변수가 전체 특성 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2013년 99.77%, 2016~2018년 79.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연령, 학력,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중 연령을 제외하고는 장애 여부와 인과관계를 갖는 특성이므로 계수 효과뿐만 아니라 특성 효과를 통해서도 장애가 큰 격차를 낳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근속기간과 산업은 저임금 비율 추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분해 결과 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산업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저임금 확률이 낮은 제조업에 비장애인보다 많이 분포하면서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성별은 저임금 비율의 격차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여성이 저임금일 확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높지만 장애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를 완화하는 영향을 미쳤다.

두 시기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2018년에는 연령 효과가 증가했지만, 학력과 사업체 규모의 효과는 감소하고 직종의 효과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전문대졸 이상, 5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 임금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학력과 사업체 규모가 만드는 격차의 크기는 감소했다. 또한 두 시기 비장애인 직종 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장애인 직종 분포는 크게 변화했다. 단순노무 및 기능직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사무직과 판매직 비중이 증가했으며, 단순노무직이 저임금일 확률도 감소했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임금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분포도 비장애인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장애인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공공서비스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공공서비스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저임금 확률이 높은 공공서비스 분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저임금 비율을 완화하는 작용을 했던 산업의 영향이 감소, 격차 완화 효과가 감소했다.

〈표 3-22〉 저임금 비율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4305	0.2473	0.4433	0.2872
	남성	0.5695	0.7527	0.5567	0.7128
연령		41.01	50.13	43.07	52.62
연령 제곱		1825.48	2669.30	2020.48	2943.64
학력	중졸 이하	0.1261	0.3954	0.1099	0.3597
	고졸	0.3846	0.3707	0.3664	0.3402
	전문대졸 이상	0.4893	0.2339	0.5237	0.3001
근속기간		6.47	7.11	6.71	7.15
사업체 규모	1~4인	0.1788	0.2146	0.1601	0.1756
	5~9인	0.1467	0.1919	0.1463	0.1266
	10~49인	0.2355	0.3211	0.2666	0.3248
	50~299인	0.1790	0.1213	0.1989	0.2195
	300인 이상	0.2600	0.1512	0.2282	0.1535
산업	제조업	0.3180	0.3913	0.3047	0.3443
	도소매·운수업	0.1536	0.1173	0.1566	0.0721
	공공서비스	0.2329	0.1957	0.2564	0.3138
	개인서비스	0.2955	0.2957	0.2823	0.2699
직종	전문가	0.2546	0.1008	0.2602	0.1197
	사무직	0.2056	0.1090	0.2126	0.1312
	서비스·판매직	0.1727	0.0771	0.1646	0.1078
	기능직	0.1833	0.2606	0.1729	0.2357
	단순노무	0.1837	0.4525	0.1897	0.4056
종사상 지위	상용직	0.5780	0.3608	0.5869	0.4051
	임시직	0.2857	0.3099	0.3085	0.3826
	일용직	0.1363	0.3293	0.1046	0.2123
연도	2011/2016	0.3244	0.3127	0.3242	0.3124
	2012/2017	0.3390	0.3332	0.3334	0.3539
	2013/2018	0.3366	0.3541	0.3425	0.3338
사례수		15104	758	13940	67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23〉 저임금 비율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1377 *** (0.010)	-0.2714 *** (0.058)	-0.0930 *** (0.010)	-0.0874 (0.064)
연령	-0.0253 *** (0.002)	-0.0372 *** (0.011)	-0.0252 *** (0.002)	-0.0317 * (0.012)
연령 제곱	0.0003 *** (0.000)	0.0004 *** (0.000)	0.0003 *** (0.000)	0.0003 *** (0.000)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560 *** (0.018)	-0.0511 (0.056)	-0.0784 *** (0.021)	-0.0945 (0.070)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471 *** (0.020)	0.0173 (0.072)	-0.1346 *** (0.023)	-0.0601 (0.087)
근속기간	-0.0060 *** (0.001)	-0.0068 * (0.003)	-0.0039 *** (0.001)	-0.0042 (0.003)
사업체 규모 5~9인 (ref. 1~4인)	-0.0586 *** (0.016)	-0.0230 (0.056)	-0.0753 *** (0.018)	0.0266 (0.088)
사업체 규모 10~49인 (ref. 1~4인)	-0.0901 *** (0.015)	-0.0409 (0.050)	-0.1164 *** (0.017)	-0.0346 (0.062)
사업체 규모 50~299인 (ref. 1~4인)	-0.1097 *** (0.016)	-0.0179 (0.070)	-0.1188 *** (0.017)	-0.0550 (0.079)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ref. 1~4인)	-0.1046 *** (0.016)	-0.1492 * (0.066)	-0.1168 *** (0.017)	-0.1649 (0.085)
산업 도소매·운수업 (ref. 제조업)	0.0881 *** (0.015)	0.0720 (0.081)	0.0692 *** (0.014)	0.3294 * (0.136)
산업 공공서비스 (ref. 제조업)	0.0674 *** (0.012)	0.1961 *** (0.066)	0.0509 *** (0.012)	0.1626 * (0.080)
산업 개인서비스 (ref. 제조업)	0.0780 *** (0.011)	0.1376 *** (0.049)	0.0750 *** (0.012)	0.0430 (0.070)
직종 사무직 (ref. 전문가)	0.0158 (0.011)	0.2323 *** (0.087)	0.0280 *** (0.010)	-0.0431 (0.076)
직종 서비스·판매직 (ref. 전문가)	0.1511 *** (0.016)	0.3212 *** (0.102)	0.1490 *** (0.017)	0.2595 * (0.123)
직종 기능직 (ref. 전문가)	0.0501 *** (0.015)	0.2005 * (0.088)	0.0046 (0.014)	0.0025 (0.087)
직종 단순노무 (ref. 전문가)	0.2235 *** (0.018)	0.4398 *** (0.090)	0.1427 *** (0.018)	0.3442 *** (0.099)
종사상 지위 임시직 (ref. 상용직)	0.1155 *** (0.013)	0.2407 *** (0.059)	0.1301 *** (0.013)	0.1208 (0.075)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종사상 지위 일용직 (ref. 상용직)	0.1333 *** (0.017)	0.1415 * (0.057)	0.1605 *** (0.020)	0.0350 (0.084)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203 ** (0.007)	-0.0742 * (0.033)	-0.0102 (0.007)	-0.0378 (0.039)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97 * (0.008)	-0.0603 (0.039)	-0.0354 *** (0.008)	-0.0468 (0.039)
상수	0.8327 *** (0.057)	1.1275 *** (0.336)	0.8000 *** (0.052)	1.0276 ** (0.351)
F	241.26 ***	40.54 ***	157.03 ***	20.76 ***
R제곱	0.3561	0.5026	0.3210	0.3999
사례수	15104	758	13940	675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24〉 저임금 비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767 (0.032) ***	0.1833 (0.034) ***
	특성 효과	0.1225 (0.020) ***	0.1007 (0.019) ***
	계수 효과	0.0542 (0.024) *	0.0826 (0.028)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252 (0.005) ***	-0.0145 (0.004) ***
	연령	0.0352 (0.007) ***	0.0403 (0.008) ***
	학력	0.0384 (0.007) ***	0.0322 (0.007) ***
	근속기간	-0.0038 (0.004)	-0.0017 (0.003)
	사업체 규모	0.0074 (0.003) *	0.0010 (0.003)
	산업	-0.0057 (0.003)	-0.0039 (0.003)
	직종	0.0480 (0.009) ***	0.0203 (0.007) **
	종사상 지위	0.0285 (0.006) ***	0.0269 (0.006) ***
	연도	-0.0002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근로연령층의 저임금 확률 모형 추정 결과와 격차 분해 결과는 전체 연령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표 3-27>을 보면 2011~2013년에 장애인의 저임금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14.22%포인트 높으며, 이중 8.53%포인트는 특성 효과, 5.69%포인트는 계수 효과로 전체 격차에서 각각 60%, 40%를 설명한다. 2016~2018년에는 격차가 14.59%포인트로 5.16%포인트는 특성 효과, 9.43%포인트는 계수 효과로 각각 36%, 65%를 설명한다. 격차의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이 2011~2013년에는 특성 효과가 전체 격차의 약 60%를 설명했으나 2016~2018년 이 비율은 35%로 감소해,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크게 증가했다.

특성 효과에서 장애인이 저임금일 위험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체 연령과 마찬가지로 연령, 학력,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다. 하지만 근로연령층으로 한정했을 때 18세 이상 전체에 비해 연령의 효과는 크게 감소했고, 학력과 종사상 지위 차이의 영향은 여전히 크지만 두 시기 큰 변화가 없다. 직종의 영향은 전체 연령 분해 결과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장애인 근로연령층 사무직 및 전문가 증가, 단순노무직 감소,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저임금 확률 감소 등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사업체 규모 분포에 있어서도 장애인 근로연령층의 10인 미만 비율은 감소한 반면 50~299인 사업체 비중이 약 12%에서 21%로 크게 증가하면서 저임금 비율 격차의 감소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전체 효과에서 특성 효과의 설명력이 감소했다.

〈표 3-25〉 저임금 비율 모형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4305	0.2271	0.4401	0.2538
	남성	0.5695	0.7729	0.5599	0.7462
연령		40.07	47.49	41.67	48.89
연령 제곱		1725.14	2368.40	1868.63	2513.48
학력	중졸 이하	0.1093	0.3455	0.0819	0.3014
	고졸	0.3894	0.4019	0.3721	0.3783
	전문대졸 이상	0.5013	0.2526	0.5459	0.3203
근속기간		6.48	7.51	6.78	7.49
사업체 규모	1~4인	0.1721	0.1962	0.1551	0.1691
	5~9인	0.1467	0.1970	0.1476	0.1279
	10~49인	0.2344	0.3193	0.2633	0.3251
	50~299인	0.1799	0.1201	0.1984	0.2142
	300인 이상	0.2669	0.1674	0.2357	0.1637
산업	제조업	0.3233	0.4275	0.3125	0.3904
	도소매·운수업	0.1537	0.1041	0.1590	0.0739
	공공서비스	0.2342	0.1788	0.2541	0.2761
	개인서비스	0.2888	0.2897	0.2744	0.2596
직종	전문가	0.2600	0.1019	0.2697	0.1247
	사무직	0.2120	0.1232	0.2228	0.1521
	서비스·판매직	0.1761	0.0719	0.1665	0.1001
	기능직	0.1861	0.2885	0.1762	0.2773
	단순노무	0.1658	0.4145	0.1647	0.3458
종사상 지위	상용직	0.5936	0.3994	0.6118	0.4579
	임시직	0.2794	0.3086	0.2994	0.3968
	일용직	0.1270	0.2920	0.0888	0.1453
연도	2011/2016	0.3253	0.3178	0.3267	0.3213
	2012/2017	0.3391	0.3364	0.3332	0.3537
	2013/2018	0.3356	0.3458	0.3401	0.3250
사례수		13856	578	12247	4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3-26〉 저임금 비율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1423 *** (0.011)	-0.3183 *** (0.067)	-0.0946 *** (0.010)	-0.1020 (0.076)
연령	-0.0298 *** (0.003)	-0.0436 * (0.018)	-0.0240 *** (0.003)	-0.0264 (0.019)
연령 제곱	0.0004 *** (0.000)	0.0004 * (0.000)	0.0003 *** (0.000)	0.0002 (0.000)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559 ** (0.019)	-0.0601 (0.059)	-0.0756 *** (0.023)	-0.1550 (0.079)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453 *** (0.021)	0.0211 (0.077)	-0.1312 *** (0.025)	-0.1429 (0.096)
근속기간	-0.0061 *** (0.001)	-0.0057 * (0.003)	-0.0036 *** (0.001)	-0.0015 (0.003)
사업체 규모 5~9인 (ref. 1~4인)	-0.0642 *** (0.016)	-0.0031 (0.061)	-0.0817 *** (0.019)	0.0418 (0.094)
사업체 규모 10~49인 (ref. 1~4인)	-0.0966 *** (0.015)	-0.0428 (0.055)	-0.1225 *** (0.018)	-0.0668 (0.069)
사업체 규모 50~299인 (ref. 1~4인)	-0.1155 *** (0.016)	0.0063 (0.080)	-0.1311 *** (0.018)	-0.0291 (0.089)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ref. 1~4인)	-0.1088 *** (0.017)	-0.1383 (0.072)	-0.1269 *** (0.018)	-0.1684 (0.087)
산업 도소매·운수업 (ref. 제조업)	0.0869 *** (0.016)	0.0441 (0.091)	0.0640 *** (0.015)	0.3470 * (0.153)
산업 공공서비스 (ref. 제조업)	0.0618 *** (0.012)	0.1808 * (0.075)	0.0423 *** (0.012)	0.1404 (0.088)
산업 개인서비스 (ref. 제조업)	0.0706 *** (0.011)	0.1378 ** (0.052)	0.0651 *** (0.012)	0.0537 (0.075)
직종 사무직 (ref. 전문가)	0.0144 (0.011)	0.2383 * (0.093)	0.0267 ** (0.010)	-0.0387 (0.087)
직종 서비스·판매직 (ref. 전문가)	0.1472 *** (0.016)	0.3269 ** (0.117)	0.1507 *** (0.017)	0.2403 (0.127)
직종 기능직 (ref. 전문가)	0.0461 ** (0.015)	0.2079 * (0.098)	0.0081 (0.014)	-0.0287 (0.093)
직종 단순노무 (ref. 전문가)	0.2119 *** (0.018)	0.4354 *** (0.102)	0.1267 *** (0.019)	0.3220 ** (0.110)
종사상 지위 임시직 (ref. 상용직)	0.1091 *** (0.014)	0.2407 *** (0.063)	0.1372 *** (0.014)	0.1467 (0.079)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종사상 지위 일용직 (ref. 상용직)	0.1417 *** (0.018)	0.1560 * (0.062)	0.1561 *** (0.022)	0.0774 (0.095)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204 ** (0.007)	-0.0617 (0.036)	-0.0092 (0.007)	-0.0151 (0.044)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87 * (0.008)	-0.0433 (0.043)	-0.0323 *** (0.008)	-0.0601 (0.045)
상수	0.9268 *** (0.068)	1.2853 ** (0.443)	0.7877 *** (0.068)	1.0087 * (0.458)
F	174.97 ***	30.16 ***	92.72 ***	11.03 ***
R제곱	0.3339	0.4874	0.2766	0.3923
사례수	13856	578	12247	44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직관적으로 장애인-비장애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학력 증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최저임금 정책 등 저임금 직종의 임금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¹³⁾ 저임금 모형에서 임금 수준과 직결되는 변수인 직종별 저임금 모형 계수를 보면 2016~2018년 전문직 대비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의 저임금 확률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표 3-26〉 참조).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일자리의 임금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특히 단순노무직 비중이 큰 장애인의 임금 격차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13)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도 이에 미치는 못하는 임금을 받는 중증장애인도 있다. 2019년 기준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는 65%에 이르고, 이들은 최저시급 대비 36.6%의 임금을 받고 있다(김예지, 2020. 7. 23.). 이러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개선의 여지가 크지만, 대상 규모가 작아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 관측치 감소로 유의한 추정결과를 얻기 어려워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3-27〉 저임금 비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422 (0.035) ***	0.1459 (0.038) ***
	특성 효과	0.0853 (0.020) ***	0.0516 (0.019) **
	계수 효과	0.0569 (0.027) *	0.0943 (0.032)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289 (0.005) ***	-0.0176 (0.004) ***
	연령	0.0193 (0.006) **	0.0127 (0.006) *
	학력	0.0354 (0.007) ***	0.0291 (0.008) ***
	근속기간	-0.0062 (0.004)	-0.0026 (0.003)
	사업체 규모	0.0063 (0.003) *	0.0011 (0.004)
	산업	-0.0077 (0.003) *	-0.0055 (0.003)
	직종	0.0408 (0.009) ***	0.0119 (0.007)
	중사상 지위	0.0266 (0.006) ***	0.0222 (0.007) **
	연도	-0.0001 (0.000)	0.0003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제4절 시사점

이 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수준과 변화를 살펴보고 Oaxaca-Blinder 분해를 통해 그러한 격차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비장애인 고용률 격차의 과반이 양 집단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효과로, 특히 근로연령층의 고용률 격차는 83~85%가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이 특성 효과에서도 고용률 격

차를 상당 부분 설명하는 두 개의 변수, 건강상태와 학력이 장애 상태와 외생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요인이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차별(계수 효과), 장애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특성 차이가 고용률 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특성 효과의 기여도가 약간 증가했지만 의미를 두어 해석할 정도는 아니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률을 제고하고 비장애인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또한 정책적으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기회 증대라는 교육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더욱 직접적으로는 장애인 대상 고용서비스에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서비스가 연계·결합될 필요,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에 취업 이후에도 시설, 의료비용 등 장애인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추가될 필요를 말해준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저임금 비율 격차는 약간 증가했으나, 근로 연령층은 유사한 수준의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2010년대를 거치면서 특성 효과의 기여도가 크게 감소했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임금을 결정하는 특성인 학력, 직종, 종사상 지위, 사업체 규모 분포는 공통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가 개선되었음을 말해준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증가했고, 저임금인 단순노무직 비중은 줄어든 반면 사무직 비중은 증가했다. 그리고 상용직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10인 미만 사업체 대신 50~299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특성 변화는 비장애인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다. 이러한 특성 변화로 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개선되어 비장애인과 격차가 감소해야 한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차이, 장애로 인한 차이가 비장애인과 여전한 임금 격차, 저임금 비율의 격차를 낳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시장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 격차를 만회하고자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더해, 각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장애인의 참여를 확대시켜왔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2008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2%의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3.4%로 점증적으로 증가시켜왔고 2019년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약 1만 8천 명 증가한 성과를 보여준다(고용노동부, 2020. 4. 20.).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도 2011년 1만 300명에서 2020년 2만 2396명으로 확대되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이러한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분석 결과의 공공서비스 산업 장애인 고용 확대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이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만 시장의 차별 앞에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 예방 및 구제 조치가 요구된다.



제4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제1절 주거 분야 격차 지표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 주거 격차의 실태와 변화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분해

제4절 시사점

제4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제1절 주거 분야 격차 지표

1. 적절한 주거의 개념

적절한 주거에 대한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은 국제조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유엔(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제11조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CESCR], 1976). 또한 유엔(UN) 장애인권리 협약 역시 제28조에서 의식주를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UN CRPD, 2006).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1991년 발표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4호에서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요건을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UN CESCR, 1991, para. 8). ① 점유기간의 법적 보장(legal security of tenure), ② 서비스, 시설, 인프라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③ 주거비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④ 거주 적합성(habitability), ⑤ 접근성(accessibility), ⑥ 적절한 위치(location), ⑦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dequacy)이 그것이다. 이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표 4-1>과 같이 주거의 물리적 적절성, 경제적 적절성, 환경적 적절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4-1〉 주거 적절성의 개념

구분	요건	내용
물리적 적절성	서비스, 시설, 인프라의 이용가능성	건강, 안전, 안락, 영양을 위한 필수 시설의 구비
	거주 적합성	적절한 면적의 확보와 추위, 습기, 열, 비, 바람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보호
경제적 적절성	점유기간의 법적 보장	점유형태와 관계없이 강제 퇴거, 괴롭힘, 기타 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
	주거비 부담 가능성	다른 기본적 욕구의 달성이나 충족을 위협하거나 절충하지 않는 수준의 주거 관련 비용
환경적 적절성	접근성	노인, 아동, 장애인, 말기 환자, HIV 양성자, 만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 희생자, 재난 취약 지역 거주자 등 취약집단의 주거 접근 보장 및 우선 고려
	적절한 위치	직장, 의료시설, 학교, 보육시설, 기타 사회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문화적 적절성	주택의 건설 방식, 건축 자재, 주거 정책이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

주: 일곱 가지 요건의 세 가지 구분은 저자에 의한 것임. 점유기간의 법적 보장은 경제적 측면은 아니지만, 주택의 소유와 관련된 문제로 보아 경제적 적절성으로 분류함.

자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CESCR]. (1991). General comment No. 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 (1) of the Covenant). para. 8을 정리함.

2. 주거 적절성의 지표 및 측정

기존 연구는 주거 적절성의 개념 중 주로 물리적 적절성과 경제적 적절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적 적절성을 측정하여 사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주거의 환경적 적절성 개념은 정책적 접근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인 혹은 가구 단위로 측정이 어렵거나, 주거의 주변 환경에 대한 측정이 필요한데 사용 가능한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적절성과 경제적 적절성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지표나 측정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표 4-2〉 국내 연구에서의 주거 적절성 지표

구분	지표		해당 연구
물리적 적절성	최저주거기준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2012), 김문길 외(2017),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2013), 김용창, 최은영(2013), 김진희, 이상록(2012), 김현중, 강동우, 이성우(2010), 김혜승, 김태환(2008a, 2008b), 박신영(2012),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2015), 오지현, 여유진(2009), 이다은, 서원석(2019a, 2019b), 이선우(2010), 이성재(2007), 이태진 외(2016), 임세희(2010, 2014, 2015, 2018, 2019), 임세희, 박경하(2017), 임세희, 이봉주(2009), 임재현(2011), 임형백, 민성희, 이성우(2009), 최은영, 김용창, 권순필(2012)
	주택 유형		권연화, 최열(2018), 노승철, 이희연(2009), 최열, 권연화(2014)
	주거 면적		권연화, 최열(2018), 오지현, 여유진(2009)
	주택 노후도		노승철, 이희연(2009)
경제적 적절성	주거비 부담 (RIR)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방식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2012), 김문길 외(2017), 김혜승, 김태환(2008a), 노승철, 이희연(2009), 박신영(2012),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2015), 배병우, 남진(2013), 이다은, 서원석(2019a), 이선우(2010), 이태진 외(2016), 임세희(2010, 2016, 2018, 2019), 임세희, 박경하(2017), 임재현(2011), 정은희, 최유석(2014), 조혜진, 김민정(2014), 진미윤(1998),
		잔여소득 평가 방식	임세희(2019)
	주거자산 부담(PIR)		김문길 외(2017), 노승철, 이희연(2009), 조혜진, 김민정(2014)
	점유 형태		권연화, 최열(2018),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2012),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2013), 김진희, 이상록(2012), 노승철, 이희연(2009), 오지현, 여유진(2009), 임재현(2011), 정은희, 최유석(2014), 최열, 권연화(2014),
	임차료 상승률		임세희(2018)
	주거비 체납		임세희(2018), 임재현(2011), 정은희, 최유석(2014)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가. 물리적 적절성

주거의 물리적 적절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최저주거기준이며, 이 외에도 주택 유형, 주거 면적, 주택 노후도 등이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적절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저주거기준과 주택 유형을 지표로 선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태를 비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설정된 것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현재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고시로 제시되며(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2019b), 2004년에 최초 고시된 후 2011년 한차례 개정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04, 2011).¹⁴⁾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최저주거기준은 ①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② 용도별 방의 개수, ③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④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포함도록 규정되며, 고시에서 항목별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우선 최소 주거면적과 용도별 방의 개수는 가구원 수와 가구 구성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이 때 방의 개수를 설정하기 위한 침실 분리 원칙이 제시되는데, 부부와 노부모,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둘째,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

14) 최저주거기준은 처음에는 「주택법」에 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새로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로 규정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셋째,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제시된다. “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표 4-3〉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최저주거기준)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 주거면적(㎡)
1	1인 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자녀1	2DK	36
4	부부+자녀2	3DK	43
5	부부+자녀3	3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DK	55

주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http://www.law.go.kr/행정규칙/최저주거기준/\(2011-490,20110527\)](http://www.law.go.kr/행정규칙/최저주거기준/(2011-490,20110527)) 에서 2020. 6. 3. 인출.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을 실제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고시의 가구

원 수에 따른 방 개수나 면적을 그대로 적용하는 연구도 다수 있지만(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 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이다은, 서원석, 2019a, 2019b; 이선우, 2010; 임재현, 2011), 고시에 제시된 침실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방 개수를 산출하는 경우(임세희, 2018, 2019; 임세희, 박경하, 2017)도 있다. 하지만 김혜승, 김태환(2008b)은 고시에 제시된 표준 가구구성과 침실 분리 원칙이 다양한 형태의 가구구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면서 수정된 침실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방 개수를 설정하였고, 누락된 침실유형별 구성을 추가하여 최소 면적 기준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임세희(2010, 2014, 2015), 임세희, 이봉주(2009)도 최소 방의 개수는 김혜승, 김태환(2008b)의 원칙을 따랐고, 면적 기준은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7인 이상의 가구는 기존 고시에서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를 가구원 1인당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최저주거기준 고시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 다른 연구들도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면적 기준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였다(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 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임재현, 2011).

필수 설비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연구가 단독 상하수도, 단독 입식 부엌, 단독 수세식 화장실, 단독 목욕시설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일부 연구(김혜승, 김태환, 2008b; 오지현, 여유진, 2009; 임재현, 2011)에서 상하수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기준이 충족될 경우 단독 상하수도의 기준은 대부분 충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고시의 다섯 가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으며, 객관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

외하는 경우도 있다(김혜승, 김태환, 2008b). 하지만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네 가지 기준이 문항으로 포함되어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이선우, 2010). 다만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응답이 어렵고 미달 응답이 과도하게 높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임세희, 이봉주, 2009). 대안적으로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2015)은 한국복지패널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에서 2개 항목이 미달할 경우 기준 미달로 정의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임세희(2010, 2014, 2019)는 지하 주거, 반지하 주거,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 가건물을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주거로 정의하기도 했고, 이다은, 서원석(2019a, 2019b), 임세희(2015, 2018)에서는 주거실태조사에서 주거 상태에 대한 8개 항목 중 ‘불량’으로 응답한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하게 최은영, 김용창, 권순필(2012) 역시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와 지하·옥상 거주 여부를 사용했고, 임재현(2011) 역시 주택 유형과 주거 위치를 기준으로 구조·성능·환경 기준을 대신하였다.

주택 유형은 주거의 상향·하향 이동이나 주거 불안정성을 다루는 연구에 등장한다. 주거의 상향·하향 이동은 주택 점유 형태(자가 혹은 차가), 주거 면적 등 다양한 기준이 사용되는데(권연화, 최열, 2018), 이 때 주택 유형도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된다(권연화, 최열, 2018; 노승철, 이희연, 2009; 최열, 권연화, 2014). 특히 한국에서 아파트는 “부의 수단이자 지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치나 크기 등에 따라 계층적 차별화 기능까지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전상인, 2008, p. 56)을 근거로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주거 이동을 주거의 상향 이동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있다(권연화, 최열, 2009; 최열, 권연화, 2014).

나. 경제적 적절성

주거의 경제적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거비 부담, 주거자산 부담, 점유 형태, 임차료 상승률, 주거비 체납 등이 사용되었으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방식의 주거비 부담 지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거비 과부담 여부와 주택의 점유 형태를 선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태를 비교한다.

주거비 부담 혹은 지불 능력(housing affordability)을 평가하는 지표에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rice-to-Income Ratio: PIR), 소득 대비 주거비(주로 임대료) 비율(Rent-to-Income Ratio: RIR)이 주로 사용되며, 전자는 자가 가구에, 후자는 차가 가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박정민, 오욱찬, 이견민, 2015; Jewkes & Delgadillo, 2010). 또한 주거비의 과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임세희, 2019).

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보는 것인데, 주거비 중에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우선 실제 임대료(월세)만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신영(2012), 오지현, 여유진(2009)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자가나 전세 가구가 배제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자가와 전세를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귀속임대료(imputed rent) 산정 방식이 사용된다. 진미윤(1998)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자가의 주거비를 과대추정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안적으로 자가는 배제한 채 월세 가구는 실제 임대료를 산정하고, 전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귀속임대료로 환산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김혜승, 김

태환(2008a), 이선우(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가 가구가 제외되고 전월세의 임대료가 과대추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세희(2010, 2016, 2018, 2019)는 월세 가구의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자가와 전세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관련 대출의 산정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이 경우 자가 가구를 포괄하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 금리와 산정 금리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한다. 만약 연구 자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의 이자를 측정하였다면 자가나 전세 가구의 경우에도 실제 이자로 집계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2012),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2015), 임재현(2011)의 연구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 주거비에서 임대료 외에 다양한 비용이 존재하는데,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주거관리비나 광열수도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김혜승, 김태환, 2008a; 진미윤, 1998; 박정민, 오욱찬, 이건민, 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이다은, 서원석, 2019a).

주거비의 ‘과부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30% 기준은 이론적 근거를 가진 기준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주거비의 과부담 기준으로 타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박신영, 2012; Chaplin & Freeman, 1999; Hulchanski, 1995).

주택의 점유 형태 또한 주거의 경제적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가 상태가 아닌 경우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보거나(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김진희, 이상록, 2012; 오지현, 여유진, 2009; 임재현, 2011; 정은희, 최유석, 2014), 차가에서 자가로의 주거 이동의 상향 이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권연화, 최열, 2018; 노승철, 이희연, 2008; 최열, 권연화, 2014).

다. 주거 지표의 선정

이 연구에서는 앞서 주거의 물리적, 경제적 적절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지표로 네 가지를 선정하였다. 물리적 적절성에는 최저주거기준과 주택 유형, 경제적 적절성에는 주거비 과부담과 점유 형태를 선정하였다. 또한 두 영역의 적절성 지표를 결합하였을 때의 상태를 추가로 살펴본다.

〈표 4-4〉 주거 격차 지표의 선정

구분	지표	측정	실태 분석	격차 분석
물리적 적절성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에서 제시하는 ① 면적 및 방의 개수, ② 필수 설비 기준, ③ 구조·성능·환경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	○
	주택 유형	아파트, 일반주택	○	×
경제적 적절성	주거비 과부담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30% 초과	○	○
	점유 형태	자가, 차가	○	×
결합	최저주거기준 × 주거비 과부담	① 비주거빈곤,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③ 주거비 과부담, ④ 결합 주거빈곤	○	×
	주택 유형 × 점유 형태	① 아파트-자가, ② 아파트-차가, ③ 일반주택-자가, ④ 일반주택-차가	○	×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먼저 최저주거기준은 면적 및 방의 개수, 필수 설비 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면적 및 방의 개수는 다수의 연구(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 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이다은, 서원석, 2019a, 2019b; 이선우, 2010; 임재현, 2011)를 따라 최저주거기준 고시의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적과 방 개수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로 측정하였으며 최저 기준은 1인 가구 14㎡/1실, 2인 가구 26㎡/1실, 3인 가구 36㎡/2실, 4인

가구 43㎡/3실, 5인 가구 46㎡/3실, 6인 가구 55㎡/4실을 적용하였다. 또한 7인 이상은 면적의 경우 9㎡를 누적적으로 더하고, 방 개수는 7~8인 가구 4실, 9인 가구 5실 기준을 적용하였다. 필수 설비 기준은 상하수도(단독), 부엌(단독 입식), 화장실(단독 수세식), 목욕시설(단독 온수) 4개 항목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영구건물, 방음·환기, 소음·진동, 자연재해의 4가지 항목에서 하나라도 부적절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주거비 과부담을 측정할 때 주거비는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한 다수의 연구(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 2015;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임재현, 2011)를 따랐다. 즉 주거비는 월세 가구의 실제 월 임대료, 자가 및 전세 가구의 주거 관련 부채의 실제 이자,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이 때 소득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이 외에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점유 형태는 자가와 차가로 구분하였다.

3. 주거 격차 분해 모형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나 주거비 과부담과 같은 주거 취약 상태에 대한 영향 요인에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 특성을 주로 고려하였다(박정민, 오욱찬, 이진민, 2015; 이다은, 서원석, 2019a, 2019b; 임세희, 2015, 2016; 임세희, 박경하, 2017; 정은희, 최유석, 2014). 여기에 추가적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건강 특성에 주목하는 경우(박정민, 오욱찬, 이진민, 2015), 지역 특성

에 주목하는 경우(임세희, 2015, 2016), 제도적 요인에 주목하는 경우(이
 다은, 서원석, 2019b)가 있었다.

〈표 4-5〉 주거 격차 분해 모형

변수	측정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비 과부담
성별	여성(ref.), 남성	○	○
연령	연속변수(만 나이)	○	○
연령 제곱	연속변수(연령×연령)	○	○
가구원 수	연속변수(명)	○	○
배우자	없음(ref.), 있음	○	○
학력	중졸 이하(ref.), 고졸, 전문대졸 이상(졸업 기준 최종학력)	○	○
경제활동	미취업(ref.), 취업	○	○
주택점유	차가(ref.), 자가	○	○
거주지역	대도시(ref.), 중소도시, 농어촌	○	○
연도	2011/2016(ref.), 2012/2017, 2013/2018	○	○

주: ref.는 기준범주를 의미함.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을 따라 개인의 인적 특성과 가구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과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 우선 개인의 인
 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상태를 포함하였으며, 연령의 경우 종속변
 수와 2차 함수 형태의 관계를 가정하여 연령의 제곱을 함께 포함하였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를 포함하였는데,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경우 기준 자체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별화되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학력과 경제활동 상태를 포함하였다. 주거 특성
 으로 주택의 점유 형태, 그리고 거주지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마지막으
 로 분석시기에서 초기 3년과 후기 3년을 결합하여 분석하므로 연도별 고
 정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연도 더미 변수를 포함하였다. 격차 분해에서

계수효과가 자체가 제도적 영향, 특히 주거복지 제도의 영향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요인은 모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의 실태와 변화

1. 물리적 적절성

가. 최저주거기준

우선 <표 4-6>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장애인의 경우 2011년 32.62%로 비장애인 27.65%에 비해 4.97%포인트 높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감소폭이 더 크고, 이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4-6>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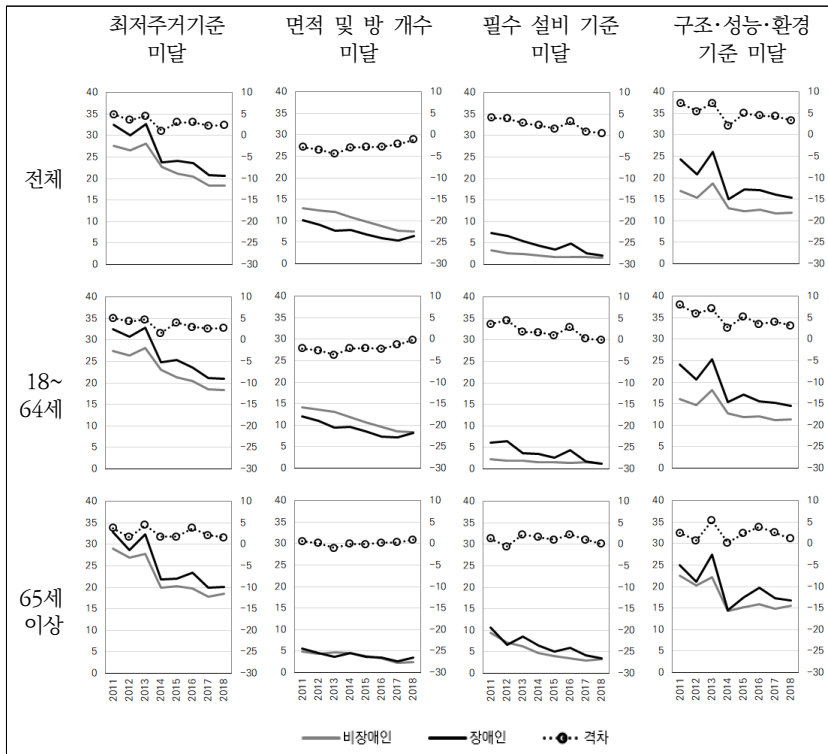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27.65	26.50	28.08	22.71	21.12	20.41	18.44	18.32
	장애인	32.62	30.15	32.70	23.78	24.20	23.55	20.73	20.72
	격차	4.97	3.65	4.62	1.08	3.08	3.14	2.29	2.40
18~64세	비장애인	27.44	26.43	28.11	23.13	21.26	20.53	18.56	18.28
	장애인	32.52	30.79	32.86	24.76	25.36	23.57	21.21	21.06
	격차	5.08	4.36	4.75	1.63	4.10	3.04	2.65	2.78
65세 이상	비장애인	29.09	27.00	27.89	20.00	20.26	19.69	17.78	18.54
	장애인	32.86	28.74	32.37	21.83	22.06	23.52	19.95	20.18
	격차	3.77	1.73	4.48	1.82	1.80	3.84	2.17	1.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연령대를 나눠 보면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에 큰 차이는 없으며, 모두 비슷한 추세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로연령층에서의 비장애인-장애인 격차가 고령층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7〉에서 최저주거기준의 세 가지 하위 요소 중 면적 및 방 개수 미달 비율을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미달 비율이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면적 기준 미달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미세하게 높으나, 방 개수 미달 비율은 면적 기준 미달 비율보다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면적 및 방 개수 기준에서 장애인의 주거 상황이 더 좋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방 개수 기준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면적 기준과 방 개수 기준 미달 비율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감소 추세인 것은 동일하다.

또한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면적 및 방 개수 미달 비율은 근로연령층이 고령층에 비해 높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근로연령층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미달 비율이 낮은 것이 확인된다. 고령층은 면적과 방 개수 기준 모두 미달 비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근로연령층은 면적 기준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지만 방 개수 기준에서 장애인의 미달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면적 및 방 개수 기준에서 장애인의 상황이 비장애인보다 좋게 나타나는 것은 주로 방 개수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며, 이는 고령층보다는 근로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격차로 인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구원 수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가구원 수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복지패널에서도 장애인의 가구원 수는 비장애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장애인은 평균 가구원 수가 2.54명, 비장애인은 3.14명이다(〈표 4-8〉 참조).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의 비율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 분석에 적용한 방 개수 기준에서 2~4인 가구의 방 개수 기준은 가구원 수

가 늘어날수록 1개씩 증가한다. 이로 인해 3인, 4인 가구가 많은 비장애인이 오히려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표 4-7〉 최저주거기준: 면적 및 방 개수 미달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면적	비장애인	3.45	2.74	2.88	2.22	1.49	1.44	1.13	1.51
		장애인	4.09	2.78	2.29	3.60	2.47	1.64	1.28	1.47
		격차	0.64	0.04	-0.59	1.38	0.98	0.21	0.15	-0.04
	방 개수	비장애인	10.93	11.15	10.60	9.72	8.86	7.98	7.05	6.69
		장애인	7.39	7.44	5.86	5.04	5.09	4.75	4.53	5.21
		격차	-3.54	-3.71	-4.74	-4.68	-3.77	-3.23	-2.52	-1.48
	면적 및 방 개수	비장애인	12.99	12.47	12.07	10.83	9.74	8.74	7.63	7.47
		장애인	10.14	9.02	7.62	7.94	6.89	5.97	5.46	6.42
		격차	-2.85	-3.45	-4.45	-2.89	-2.84	-2.77	-2.17	-1.06
18~64세	면적	비장애인	3.69	2.95	3.01	2.28	1.54	1.51	1.21	1.67
		장애인	4.83	3.22	2.52	4.05	2.64	1.58	1.31	1.53
		격차	1.14	0.27	-0.49	1.77	1.10	0.07	0.09	-0.14
	방 개수	비장애인	12.05	12.27	11.75	10.72	9.83	8.89	7.96	7.53
		장애인	9.04	9.26	7.72	6.62	6.97	6.41	6.37	7.14
		격차	-3.01	-3.02	-4.03	-4.10	-2.86	-2.47	-1.59	-0.38
	면적 및 방 개수	비장애인	14.18	13.65	13.17	11.81	10.68	9.63	8.56	8.36
		장애인	12.04	11.04	9.50	9.64	8.60	7.38	7.25	8.25
		격차	-2.14	-2.61	-3.67	-2.17	-2.08	-2.26	-1.31	-0.11
65세 이상	면적	비장애인	1.83	1.24	2.05	1.81	1.16	1.00	0.62	0.61
		장애인	2.29	1.78	1.81	2.69	2.16	1.75	1.22	1.37
		격차	0.46	0.55	-0.24	0.88	1.00	0.75	0.60	0.76
	방 개수	비장애인	3.35	3.49	2.97	3.33	2.88	2.48	1.73	2.01
		장애인	3.41	3.42	2.01	1.91	1.62	1.80	1.50	2.11
		격차	0.05	-0.07	-0.96	-1.42	-1.26	-0.67	-0.23	0.10
	면적 및 방 개수	비장애인	4.93	4.39	4.76	4.60	3.88	3.29	2.22	2.51
		장애인	5.52	4.54	3.73	4.56	3.73	3.48	2.53	3.47
		격차	0.60	0.15	-1.03	-0.04	-0.15	0.18	0.31	0.9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8〉 가구원 수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3.31	3.32	3.30	3.29	3.25	3.21	3.18	3.14
	장애인	2.75	2.74	2.71	2.68	2.65	2.63	2.55	2.54
	격차	-0.56	-0.57	-0.60	-0.61	-0.61	-0.58	-0.62	-0.61
18~64세	비장애인	3.46	3.47	3.46	3.46	3.42	3.39	3.36	3.33
	장애인	2.98	2.98	2.96	2.94	2.93	2.92	2.86	2.85
	격차	-0.49	-0.49	-0.50	-0.51	-0.49	-0.47	-0.50	-0.48
65세 이상	비장애인	2.27	2.27	2.24	2.21	2.20	2.16	2.11	2.09
	장애인	2.19	2.22	2.18	2.14	2.12	2.12	2.05	2.03
	격차	-0.08	-0.05	-0.07	-0.07	-0.08	-0.03	-0.06	-0.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9〉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의 두 번째 요소인 필수 설비 기준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미달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 그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 기준 장애인의 필수 설비 기준 미달 비율은 7.41%, 비장애인은 3.23%로 그 격차는 4.18%포인트였는데, 2018년 들어 격차가 0.58%포인트로 크게 감소하였다. 필수 설비의 네 가지 항목에서 상하수도과 부엌 기준은 미달 비율 자체가 1% 미만으로 매우 낮는데, 화장실과 목욕시설의 기준 미달 비율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장애인의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확인된다. 즉 필수 설비 기준 미달 비율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수준은 주로 화장실과 목욕시설 기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를 구분하면 고령층보다는 근로연령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러한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근로연령층의 필수 설비 기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최저주거기준: 필수 설비 기준 미달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상·하 수도	비장애인	0.43	0.32	0.40	0.47	0.31	0.37	0.48	0.60
		장애인	0.64	0.53	0.95	0.28	0.31	0.63	0.19	0.41
		격차	0.21	0.21	0.56	-0.19	0.00	0.26	-0.29	-0.19
	부엌	비장애인	0.83	0.68	0.57	0.66	0.58	0.52	0.45	0.69
		장애인	0.77	0.77	0.58	0.82	0.67	1.23	0.27	0.63
		격차	-0.06	0.09	0.00	0.16	0.09	0.71	-0.18	-0.06
	화장실	비장애인	2.38	1.73	1.71	1.34	1.28	1.06	0.94	1.17
		장애인	5.04	4.41	3.61	2.40	2.31	2.48	1.53	1.54
		격차	2.65	2.68	1.90	1.06	1.03	1.41	0.59	0.37
	목욕 시설	비장애인	1.85	1.59	1.62	1.37	1.17	1.32	1.11	1.16
		장애인	5.28	4.93	3.84	3.08	2.45	3.50	2.28	1.33
		격차	3.43	3.34	2.22	1.71	1.28	2.18	1.17	0.18
	필수 설비	비장애인	3.23	2.57	2.44	2.03	1.82	1.68	1.76	1.52
		장애인	7.41	6.59	5.33	4.45	3.45	4.93	2.69	2.10
		격차	4.18	4.02	2.89	2.43	1.63	3.25	0.94	0.58
18~ 64세	상·하 수도	비장애인	0.37	0.31	0.40	0.48	0.33	0.40	0.52	0.52
		장애인	0.41	0.55	0.96	0.36	0.25	0.74	0.22	0.30
		격차	0.04	0.24	0.56	-0.12	-0.07	0.34	-0.30	-0.22
	부엌	비장애인	0.73	0.57	0.43	0.59	0.53	0.49	0.43	0.60
		장애인	0.55	0.84	0.36	0.60	0.63	1.33	0.31	0.54
		격차	-0.18	0.28	-0.07	0.01	0.10	0.84	-0.12	-0.06
	화장실	비장애인	1.66	1.20	1.28	1.00	1.04	0.87	0.82	0.95
		장애인	4.19	4.04	2.44	1.81	1.88	2.12	0.95	0.86
		격차	2.53	2.83	1.15	0.81	0.85	1.25	0.14	-0.08
	목욕 시설	비장애인	1.25	1.14	1.28	1.05	0.94	1.10	0.96	0.92
		장애인	4.18	5.24	2.42	2.32	1.60	3.01	1.56	0.68
		격차	2.93	4.11	1.14	1.26	0.66	1.90	0.60	-0.24
	필수 설비	비장애인	2.32	1.90	1.86	1.60	1.48	1.38	1.54	1.20
		장애인	6.05	6.53	3.75	3.43	2.60	4.41	1.82	1.24
		격차	3.72	4.63	1.90	1.83	1.12	3.03	0.28	0.0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5세 이상	상·하 수도	비장애인	0.82	0.39	0.40	0.40	0.19	0.19	0.27	1.05
		장애인	1.19	0.47	0.95	0.11	0.40	0.43	0.14	0.58
		격차	0.37	0.08	0.54	-0.30	0.21	0.24	-0.13	-0.47
	부엌	비장애인	1.50	1.48	1.54	1.08	0.89	0.72	0.59	1.20
		장애인	1.32	0.62	1.02	1.27	0.76	1.06	0.21	0.77
		격차	-0.18	-0.86	-0.52	0.18	-0.12	0.34	-0.39	-0.42
	화장실	비장애인	7.29	5.32	4.53	3.52	2.76	2.24	1.67	2.39
		장애인	7.09	5.23	6.05	3.60	3.08	3.11	2.48	2.61
		격차	-0.20	-0.09	1.52	0.07	0.33	0.87	0.81	0.23
	목욕 시설	비장애인	5.89	4.72	3.87	3.42	2.62	2.66	1.97	2.49
		장애인	7.93	4.23	6.78	4.60	4.03	4.37	3.46	2.38
		격차	2.05	-0.49	2.91	1.18	1.41	1.71	1.48	-0.10
	필수 설비	비장애인	9.37	7.16	6.28	4.77	3.96	3.49	3.02	3.34
		장애인	10.72	6.71	8.59	6.50	5.03	5.86	4.12	3.48
		격차	1.35	-0.45	2.30	1.73	1.07	2.36	1.10	0.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최저주거기준의 세부 요소에서 2018년 기준 장애인의 면적 및 방 개수 기준 미달 비율이 6.42%, 필수 설비 기준 미달 비율이 2.10%인 것에 비해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은 15.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표 4-10〉 참조). 이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시간에 따른 감소폭 또한 나머지 두 요소에 비해 매우 크다. 2011년 기준 장애인의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은 24.39%였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15.35%로 크게 감소한다.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은 비장애인도 감소하였지만 장애인만큼 큰 폭은 아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또한 2011년 7.42%포인트에서 2018년 3.4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세부 지표에서 자연재해 기준 미달 비율은 절대적인 크기가 작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크기도 작는데, 나머지 세 개 세부 지표에서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와 장애인-비장애인의 격차 감소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표 4-10〉 최저주거기준: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영구 건물	비장애인	11.08	10.87	12.55	8.60	8.04	6.79	6.70	5.77
		장애인	17.19	13.49	18.91	11.75	11.11	11.78	10.50	7.81
		격차	6.11	2.62	6.36	3.15	3.07	4.99	3.80	2.03
	방음· 환기 등	비장애인	9.96	9.00	10.80	7.06	7.61	7.25	6.71	5.31
		장애인	14.30	12.68	15.29	9.39	9.85	9.67	8.36	6.45
		격차	4.34	3.68	4.48	2.32	2.24	2.42	1.66	1.14
	소음· 진동 등	비장애인	5.78	5.43	4.97	3.80	3.31	4.88	4.82	4.23
		장애인	9.42	6.10	7.36	4.56	4.78	6.00	5.97	4.79
		격차	3.64	0.67	2.39	0.76	1.47	1.12	1.15	0.56
	자연 재해	비장애인	1.54	1.15	1.77	1.68	1.55	2.11	1.32	3.54
		장애인	3.12	1.93	2.75	1.86	2.22	1.56	2.25	5.00
		격차	1.59	0.78	0.98	0.18	0.67	-0.55	0.93	1.46
	구조·성 능·환경	비장애인	16.97	15.34	18.68	12.90	12.28	12.61	11.73	11.95
		장애인	24.39	20.77	26.03	15.07	17.30	17.15	16.09	15.35
		격차	7.42	5.43	7.35	2.17	5.01	4.53	4.36	3.40
18~ 64세	영구 건물	비장애인	10.35	10.19	12.07	8.26	7.67	6.06	6.12	5.27
		장애인	16.66	12.30	18.08	11.26	10.17	10.28	10.04	7.07
		격차	6.31	2.11	6.00	2.99	2.50	4.21	3.92	1.79
	방음· 환기 등	비장애인	9.49	8.60	10.53	7.01	7.47	7.05	6.54	4.96
		장애인	13.84	12.78	14.94	9.39	9.50	9.17	7.84	5.22
		격차	4.35	4.18	4.42	2.38	2.04	2.12	1.30	0.26
	소음· 진동 등	비장애인	5.61	5.35	4.90	3.81	3.23	4.78	4.80	4.39
		장애인	9.19	6.05	8.05	5.15	5.51	6.05	5.85	5.08
		격차	3.58	0.70	3.14	1.33	2.28	1.27	1.05	0.68
	자연 재해	비장애인	1.41	1.07	1.71	1.67	1.44	2.14	1.22	3.24
		장애인	3.38	1.67	2.35	1.72	1.94	1.21	2.82	5.81
		격차	1.97	0.59	0.64	0.04	0.50	-0.94	1.60	2.57
	구조·성 능·환경	비장애인	16.16	14.61	18.16	12.68	11.82	12.07	11.20	11.30
		장애인	24.14	20.62	25.32	15.35	17.15	15.63	15.30	14.46
		격차	7.98	6.02	7.16	2.67	5.33	3.56	4.10	3.16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5세 이상	영구 건물	비장애인	16.02	15.53	15.67	10.74	10.33	11.23	10.05	8.55
		장애인	18.47	16.12	20.64	12.73	12.85	14.45	11.26	8.99
		격차	2.44	0.59	4.96	1.99	2.51	3.21	1.21	0.44
	방음· 환기 등	비장애인	13.20	11.72	12.65	7.40	8.50	8.46	7.70	7.28
		장애인	15.43	12.46	16.00	9.39	10.50	10.54	9.22	8.41
		격차	2.23	0.73	3.35	1.99	2.00	2.09	1.52	1.14
	소음· 진동 등	비장애인	6.88	5.94	5.40	3.72	3.80	5.47	4.96	3.31
		장애인	9.98	6.21	5.94	3.38	3.42	5.91	6.18	4.33
		격차	3.10	0.28	0.54	-0.33	-0.38	0.44	1.22	1.03
	자연 재해	비장애인	2.39	1.68	2.15	1.74	2.24	1.92	1.89	5.18
		장애인	2.50	2.52	3.58	2.15	2.75	2.18	1.30	3.69
		격차	0.11	0.84	1.43	0.41	0.51	0.27	-0.58	-1.49
	구조·성 능·환경	비장애인	22.50	20.37	22.13	14.32	15.16	15.89	14.82	15.55
		장애인	24.99	21.09	27.50	14.52	17.56	19.83	17.38	16.77
		격차	2.50	0.72	5.37	0.20	2.41	3.93	2.57	1.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연령대로 구분했을 때 면적 및 방 개수 기준, 필수 설비 기준과 달리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고령층의 미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마찬가지이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에서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장애인의 경우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의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에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비장애인은 고령층의 미달 비율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고령 비장애인의 높은 구조·성능·환경 기준 미달 비율은 주로 영구건물, 방음·환기 지표의 미달에서 비롯된다.

나. 주택 유형

주택 유형에서는 <표 4-11>에 아파트 거주 비율을 제시하였다. 2011년 장애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37.98%인데 비장애인은 47.95%로 그

격차는 9.98%포인트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격차는 2018년 들어 6.12%로 감소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연령대로 구분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에 비해 근로연령층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다.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근로연령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크기도 크게 나타난다. 다만 2018년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그 이전의 추세와 크게 다른데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4-11〉 주택 유형: 아파트 거주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47.95	48.60	48.99	50.00	50.80	51.61	52.88	53.47
	장애인	37.98	38.32	40.33	41.10	43.28	45.17	44.87	47.35
	격차	-9.98	-10.28	-8.65	-8.90	-7.52	-6.45	-8.01	-6.12
18~64세	비장애인	50.31	50.88	51.27	52.36	53.06	54.04	55.59	55.98
	장애인	42.28	41.60	44.54	44.37	47.38	48.75	49.69	54.95
	격차	-8.03	-9.28	-6.74	-7.99	-5.68	-5.29	-5.90	-1.03
65세 이상	비장애인	31.98	33.01	33.86	34.88	36.76	36.89	37.14	39.55
	장애인	27.55	31.05	31.62	34.57	35.70	38.84	36.98	35.19
	격차	-4.43	-1.96	-2.24	-0.31	-1.06	1.96	-0.17	-4.3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기존 연구들은 일반 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주거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보았는데, 아파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12〉에서는 아파트에서 국민임대 아파트와 영구임대 아파트를 구분하고 나머지를 일반 아파트로 분류하였다. 일반 아파트 거주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반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장애인이 더 높다. 특히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은 비장애인이 1% 내외인데 비해 장애인은 6~7%로 그 차이가 크다. 이는 장애인의 낮은 소득 수준이 반영된 결과이다.

〈표 4-12〉 주택 유형: 유형별 아파트 거주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일반 아파트	비장애인	44.46	45.61	45.74	46.26	47.00	47.76	48.75	49.22
		장애인	29.54	29.96	30.16	30.33	32.22	34.04	33.05	34.75
		격차	-14.92	-15.65	-15.58	-15.93	-14.78	-13.71	-15.70	-14.46
	국민 임대	비장애인	1.74	1.42	2.07	2.71	2.95	2.96	3.33	3.45
		장애인	2.23	1.71	4.22	4.64	4.62	4.50	5.28	5.60
		격차	0.49	0.28	2.16	1.94	1.66	1.54	1.96	2.14
	영구 임대	비장애인	1.75	1.57	1.18	1.03	0.85	0.89	0.81	0.80
		장애인	6.21	6.65	5.95	6.13	6.44	6.63	6.54	7.01
		격차	4.46	5.08	4.77	5.09	5.59	5.73	5.73	6.20
18~64세	일반 아파트	비장애인	46.76	47.88	47.97	48.52	49.18	50.17	51.46	51.68
		장애인	33.08	32.03	32.63	31.72	34.68	36.83	36.37	40.81
		격차	-13.69	-15.85	-15.35	-16.80	-14.50	-13.34	-15.09	-10.87
	국민 임대	비장애인	1.84	1.50	2.24	2.92	3.16	3.13	3.48	3.63
		장애인	2.10	2.06	5.07	5.56	5.22	4.60	6.10	6.53
		격차	0.26	0.56	2.83	2.64	2.06	1.48	2.62	2.89
	영구 임대	비장애인	1.71	1.50	1.06	0.93	0.73	0.75	0.65	0.66
		장애인	7.11	7.51	6.84	7.09	7.48	7.31	7.22	7.61
		격차	5.40	6.01	5.78	6.17	6.75	6.57	6.57	6.95
65세 이상	일반 아파트	비장애인	28.87	30.06	30.96	31.84	33.48	33.11	32.99	35.50
		장애인	20.97	25.39	25.05	27.56	27.67	29.11	27.61	25.04
		격차	-7.90	-4.67	-5.91	-4.27	-5.80	-3.99	-5.38	-10.46
	국민 임대	비장애인	1.09	0.90	0.94	1.33	1.69	1.97	2.40	2.44
		장애인	2.54	0.93	2.48	2.81	3.50	4.32	3.94	4.10
		격차	1.45	0.03	1.54	1.48	1.82	2.34	1.54	1.66
	영구 임대	비장애인	2.01	2.06	1.96	1.72	1.60	1.80	1.75	1.60
		장애인	4.03	4.74	4.09	4.20	4.52	5.41	5.43	6.04
		격차	2.02	2.68	2.14	2.48	2.92	3.61	3.68	4.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일반 아파트 거주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격차는 시간에 따라 14~15%포인트 수준으로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결국 전체 아파트 거주 비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일반 아파트 거주 비율에서의 격차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에서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11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근로연령층의 경우 일반 아파트 거주 비율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그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두 연령대 모두 2011~2012년 사이, 그리고 2017~2018년 사이의 일반 아파트 거주 비율 격차의 변화가 커서 이를 제외하면 그 격차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적 적절성

가. 주거비 과부담

주거의 경제적 적절성을 주거비 과부담으로 살펴보았다. <표 4-13>에서 주거비 과부담 측정의 바탕이 되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을 살펴보면 2011년 장애인이 15.14%, 비장애인이 11.21%로 3.93%포인트의 격차를 보이는데 2018년에는 그 격차가 8.22%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 극단치가 생성되어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2018년에 예외적으로 장애인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높게 나타나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을 제외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며 격차도 유지되고 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이 30% 초과하는지 여부로 측정한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이러한 극단치의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2018년의 예외적으로 높은 장애인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의 영향도 보이지 않는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며, 그 격차 또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표 4-13〉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 및 주거비 과부담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RIR	비장애인	11.21	10.92	10.76	16.24	10.26	9.29	9.02	9.44
		장애인	15.14	14.88	16.32	14.11	13.13	12.35	12.66	17.66
		격차	3.93	3.97	5.55	-2.13	2.87	3.06	3.64	8.22
	주거비 과부담	비장애인	4.14	3.98	4.38	3.77	3.05	3.56	2.92	3.39
		장애인	9.07	8.98	9.76	8.24	6.64	5.52	6.06	6.04
		격차	4.93	5.00	5.39	4.47	3.59	1.95	3.13	2.65
18~64세	RIR	비장애인	10.11	10.16	9.97	16.32	9.72	8.57	8.25	8.82
		장애인	14.36	14.38	15.94	13.34	12.06	11.34	11.17	16.25
		격차	4.25	4.22	5.97	-2.98	2.34	2.77	2.92	7.43
	주거비 과부담	비장애인	3.31	3.12	3.65	2.93	2.44	3.06	2.25	2.74
		장애인	7.67	8.44	8.28	6.89	5.77	4.51	4.84	3.44
		격차	4.36	5.31	4.63	3.96	3.33	1.45	2.59	0.70
65세 이상	RIR	비장애인	18.65	16.11	16.03	15.72	13.60	13.65	13.51	12.88
		장애인	17.05	16.01	17.10	15.64	15.10	14.13	15.10	19.89
		격차	-1.60	-0.10	1.07	-0.08	1.50	0.49	1.59	7.01
	주거비 과부담	비장애인	9.80	9.86	9.16	9.09	6.82	6.62	6.83	7.05
		장애인	12.47	10.20	12.82	10.92	8.23	7.30	8.03	10.19
		격차	2.67	0.34	3.66	1.82	1.41	0.69	1.20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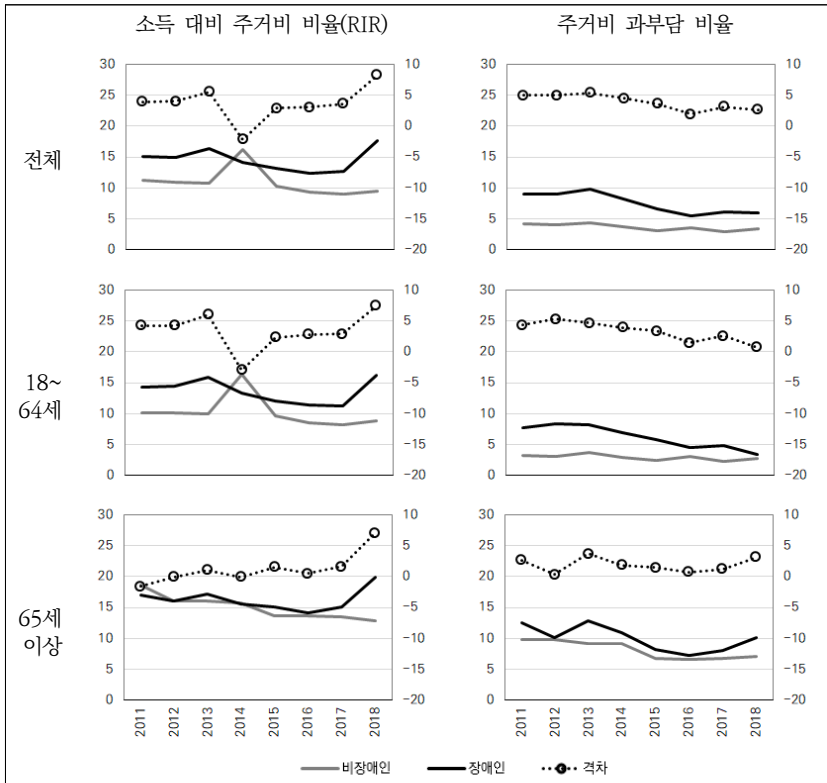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2018년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근로연령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다소

감소하고, 고령층은 격차가 다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근로연령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층에서의 격차는 등락이 심해 뚜렷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은 물론 주거비 과부담 비율 역시 고령층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절대적인 수준이 높다.

[그림 4-2]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과 주거비 과부담 비율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나. 점유 형태

〈표 4-14〉에서 점유 형태를 자가 비율로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자가 비율이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비해, 장애인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명확하지 않다. 그 격차는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자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자가 비율의 추세 역시 양 연령대 모두 비장애인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지만 장애인의 증가세는 지속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

〈표 4-14〉 점유 형태: 자가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61.03	60.36	61.40	62.77	63.09	64.54	64.67	64.97
	장애인	53.94	54.08	56.36	55.40	56.56	55.05	55.11	54.39
	격차	-7.09	-6.28	-5.05	-7.38	-6.52	-9.48	-9.56	-10.58
18~64세	비장애인	59.90	59.16	60.17	61.42	61.89	63.45	63.51	63.78
	장애인	51.46	50.90	53.86	52.35	54.36	53.12	53.19	52.04
	격차	-8.44	-8.26	-6.31	-9.07	-7.53	-10.33	-10.32	-11.73
65세 이상	비장애인	68.68	68.62	69.60	71.44	70.52	71.14	71.37	71.60
	장애인	59.94	61.15	61.54	61.49	60.64	58.48	58.24	58.15
	격차	-8.74	-7.48	-8.06	-9.95	-9.88	-12.66	-13.13	-13.4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3. 주거 적절성 지표의 결합

가.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결합

〈표 4-15〉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적절성과 경제적 적절성을 교차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결합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했다. ‘비주거빈곤’은 두 가지 지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은 양 지표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 ‘결합 주거빈곤’은 양 지표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장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결합 주거빈곤’은 그 비율은 낮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의 수치로 나온다. 다만 ‘결합 주거빈곤’ 상태인 사람의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격차에 뚜렷한 증감 추세가 보이지는 않는다. 한 가지 지표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주거비 과부담’에만 해당하는 경우보다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에만 해당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인 사람의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절대적인 비율에서 차이가 크어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크기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모두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를 구분해 살펴보면 근로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에서 ‘결합 주거빈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양 연령층 모두 장애인의 ‘결합 주거빈곤’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는데, 격차의 변화 추세는 뚜렷하지 않다.

〈표 4-15〉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결합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 장 애 인	비주거빈곤	69.41	70.75	69.16	74.37	76.45	76.74	79.22	78.85
		최저주거기준 미달	26.44	25.27	26.46	21.86	20.50	19.69	17.86	17.75
		주거비 과부담	2.95	2.73	2.72	2.91	2.37	2.85	2.31	2.85
		결합 주거빈곤	1.20	1.26	1.66	0.85	0.68	0.71	0.61	0.55
	장 애 인	비주거빈곤	61.36	63.13	61.99	70.73	70.60	72.71	75.03	74.37
		최저주거기준 미달	29.57	27.89	28.25	21.03	22.77	21.77	18.91	19.59
		주거비 과부담	6.04	6.67	5.26	5.57	5.12	3.63	4.18	4.83
		결합 주거빈곤	3.03	2.32	4.51	2.67	1.52	1.89	1.88	1.21
	격 차	비주거빈곤	-8.05	-7.62	-7.17	-3.64	-5.85	-4.03	-4.18	-4.49
		최저주거기준 미달	3.12	2.62	1.78	-0.83	2.26	2.08	1.05	1.84
		주거비 과부담	3.09	3.94	2.54	2.66	2.75	0.78	1.87	1.99
		결합 주거빈곤	1.83	1.06	2.85	1.82	0.84	1.18	1.27	0.66
18~ 64세	비 장 애 인	비주거빈곤	70.16	71.44	69.69	74.56	76.75	77.03	79.68	79.46
		최저주거기준 미달	26.53	25.43	26.66	22.51	20.81	19.91	18.07	17.80
		주거비 과부담	2.41	2.11	2.15	2.29	1.92	2.46	1.73	2.26
		결합 주거빈곤	0.90	1.02	1.50	0.64	0.52	0.60	0.52	0.48
	장 애 인	비주거빈곤	62.53	62.82	63.00	70.70	69.48	73.36	75.08	76.04
		최저주거기준 미달	29.80	28.74	28.71	22.40	24.75	22.14	20.07	20.53
		주거비 과부담	4.94	6.38	4.03	4.65	5.02	2.95	3.61	2.76
		결합 주거빈곤	2.74	2.05	4.25	2.24	0.75	1.55	1.23	0.68
	격 차	비주거빈곤	-7.63	-8.62	-6.69	-3.86	-7.27	-3.67	-4.60	-3.42
		최저주거기준 미달	3.27	3.31	2.05	-0.11	3.93	2.23	2.01	2.72
		주거비 과부담	2.52	4.28	1.88	2.36	3.10	0.50	1.88	0.50
		결합 주거빈곤	1.84	1.03	2.75	1.61	0.23	0.95	0.71	0.20
65세 이상	비 장 애 인	비주거빈곤	64.32	66.02	65.66	73.16	74.61	74.99	76.50	75.49
		최저주거기준 미달	25.88	24.12	25.18	17.74	18.57	18.40	16.67	17.47
		주거비 과부담	6.57	6.97	6.45	6.85	5.15	5.26	5.69	6.10
		결합 주거빈곤	3.23	2.89	2.72	2.24	1.67	1.36	1.15	0.94
	장 애 인	비주거빈곤	58.53	63.82	59.89	70.78	72.65	71.57	74.95	71.71
		최저주거기준 미달	29.00	25.98	27.29	18.30	19.12	21.12	17.01	18.10
		주거비 과부담	8.72	7.30	7.79	7.39	5.29	4.82	5.10	8.14
		결합 주거빈곤	3.75	2.90	5.03	3.52	2.94	2.48	2.94	2.05
	격 차	비주거빈곤	-5.79	-2.20	-5.77	-2.38	-1.96	-3.41	-1.55	-3.78
		최저주거기준 미달	3.12	1.86	2.11	0.56	0.55	2.73	0.35	0.64
		주거비 과부담	2.15	0.33	1.35	0.54	0.14	-0.44	-0.59	2.03
		결합 주거빈곤	0.52	0.01	2.32	1.28	1.27	1.12	1.79	1.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나.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의 결합

다음으로 <표 4-16>에서는 주택 유형과 점유 형태를 교차하여 살펴본다. 주택 유형과 점유 형태에 따라 아파트-자가, 아파트-차가, 일반주택-자가, 일반주택-차가의 네 집단으로 구분된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자가의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는데, 그 격차는 11%포인트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다른 변화 추세 중 눈에 띄는 것은 아파트-차가의 비율이다. 비장애인은 16% 내외의 비율로 거의 유지되는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비율이 높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자가보다는 차가 상태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추세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유사하다.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파트-자가 비율의 증가 속도는 비슷한 반면, 아파트-차가 비율의 증가 속도는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 이에 따라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파트-자가 비율의 격차는 대체로 유지되는 반면, 아파트-차가 비율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2018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파트-자가 비율의 격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료의 특성상 이를 다소 예외적인 상황이라 판단하면 아파트-자가 비율의 격차는 대체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16〉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의 결합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 장 애 인	아파트-자가	32.36	32.27	32.72	34.26	34.57	36.11	36.66	37.01
		아파트-차가	15.59	16.34	16.27	15.74	16.23	15.50	16.22	16.46
		일반주택-자가	28.67	28.10	28.69	28.51	28.52	28.42	28.01	27.96
		일반주택-차가	23.38	23.30	22.33	21.49	20.69	19.96	19.11	18.57
	장 애 인	아파트-자가	20.45	20.87	22.23	21.78	23.87	24.35	24.90	24.75
		아파트-차가	17.53	17.45	18.11	19.32	19.41	20.82	19.97	22.60
		일반주택-자가	33.49	33.21	34.13	33.62	32.69	30.71	30.20	29.64
		일반주택-차가	28.53	28.46	25.54	25.28	24.03	24.12	24.93	23.01
	격 차	아파트-자가	-11.91	-11.40	-10.49	-12.49	-10.70	-11.77	-11.75	-12.26
		아파트-차가	1.94	1.12	1.84	3.59	3.18	5.32	3.74	6.15
		일반주택-자가	4.83	5.12	5.44	5.11	4.18	2.29	2.19	1.68
		일반주택-차가	5.15	5.16	3.21	3.79	3.34	4.16	5.82	4.43
18~ 64세	비 장 애 인	아파트-자가	33.81	33.62	34.03	35.59	35.86	37.70	38.45	38.62
		아파트-차가	16.50	17.26	17.24	16.78	17.20	16.34	17.14	17.36
		일반주택-자가	26.09	25.53	26.13	25.83	26.03	25.75	25.06	25.16
		일반주택-차가	23.61	23.58	22.59	21.80	20.91	20.21	19.35	18.86
	장 애 인	아파트-자가	22.73	22.80	24.78	23.30	26.89	27.26	28.32	29.37
		아파트-차가	19.55	18.80	19.76	21.07	20.49	21.48	21.36	25.58
		일반주택-자가	28.73	28.10	29.08	29.04	27.48	25.85	24.87	22.67
		일반주택-차가	28.99	30.30	26.39	26.59	25.15	25.40	25.45	22.38
	격 차	아파트-자가	-11.08	-10.82	-9.25	-12.28	-8.97	-10.44	-10.13	-9.25
		아파트-차가	3.06	1.54	2.51	4.29	3.29	5.14	4.23	8.22
		일반주택-자가	2.64	2.56	2.94	3.21	1.44	0.10	-0.19	-2.49
		일반주택-차가	5.38	6.72	3.79	4.78	4.24	5.19	6.10	3.51
65세 이상	비 장 애 인	아파트-자가	22.52	22.99	24.03	25.80	26.60	26.48	26.23	28.12
		아파트-차가	9.46	10.02	9.82	9.08	10.16	10.40	10.92	11.43
		일반주택-자가	46.16	45.63	45.57	45.63	43.93	44.66	45.15	43.49
		일반주택-차가	21.86	21.36	20.58	19.48	19.31	18.46	17.71	16.96
	장 애 인	아파트-자가	14.91	16.59	16.93	18.73	18.30	19.19	19.30	17.36
		아파트-차가	12.64	14.46	14.69	15.84	17.40	19.65	17.68	17.83
		일반주택-자가	45.03	44.56	44.60	42.76	42.34	39.29	38.94	40.79
		일반주택-차가	27.42	24.39	23.78	22.67	21.96	21.86	24.08	24.02
	격 차	아파트-자가	-7.61	-6.40	-7.10	-7.08	-8.30	-7.29	-6.93	-10.76
		아파트-차가	3.18	4.44	4.86	6.76	7.23	9.25	6.76	6.40
		일반주택-자가	-1.13	-1.08	-0.96	-2.88	-1.59	-5.36	-6.20	-2.70
		일반주택-차가	5.56	3.04	3.20	3.19	2.65	3.40	6.37	7.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분해

1.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변화

이 절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나타나는 주거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Oaxaca-Blinder 격차 분해를 실시하였다. 격차 분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지표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격차 분해에 앞서 <표 4-17>에는 분석 시점에서 나타나는 두 지표의 격차를 제시하였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경우 분석시기 초기인 2011~2013년에 장애인은 31.83%, 비장애인은 27.41%로 4.41%포인트의 격차가 나타난다. 분석시기 후기인 2016~2018년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2.62%포인트로 1.7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양 시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감소하였는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감소폭이 컸기 때문에 격차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의 격차는 고령층에 비해 근로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나며, 격차의 감소폭 또한 근로연령층이 더 크게 나타난다. 2011~2013년의 경우 근로연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의 격차는 4.73%포인트, 고령층은 3.31%포인트였는데, 2016~2018년에는 2.85%포인트와 2.53%포인트로 그 크기가 비슷해진다. 장애인의 경우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모두 10%포인트 정도로 감소폭이 유사했는데, 비장애인은 근로연령층(8.21%포인트)에 비해 고령층(9.34%포인트)의 감소폭이 컸기 때문이다.

주거비 과부담 격차의 변화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유사하다. 분석시기 초기인 2011~2013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

의 격차는 4.98%포인트에서 2016~2018년에는 2.59%포인트로 감소한다. 비장애인은 소폭(0.90%포인트) 감소한 반면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크게(3.30%포인트)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를 구분해 보면 고령층에 비해 근로연령층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1~2013년에는 근로연령층(4.61%포인트)에서 고령층(2.18%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2016~2018년에는 1.64%포인트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2.79%포인트 감소한 반면 근로연령층 비장애인은 0.71%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표 4-17〉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변화(18세 이상)

(단위: %, %포인트)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주거비 과부담 비율		
		2011~2013	2016~2018	변화	2011~2013	2016~2018	변화
전체 (18세 이상)	비장애인	27.41	19.05	-8.36	4.20	3.30	-0.90
	장애인	31.83	21.68	-10.15	9.19	5.89	-3.30
	격차	4.41	2.62	-1.79	4.98	2.59	-2.40
18~64세	비장애인	27.33	19.12	-8.21	3.40	2.69	-0.71
	장애인	32.06	21.97	-10.09	8.01	4.33	-3.68
	격차	4.73	2.85	-1.88	4.61	1.64	-2.98
65세 이상	비장애인	27.99	18.65	-9.34	9.63	6.84	-2.79
	장애인	31.31	21.18	-10.12	11.81	8.49	-3.33
	격차	3.31	2.53	-0.78	2.18	1.64	-0.54

주: 격차 분해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제한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분해

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앞에서 설명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모형을 바탕으로 격차 분해를 실시하였으며, 격차 분해에 필요한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표 4-18>의 기술통계를 보면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의 비율, 연령, 저학력자 비율, 농어촌 거주 비율이 높고, 가구원 수, 취업자 비율, 자가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 4-19>에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과 연령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원이 1인 많을 때 비장애인은 7~8%, 장애인은 6~7% 정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높다. 가구원 수의 영향은 최저주거기준에서 면적 및 방의 개수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탓이 크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비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장애인의 경우 2016~2018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력 역시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2013년 비장애인의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4.64%, 전문대졸 이상은 13.66% 낮다. 비장애인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은 중졸 이하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확연히 낮다. 경제활동의 경우 비장애인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반면, 장애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취업 상태일 경우 미취업 상태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은 동일했다. 취업 상태를 적절한 주거 마련을 위한 경제적 자원의 확보가 가능한 상태의 의미로 본다면 취업 상태일 때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가구의 경제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표 4-18〉 최저주거기준 모형의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32	0.4154	0.5088	0.4140
	남성	0.4868	0.5846	0.4912	0.5860
연령		44.14	56.05	45.90	58.10
연령 제곱		2220.60	3382.29	2394.00	3638.14
가구원 수		3.3098	2.7317	3.1765	2.5746
배우자	없음	0.3805	0.3811	0.3963	0.4497
	있음	0.6195	0.6189	0.6037	0.5503
학력	중졸 이하	0.2342	0.5492	0.2028	0.5015
	고졸	0.4059	0.3010	0.3891	0.3276
	전문대졸 이상	0.3599	0.1498	0.4081	0.1709
경제활동	미취업	0.3697	0.5964	0.3627	0.6250
	취업	0.6303	0.4036	0.6373	0.3750
주택점유	차가	0.3907	0.4520	0.3527	0.4515
	자가	0.6093	0.5480	0.6473	0.5485
거주지역	대도시	0.4528	0.4364	0.4346	0.4433
	중소도시	0.4615	0.4471	0.4807	0.4478
	농어촌	0.0856	0.1166	0.0847	0.1088
연도	2011/2016	0.3286	0.3279	0.3302	0.3359
	2012/2017	0.3338	0.3339	0.3329	0.3335
	2013/2018	0.3376	0.3381	0.3369	0.3306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19〉 최저주거기준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29 (0.006)	-0.0282 (0.023)	-0.0001 (0.006)	0.0284 (0.021)
연령	0.0024 (0.001)	0.0051 (0.005)	-0.0001 (0.001)	-0.0003 (0.005)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가구원 수	0.0795 *** (0.007)	0.0702 *** (0.012)	0.0646 *** (0.007)	0.0627 *** (0.015)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670 *** (0.012)	-0.0742 * (0.030)	-0.0574 *** (0.011)	-0.0272 (0.026)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464 *** (0.011)	-0.0113 (0.030)	-0.0447 *** (0.011)	-0.0222 (0.029)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366 *** (0.012)	-0.0956 * (0.041)	-0.0976 *** (0.012)	-0.1188 *** (0.034)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219 * (0.009)	0.0381 (0.025)	0.0219 ** (0.008)	0.0053 (0.025)
주택점유 자가 (ref. 차가)	-0.2213 *** (0.013)	-0.1912 *** (0.028)	-0.1305 *** (0.013)	-0.1592 *** (0.028)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119 (0.012)	0.0135 (0.028)	-0.0137 (0.012)	-0.0043 (0.028)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722 *** (0.020)	0.1037 ** (0.033)	0.0031 (0.018)	0.0281 (0.033)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29 (0.008)	-0.0268 (0.017)	-0.0169 * (0.008)	-0.0256 (0.017)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66 (0.009)	0.0064 (0.023)	-0.0161 (0.009)	-0.0269 (0.022)
상수	0.1356 *** (0.036)	0.1135 (0.151)	0.1374 *** (0.034)	0.1518 (0.162)
F	47.99 ***	8.53 ***	20.06 ***	5.50 ***
R제곱	0.0957	0.0652	0.0552	0.0603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주택점유 상태의 경우 차가에 비해 자가 상태일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낮다는 것이 확인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공통적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의 차이는 분석시기 초기인 2011~2013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된다.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높은 것인데, 이는 분석시기 후기인 2016~2018년에 이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20〉은 앞에서 제시한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격차 분해를 한 결과이다. 2011~2013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총 격차가 4.41%포인트였으며, 특성 효과에 의한 격차가 2.09%포인트, 계수 효과에 의한 격차가 2.32%포인트로 나타난다. 이는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장애인과 동일했다라면 격차가 2.09%포인트 줄어들었을 것이고, 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영향을 주는 특성의 영향력이 비장애인과 같았다라면 격차가 2.32%포인트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2016~2018년에는 총 격차가 2.62%포인트로 2011~2013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6~2018년의 경우 비장애인의 특성이 장애인과 같았다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는 1.25%포인트에 불과했을 것이다.

2011~2013년에 특성 효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 수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확률이 높고, 장애인의 가구원 수가 비장애인보다 적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가구원 수가 장애인과 같았다라면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4.60%포인트 더 낮았을 것이다. 2016~2018년에 가구원 수의 특성 효과는 3.89%포인트로 다소 작아졌지만 여전히 특성 효과 중 가장 크다.

〈표 4-20〉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441 (0.014) **	0.0262 (0.014)
	특성 효과	0.0209 (0.007) **	0.0137 (0.006) *
	계수 효과	0.0232 (0.013)	0.0125 (0.013)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3 (0.001)	-0.0000 (0.001)
	연령	0.0224 (0.004) ***	0.0159 (0.004) ***
	가구원 수	-0.0460 (0.005) ***	-0.0389 (0.005) ***
	배우자	-0.0000 (0.001)	0.0031 (0.001) *
	학력	0.0336 (0.004) ***	0.0259 (0.004) ***
	경제활동	-0.0050 (0.002) *	-0.0057 (0.002) **
	주택점유	0.0136 (0.004) **	0.0129 (0.003) ***
	거주지역	0.0021 (0.001) *	0.0005 (0.001)
	연도	-0.0000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011~2013년에 특성 효과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영향은 학력에서 나타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대체로 고학력일 때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이 낮아지는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중졸 이하 학력이 매우 높다. 만약 비장애인의 학력 분포가 장애인과 같았다면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3.36%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다. 2016~2018년에 학력의 특성 효과는 2.59%포인트로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구원 수 다음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연령과 주택점유 형태 또한 특성 효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2011~2013년에 비장애인의 연령 분포가 장애인과 같았다면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2.24%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며, 비장애인의 주택점유 형태가 장애인과 같았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이 1.36%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다. 연령과 주택점유 형태의 특성 효과는 2016~2018

년에도 각각 1.59%포인트와 1.29% 포인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나머지 변수들의 특성 효과는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개별 변수의 특성 효과는 전반적으로 2011~2013년에 비해 2016~201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를 연령대로 구분하여 분해하였다. 앞서 기술통계 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64세 근로연령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주거 격차는 양상이 크게 다를 수 있다.

우선 <표 4-21>에는 최저주거기준 모형에 사용할 변수들에 대해 근로연령층의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의 비율, 연령, 저학력자 비율, 농어촌 거주 비율이 높고, 가구원 수, 취업자 비율, 자가 비율이 낮은 것이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 4-22>에 제시한 근로연령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또한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각 변수의 계수에서 일부 차이가 나타나고 한계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이에 따라 <표 4-23>에 제시한 격차 분해 결과의 양상도 유사하다. 총 격차는 2011~2013년에 4.73%포인트에서 2016~2018년에 2.85%포인트로 감소하였고,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의 비중이 유사하며 모두 양 시기 사이에 유사하게 감소하였다. 특성 효과에서 각 변수들이 차지하는 영향 또한 가구원 수와 학력, 그리고 주택점유 형태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와 유사하다. 이러한 개별 변수들의 특성 효과는 2011~2013년에 비해 2016~2018년에 대체로 감소한 경향 또한 공통적이다. 전반적으로 근로연령층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 분해 결과는 18세 이상 전체에 대한 격차 분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21〉 최저주거기준 모형의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12	0.3711	0.4947	0.3627
	남성	0.4988	0.6289	0.5053	0.6373
연령		39.78	48.37	41.06	48.53
연령 제곱		1741.43	2482.31	1855.42	2505.03
가구원 수		3.4655	2.9727	3.3588	2.8776
배우자	없음	0.3787	0.3998	0.4002	0.4987
	있음	0.6213	0.6002	0.5998	0.5013
학력	중졸 이하	0.1569	0.4325	0.1168	0.3481
	고졸	0.4435	0.3831	0.4233	0.4257
	전문대졸 이상	0.3996	0.1844	0.4598	0.2262
경제활동	미취업	0.3202	0.5134	0.3075	0.5288
	취업	0.6798	0.4866	0.6925	0.4712
주택점유	차가	0.4026	0.4794	0.3642	0.4721
	자차	0.5974	0.5206	0.6358	0.5279
거주지역	대도시	0.4604	0.4774	0.4391	0.4705
	중소도시	0.4652	0.4309	0.4865	0.4469
	농어촌	0.0743	0.0918	0.0745	0.0826
연도	2011/2016	0.3288	0.3362	0.3323	0.3432
	2012/2017	0.3344	0.3334	0.3330	0.3313
	2013/2018	0.3367	0.3305	0.3347	0.3255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22〉 최저주거기준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29 (0.006)	-0.0426 (0.030)	-0.0014 (0.007)	0.0304 (0.031)
연령	0.0058 * (0.003)	0.0174 (0.010)	0.0021 (0.003)	0.0030 (0.011)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2 (0.000)	-0.0000 (0.000)	-0.0000 (0.000)
가구원 수	0.0856 *** (0.007)	0.0877 *** (0.016)	0.0688 *** (0.007)	0.0818 *** (0.02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706 *** (0.013)	-0.0619 (0.041)	-0.0588 *** (0.013)	-0.0169 (0.039)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554 *** (0.013)	-0.0069 (0.036)	-0.0434 ** (0.014)	-0.0175 (0.038)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496 *** (0.015)	-0.0884 (0.049)	-0.1002 *** (0.016)	-0.0980 * (0.045)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210 * (0.010)	0.0406 (0.031)	0.0221 * (0.009)	0.0070 (0.034)
주택접유 자가 (ref. 차가)	-0.2334 *** (0.014)	-0.2440 *** (0.035)	-0.1377 *** (0.015)	-0.2152 *** (0.039)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146 (0.013)	-0.0103 (0.035)	-0.0074 (0.014)	-0.0293 (0.038)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621 * (0.025)	0.1458 ** (0.050)	0.0056 (0.022)	0.0304 (0.052)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19 (0.009)	-0.0224 (0.023)	-0.0170 (0.009)	-0.0202 (0.025)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87 (0.010)	0.0089 (0.032)	-0.0176 (0.010)	-0.0228 (0.032)
상수	0.0716 (0.049)	-0.1387 (0.217)	0.0862 (0.049)	0.0448 (0.252)
F	42.81 ***	8.36 ***	16.15 ***	4.07 ***
R제곱	0.1059	0.0989	0.0600	0.0947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23〉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473 (0.018) **	0.0285 (0.019)
	특성 효과	0.0233 (0.009) **	0.0132 (0.008)
	계수 효과	0.0240 (0.017)	0.0153 (0.018)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4 (0.001)	-0.0002 (0.001)
	연령	0.0137 (0.005) **	0.0069 (0.004)
	가구원 수	-0.0422 (0.006) ***	-0.0331 (0.006) ***
	배우자	0.0015 (0.002)	0.0058 (0.002) **
	학력	0.0355 (0.005) ***	0.0233 (0.004) ***
	경제활동	-0.0040 (0.002) *	-0.0049 (0.002) *
	주택점유	0.0179 (0.006) **	0.0149 (0.005) **
	거주지역	0.0006 (0.001)	0.0003 (0.001)
	연도	0.0000 (0.000)	0.0002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는 물론 근로연령층과 개인 특성은 물론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우선 〈표 4-24〉의 기술통계에서부터 차이가 드러나는데, 고령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높고 가구원 수, 취업 비율이 낮은 것은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와 유사하지만, 연령, 학력, 거주지역 분포가 비장애인과 유사하고 유배우자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표 4-25〉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개별 변수의 방향에서 고령층과 근로연령층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변수의 영향력에서는 차이가 확인된다. 일례로 가구원 수 1인 증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확률의 차이는 근로연령층의 경우 6~9% 정도인 반면 고령층은 3~5%로 작게 나타난다. 또한 배우자 유무의 영향력은 근로연령층에 비해 높고, 주택점유 형태의 영향력은 근로연령층에 비해 작게 나타난다.

〈표 4-24〉 최저주거기준 모형의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0	0.5142	0.5907	0.4995
	남성	0.4060	0.4858	0.4093	0.5005
연령		73.55	73.17	73.98	74.06
연령 제곱		5451.71	5388.35	5519.80	5528.07
가구원 수		2.2604	2.1945	2.1184	2.0691
배우자	없음	0.3924	0.3392	0.3738	0.3681
	있음	0.6076	0.6608	0.6262	0.6319
학력	중졸 이하	0.7554	0.8093	0.7019	0.7573
	고졸	0.1523	0.1181	0.1901	0.1640
	전문대졸 이상	0.0923	0.0726	0.1080	0.0787
경제활동	미취업	0.7036	0.7813	0.6830	0.7855
	취업	0.2964	0.2187	0.3170	0.2145
주택점유	차가	0.3102	0.3909	0.2862	0.4171
	자가	0.6898	0.6091	0.7138	0.5829
거주지역	대도시	0.4018	0.3450	0.4085	0.3980
	중소도시	0.4364	0.4832	0.4474	0.4494
	농어촌	0.1618	0.1718	0.1441	0.1526
연도	2011/2016	0.3272	0.3095	0.3177	0.3238
	2012/2017	0.3295	0.3352	0.3327	0.3372
	2013/2018	0.3433	0.3553	0.3496	0.3390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25〉 최저주거기준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57 (0.013)	0.0477 (0.032)	0.0172 (0.010)	0.0495 (0.030)
연령	0.0076 (0.018)	0.0490 (0.055)	0.0216 (0.017)	0.0089 (0.042)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3 (0.000)	-0.0001 (0.000)	-0.0001 (0.000)
가구원 수	0.0454 *** (0.009)	0.0309 (0.017)	0.0355 *** (0.011)	0.0319 (0.018)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887 *** (0.018)	-0.1367 *** (0.036)	-0.0670 *** (0.016)	-0.0619 (0.033)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459 * (0.019)	-0.0913 * (0.046)	-0.0723 *** (0.016)	-0.0441 (0.044)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958 *** (0.024)	-0.1766 ** (0.061)	-0.0995 *** (0.021)	-0.1901 *** (0.034)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189 (0.015)	0.0223 (0.037)	0.0268 * (0.013)	-0.0232 (0.028)
주택접유 자가 (ref. 차가)	-0.1161 *** (0.017)	-0.0688 * (0.033)	-0.0776 *** (0.015)	-0.0673 * (0.029)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50 (0.017)	0.0522 (0.034)	-0.0529 *** (0.015)	0.0326 (0.031)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861 *** (0.018)	0.0385 (0.036)	-0.0267 (0.017)	0.0338 (0.036)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93 (0.010)	-0.0370 * (0.018)	-0.0161 (0.010)	-0.0317 (0.019)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68 (0.012)	0.0025 (0.026)	-0.0072 (0.013)	-0.0317 (0.026)
상수	-0.0418 (0.686)	-1.4466 (2.074)	-0.6731 (0.646)	-0.1489 (1.617)
F	16.71 ***	4.08 ***	10.96 ***	5.51 ***
R제곱	0.0510	0.0444	0.0411	0.0352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26〉은 고령층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대한 분해 결과이다. 우선 총 격차 분해 결과를 보면 2011~2013년에 비해 2016~2018년에 총 격차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근로연령층과 유사하다. 또한 계수 효과의 크기가 2011~2013년에 2.92%포인트에서 2016~2018년에 1.33%포인트로 줄어든 것도 유사하다. 그런데 특성 효과는 0.40%포인트에서 1.21%포인트로 증가하여 근로연령층과 차이가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구 특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커졌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연령층에서는 특성 효과의 크기가 계수 효과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고령층에서는 특성 효과보다 계수 효과의 크기가 큰 것도 특징적이다. 계수 효과가 총 격차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은 2011~2013년에 두드러지지만 2016~2018년에는 특성 효과가 증가하고 계수 효과가 감소함으로써 크기가 유사해졌다.

〈표 4-26〉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331 (0.017) *	0.0253 (0.015)
	특성 효과	0.0040 (0.005)	0.0121 (0.005) *
	계수 효과	0.0292 (0.016)	0.0133 (0.015)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5 (0.001)	0.0016 (0.001)
	연령	-0.0006 (0.001)	0.0007 (0.001)
	가구원 수	-0.0030 (0.003)	-0.0018 (0.002)
	배우자	-0.0047 (0.002) *	-0.0004 (0.002)
	학력	0.0035 (0.002)	0.0048 (0.002) *
	경제활동	-0.0015 (0.001)	-0.0027 (0.001)
	주택접유	0.0094 (0.003) ***	0.0102 (0.003) ***
	거주지역	0.0006 (0.002)	-0.0003 (0.001)
	연도	-0.0002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고령층은 특성 효과의 세부 분해 결과에서도 근로연령층과 차이가 확인된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구원 수, 학력, 주택점유 형태였는데, 고령층에서는 주택점유 형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의 특성효과는 2011~2013년에 0.47%포인트로 나타나는데, 2016~2018년에는 크기가 매우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다. 학력의 경우에는 특성효과가 2011~2013년에 0.35%포인트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6~2018년에는 0.48%포인트로 커졌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나. 주거비 과부담

다음으로 주거비 과부담 격차를 분해하였으며,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결과, 그리고 격차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27>에 제시한 주거비 과부담 모형의 기술통계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모형과 일부 변수의 결측으로 사례수가 달라 다시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동일하다.

다음 <표 4-28>은 회귀분석 결과이다. 성별은 주거비 과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과 가구원 수, 배우자 유무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의 경우 2011~2013년에는 주거비 과부담 확률과 2차 함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이 되는데, 2016~2018년에는 그렇지 않다. 가구원 수의 영향은 시기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거비 과부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주거비 과부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1~2013년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

학력의 경우 2011~2013년에 비장애인의 경우에만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영향이 확인된다. 고학력일수록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1~2013년의 장애인, 그리고 2016~2018년에는 비장애인과의 장애인 모두 학력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취업 상태 일 경우 주거비 과부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6~2018년 장애인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표 4-27〉 주거비 과부담 모형의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33	0.4151	0.5092	0.4133
	남성	0.4867	0.5849	0.4908	0.5867
연령		44.14	56.05	45.90	58.12
연령 제곱		2220.27	3382.34	2394.12	3639.94
가구원 수		3.3102	2.7321	3.1764	2.5736
배우자	없음	0.3805	0.3814	0.3961	0.4502
	있음	0.6195	0.6186	0.6039	0.5498
학력	중졸 이하	0.2343	0.5497	0.2031	0.5027
	고졸	0.4057	0.3004	0.3892	0.3266
	전문대졸 이상	0.3600	0.1499	0.4077	0.1707
경제활동	미취업	0.3695	0.5962	0.3621	0.6248
	취업	0.6305	0.4038	0.6379	0.3752
주택점유	차가	0.3906	0.4523	0.3528	0.4519
	자가	0.6094	0.5477	0.6472	0.5481
거주지역	대도시	0.4529	0.4362	0.4348	0.4431
	중소도시	0.4614	0.4474	0.4805	0.4478
	농어촌	0.0857	0.1163	0.0848	0.1091
연도	2011/2016	0.3287	0.3282	0.3300	0.3357
	2012/2017	0.3337	0.3337	0.3327	0.3344
	2013/2018	0.3376	0.3381	0.3373	0.3300
사례수		39264	4639	33801	39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28〉 주거비 과부담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39 (0.002)	0.0178 (0.014)	0.0024 (0.002)	-0.0010 (0.012)
연령	0.0042 *** (0.001)	0.0078 *** (0.002)	0.0017 * (0.001)	0.0008 (0.002)
연령 제곱	-0.0000 *** (0.000)	-0.0001 *** (0.000)	-0.0000 (0.000)	0.0000 (0.000)
가구원 수	-0.0198 *** (0.002)	-0.0446 *** (0.006)	-0.0144 *** (0.002)	-0.0219 *** (0.005)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365 *** (0.005)	-0.0347 (0.018)	-0.0146 ** (0.005)	-0.0338 ** (0.013)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141 ** (0.005)	0.0229 (0.018)	-0.0065 (0.005)	-0.0210 (0.014)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208 *** (0.005)	0.0361 (0.025)	0.0037 (0.006)	0.0040 (0.019)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312 *** (0.004)	-0.0463 ** (0.015)	-0.0303 *** (0.004)	0.0077 (0.012)
주택점유 자가 (ref. 차가)	-0.0121 ** (0.004)	-0.0286 * (0.014)	-0.0070 (0.004)	-0.0100 (0.010)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57 (0.004)	-0.0046 (0.015)	0.0038 (0.004)	0.0063 (0.013)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46 (0.006)	0.0040 (0.020)	0.0009 (0.006)	0.0033 (0.015)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06 (0.004)	0.0002 (0.010)	-0.0072 * (0.004)	0.0040 (0.010)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25 (0.004)	0.0063 (0.012)	-0.0031 (0.004)	0.0002 (0.011)
상수	0.0572 *** (0.013)	0.0281 (0.063)	0.0651 *** (0.015)	0.0836 (0.061)
F	37.10 ***	11.50 ***	14.87 ***	6.31 ***
R제곱	0.0443	0.0672	0.0245	0.0369
사례수	39264	4639	33801	3988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주택점유 형태가 자가일 경우 주거비 과부담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6~2018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자가의 경우에도 차가 못지않게 대출 상환비 등 주거비가 소요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확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 <표 4-29>는 앞에서 제시한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격차 분해를 한 결과이다. 2011~2013년에 장애인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4.98%포인트 높다. 이 중 3.54%포인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인한 효과, 1.45%포인트는 계수 차이로 인한 효과로 계수 효과보다 특성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6~2018년에 총 격차는 2.59%포인트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또한 특성 효과로 인한 격차가 2.32%포인트로 2011~2013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계수 효과는 0.26%포인트로 줄어 미미한 수준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모형에서와 같이 주거비 과부담 모형에서도 2011~2013년에 특성 효과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 수 변수로 나타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거비 과부담 상태일 확률이 낮고, 장애인의 가구원 수가 비장애인보다 적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가구원 수가 장애인과 같았더라면 비장애인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1.15%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다. 2016~2018년에 가구원 수의 특성 효과는 0.87%포인트로 작아졌지만 여전히 특성 효과 중 가장 크다.

특성 효과에서 가구원 수 이외의 비교적 큰 영향은 연령과 경제활동에서 확인된다. 2011~2013년에 비장애인의 연령 분포가 장애인과 같았더라면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1.00%포인트, 고용률이 같았더라면 0.71%포인트 더 높았을 것이다. 2016~2018년에 특성 효과 중 연령의 영향은

0.54%포인트로 다소 작아졌는데, 경제활동의 영향은 0.80%포인트로 오히려 다소 증가하였다. 학력의 경우 2011~2013년에는 특성 효과가 0.59%포인트로 나타나는데, 2016~2018년에는 크기도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나머지 변수들의 특성효과는 미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29〉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498 (0.007) ***	0.0259 (0.006) ***
	특성 효과	0.0354 (0.003) ***	0.0232 (0.003) ***
	계수 효과	0.0145 (0.007) *	0.0026 (0.006)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4 (0.000)	0.0002 (0.000)
	연령	0.0100 (0.002) ***	0.0054 (0.002) **
	가구원 수	0.0115 (0.001) ***	0.0087 (0.001) ***
	배우자	-0.0000 (0.001)	0.0008 (0.000)
	학력	0.0059 (0.002) ***	-0.0005 (0.002)
	경제활동	0.0071 (0.001) ***	0.0080 (0.001) ***
	주택점유	0.0007 (0.000) *	0.0007 (0.000)
	거주지역	-0.0002 (0.000)	-0.0001 (0.000)
	연도	-0.0000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주거비 과부담에 대해서도 연령대를 구분하여 격차를 분해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는 사례수가 최저주거기준 모형과 달라 따로 제시하였지만, 기본적인 특성은 다르지 않다(〈표 4-20〉).

〈표 4-31〉에서 근로연령층에 대한 주거비 과부담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주거비 과부담 확률은 연령과 2차 함수 관계를 보이고,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배

우자가 없을 경우, 저학력일 경우, 미취업 상태일 경우 높다. 다만 주택점유 형태의 경우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에서는 2011~2013년에 주거비 과부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근로연령층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가 상태일 때 주거비 과부담 확률이 낮은 방향은 일치한다.

〈표 4-30〉 주거비 과부담 모형의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12	0.3710	0.4952	0.3613
	남성	0.4988	0.6290	0.5048	0.6387
연령		39.78	48.37	41.06	48.52
연령 제곱		1741.36	2482.61	1855.55	2503.91
가구원 수		3.4658	2.9729	3.3585	2.8772
배우자	없음	0.3786	0.4000	0.4000	0.4995
	있음	0.6214	0.6000	0.6000	0.5005
학력	중졸 이하	0.1570	0.4327	0.1170	0.3495
	고졸	0.4433	0.3828	0.4235	0.4245
	전문대졸 이상	0.3998	0.1845	0.4595	0.2260
경제활동	미취업	0.3201	0.5135	0.3069	0.5280
	취업	0.6799	0.4865	0.6931	0.4720
주택점유	차가	0.4025	0.4796	0.3642	0.4728
	자가	0.5975	0.5204	0.6358	0.5272
거주지역	대도시	0.4606	0.4776	0.4394	0.4701
	중소도시	0.4651	0.4310	0.4861	0.4469
	농어촌	0.0744	0.0914	0.0745	0.0829
연도	2011/2016	0.3289	0.3363	0.3321	0.3428
	2012/2017	0.3344	0.3335	0.3326	0.3326
	2013/2018	0.3367	0.3302	0.3353	0.3246
사례수		26798	2134	22206	15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31〉 주거비 과부담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46 (0.003)	0.0278 (0.020)	0.0031 (0.003)	0.0048 (0.016)
연령	0.0064 *** (0.001)	0.0102 * (0.004)	0.0043 *** (0.001)	0.0018 (0.002)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 (0.000)	-0.0000 ** (0.000)	-0.0000 (0.000)
가구원 수	-0.0185 *** (0.002)	-0.0474 *** (0.009)	-0.0137 *** (0.002)	-0.0196 ** (0.007)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354 *** (0.006)	-0.0188 (0.027)	-0.0120 * (0.006)	-0.0237 (0.017)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133 * (0.006)	0.0114 (0.021)	-0.0068 (0.006)	-0.0165 (0.019)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221 *** (0.007)	0.0298 (0.028)	0.0005 (0.007)	0.0071 (0.023)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321 *** (0.005)	-0.0468 * (0.020)	-0.0318 *** (0.005)	0.0062 (0.016)
주택점유 자가 (ref. 차가)	-0.0044 (0.004)	-0.0191 (0.017)	-0.0008 (0.004)	-0.0000 (0.012)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56 (0.004)	0.0026 (0.018)	0.0021 (0.005)	0.0039 (0.017)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07 (0.007)	0.0128 (0.030)	-0.0002 (0.006)	-0.0104 (0.017)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08 (0.004)	0.0106 (0.012)	-0.0086 * (0.004)	0.0048 (0.014)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37 (0.005)	0.0090 (0.015)	-0.0041 (0.004)	-0.0141 (0.014)
상수	0.0104 (0.018)	-0.0182 (0.086)	0.0161 (0.022)	0.0488 (0.060)
F	16.16 ***	5.26 ***	6.29 ***	2.96 ***
R제곱	0.0344	0.0733	0.0182	0.0293
사례수	26798	2134	22206	1507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32〉에는 근로연령층에서 주거비 과부담 격차의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18세 이상 전체에서는 계수 효과에 비해 특성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컸는데, 이는 근로연령층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2011~2013년에는 계수 효과가 1.61%포인트인데 비해 특성 효과가 3.01%포인트로 높고, 2016~2018년에도 계수 효과가 -0.07%포인트인데 비해 특성 효과가 1.70%포인트로 높다. 또한 총 격차는 물론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 모두 2011~2013년에 비해 2016~2018년에 감소한 것도 18세 이상 전체에 대한 분해 결과와 유사하다.

〈표 4-32〉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461 (0.009) ***	0.0164 (0.007) *
	특성 효과	0.0301 (0.003) ***	0.0170 (0.003) ***
	계수 효과	0.0161 (0.009)	-0.0007 (0.008)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6 (0.000)	0.0004 (0.000)
	연령	0.0077 (0.002) ***	0.0019 (0.002)
	가구원 수	0.0091 (0.001) ***	0.0066 (0.001) ***
	배우자	0.0008 (0.001)	0.0012 (0.001)
	학력	0.0056 (0.002) **	-0.0001 (0.002)
	경제활동	0.0062 (0.001) ***	0.0070 (0.001) ***
	주택점유	0.0003 (0.000)	0.0001 (0.000)
	거주지역	-0.0002 (0.000)	-0.0001 (0.000)
	연도	0.0000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물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특성 효과의 세부 분해 결과도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와 유사하다. 2011~2013년에 특성 효과에서의 영향은 연령, 가구원 수, 학력, 경제활동 등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18세 이상 전체 연령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특성 효과에서 이들 변수의 영향이 2016~2018년에 들어 크기가 줄어들고 일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고령층에서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격차 분해를 실시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모형과 사례수가 일부 달라 기술통계를 다시 제시하였는데, 기본적인 특성은 일치한다(〈표 4-33〉). 근로연령층과 비교한 고령층의 특성 차이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표 4-33〉 주거비 과부담 모형의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3	0.5134	0.5905	0.4997
	남성	0.4057	0.4866	0.4095	0.5003
연령		73.55	73.18	73.99	74.06
연령 제곱		5451.56	5390.32	5520.33	5527.89
가구원 수		2.2607	2.1949	2.1193	2.0691
배우자	없음	0.3928	0.3398	0.3739	0.3682
	있음	0.6072	0.6602	0.6261	0.6318
학력	중졸 이하	0.7558	0.8107	0.7027	0.7574
	고졸	0.1524	0.1166	0.1902	0.1639
	전문대졸 이상	0.0918	0.0727	0.1070	0.0787
경제활동	미취업	0.7032	0.7809	0.6828	0.7857
	취업	0.2968	0.2191	0.3172	0.2143
주택점유	차가	0.3104	0.3915	0.2867	0.4172
	자가	0.6896	0.6085	0.7133	0.5828
거주지역	대도시	0.4013	0.3439	0.4077	0.3981
	중소도시	0.4367	0.4840	0.4479	0.4492
	농어촌	0.1620	0.1721	0.1444	0.1526
연도	2011/2016	0.3272	0.3101	0.3179	0.3238
	2012/2017	0.3291	0.3341	0.3330	0.3373
	2013/2018	0.3437	0.3559	0.3491	0.3389
사례수		12466	2505	11595	248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34〉 주거비 과부담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124 (0.009)	0.0048 (0.019)	0.0110 (0.008)	-0.0027 (0.018)
연령	0.0152 (0.009)	0.0079 (0.026)	0.0225 ** (0.008)	-0.0063 (0.029)
연령 제곱	-0.0001 (0.000)	-0.0001 (0.000)	-0.0001 ** (0.000)	0.0000 (0.000)
가구원 수	-0.0306 *** (0.003)	-0.0434 *** (0.007)	-0.0248 *** (0.003)	-0.0307 *** (0.006)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374 ** (0.012)	-0.0529 * (0.022)	-0.0210 (0.011)	-0.0413 (0.022)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312 ** (0.011)	0.0615 (0.039)	-0.0086 (0.010)	-0.0295 (0.019)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438 ** (0.014)	0.0384 (0.057)	-0.0169 (0.014)	-0.0160 (0.032)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211 * (0.009)	-0.0596 ** (0.019)	-0.0280 *** (0.008)	-0.0064 (0.018)
주택접유 자가 (ref. 차가)	-0.0605 *** (0.012)	-0.0506 * (0.024)	-0.0399 *** (0.011)	-0.0251 (0.018)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31 (0.010)	-0.0205 (0.025)	0.0091 (0.009)	0.0138 (0.021)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294 ** (0.011)	-0.0098 (0.024)	0.0009 (0.013)	0.0197 (0.024)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24 (0.008)	-0.0241 (0.018)	0.0022 (0.008)	0.0038 (0.015)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41 (0.008)	-0.0012 (0.019)	0.0046 (0.008)	0.0243 (0.017)
상수	-0.2999 (0.351)	0.0690 (1.001)	-0.7004 * (0.321)	0.3698 (1.112)
F	17.04 ***	6.67 ***	13.34 ***	5.08 ***
R제곱	0.0471	0.0583	0.0308	0.0405
사례수	12466	2505	11595	2481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4-34〉에서 고령층에 대한 주거비 과부담 모형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연령층과 비교하여 개별 변수의 영향이 갖는 방향은 거의 일치하지만 그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연령의 경우 근로연령층에서 주거비 과부담 확률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었는데 고령층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주택점유 형태의 영향은 근로연령층에서는 크기도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고령층의 경우에는 2~6%의 영향을 주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큰 차이이다.

마지막으로 〈표 4-35〉에는 고령층에서 주거비 과부담에 대한 격차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총 격차 분해에서도 근로연령층과 차이가 확인된다. 고령층에서는 2011~2013년에 총 격차가 2.18%포인트로 근로연령층 4.61%포인트보다 작다. 큰 차이는 특성 효과가 0.99%포인트로 매우 작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로연령층에서는 총 격차의 상당 부분이 특성 효과인 것에 비해, 고령층에서는 계수 효과의 크기가 더 크다. 하지만 2016~2018년에 이르면 고령층도 근로연령층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총 격차 자체는 1.64%포인트로 줄어들었고 총 격차의 대부분을 특성 효과가 차지한다. 이는 2016~2018년에 특성 효과가 증가한 반면 계수 효과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성 효과의 세부 분해 결과에서도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 근로연령층의 특성 효과에서는 가구원 수와 경제활동의 영향이 크게 확인되었는데, 고령층은 주택점유 형태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주택점유 형태의 특성효과는 근로연령층에서는 크기도 미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고령층의 경우 2011~2013년에 0.49%포인트, 2016~2018년에 0.52%포인트로 특성 효과 중에서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표 4-35〉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218 (0.011) *	0.0164 (0.010)
	특성 효과	0.0099 (0.003) **	0.0115 (0.003) ***
	계수 효과	0.0119 (0.011)	0.0049 (0.010)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10 (0.001)	0.0010 (0.001)
	연령	0.0009 (0.000)	0.0006 (0.000)
	가구원 수	0.0020 (0.002)	0.0012 (0.001)
	배우자	-0.0020 (0.001) *	-0.0001 (0.000)
	학력	0.0020 (0.001)	0.0007 (0.001)
	경제활동	0.0016 (0.001) *	0.0029 (0.001) **
	주택점유	0.0049 (0.002) **	0.0052 (0.002) **
	거주지역	-0.0004 (0.001)	0.0000 (0.000)
	연도	0.0000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제4절 시사점

이 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의 수준과 변화를 살펴보고 Oaxaca-Blinder 분해법을 통해 그러한 격차의 요인을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주거비 과부담과 같은 주거 취약의 비중은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도 감소하고 있다. 측정 방식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2000년대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주거 취약 상태 수준에 비해 2010년대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확연히 낮은 상태가 확인된다.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2015)과 같이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감소 추세는 확인된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2000년대에도 나타나고 있었는데(임세희, 2014),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의 영향이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에게 더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또한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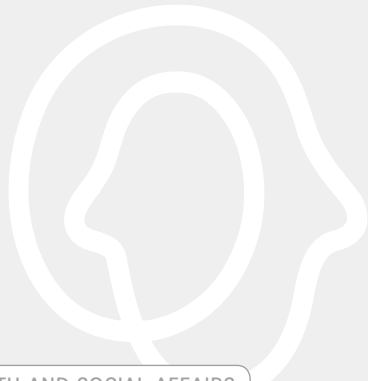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주거비 과부담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도 유사하다. 하지만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고령층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비 과부담 격차는 고령층의 경우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령 비장애인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격차에서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의 크기가 유사한 반면,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서는 계수 효과보다 특성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특성 효과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인한 격차인데, 인구학적 특성과 같이 장애에 대해 외생적인 특성의 경우 정책적 개입으로 차이를 줄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하지만 학력, 경제활동, 주택점유 형태, 거주지역 등 사회정책의 개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도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서 특성 효과는 2011~2013년에 비해 2016~2018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고령층의 경우 분석시기 초기에 비해 후기에 최저주거기준 미

달과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서 특성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계수 효과는 주거 지표의 특성상 전통적인 ‘차별’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크지 않다. 그보다는 주거복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내포된 효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모든 연령대에서 분석 초기에 비해 후기에 계수 효과가 감소한 것은 주거복지 정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에서 현재의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계수 효과에 의한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시켜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2018년 시기에 이미 계수 효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격차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전히 20% 정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3~6% 정도의 주거비 과부담 비율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는 요구된다. 단지 주거복지 정책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주거 상황을 더 개선시키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성 효과 또한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특히 고령층의 경우 증가한 것에 정책적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경우 학력과 주택점유 형태,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경제활동과 주택점유 형태가 특성 효과에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령층의 학력에 대해서는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경제활동과 주택점유 형태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정책이 아닌 고용과 소득보장 정책에서의 대응이 가능하다.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지원, 그리고 노후에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근로연령대에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및 고용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5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제1절 건강 분야 격차 지표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의 실태와 변화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분해

제4절 시사점

제5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제1절 건강 분야 격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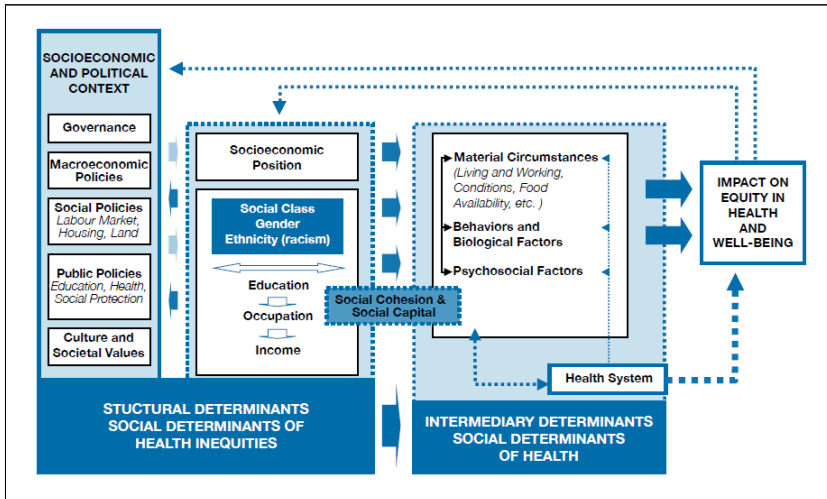
1. 건강 격차의 개념 및 평가

건강 격차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이고 피할 수 있는 건강상의 차이”로 정의된다(Whitehead, 1992, p. 431). 미국의 Healthy People 2020은 건강 격차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리함과 밀접히 연결되는 건강상의 차이”라고 언급하였는데(Healthy People 2020, 2020), 경제적 불리함은 물질적 자원이나 기회의 결핍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함은 사회에서 상대적 지위, 환경적 불리함은 거주하는 지역사회 등과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Braveman, 2014). 이러한 사회경제적 불리함은 피할 수 있는 질환, 장애, 조기사망 등과 연결되는데 건강 격차는 보건의료제도 외에도 주거나 고용,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정책 등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Braveman, 2014).

건강 격차의 발생 기전을 분석한 연구는 구조적 결정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과 함께, 교육,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중간매개 결정요인으로 생활, 노동조건과 같은 물질적 요인, 행태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보건의료시스템을 제시한다(Solar & Irwin, 2010, p. 48). 이러한 모형에 근거해 본다면 건강 격차는 건강상태 그 자체로도 평가가 필요하지만 중간 요인으로서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행동이나 의료이용 등을 포함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건강 격차와 관련한 연구에서 건강상태에서의 격차와 함께 보건의료에서의 격차는 중

요한 문제이다. 보건의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도가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 보장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김창엽, 2009, pp. 81-82).

[그림 5-1]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자료: Solar, O., & Irwin, A. (2010).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cussion Paper 2 (Policy and Practi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Document Production Services. p. 48.

건강 격차에서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불리함은 복합적이다. Jenkins and Rigg(2004, p. 497)는 장애인이 겪는 경제적 불리함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리함(선택 효과), 장애 발생으로 인한 효과, 장애 보유로 인한 효과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등 장애 발생 이전에 더 불리한 환경에 있고 장애 발생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다 열악해진다고 하였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측면에서 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평가한 Emerson et al.

(2009)에 따르면 사회적 요인들이 어린 시절의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낳을 수 있고 장애 발생은 장애아동의 직간접 돌봄 비용을 발생시키고 가구의 사회계층이 하향 이동할 수 있다. 성인기에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기존의 사회적 격차는 더 커질 수 있고 장애와 관련된 건강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Emerson et al., 2009, p. 6). 장애와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은 장애인의 역량을 줄이고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전들은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한 장애인이 저소득, 경제적 불안정, 열악한 주거환경 등 생활과 일에 있어 불건강과 관련된 노출의 위험이 높다(Emerson et al., 2011, p. 145). 예를 들어 영국에서 사회경제적 불리함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위험의 20~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merson et al., 2009, p. 8). 장애 관련 차별이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건의료제도의 작동에 있어 차별은 직접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적절한 접근을 방해하고 간접적으로 장애인이 열악한 건강을 가질 수 있는 생활 환경에 노출시키며 차별에 대한 경험이 신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merson et al., 2011, p. 146).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을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라고 정의한 것처럼(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p. 1) 건강 격차는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대여명이나 사망률이 인구 집단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건강의 연속성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질병 이환율이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으로 나눠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도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평가하기도 하고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를 사용하기도 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의료이용 여부나 의료기관 방문 횟수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p.

351). 한편 의료 이용에 있어 건강 필요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미충족 의료(unmet need)를 평가하기도 하다(Allin, Grignon, & Le Grand, 2010, p. 466). 또한 예방 목적의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성별, 연령과 같이 관측 가능한 요인 외에 다른 원인으로 그 필요도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의료 격차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Parish, Saville, & Taylor, 2006).

한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수준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가계가 심각한 경제적 위험을 경험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 수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지불능력 대비 가계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의 수준이 적절한지(재난적 의료비 발생 여부)를 평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의 수준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표나 의료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는 보편적 의료보장의 목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Wagstaff et al., 2018, p. 180).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분석한 김성희 외(2017b)는 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 이환율, 우울 증상 경험률, 자살률로 건강상태를 평가하였고 외래 이용률, 입원율, 응급의료 이용률, 미충족 치료율로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평가하였으며 흡연율,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로 건강행태 격차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좋지 않았지만 고령화되면서 격차는 줄어들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외래 이용률은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 입원율과 응급의료 이용률, 미충족 치료율, 개인지출 의료비는 장애인이 더 높은 편이었다. 흡연율은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조금 높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조금 높았다(김성희 외, 2017b, pp. 78-91).

2. 건강 격차 지표 선정 및 측정

이 장에서는 보건의료와 건강상태로 구분하여 건강 격차를 평가하였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의료접근성 지표로 미충족 의료 경험과 의료서비스 이용 수준을 평가하였다. 미충족 의료 경험은 필요할 때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에서 다른 지표들은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였으나 미충족 의료의 경우 한국복지패널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욕구만을 조사하고 있어, 다양한 이유를 포함해 조사하고 있는 한국의료패널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 의료패널은 ‘지난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를 묻고 있으며 그 이유로 ① 경제적 이유(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② 의료기관이 너무 멀어서, ③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웠음, ④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⑤ 증세가 경미해서, ⑥ 어디로 가야할지 잘 몰라서(정보부족), ⑦ 방문 시간이 없어서, ⑧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지 않아서, ⑨ 나(또는 가족)의 건강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가 없어서, ⑩ 기타로 나눠 의료이용 제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이 연구에서는 전체 미충족 의료 경험을 평가하는 것과 함께 의료이용 제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이유(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웠음’, ‘방문 시간이 없어서’를 각각 ‘경제적 제약’, ‘이동상 제약’, ‘시간상 제약’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이유를 기타로 구분하였다.

의료 이용은 외래의료 이용 여부, 외래 방문일수, 입원의료 이용 여부, 입원일수의 네 가지를 평가하고 예방서비스인 건강검진 수진 여부를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어려움

을 확인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 여부를 평가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지불능력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의료비로 정의되는데 지불능력은 소득, 생활비가 사용되기도 하고 가구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을 이용하기도 한다(Xu et al., 2003). 이 장에서는 가구소득과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제외한 금액을 함께 이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10%, 20%, 30%, 40%가 넘는 경우와 가처분소득 대비 10%, 20%, 30%, 40%가 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 발생으로 정의하였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가구 단위로 산출하여 개인 단위에서 분석하였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알려진 주관적인 건강인식을 평가하였다. 주관적인 건강인식은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보통이다’,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로 측정되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이 연구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응답한 경우를 합산하여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건강 지표로 만성질환 유병 상태를 평가하였는데 질환 종류나 유병기간에 상관없이 만성질환이 1개라도 있다고 응답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울과 자살을 평가하였다. 우울은 CESD-11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총점과 그 값에 20/11을 곱한 값이 16보다 높은 경우를 ‘우울 증상’으로 구분한 두 가지 변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2020)를 모두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각각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표 5-1〉 건강 격차 지표의 선정

구분	지표	측정	실태 분석	격차 분해
보건 의료	예방서비스	진검검진	수진 여부	○ ×
	의료서비스	외래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 일수	○ ×
		입원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 일수	○ ×
	미충족 의료	전체 미충족 의료	필요한데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 경험	○ ○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 ×
		이동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거동 불편 혹은 건강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 ×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방문 시간이 없어서 발생한 미충족 의료	○ ×
		기타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나머지 7개 항목을 이유로 한 미충족 의료	○ ×
	재난적 의료비	소득 대비 10, 20, 30, 40% 초과 의료비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기준	○ ○
		지불능력 대비 10, 20, 30, 40% 초과 의료비	(소비지출 - 식료품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기준	○ ×
건강 상태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 나쁨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혹은 '건강이 아주 안 좋다'	○ ○
	만성질환	만성질환 보유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	○ ×
	우울	우울 정도	CESD-11 점수	○ ×
		우울 증상	CESD-11 점수 16점 초과	○ ○
	자살	자살 생각	지난 1년간 자살 생각	○ ×
		자살 계획	지난 1년간 자살 계획	○ ×
		자살 시도	지난 1년간 자살 시도	○ ×

주: 미충족 의료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분석함. 재난적 의료비에서 격차 분해에 사용한 지표는 소득 대비 10% 초과 기준임.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3.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 분해 모형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추이를 비교한 지표들 중 네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건강 격차를 분해하였다. 일반적인 건강수준을 보여 줄 수 있는 주관

적 건강인식(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과 정신건강 관련 지표인 우울 증상 경험을 이용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관련 미충족 의료 경험(모든 이유)과 재난적 의료비 경험(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을 이용하였다.

격차 분해에 사용되는 회귀모형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Aday and Anderson(1974)은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인성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도 이 틀에서 미충족 의료 욕구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미충족 의료 욕구 요인에 관한 문헌을 고찰한 연구는 여성, 고령, 취업한 경우와 저학력, 저소득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만성질환 개수가 많을수록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문정화, 강민아, 2016, pp. 501-502, 신한열, 고재인, 심은혜, 김홍수, 2019, p. 38). 한편 한국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주재홍, 김휘준, 장지은, 박은철, 장성인, 2020, p. 122)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경제적 제약 요인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충족 의료에서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혜재, 허순임(2017, pp. 103-104)은 일차적으로 교육수준 등 본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요인들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 발생에 대한 격차 분해 변수를 선정하였다. 우선 소인성 요인 측면에서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를 포함하였고 가능 요인 측면에서 학력,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보장 상태를 포함하였

다. 마지막으로 필요 요인 측면에서 만성질환 유무를 포함하였다.

개인 수준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고 경제활동 여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 만성질환 보유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과 같은 건강요인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달랐다(김연수, 김혜윤, 2018).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재난적 의료비의 분모인 가구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면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였다(김수진, 2019, p. 84).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일반적으로 가구 수준에서 평가되는데 재난적 의료비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가구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저학력인 경우, 미취업인 경우, 기혼인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가구 내 만성질환 개수가 많은 경우, 가구 내 노인이 있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이 높았다(김민정, 감신, 이원기, 2017, 박진영, 정기택, 김용민, 2014, 손민성, 김한결, 이현실, 최만규, 2018, 이유진, 신정우, 2018).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위험 요인은 개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격차 분해 모형은 앞서 미충족 의료 욕구 분석 모형과 동일한 변수를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앞서 건강불평등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 유전인자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예를 들어 저학력, 저소득, 미취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배연희, 김한나, 2015, 윤병준, 2016).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상태,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장

애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하였다(유창민, 2016).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우울감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연령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서 우울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고 혼인상태, 만성질환, 직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서 우울감을 유지시키는 요인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에서는 소득이, 비장애인에서는 교육수준이 우울감 유지와 관련된 요인이었는데 비장애인에서 교육수준은 우울감 상태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유창민, 2017). 주관적 건강수준과 우울감에 대한 격차 분해 모형은 성, 연령 등의 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상태, 만성질환 유무 등을 변수로 포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의 건강 격차를 분해하였다.

〈표 5-2〉 건강 격차 분해 모형

변수	측정	미충족 의료	재난적 의료비	주관적 건강 나쁨	우울 증상
성별	여성(ref.), 남성	○	○	○	○
연령	연속변수(만 나이)	○	○	○	○
연령 제곱	연속변수(연령 × 연령)	○	○	○	○
배우자	없음(ref.), 있음	○	○	○	○
학력	중졸 이하(ref.), 고졸, 전문대졸 이상(졸업 기준 최종학력)	○	○	○	○
경제활동	미취업(ref.), 취업	○	○	○	○
소득수준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 ref.),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고소득층(150% 이상)	○	○	○	○
거주지역	대도시(ref.), 중소도시, 농어촌	○	○	○	○
만성질환	없음(ref.), 있음	○	○	○	○
건강보장	건강보험(ref.), 의료급여	○	○	×	×
연도	2011/2016(ref.), 2012/2017, 2013/2018	○	○	○	○

주: ref.는 기준범주를 의미함. 미충족 의료는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거주지역은 대도시와 그 외로 구분함.

자료: 저자가 직접 작성함.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의 실태와 변화

이하에서는 2011~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 실태를 분석한다. 모든 분석 결과는 장애 유무, 연도, 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이때 연령 집단별 분석 결과는 시간에 따라 연령 구성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 근로연령대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각각의 건강수준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고령층 비율 증가가 전체 장애인의 건강 수준(의료 이용)을 악화(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¹⁵⁾

1. 보건의료

우선 <표 5-3>에 유형별 의료서비스 이용 상태를 제시하였다. 외래이용 비율은 비장애인이 2011년에 80.44%, 2018년에 80.72%였고 장애인은 2011년 91.32%, 2018년 95.35%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11년에는 10.88%포인트, 2018년에는 14.63%포인트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비장애인의 외래진료 횟수는 2011년 10.46회, 2018년 11.17회였고 장애인은 2011년 24.58회, 2018년 22.51회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11년에는 14.13회, 2018년에는 11.34회 더 많이 외래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입원서비스 이용도 장애인이 더 높은 편이었는데 입원 여부는 비장애인이 2011년 9.92%, 2018년 10.30%, 장애인이 2011년 18.85%, 2018년 15.25%로 2011년 격차는 8.93%포인트,

15) 한국복지패널 2011~2018년 자료에서 비장애인의 노인 비율은 12.86%에서 15.25%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의 노인 비율은 29.23%에서 38.44%로 증가하였다. 한국의료패널도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의 노인 비율은 15.4%에서 22.6%로 증가하였고 장애인의 노인 비율은 50.2%에서 61.7%로 증가하였다.

2018년 격차는 4.94%포인트였고 입원 일수는 비장애인이 2011년 1.62일, 2018년 1.62일, 장애인이 2011년 6.26일, 2018년 7.43일로 2011년 격차는 4.64일, 2018년 격차는 5.80일이었다.

연령대를 구분하면 근로연령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보다 의료 이용 정도는 낮았다. 연령대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랐는데 외래서비스는 고령층에서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감소하였지만 입원서비스는 격차가 증가하였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발생 등으로 비장애인도 의료 이용이 증가하지만 장애인이 건강상태가 더 빠르게 악화되면서 입원서비스 이용이 더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 <표 5-4>에는 건강검진 수진율을 제시하였다. 건강검진 수진율은 비장애인에서 2011년 46.44%, 2018년 48.10%로 소폭 증가하였고 장애인에서 45.93%, 2018년 43.07%로 소폭 감소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 격차는 0.51%포인트에서 5.03%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연령을 구분할 경우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두 집단에서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연령층의 격차는 1.02%포인트에서 3.32%포인트로 증가하였고 고령층은 1.01%포인트에서 10.41%포인트로 증가하여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더 컸다.

〈표 5-3〉 의료서비스 이용

(단위: %, %포인트, 횟수, 일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외래 이용	비장애인	80.44	78.84	76.52	77.87	77.96	78.50	79.11	80.72
		장애인	91.32	90.62	92.45	93.12	91.73	92.81	90.62	95.35
		격차	10.88	11.78	15.93	15.25	13.78	14.31	11.51	14.63
	외래 진료 횟수	비장애인	10.46	10.54	10.63	10.27	10.78	10.52	10.73	11.17
		장애인	24.58	24.58	25.24	22.87	25.81	26.65	22.72	22.51
		격차	14.13	14.04	14.61	12.61	15.03	16.13	11.99	11.34
	입원	비장애인	9.92	9.53	8.72	9.39	9.95	9.50	9.80	10.30
		장애인	18.85	15.81	14.14	14.84	18.46	19.93	16.08	15.25
		격차	8.93	6.28	5.42	5.44	8.51	10.44	6.28	4.94
	입원 일수	비장애인	1.62	1.77	1.46	1.49	1.47	1.58	1.50	1.62
		장애인	6.26	3.98	5.02	5.08	7.36	8.71	7.98	7.43
		격차	4.64	2.21	3.56	3.58	5.90	7.13	6.48	5.80
18~64세	외래 이용	비장애인	77.98	76.20	73.42	74.93	74.82	75.35	75.98	77.48
		장애인	88.94	87.43	90.30	90.22	88.28	90.51	87.43	93.46
		격차	10.96	11.22	16.88	15.28	13.46	15.16	11.45	15.98
	외래 진료 횟수	비장애인	7.73	7.94	7.85	7.58	8.09	7.85	8.11	8.30
		장애인	20.92	19.31	20.17	18.89	21.90	22.74	19.24	17.90
		격차	13.19	11.37	12.32	11.31	13.81	14.89	11.13	9.61
	입원	비장애인	8.67	8.47	7.55	8.24	8.79	8.37	8.52	9.11
		장애인	16.31	13.41	10.86	12.99	17.19	16.46	11.76	10.73
		격차	7.64	4.94	3.30	4.75	8.40	8.09	3.24	1.62
	입원 일수	비장애인	1.24	1.35	1.13	1.06	1.03	1.03	1.04	1.11
		장애인	4.82	2.99	4.32	4.61	8.03	8.35	6.30	6.37
		격차	3.58	1.63	3.19	3.54	7.01	7.32	5.26	5.25
65세 이상	외래 이용	비장애인	97.08	96.89	97.04	96.64	97.41	97.61	97.30	98.71
		장애인	97.09	97.70	96.93	98.91	98.13	96.87	95.86	98.38
		격차	0.01	0.82	-0.11	2.27	0.72	-0.74	-1.43	-0.33
	외래 진료 횟수	비장애인	28.93	28.33	28.98	27.45	27.45	26.72	25.90	27.16
		장애인	33.45	36.26	35.74	30.81	33.05	33.56	28.41	29.89
		격차	4.52	7.93	6.76	3.37	5.59	6.84	2.51	2.73
	입원	비장애인	18.41	16.79	16.43	16.75	17.16	16.36	17.23	16.92
		장애인	25.02	21.13	20.94	18.52	20.80	26.07	23.15	22.47
		격차	6.61	4.34	4.51	1.77	3.65	9.72	5.92	5.55
	입원 일수	비장애인	4.16	4.59	3.64	4.23	4.19	4.93	4.17	4.47
		장애인	9.72	6.19	6.47	6.01	6.12	9.36	10.73	9.13
		격차	5.56	1.59	2.83	1.79	1.93	4.43	6.56	4.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4〉 건강검진 수준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46.44	47.78	46.88	45.85	47.43	49.19	48.16	48.10
	장애인	45.93	45.56	48.00	40.88	46.14	46.25	44.43	43.07
	격차	-0.51	-2.22	1.11	-4.97	-1.28	-2.95	-3.73	-5.03
18~64세	비장애인	46.04	47.14	46.59	45.10	47.00	48.94	47.83	47.43
	장애인	45.02	45.92	47.67	39.28	43.77	45.81	43.96	44.11
	격차	-1.02	-1.22	1.08	-5.82	-3.23	-3.13	-3.87	-3.32
65세 이상	비장애인	49.16	52.20	48.85	50.67	50.09	50.75	50.08	51.81
	장애인	48.15	44.77	48.69	44.09	50.53	47.02	45.20	41.40
	격차	-1.01	-7.43	-0.16	-6.58	0.44	-3.73	-4.87	-10.4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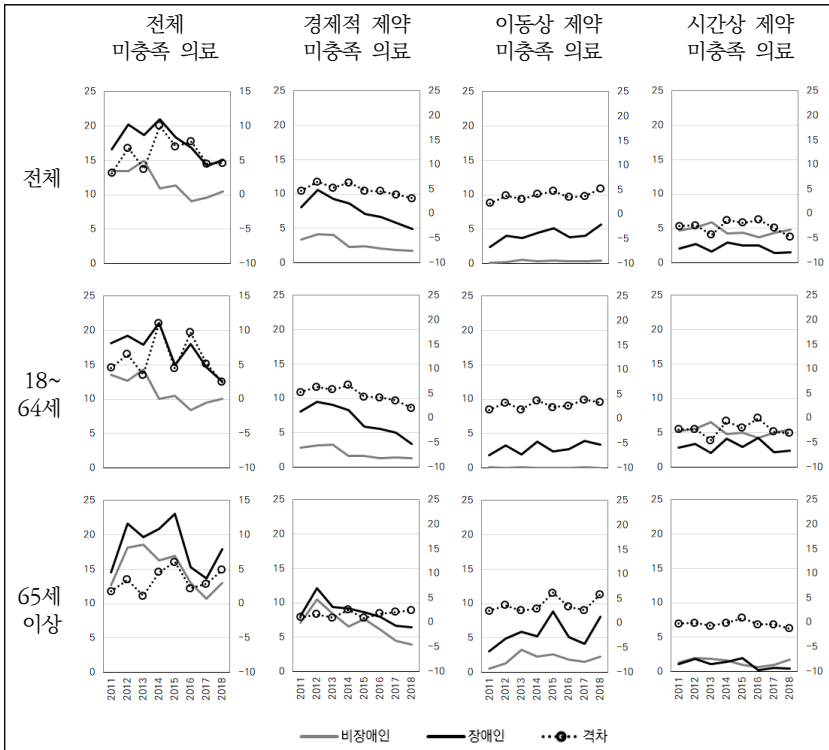
다음 [그림 5-2]와 〈표 5-5〉에는 미충족 의료 경험을 제시하였다.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비장애인이 2011년 13.47%, 2018년 10.53%였고 장애인은 2011년 16.62%, 2018년 15.14%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011년에는 3.15%포인트, 2018년에는 4.60%포인트 더 많이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였다. 미충족 의료의 이유를 구분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비장애인이 2011년 3.43%, 2018년 1.77%였고 장애인은 2011년 8.10%, 2018년 4.88%로 격차는 4.68%포인트에서 3.11%포인트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비장애인이 2011년에 0.13%, 2018년에 0.40%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장애인은 2.38%에서 5.63%로 증가하여 격차는 2.26%포인트에서 5.23%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시간이 없어서와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은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높았는데 시간이 없어서는 2011년, 2018년에 비장애인이 각각 4.66%, 4.84%, 장애인이 2.12%, 1.48%로 격차는 2.54%포인트, 3.36%포인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그 외 이유는 비장애인이 5.92%에서 3.44%로 감소하고 장애인이 4.41%에서 3.82%

로 감소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전체 미충족 의료 발생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경제적 이유와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소폭 증가하고 시간 없음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연령 집단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5-2] 미충족 의료 경험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으로 오른쪽의 축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표 5-5〉 미충족 의료 경험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전체	비장애인	13.47	13.46	14.94	10.93	11.39	9.07	9.67	10.53
		장애인	16.62	20.28	18.69	20.99	18.40	16.82	14.20	15.14
		격차	3.15	6.83	3.75	10.06	7.02	7.74	4.52	4.60
	경제적 제약	비장애인	3.43	4.17	4.01	2.30	2.43	2.03	1.89	1.77
		장애인	8.10	10.64	9.24	8.67	7.05	6.63	5.74	4.88
		격차	4.68	6.47	5.23	6.37	4.62	4.60	3.85	3.11
	이동상 제약	비장애인	0.13	0.22	0.53	0.36	0.38	0.29	0.30	0.40
		장애인	2.38	4.01	3.67	4.45	5.12	3.79	4.06	5.63
		격차	2.26	3.79	3.13	4.09	4.73	3.50	3.75	5.23
	시간상 제약	비장애인	4.66	5.09	5.92	4.31	4.41	3.73	4.37	4.84
		장애인	2.12	2.72	1.65	2.97	2.52	2.48	1.44	1.48
		격차	-2.54	-2.37	-4.27	-1.34	-1.88	-1.25	-2.92	-3.36
	기타	비장애인	5.92	4.63	5.23	4.48	4.73	3.58	3.72	3.44
		장애인	4.41	3.25	4.47	5.40	4.32	4.49	3.44	3.82
		격차	-1.50	-1.38	-0.76	0.92	-0.41	0.91	-0.27	0.38
18~64세	전체	비장애인	13.59	12.72	14.36	10.04	10.49	8.40	9.48	10.07
		장애인	18.16	19.28	17.90	21.10	14.94	18.08	14.68	12.55
		격차	4.58	6.56	3.54	11.07	4.45	9.68	5.19	2.47
	경제적 제약	비장애인	2.87	3.19	3.31	1.59	1.58	1.33	1.43	1.36
		장애인	8.10	9.52	9.11	8.29	5.89	5.55	5.00	3.39
		격차	5.23	6.33	5.79	6.71	4.31	4.22	3.57	2.03
	이동상 제약	비장애인	0.05	0.04	0.08	0.03	0.01	0.02	0.08	0.03
		장애인	1.88	3.31	1.99	3.80	2.35	2.69	3.96	3.36
		격차	1.82	3.27	1.91	3.77	2.35	2.67	3.88	3.33
	시간상 제약	비장애인	5.19	5.61	6.60	4.78	4.99	4.30	5.01	5.45
		장애인	2.88	3.36	2.05	4.16	2.98	4.31	2.22	2.39
		격차	-2.31	-2.25	-4.55	-0.62	-2.01	0.01	-2.80	-3.06
	기타	비장애인	6.24	4.64	5.21	4.20	4.53	3.38	3.68	4.02
		장애인	5.63	3.38	5.00	5.21	4.18	6.20	4.11	3.92
		격차	-0.60	-1.26	-0.21	1.01	-0.35	2.81	0.44	-0.1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65세 이상	전체	비장애인	12.72	18.14	18.59	16.29	16.96	13.04	10.73	13.04
		장애인	14.51	21.60	19.70	20.84	23.02	15.27	13.62	17.95
		격차	1.79	3.45	1.11	4.55	6.07	2.23	2.89	4.91
	경제적 제약	비장애인	7.08	10.47	8.41	6.59	7.68	6.10	4.48	3.98
		장애인	8.11	12.11	9.41	9.13	8.60	7.95	6.62	6.49
		격차	1.03	1.65	1.00	2.55	0.92	1.85	2.13	2.51
	이동상 제약	비장애인	0.59	1.30	3.27	2.30	2.60	1.80	1.48	2.27
		장애인	3.10	4.94	5.85	5.27	8.82	5.14	4.17	8.12
		격차	2.51	3.64	2.58	2.96	6.22	3.34	2.69	5.85
	시간상 제약	비장애인	1.30	1.95	1.83	1.59	0.99	0.60	0.96	1.74
		장애인	1.06	1.87	1.12	1.46	1.91	0.22	0.53	0.47
		격차	-0.24	-0.08	-0.71	-0.12	0.92	-0.38	-0.43	-1.27
	기타	비장애인	3.89	4.59	5.36	6.10	5.89	4.66	3.93	5.24
		장애인	2.69	3.08	3.79	5.63	4.50	2.39	2.66	3.72
		격차	-1.21	-1.51	-1.57	-0.47	-1.39	-2.27	-1.27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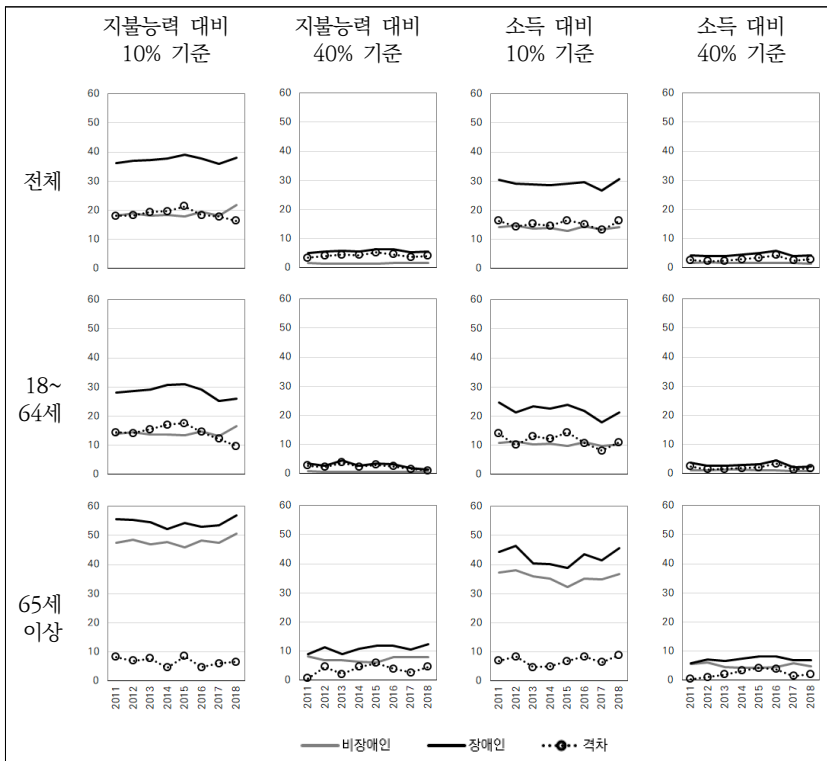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다음 [그림 5-3]과 <표 5-6>, <표 5-7>에는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을 제시하였는데, 재난적 의료비 경험은 지불능력의 10%를 기준으로 볼 경우 비장애인은 2011년 18.13%, 2018년 21.66%로, 장애인은 36.17%, 2018년 37.94%로 소폭 증가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가 18.04% 포인트에서 16.28%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지불능력의 40%를 기준으로 볼 경우 비장애인은 2011년 1.64%, 2018년 1.52%로 소폭 증가하였고 장애인은 2011년 4.99%, 2018년 5.54%로 소폭 증가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3.35%포인트에서 4.02%포인트로 소폭 증가하였다. 소득의 10%가 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정의할 경우 비장애인은 2011년 14.17%, 2018년 14.27%, 장애인은 30.45%, 2018년 30.58%로 거의 변화가 없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16.28%포인트에서 16.31%포인트로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다. 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비장애인은 2011년 1.69%, 2018년 1.27%로 소폭 감소하였고 장애인은 4.22%, 2018년 4.06%로 소폭 감소하여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2.53%포인트에서 2.79%포인트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림 5-3] 재난적 의료비 경험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표 5-6〉 재난적 의료비 경험: 지불능력 대비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지불 능력 10%	비장애인	18.13	18.83	18.03	18.30	17.84	19.42	18.21	21.66
		장애인	36.17	36.95	37.37	37.87	39.12	37.71	35.96	37.94
		격차	18.04	18.12	19.34	19.57	21.27	18.29	17.75	16.28
	지불 능력 20%	비장애인	6.64	6.09	6.65	6.50	6.67	6.35	6.49	6.66
		장애인	19.43	19.08	18.25	15.70	19.78	18.81	16.03	18.79
		격차	12.80	12.99	11.60	9.19	13.11	12.46	9.54	12.14
	지불 능력 30%	비장애인	3.21	3.00	2.81	2.69	2.93	3.07	3.19	2.97
		장애인	9.40	9.09	10.99	9.09	13.10	11.76	9.53	9.80
		격차	6.20	6.09	8.18	6.40	10.17	8.69	6.33	6.83
	지불 능력 40%	비장애인	1.64	1.37	1.41	1.17	1.26	1.62	1.59	1.52
		장애인	4.99	5.40	5.83	5.38	6.37	6.17	5.18	5.54
		격차	3.35	4.03	4.43	4.20	5.12	4.55	3.59	4.02
18~ 64세	지불 능력 10%	비장애인	13.81	14.49	13.64	13.69	13.33	14.65	13.16	16.46
		장애인	28.15	28.61	29.03	30.68	30.89	29.07	25.29	26.06
		격차	14.34	14.12	15.38	16.98	17.56	14.43	12.13	9.60
	지불 능력 20%	비장애인	3.88	3.23	3.81	3.88	4.10	3.50	3.44	3.39
		장애인	14.92	14.14	12.90	8.93	13.78	11.42	8.45	10.15
		격차	11.04	10.91	9.09	5.05	9.68	7.92	5.01	6.76
	지불 능력 30%	비장애인	1.54	1.37	1.35	1.16	1.43	1.38	1.22	0.99
		장애인	5.91	4.61	7.83	4.41	9.48	7.43	3.90	3.73
		격차	4.37	3.24	6.49	3.25	8.05	6.06	2.69	2.74
	지불 능력 40%	비장애인	0.67	0.56	0.58	0.39	0.50	0.59	0.49	0.38
		장애인	3.41	2.71	4.37	2.71	3.45	3.01	1.93	1.34
		격차	2.74	2.15	3.79	2.33	2.96	2.42	1.44	0.96
65세 이상	지불 능력 10%	비장애인	47.44	48.51	47.05	47.72	45.87	48.39	47.53	50.55
		장애인	55.58	55.46	54.66	52.21	54.30	52.98	53.44	56.97
		격차	8.15	6.94	7.61	4.49	8.43	4.59	5.92	6.42
	지불 능력 20%	비장애인	25.30	25.65	25.47	23.29	22.58	23.63	24.20	24.78
		장애인	30.36	30.02	29.34	29.20	30.86	31.88	28.46	32.63
		격차	5.06	4.37	3.87	5.92	8.28	8.25	4.25	7.85
	지불 능력 30%	비장애인	14.50	14.16	12.45	12.45	12.25	13.34	14.67	13.96
		장애인	17.86	19.02	17.53	18.43	19.78	19.41	18.74	19.52
		격차	3.35	4.86	5.08	5.98	7.53	6.07	4.07	5.56
	지불 능력 40%	비장애인	8.25	6.92	6.90	6.21	5.99	7.88	7.95	7.82
		장애인	8.82	11.37	8.87	10.69	11.77	11.76	10.51	12.27
		격차	0.57	4.45	1.97	4.49	5.78	3.88	2.56	4.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14 한국 장애인의 다중격차와 사회정책의 대응

〈표 5-7〉 재난적 의료비 경험: 소득 대비 비율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소득 10%	비장애인	14.17	14.64	13.66	13.84	12.75	14.43	13.48	14.27
		장애인	30.45	29.05	28.94	28.48	29.23	29.60	26.72	30.58
		격차	16.28	14.41	15.29	14.64	16.49	15.17	13.24	16.31
	소득 20%	비장애인	5.34	5.41	5.41	5.08	5.56	5.37	4.97	4.95
		장애인	14.17	13.25	13.92	12.47	16.16	15.57	12.30	12.90
		격차	8.84	7.84	8.51	7.39	10.59	10.20	7.33	7.95
	소득 30%	비장애인	2.74	2.82	2.46	2.50	2.55	2.84	2.33	2.31
		장애인	6.39	6.64	6.89	6.86	7.82	9.04	6.29	7.54
		격차	3.65	3.83	4.42	4.37	5.27	6.21	3.96	5.23
	소득 40%	비장애인	1.69	1.76	1.68	1.57	1.56	1.60	1.50	1.27
		장애인	4.22	3.90	3.95	4.40	4.89	5.78	3.89	4.06
		격차	2.53	2.15	2.27	2.83	3.33	4.19	2.40	2.79
18~64세	소득 10%	비장애인	10.75	11.21	10.31	10.49	9.61	10.99	9.77	10.21
		장애인	24.74	21.18	23.37	22.64	23.98	21.66	17.77	21.18
		격차	13.99	9.97	13.07	12.15	14.36	10.66	8.00	10.97
	소득 20%	비장애인	3.45	3.49	3.83	3.56	3.99	3.43	2.92	2.73
		장애인	11.20	8.88	10.20	8.36	13.00	11.83	6.88	7.41
		격차	7.75	5.40	6.37	4.80	9.01	8.40	3.96	4.68
	소득 30%	비장애인	1.77	1.78	1.64	1.70	1.76	1.89	1.15	1.11
		장애인	4.60	3.81	4.54	4.17	4.48	6.70	3.12	4.04
		격차	2.84	2.03	2.90	2.47	2.72	4.81	1.98	2.93
	소득 40%	비장애인	1.13	1.13	1.25	1.18	1.16	1.11	0.78	0.66
		장애인	3.54	2.48	2.74	2.94	3.13	4.40	2.04	2.38
		격차	2.42	1.35	1.49	1.76	1.97	3.29	1.25	1.73
65세 이상	소득 10%	비장애인	37.34	38.14	35.82	35.25	32.18	35.27	34.99	36.80
		장애인	44.28	46.48	40.49	40.14	38.94	43.63	41.39	45.64
		격차	6.93	8.34	4.68	4.89	6.75	8.36	6.39	8.84
	소득 20%	비장애인	18.12	18.57	15.87	14.81	15.34	17.15	16.87	17.28
		장애인	21.37	22.92	21.63	20.66	21.98	22.17	21.19	21.69
		격차	3.25	4.34	5.76	5.86	6.65	5.02	4.32	4.41
	소득 30%	비장애인	9.34	9.90	7.93	7.62	7.48	8.58	9.17	8.95
		장애인	10.72	12.92	11.76	12.25	13.98	13.18	11.48	13.13
		격차	1.38	3.02	3.83	4.63	6.51	4.60	2.31	4.18
	소득 40%	비장애인	5.51	6.02	4.54	4.10	4.06	4.53	5.64	4.69
		장애인	5.85	7.05	6.47	7.31	8.13	8.23	6.94	6.74
		격차	0.34	1.03	1.93	3.21	4.08	3.69	1.30	2.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 건강상태

다음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하였다.

〈표 5-8〉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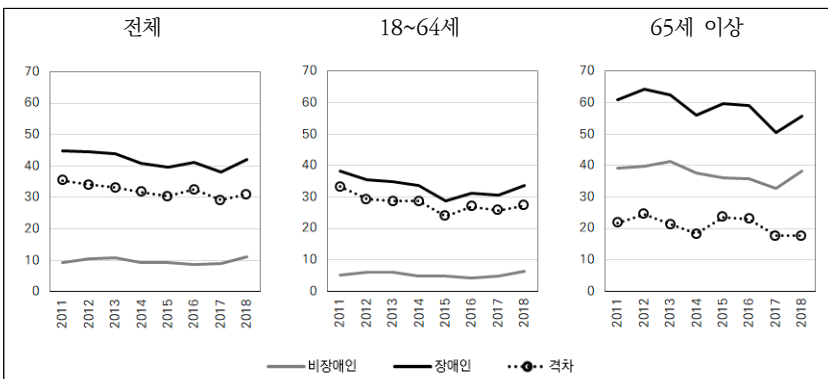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9.46	10.47	10.78	9.23	9.24	8.76	8.95	11.15
	장애인	44.92	44.52	43.89	40.99	39.69	41.31	38.13	42.17
	격차	35.46	34.05	33.11	31.76	30.45	32.55	29.17	31.02
18~64세	비장애인	5.09	6.16	6.19	4.79	4.93	4.30	4.86	6.30
	장애인	38.35	35.54	34.87	33.54	28.92	31.33	30.64	33.65
	격차	33.26	29.37	28.69	28.74	24.00	27.03	25.78	27.36
65세 이상	비장애인	39.09	39.93	41.19	37.64	36.04	35.86	32.74	38.13
	장애인	60.83	64.43	62.58	55.87	59.64	58.95	50.40	55.82
	격차	21.74	24.50	21.39	18.23	23.60	23.09	17.65	17.6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5-4〕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8〉을 보면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은 비장애인이 2011년 9.46%, 2018년 11.15%로 약간 증가하였고 장애인은 2011년 44.92%, 2018년 42.17%로 소폭 감소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35.46%포인트에서 31.02%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보면 근로연령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보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2018년 기준으로 근로연령층 27.36%포인트로 고령층의 격차 17.69%포인트보다 컸다. 고령화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5-9〉에 제시한 만성질환 보유 비율은 비장애인이 2011년 34.50%, 2018년 38.57%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은 2011년 74.16%, 2018년 78.32%로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39.66%포인트에서 39.75%포인트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연령대를 구분했을 때 근로연령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보다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2018년 기준으로 근로연령층 41.25%포인트로 고령층의 격차 1.56%포인트보다 컸다.

〈표 5-9〉 만성질환 보유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34.50	36.46	39.50	35.89	37.95	41.39	41.45	38.57
	장애인	74.16	75.14	78.61	77.30	77.41	79.67	77.77	78.32
	격차	39.66	38.68	39.10	41.41	39.46	38.28	36.31	39.75
18~64세	비장애인	26.90	29.03	32.03	27.97	29.94	33.65	33.38	29.52
	장애인	66.16	67.32	71.83	68.64	68.14	71.80	67.68	70.77
	격차	39.27	38.29	39.80	40.67	38.20	38.15	34.31	41.25
65세 이상	비장애인	85.98	87.31	88.94	86.52	87.71	88.38	88.36	88.85
	장애인	93.50	92.45	92.67	94.57	94.58	93.57	94.29	90.40
	격차	7.52	5.14	3.73	8.04	6.86	5.19	5.93	1.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10〉에서 우울 점수는¹⁶⁾ 비장애인이 2013년 3.10점, 2018년 2.45점으로 소폭 감소했고 장애인도 2013년 5.92점, 2018년 5.09점으로 감소했으며 격차도 각각 2.82점과 2.64점으로 소폭 감소했다. 우울 증상 경험률도 비장애인이 2013년 10.03%, 2018년 8.27%로 소폭 감소했고 장애인은 2013년 27.74%, 2018년 22.94%로 감소하면서 격차는 2013년 17.71%포인트, 2018년 14.67%포인트로 소폭 감소했다.

〈표 5-10〉 우울 점수 및 우울 증상 경험

(단위: 점,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우울 점수	비장애인	2.69	2.78	3.10	2.58	2.60	2.56	2.71	2.45
		장애인	5.04	4.96	5.92	5.16	4.44	4.97	4.95	5.09
		격차	2.35	2.18	2.82	2.58	1.84	2.41	2.24	2.64
	우울 증상	비장애인	9.08	9.25	10.03	8.53	8.97	8.07	9.75	8.27
		장애인	22.52	21.87	27.74	24.30	19.02	23.23	22.73	22.94
		격차	13.45	12.62	17.71	15.76	10.05	15.16	12.98	14.67
18~ 64세	우울 점수	비장애인	2.38	2.48	2.73	2.27	2.29	2.26	2.43	2.13
		장애인	4.61	4.31	5.36	4.71	3.64	4.54	4.51	4.56
		격차	2.23	1.84	2.63	2.44	1.35	2.28	2.08	2.44
	우울 증상	비장애인	7.54	7.42	7.62	6.75	7.34	6.48	8.13	6.48
		장애인	20.77	18.33	23.84	21.75	13.95	19.57	20.93	19.95
		격차	13.23	10.91	16.23	15.00	6.61	13.09	12.80	13.47
65세 이상	우울 점수	비장애인	4.77	4.80	5.52	4.52	4.50	4.34	4.32	4.23
		장애인	6.05	6.34	7.03	6.00	5.78	5.67	5.64	5.85
		격차	1.28	1.54	1.51	1.48	1.28	1.33	1.32	1.62
	우울 증상	비장애인	19.19	21.51	25.52	19.60	18.81	17.62	19.00	18.10
		장애인	26.65	29.43	35.47	29.01	27.50	29.09	25.57	27.25
		격차	7.45	7.92	9.96	9.41	8.69	11.47	6.57	9.15

주: 우울 문항 응답 기준이 2013년부터 수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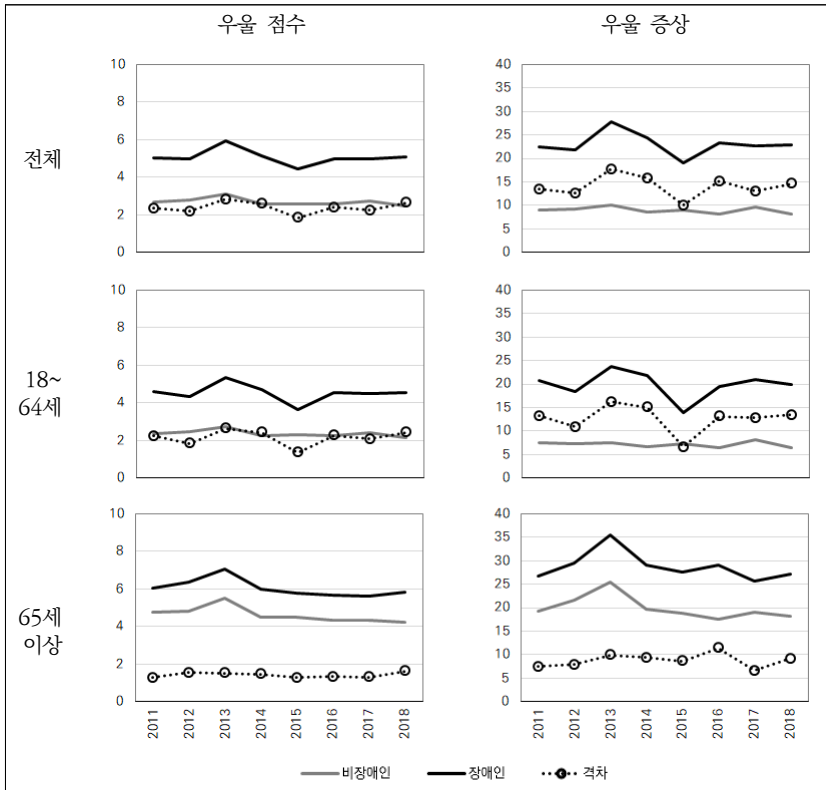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16) 한국복지패널 9차 조사부터 우울 문항의 응답 기준이 원칙도와 동일하게 수정되어 추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령대를 구분해 보면 근로연령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보다 우울 점수나 우울 증상 경험률은 낮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2018년 기준으로 근로연령층에서 우울 점수는 2.44점, 우울 증상 경험률은 13.47%포인트인 반면 고령층에서는 각각 1.62점, 9.15%포인트로 근로연령층에서 고령층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컸다.

[그림 5-5] 우울 점수 및 우울 증상 경험

(단위: 점,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11〉 자살 생각, 계획, 시도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자살 생각	비장애인	2.39	3.05	2.85	2.08	1.89	1.28	1.92	1.60
		장애인	9.21	7.59	9.96	5.31	3.80	5.82	5.35	4.29
		격차	6.82	4.54	7.12	3.23	1.92	4.54	3.44	2.69
	자살 계획	비장애인	0.31	0.47	0.37	0.24	0.28	0.18	0.33	0.26
		장애인	1.97	1.29	2.07	0.99	0.92	0.91	0.69	0.59
		격차	1.66	0.82	1.70	0.75	0.64	0.73	0.37	0.33
	자살 시도	비장애인	0.15	0.11	0.10	0.02	0.06	0.07	0.13	0.07
		장애인	0.29	0.71	1.03	0.23	0.41	0.31	0.09	0.17
		격차	0.13	0.60	0.93	0.21	0.35	0.24	-0.04	0.10
18~ 64세	자살 생각	비장애인	2.13	2.89	2.44	1.95	1.72	1.06	1.88	1.49
		장애인	9.92	8.11	10.80	5.48	3.85	5.73	6.39	4.84
		격차	7.79	5.22	8.36	3.53	2.14	4.68	4.51	3.35
	자살 계획	비장애인	0.28	0.46	0.35	0.20	0.30	0.10	0.35	0.26
		장애인	2.20	1.54	2.49	1.21	1.44	0.73	0.72	0.71
		격차	1.92	1.08	2.14	1.00	1.15	0.63	0.37	0.45
	자살 시도	비장애인	0.15	0.11	0.10	0.01	0.05	0.05	0.15	0.05
		장애인	0.32	0.84	1.51	0.33	0.66	0.43	0.00	0.25
		격차	0.16	0.72	1.41	0.32	0.61	0.38	-0.15	0.20
65세 이상	자살 생각	비장애인	4.45	4.08	5.38	2.84	2.89	2.60	2.10	2.18
		장애인	7.20	6.48	8.30	4.98	3.72	5.96	3.72	3.50
		격차	2.75	2.40	2.92	2.14	0.83	3.35	1.62	1.32
	자살 계획	비장애인	0.55	0.54	0.44	0.44	0.19	0.65	0.18	0.26
		장애인	1.30	0.75	1.23	0.59	0.06	1.21	0.65	0.42
		격차	0.75	0.21	0.79	0.15	-0.12	0.56	0.46	0.16
	자살 시도	비장애인	0.13	0.06	0.13	0.11	0.08	0.19	0.05	0.18
		장애인	0.19	0.43	0.07	0.05	0.00	0.12	0.24	0.05
		격차	0.06	0.37	-0.06	-0.06	-0.08	-0.07	0.19	-0.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11〉에는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비율을 제시하였다.
지난 1년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은 비장애인이 2011년 2.39%,

2018년 1.60%로 소폭 감소하였고 장애인은 2011년 9.21%, 2018년 4.29%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6.82%포인트에서 2.69%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자살을 계획한 비율은 비장애인이 2011년 0.31%, 2018년 0.26%로 소폭 감소하였고 장애인은 2011년 1.97%, 2018년 0.59%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1.66%포인트에서 0.33%포인트로 감소하였다. 자살을 시도한 비율은 비장애인이 2011년 0.15%, 2018년 0.07%로 감소하였고 장애인은 2011년 0.29%, 2018년 0.17%로 감소하여 두 집단 간 격차는 각각 0.13%포인트, 0.10%포인트 수준이었다. 연령대를 구분했을 때 장애인은 근로연령층보다 고령층의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반면 비장애인은 근로연령층보다 고령층에서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 비율이 높았다. 이로 인해 두 집단 간 격차는 고령층보다 근로연령층에서 더 컸다.

제3절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분해

1.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변화

다음으로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Oaxaca-Blinder 분해를 실시한다. 분해의 결과변수는 보건의료 지표로 미충족 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처분소득 대비 10%가 넘는 의료비), 그리고 건강상태 지표로 주관적 건강인식과 우울 증상을 사용하였다.

우선 <표 5-12>에는 네 가지 지표의 2011~2013년, 2016~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를 제시하였다. 2011~2013년 비장애인과 장애인

에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각각 13.96%와 18.52%이고 그 차이는 4.56%포인트이다. 2016~2018년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이 비장애인보다 덜 개선된 결과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4.56%포인트에서 5.60%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 격차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패턴은 근로연령층과 고령층 각각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을 살펴보면, 2011~2013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각각 14.15%와 29.47%이고 그 차이는 15.32%포인트이다. 2016~2018년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각각 14.06%와 28.96%이고 그 차이는 14.90%포인트로 2011~2013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의 시간에 따른 변화 패턴은 연령대에 따라 달랐는데 근로연령층에서 재난적 의료비 경험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12.35%포인트에서 9.89%포인트로 감소했으나 고령층의 격차는 6.59%포인트에서 7.84%포인트로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2013년 비장애인과 장애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0.24%와 44.44%이고 그 차이는 34.20%포인트이다. 2016~2018년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비장애인보다 개선된 결과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34.20%포인트에서 30.90%포인트로 개선되었음이 확인된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패턴은 연령대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다만 고령층에서 근로연령층에 비해 장애인-비장애인 격차가 작은 편이었는데 이는 노령화에 따라 고령 비장애인도 신체 기능상의 문제 등을 겪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우울 증상 경험을 살펴보면 2011~2013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각각 9.46%, 24.10%로 장애인이 14.64%포인트 높았고 2016~2018년 비장

애인과 장애인은 각각 8.70%, 22.97%로 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우울 증상 경험률이 소폭 감소하면서 격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관찰되었다.

〈표 5-12〉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변화

(단위: %, %포인트)

구분		미충족 의료			재난적 의료비		
		2011~2013	2016~2018	변화	2011~2013	2016~2018	변화
전체 (18세 이상)	비장애인	13.96	9.76	-4.20	14.15	14.06	-0.10
	장애인	18.52	15.36	-3.16	29.47	28.96	-0.51
	격차	4.56	5.60	1.04	15.32	14.90	-0.41
18~64세	비장애인	13.56	9.32	-4.24	10.75	10.32	-0.43
	장애인	18.45	15.10	-3.35	23.10	20.21	-2.89
	격차	4.89	5.78	0.89	12.35	9.89	-2.46
65세 이상	비장애인	16.56	12.27	-4.29	37.08	35.71	-1.37
	장애인	18.63	15.67	-2.96	43.67	43.55	-0.12
	격차	2.06	3.40	1.33	6.59	7.84	1.25
구분		주관적 건강 나쁨			우울 증상		
		2011~2013	2016~2018	변화	2011~2013	2016~2018	변화
전체 (18세 이상)	비장애인	10.24	9.63	-0.61	9.46	8.70	-0.76
	장애인	44.44	40.53	-3.90	24.10	22.97	-1.13
	격차	34.20	30.90	-3.29	14.64	14.27	-0.37
18~64세	비장애인	5.82	5.15	-0.66	7.53	7.03	-0.50
	장애인	36.26	31.86	-4.41	20.99	20.15	-0.84
	격차	30.45	26.70	-3.74	13.47	13.13	-0.34
65세 이상	비장애인	40.09	35.62	-4.47	22.15	18.25	-3.91
	장애인	62.66	55.01	-7.65	30.77	27.29	-3.48
	격차	22.57	19.39	-3.18	8.62	9.04	0.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분해

가. 미충족 의료

이 분석의 목적은 2011~2013년과 2016~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의 격차인 4.56%포인트와 5.60%포인트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표 5-13>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보고하였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 빈곤층,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자, 대도시 외 거주 비율이 높고, 연령 수준이 높다. 이처럼 장애인은 저소득, 대도시 외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미충족 의료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가 미충족 의료 격차를 일정하게 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표 5-14>에는 미충족 의료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우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2011~2013년에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3~4%포인트 가량 낮다.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약 1~2%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약 4~5%포인트 더 낮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미충족 의료 경험률도 낮아지는데 빈곤층보다 중산층일 때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8~9%포인트 더 낮고, 의료급여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8~9%포인트 더 높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서 연령의 영향이 더 크고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더 큰 편이었다. 즉 고소득층일 때 빈곤층보다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10~11%포인트 낮았다. 반면 비장애인과 다르게 경제활동이나, 교육수준, 건강보장 형태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

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장애인의 표본수가 작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회귀계수 값도 작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들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2013년과 2016~2018을 비교하면 비장애인은 성별에 따른 차이,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감소한 반면 장애인 은 각 변수의 영향력이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표 5-13〉 미충족 의료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93	0.4139	0.5051	0.4410
	남성	0.4907	0.5861	0.4949	0.5590
연령		44.65	58.93	46.24	61.27
연령 제곱		2264.19	3723.37	2424.28	4019.63
배우자	없음	0.3603	0.3916	0.3961	0.4411
	있음	0.6397	0.6084	0.6039	0.5589
학력	중졸 이하	0.3506	0.6304	0.3021	0.5655
	고졸	0.3038	0.2575	0.2962	0.2953
	전문대졸 이상	0.3457	0.1121	0.4017	0.1392
경제활동	미취업	0.3886	0.6196	0.3612	0.6432
	취업	0.6114	0.3804	0.6388	0.3568
소득수준	빈곤층	0.1348	0.3891	0.1321	0.4158
	중산층	0.6284	0.5139	0.6436	0.4942
	고소득층	0.2368	0.0970	0.2243	0.0900
거주지역	대도시	0.4696	0.3959	0.4585	0.3725
	그 외	0.5304	0.6041	0.5415	0.6275
만성질환	없음	0.7215	0.3778	0.6702	0.3345
	있음	0.2785	0.6222	0.3298	0.6655
건강보장	건강보험	0.9735	0.7620	0.9741	0.7937
	의료급여	0.0265	0.2380	0.0259	0.2063
연도	2011/2016	0.3275	0.3357	0.3302	0.3217
	2012/2017	0.3339	0.3315	0.3335	0.3379
	2013/2018	0.3386	0.3328	0.3363	0.3404
사례수		39298	4642	33869	399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표 5-14〉 미충족 의료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408 *** (0.004)	-0.0405 * (0.020)	-0.0226 *** (0.004)	-0.0384 * (0.018)
연령	0.0071 *** (0.001)	0.0144 *** (0.004)	0.0031 *** (0.001)	0.0076 * (0.003)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 (0.000)	-0.0000 * (0.000)	-0.0001 *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049 (0.007)	-0.0452 (0.024)	-0.0157 * (0.006)	-0.0210 (0.022)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175 ** (0.007)	0.0040 (0.025)	0.0014 (0.006)	0.0213 (0.024)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174 ** (0.007)	-0.0026 (0.036)	-0.0007 (0.006)	0.0330 (0.030)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406 *** (0.005)	0.0117 (0.021)	0.0402 *** (0.004)	-0.0293 (0.020)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0647 *** (0.008)	-0.0721 ** (0.022)	-0.0328 *** (0.007)	-0.0746 *** (0.019)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0891 *** (0.010)	-0.1012 ** (0.033)	-0.0503 *** (0.008)	-0.1115 *** (0.028)
거주지역 그 외 (ref. 대도시)	-0.0085 (0.005)	0.0088 (0.019)	-0.0019 (0.005)	0.0202 (0.020)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026 (0.007)	-0.0176 (0.024)	0.0004 (0.006)	0.0125 (0.026)
건강보장 의료급여 (ref. 건강보험)	0.0801 *** (0.021)	0.0012 (0.028)	0.0698 *** (0.016)	0.0406 (0.027)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07 (0.005)	0.0365 * (0.018)	0.0051 (0.004)	-0.0269 (0.020)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55 ** (0.005)	0.0224 (0.019)	0.0131 ** (0.004)	-0.0179 (0.020)
상수	0.0289 (0.023)	-0.1485 (0.104)	0.0240 (0.019)	0.0176 (0.096)
F	42.89 ***	3.37 ***	32.20 ***	4.35 ***
R제곱	0.0219	0.0255	0.0149	0.0326
사례수	35546	2590	40487	3025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다음 <표 5-15>는 앞의 기술통계와 회귀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격차를 분해한 결과이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격차는 각각 0.0342, 0.0271로, 총 격차의 75%, 48%를 차지한다. 즉, 2011~2013년에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격차의 약 75%는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반면 최근으로 오면서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는 4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만약 2011~2013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일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욕구는 13.96%에서 약 3~4%포인트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표 5-15> 미충족 의료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456 (0.010) ***	0.0560 (0.010) ***
	특성 효과	0.0342 (0.005) ***	0.0271 (0.004) ***
	계수 효과	0.0114 (0.011)	0.0289 (0.010)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39 (0.001) ***	-0.0014 (0.000) **
	연령	0.0076 (0.003) **	0.0147 (0.003) ***
	배우자	-0.0002 (0.000)	0.0007 (0.000)
	학력	0.0049 (0.002) **	0.0002 (0.002)
	경제활동	-0.0094 (0.001) ***	-0.0113 (0.001) ***
	소득수준	0.0199 (0.003) ***	0.0117 (0.002) ***
	거주지역	-0.0006 (0.000)	-0.0002 (0.000)
	만성질환	-0.0009 (0.002)	0.0001 (0.002)
	의료급여	0.0169 (0.005) ***	0.0126 (0.003) ***
	연도	-0.0001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다음은 근로연령층의 미충족 의료 격차를 분해한다. 2011~ 2013년과 2016~2018년 근로연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경험률 격차

는 4.89%포인트와 5.78%포인트였고, 이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다. 우선 <표 5-16>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 저소득, 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대도시 외 거주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다.

<표 5-16> 미충족 의료 모형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4957	0.3257	0.4919	0.3522
	남성	0.5043	0.6743	0.5081	0.6478
연령		40.20	47.85	41.34	48.88
연령 계급		1774.76	2420.30	1877.37	2514.36
배우자	없음	0.3641	0.4195	0.4044	0.4742
	있음	0.6359	0.5805	0.5956	0.5258
학력	중졸 이하	0.2863	0.4764	0.2328	0.3843
	고졸	0.3253	0.3597	0.3108	0.4068
	전문대졸 이상	0.3884	0.1638	0.4565	0.2089
경제활동	미취업	0.3472	0.4984	0.3153	0.5238
	취업	0.6528	0.5016	0.6847	0.4762
소득수준	빈곤층	0.0844	0.3119	0.0758	0.3138
	중산층	0.6531	0.5696	0.6728	0.5767
	고소득층	0.2625	0.1185	0.2514	0.1095
거주지역	대도시	0.4800	0.3969	0.4661	0.3874
	그 외	0.5200	0.6031	0.5339	0.6126
만성질환	없음	0.8049	0.5667	0.7659	0.5574
	있음	0.1951	0.4333	0.2341	0.4426
건강보장	건강보험	0.9806	0.7334	0.9805	0.7458
	의료급여	0.0194	0.2666	0.0195	0.2542
연도	2011/2016	0.3286	0.3407	0.3323	0.3290
	2012/2017	0.3337	0.3306	0.3335	0.3418
	2013/2018	0.3377	0.3288	0.3342	0.3292
사례수		28015	1164	29906	115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표 5-17〉 미충족 의료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374 *** (0.005)	-0.0582 (0.031)	-0.0200 *** (0.004)	-0.0332 (0.028)
연령	0.0131 *** (0.002)	0.0097 (0.008)	0.0076 *** (0.001)	0.0252 ** (0.008)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0.000)	-0.0001 *** (0.000)	-0.0003 **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068 (0.009)	-0.0734 (0.038)	-0.0108 (0.007)	-0.0079 (0.035)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257 ** (0.008)	0.0080 (0.033)	-0.0083 (0.008)	0.0193 (0.036)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298 *** (0.008)	0.0064 (0.044)	-0.0120 (0.007)	0.0379 (0.040)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397 *** (0.006)	0.0158 (0.028)	0.0423 *** (0.005)	-0.0430 (0.028)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0517 *** (0.011)	-0.0803 * (0.037)	-0.0311 ** (0.010)	-0.0704 * (0.032)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0752 *** (0.012)	-0.0943 (0.049)	-0.0491 *** (0.011)	-0.1047 * (0.045)
거주지역 그 외 (ref. 대도시)	-0.0115 * (0.006)	0.0218 (0.027)	-0.0030 (0.005)	0.0165 (0.031)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063 (0.008)	-0.0318 (0.030)	0.0083 (0.007)	0.0362 (0.034)
건강보장 의료급여 (ref. 건강보험)	0.0878 ** (0.029)	0.0069 (0.042)	0.0401 (0.021)	-0.0095 (0.036)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77 (0.005)	0.0099 (0.026)	0.0103 * (0.005)	-0.0350 (0.032)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84 (0.006)	-0.0050 (0.028)	0.0159 ** (0.005)	-0.0583 (0.032)
상수	-0.0680 * (0.032)	-0.0553 (0.168)	-0.0476 (0.027)	-0.2966 * (0.142)
F	38.66 ***	2.97 ***	27.94 ***	3.33 ***
R제곱	0.0220	0.0380	0.0143	0.0438
사례수	28015	1164	29906	115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표 5-17〉에는 미충족 의료 욕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우선 2011~2013년에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욕구가 3~4% 포인트 가량 낮고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미충족 의료 욕구는 약 2~3% 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 미충족 의료 욕구는 약 3~4%포인트 더 높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미충족 의료 욕구도 낮아지는데 빈곤층 고소득층일 때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7~8%포인트 더 낮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8~9%포인트 더 높다. 장애인은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미충족 의료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489 (0.015) ***	0.0578 (0.015) ***
	특성 효과	0.0392 (0.008) ***	0.0201 (0.006) ***
	계수 효과	0.0097 (0.016)	0.0377 (0.016)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64 (0.001) ***	-0.0028 (0.001) ***
	연령	0.0088 (0.003) **	0.0079 (0.002) ***
	배우자	-0.0004 (0.001)	0.0008 (0.001)
	학력	0.0058 (0.002) ***	0.0022 (0.001)
	경제활동	-0.0060 (0.001) ***	-0.0088 (0.002) ***
	소득수준	0.0151 (0.003) ***	0.0100 (0.003) ***
	거주지역	-0.0010 (0.001)	-0.0002 (0.000)
	만성질환	0.0015 (0.002)	0.0017 (0.001)
	의료급여	0.0217 (0.007) **	0.0094 (0.005)
	연도	-0.0001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표 5-18〉은 근로연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경험률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경험 격차는 각각 0.0392, 0.0201로, 총 격차의 80%, 35%를 차지한다. 즉, 특성 효과의 크기가 감소하고 계수 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특성 효과가 설명하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만약 2016~2018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특성이 동일했다면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욕구가 2%포인트 가량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다음은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경험률 격차를 분해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경험률 격차는 2.06% 포인트와 3.40% 포인트였다. 우선 〈표 5-19〉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고령 장애인은 고령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 저소득,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높다.

다음 〈표 5-20〉에는 고령층에 대한 미충족 의료 경험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우선 2011~2013년에 여성 비장애인에 비해 남성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3~4%포인트 가량 낮고,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인 경우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약 4%포인트 가량 낮고, 빈곤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11~12%포인트 더 낮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5~6%포인트 더 높다. 장애인 회귀분석에서 대부분의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미충족 의료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65	0.5302	0.5794	0.5444
	남성	0.4035	0.4698	0.4206	0.4556
연령		73.29	73.53	73.87	75.69
연령 제곱		5411.79	5440.62	5505.51	5770.15
배우자	없음	0.3358	0.3548	0.3493	0.4027
	있음	0.6642	0.6452	0.6507	0.5973
학력	중졸 이하	0.7639	0.8333	0.6931	0.7761
	고졸	0.1651	0.1227	0.2141	0.1657
	전문대졸 이상	0.0710	0.0440	0.0928	0.0582
경제활동	미취업	0.6543	0.7793	0.6197	0.7821
	취업	0.3457	0.2207	0.3803	0.2179
소득수준	빈곤층	0.4591	0.4908	0.4492	0.5345
	중산층	0.4695	0.4405	0.4792	0.3982
	고소득층	0.0714	0.0687	0.0715	0.0673
거주지역	대도시	0.4026	0.3945	0.4156	0.3553
	그 외	0.5974	0.6055	0.5844	0.6447
만성질환	없음	0.1850	0.1288	0.1311	0.0752
	있음	0.8150	0.8712	0.8689	0.9248
건강보장	건강보험	0.9275	0.7996	0.9383	0.8495
	의료급여	0.0725	0.2004	0.0617	0.1505
연도	2011/2016	0.3201	0.3291	0.3184	0.3131
	2012/2017	0.3353	0.3327	0.3334	0.3333
	2013/2018	0.3446	0.3382	0.3482	0.3535
사례수		7531	1426	10581	187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표 5-20〉 미충족 의료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346 ** (0.011)	-0.0414 (0.028)	-0.0142 (0.009)	-0.0131 (0.022)
연령	-0.0006 (0.015)	0.0459 (0.037)	-0.0125 (0.012)	-0.0423 (0.031)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3 (0.000)	0.0001 (0.000)	0.0003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142 (0.014)	-0.0120 (0.030)	-0.0356 ** (0.011)	-0.0383 (0.024)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402 ** (0.014)	0.0055 (0.038)	0.0029 (0.011)	-0.0037 (0.027)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365 (0.019)	-0.0054 (0.066)	-0.0453 *** (0.013)	-0.0407 (0.035)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169 (0.012)	0.0213 (0.031)	0.0106 (0.009)	-0.0379 (0.023)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0871 *** (0.012)	-0.0543 * (0.027)	-0.0360 *** (0.009)	-0.0825 *** (0.021)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1127 *** (0.018)	-0.1117 * (0.045)	-0.0478 ** (0.016)	-0.1461 *** (0.029)
거주지역 그 외 (ref. 대도시)	0.0050 (0.012)	-0.0085 (0.027)	-0.0001 (0.009)	0.0174 (0.021)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108 (0.013)	0.0109 (0.036)	-0.0073 (0.012)	0.0154 (0.035)
건강보장 의료급여 (ref. 건강보험)	0.0558 * (0.025)	-0.0067 (0.033)	0.1103 *** (0.025)	0.1012 ** (0.036)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587 *** (0.010)	0.0712 ** (0.023)	-0.0223 ** (0.009)	-0.0178 (0.021)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651 *** (0.011)	0.0571 * (0.024)	0.0018 (0.009)	0.0265 (0.021)
상수	0.2315 (0.553)	-1.4288 (1.406)	0.5799 (0.475)	1.7777 (1.186)
F	12.69 ***	1.83 *	11.97 ***	4.93 ***
R제곱	0.0337	0.0205	0.0279	0.0544
사례수	7531	1426	10581	1875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다음 <표 5-21>은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미충족 의료 격차는 각각 0.0073, 0.0157로, 총 격차의 35%, 46%를 차지한다. 특성 효과의 크기가 감소하고 계수 효과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특성 효과가 설명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만약 2016~2018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일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1~2%포인트 가량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표 5-21> 미충족 의료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206 (0.014)	0.0340 (0.011) **
	특성 효과	0.0073 (0.005)	0.0157 (0.004) ***
	계수 효과	0.0134 (0.014)	0.0182 (0.011)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23 (0.001) *	-0.0005 (0.000)
	연령	-0.0001 (0.001)	0.0021 (0.002)
	배우자	0.0003 (0.000)	0.0019 (0.001)
	학력	0.0027 (0.001) *	0.0014 (0.001)
	경제활동	-0.0021 (0.002)	-0.0017 (0.001)
	소득수준	0.0028 (0.002)	0.0031 (0.001) **
	거주지역	0.0000 (0.000)	-0.0000 (0.001)
	만성질환	-0.0006 (0.001)	-0.0004 (0.001)
	의료급여	0.0071 (0.003) *	0.0098 (0.003) ***
	연도	-0.0006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나. 재난적 의료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는 2011~2013년과 2016~2018년에 각각 15.32%포인트와 14.9%포인트였고 이러한 격차는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표 5-22>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보고하였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 빈곤층,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자, 대도시 외 거주 비율이 높고, 연령 수준이 높다. 만성질환자가 많고 저소득 비율이 높은 장애인 집단의 특성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를 일부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표 5-23>에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선 비장애인은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2011~2013년에 취업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는 약 3~4%포인트 더 낮고,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일 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25~26%포인트 낮다. 농어촌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3~4%포인트 더 높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8~9%포인트 높은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14~15%포인트 가량 더 낮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서 연령의 영향이 더 크고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차이도 더 큰 편이었다. 즉 취업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은 4~5%포인트 더 낮았다. 취업이라는 특성은 건강상태와 경제적 수준을 모두 보여주는 변수일 수 있는데 취업을 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서 의료이용을 더 적게 하는 반면 소득은 더 높을 수 있다. 분석 모형에서 소득 수준을 통제하였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수준보다는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향일 수 있다. 만성질환의 영향 또한 장애인에서 5~6%포인트 가량 더 컸는데 분석에서 만성질환 유무를 변수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에서 복합 만성질환이 많아서 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차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약 6~7%포인트 낮았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나타난 변화를 비교할 경우 비장애인은 각 변수의 영향력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된 반면, 장애인은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더 커졌고 만성질환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고 의료급여가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더 커졌다.

다음 <표 5-24>는 장애인-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는 각각 0.0992, 0.1075로, 총 격차의 65%, 72%를 차지한다. 즉, 2011~2013년에 장애인-비장애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격차의 약 65%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었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격차는 72% 수준으로 더 증가하였다. 만약 2011~2013년 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14.15%에서 약 10%포인트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표 5-22〉 재난적 의료비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32	0.4154	0.509	0.414
	남성	0.4868	0.5846	0.491	0.586
연령		44.14	56.05	45.90	58.10
연령 제곱		2220.66	3382.29	2394.32	3638.14
배우자	없음	0.3805	0.3811	0.3961	0.4497
	있음	0.6195	0.6189	0.6039	0.5503
학력	중졸 이하	0.2342	0.5492	0.2028	0.5015
	고졸	0.3219	0.2883	0.313	0.3151
	전문대졸 이상	0.4439	0.1625	0.4841	0.1834
경제활동	미취업	0.3698	0.5964	0.3628	0.625
	취업	0.6302	0.4036	0.6372	0.375
소득수준	빈곤층	0.1339	0.3953	0.1264	0.4029
	중산층	0.6455	0.5048	0.6642	0.5281
	고소득층	0.2206	0.0999	0.2094	0.069
거주지역	대도시	0.4528	0.4364	0.4345	0.4433
	중소도시	0.4615	0.4471	0.4808	0.4478
	농어촌	0.0856	0.1166	0.0847	0.1088
만성질환	없음	0.6316	0.2401	0.5953	0.2141
	있음	0.3684	0.7599	0.4047	0.7859
건강보장	의료급여	0.9578	0.7821	0.9582	0.747
	건강보험	0.0422	0.2179	0.0418	0.253
연도	2011/2016	0.3286	0.3279	0.33	0.3359
	2012/2017	0.3338	0.3339	0.333	0.3335
	2013/2018	0.3376	0.3381	0.3369	0.3306
사례수		39298	4642	33869	39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23〉 재난적 의료비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62 (0.004)	-0.0033 (0.022)	0.0081 (0.005)	-0.0054 (0.021)
연령	-0.0040 *** (0.001)	-0.0108 * (0.005)	-0.0054 *** (0.001)	0.0005 (0.004)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 (0.000)	0.0001 *** (0.000)	0.0000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006 (0.008)	0.0141 (0.026)	-0.0057 (0.008)	0.0039 (0.026)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123 (0.008)	-0.0136 (0.031)	-0.0053 (0.011)	0.0433 (0.033)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058 (0.009)	-0.0001 (0.045)	0.0009 (0.011)	0.0107 (0.039)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350 *** (0.006)	-0.0793 *** (0.027)	-0.0404 *** (0.007)	-0.0867 *** (0.028)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1760 *** (0.014)	-0.1441 *** (0.031)	-0.2063 *** (0.015)	-0.1536 *** (0.033)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2567 *** (0.015)	-0.2825 *** (0.041)	-0.2804 *** (0.016)	-0.3740 *** (0.043)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97 (0.008)	-0.0268 (0.029)	-0.0173 * (0.009)	-0.0472 (0.028)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324 * (0.014)	0.0124 (0.028)	-0.0179 (0.012)	-0.0340 (0.031)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855 *** (0.007)	0.1407 *** (0.027)	0.0651 *** (0.007)	0.0893 *** (0.028)
건강보장 의료급여 (ref. 건강보험)	-0.1464 *** (0.017)	-0.2156 *** (0.037)	-0.1314 *** (0.023)	-0.2773 *** (0.037)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27 (0.007)	-0.0151 (0.021)	-0.0088 (0.008)	-0.0281 (0.021)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22 (0.007)	-0.0260 (0.021)	-0.0017 (0.008)	-0.0009 (0.023)
상수	0.3448 *** (0.024)	0.6199 *** (0.144)	0.4149 *** (0.025)	0.3012 *** (0.114)
F	127.45 ***	18.11 ***	105.14 ***	27.15 ***
R제곱	0.1226	0.1061	0.1281	0.1580
사례수	39298	4642	33869	399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24〉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532 (0.014) ***	0.1490 (0.014) ***
	특성 효과	0.0992 (0.006) ***	0.1075 (0.008) ***
	계수 효과	0.0540 (0.013) ***	0.0415 (0.014)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6 (0.000)	0.0008 (0.000)
	연령	0.0272 (0.003) ***	0.0315 (0.004) ***
	배우자	-0.0000 (0.000)	0.0003 (0.000)
	학력	-0.0012 (0.003)	-0.0003 (0.003)
	경제활동	0.0079 (0.002) ***	0.0106 (0.002) ***
	소득수준	0.0557 (0.005) ***	0.0674 (0.006) ***
	거주지역	0.0011 (0.001) *	0.0001 (0.001)
	만성질환	0.0335 (0.003) ***	0.0248 (0.003) ***
	의료급여	-0.0257 (0.004) ***	-0.0277 (0.005) ***
	연도	-0.0000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근로연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격차를 분해하였다. 근로연령층에서 양 집단의 격차는 2011~2013년과 2016~2018년에 각각 12.35%포인트와 9.89%포인트였다. 우선 〈표 5-25〉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 빈곤층,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대도시 외 거주 비율이 높고, 연령 수준이 높다.

다음 〈표 5-26〉은 근로연령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의 경우 2011~2013년에 취업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 정도는 약 2~3%포인트 더 낮고,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일 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약 24%포인트 낮다. 농어촌 거주자가 대도시 거주자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약 4%포인트 더 높고,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약 7%포인트 높은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약 9%포인트 가량 더 낮았다.

근로연령층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근로연령층 장애인은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차이가 큰 편이었는데 취업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은 4~5%포인트 더 낮았다. 만성질환의 영향 또한 장애인에서 5~6%포인트 가량 더 컸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약 10%포인트 가량 더 낮았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나타난 변화를 비교할 경우 비장애인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된 반면 장애인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더 커졌고 만성질환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였다.

〈표 5-27〉에는 근로연령대 장애인-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성 효과의 절대값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계수 효과가 감소하면서 총 격차가 감소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격차는 각각 0.0767, 0.0802로, 총 격차의 62%, 81%를 차지한다. 만약 2016~2018년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10.32%에서 18.34%로 8.02%포인트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다.

〈표 5-25〉 재난적 의료비 모형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12	0.3711	0.4949	0.3627
	남성	0.4988	0.6289	0.5051	0.6373
연령		39.78	48.37	41.06	48.53
연령 제곱		1741.45	2482.31	1855.59	2505.03
배우자	없음	0.3787	0.3998	0.4000	0.4987
	있음	0.6213	0.6002	0.6000	0.5013
학력	중졸 이하	0.1569	0.4325	0.1168	0.3481
	고졸	0.3485	0.3694	0.3361	0.4101
	전문대졸 이상	0.4946	0.1981	0.5471	0.2418
경제활동	미취업	0.3203	0.5134	0.3076	0.5288
	취업	0.6797	0.4866	0.6924	0.4712
소득수준	빈곤층	0.0845	0.3249	0.0745	0.3079
	중산층	0.6715	0.5483	0.6912	0.6033
	고소득층	0.2439	0.1268	0.2343	0.0888
거주지역	대도시	0.4604	0.4774	0.4390	0.4705
	중소도시	0.4653	0.4309	0.4866	0.4469
	농어촌	0.0743	0.0918	0.0744	0.0826
만성질환	없음	0.7067	0.3158	0.6781	0.2990
	있음	0.2933	0.6842	0.3219	0.7010
건강보장	의료급여	0.9664	0.7567	0.9668	0.7140
	건강보험	0.0336	0.2433	0.0332	0.2860
연도	2011/2016	0.3289	0.3362	0.3322	0.3432
	2012/2017	0.3344	0.3334	0.3331	0.3313
	2013/2018	0.3367	0.3305	0.3348	0.3255
사례수		26816	2136	22247	151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26〉 재난적 의료비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12 (0.004)	-0.0035 (0.030)	0.0003 (0.005)	0.0088 (0.028)
연령	-0.0011 (0.002)	-0.0032 (0.009)	-0.0033 (0.002)	0.0136 (0.009)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0 (0.000)	0.0001 * (0.000)	-0.0001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297 *** (0.009)	-0.0407 (0.034)	-0.0424 *** (0.009)	-0.0548 (0.037)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091 (0.009)	-0.0048 (0.036)	0.0070 (0.013)	0.0406 (0.043)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092 (0.011)	0.0019 (0.054)	0.0152 (0.013)	0.0314 (0.049)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283 *** (0.007)	-0.0772 * (0.036)	-0.0337 *** (0.007)	-0.0481 (0.036)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1663 *** (0.019)	-0.1233 ** (0.044)	-0.2007 *** (0.021)	-0.1396 ** (0.054)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2371 *** (0.020)	-0.2554 *** (0.053)	-0.2655 *** (0.022)	-0.3382 *** (0.064)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78 (0.008)	-0.0122 (0.037)	-0.0128 (0.009)	-0.0524 (0.038)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429 * (0.017)	-0.0015 (0.039)	-0.0131 (0.013)	-0.0751 (0.039)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712 *** (0.007)	0.1323 *** (0.030)	0.0535 *** (0.007)	0.0677 * (0.030)
건강보장 의료급여 (ref. 건강보험)	-0.0918 *** (0.020)	-0.1921 *** (0.049)	-0.0772 ** (0.028)	-0.2110 *** (0.049)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23 (0.007)	-0.0330 (0.028)	-0.0108 (0.008)	-0.0340 (0.028)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02 (0.008)	-0.0159 (0.027)	-0.0063 (0.009)	-0.0160 (0.030)
상수	0.2830 *** (0.037)	0.4679 * (0.207)	0.3627 *** (0.040)	0.0222 (0.174)
F	35.87 ***	5.11 ***	24.35 ***	6.45 ***
R제곱	0.0658	0.0785	0.0682	0.0996
사례수	26816	2136	22247	151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27〉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235 (0.018) ***	0.0989 (0.019) ***
	특성 효과	0.0767 (0.007) ***	0.0802 (0.010) ***
	계수 효과	0.0468 (0.017) **	0.0187 (0.019)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2 (0.001)	0.0000 (0.001)
	연령	0.0158 (0.003) ***	0.0151 (0.003) ***
	배우자	0.0006 (0.001)	0.0042 (0.002) **
	학력	-0.0029 (0.003)	-0.0041 (0.003)
	경제활동	0.0055 (0.001) ***	0.0074 (0.002) ***
	소득수준	0.0483 (0.006) ***	0.0563 (0.007) ***
	거주지역	0.0010 (0.001)	0.0004 (0.001)
	만성질환	0.0278 (0.003) ***	0.0203 (0.003) ***
	의료급여	-0.0192 (0.005) ***	-0.0195 (0.007) **
	연도	0.0001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격차는 2011~2013년과 2016~2018년에 각각 6.59%포인트와 7.84%포인트였다. 우선 〈표 5-28〉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살펴볼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남성, 무배우, 중졸 이하, 미취업, 빈곤층, 만성질환자, 의료급여자, 대도시 외 거주 비율이 높고, 연령 수준이 높다.

다음 〈표 5-29〉에는 고령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고령 비장애인의 경우 2011~2013년에 취업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약 6~7%포인트 더 낮고, 빈곤층보다 고소득층일 때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약 38%포인트 낮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약 18%포인트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약 26%포인트 가량 더 낮다. 고령 비장

애인과 비교할 때 고령 장애인의 분석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비장애인은 각 회귀계수 값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 반면 장애인에서 취업 여부, 소득 수준과 같은 변수의 영향력이 일부 증가하였다.

〈표 5-28〉 재난적 의료비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0	0.5142	0.5907	0.4995
	남성	0.4060	0.4858	0.4093	0.5005
연령		73.55	73.17	73.98	74.06
연령 제곱		5451.71	5388.35	5519.80	5528.07
배우자	없음	0.3924	0.3392	0.3738	0.3681
	있음	0.6076	0.6608	0.6262	0.6319
학력	중졸 이하	0.7554	0.8093	0.7019	0.7573
	고졸	0.1424	0.1074	0.1795	0.1566
	전문대졸 이상	0.1022	0.0832	0.1186	0.0861
경제활동	미취업	0.7036	0.7813	0.6830	0.7855
	취업	0.2964	0.2187	0.3170	0.2145
소득수준	빈곤층	0.4671	0.5524	0.4274	0.5614
	중산층	0.4698	0.4078	0.5080	0.4026
	고소득층	0.0631	0.0398	0.0647	0.0360
거주지역	대도시	0.4018	0.3450	0.4085	0.3980
	중소도시	0.4364	0.4832	0.4474	0.4494
	농어촌	0.1618	0.1718	0.1441	0.1526
만성질환	없음	0.1256	0.0714	0.1146	0.0726
	있음	0.8744	0.9286	0.8854	0.9274
건강보장	의료급여	0.8996	0.8388	0.9081	0.8020
	건강보험	0.1004	0.1612	0.0919	0.1980
연도	2011/2016	0.3272	0.3095	0.3177	0.3238
	2012/2017	0.3295	0.3352	0.3327	0.3372
	2013/2018	0.3433	0.3553	0.3496	0.3390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29〉 재난적 의료비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91 (0.012)	-0.0379 (0.033)	-0.0169 (0.013)	-0.0366 (0.032)
연령	0.0176 (0.021)	0.0916 * (0.045)	0.0509 ** (0.017)	0.0814 (0.048)
연령 제곱	-0.0001 (0.000)	-0.0006 * (0.000)	-0.0003 ** (0.000)	-0.0005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1370 *** (0.017)	0.1286 *** (0.034)	0.1565 *** (0.017)	0.0883 ** (0.033)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033 (0.022)	-0.0291 (0.055)	-0.0225 (0.022)	0.0690 (0.050)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226 (0.028)	-0.0141 (0.070)	-0.0333 (0.034)	-0.0982 (0.065)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681 *** (0.016)	-0.0527 (0.038)	-0.0662 *** (0.016)	-0.1431 *** (0.040)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1664 *** (0.016)	-0.1464 *** (0.033)	-0.1847 *** (0.018)	-0.1464 *** (0.035)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3828 *** (0.027)	-0.2056 ** (0.075)	-0.3742 *** (0.038)	-0.3588 *** (0.083)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96 (0.017)	-0.0734 * (0.034)	-0.0240 (0.019)	-0.0283 (0.036)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56 (0.017)	-0.0076 (0.036)	-0.0196 (0.021)	-0.0067 (0.040)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1805 *** (0.016)	0.1464 ** (0.050)	0.1268 *** (0.023)	0.1356 * (0.055)
건강보장 의료급여 (ref. 건강보험)	-0.2579 *** (0.023)	-0.2509 *** (0.041)	-0.2286 *** (0.028)	-0.3762 *** (0.037)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81 (0.013)	0.0215 (0.027)	0.0003 (0.014)	-0.0178 (0.026)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252 (0.015)	-0.0486 (0.031)	0.0170 (0.015)	0.0289 (0.030)
상수	-0.4918 (0.787)	-3.1028 (1.700)	-1.8120 ** (0.674)	-2.7479 (1.846)
F	42.00 ***	5.70 ***	28.99 ***	15.95 ***
R제곱	0.1018	0.0816	0.1077	0.1484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30〉은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특성 효과의 절대값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계수 효과가 소폭 증가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는 각각 0.0241, 0.0203로, 총 격차의 37%, 26%를 차지한다. 만약 2016~2018년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35.71%에서 37.74%로 2.03%포인트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다.

〈표 5-30〉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구분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659 (0.017) ***	0.0784 (0.019) ***
	특성 효과	0.0241 (0.007) ***	0.0203 (0.009) *
	계수 효과	0.0418 (0.016) **	0.0581 (0.017)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7 (0.001)	-0.0015 (0.001)
	연령	-0.0008 (0.001)	0.0017 (0.002)
	배우자	0.0073 (0.003) *	0.0009 (0.004)
	학력	0.0003 (0.001)	0.0016 (0.002)
	경제활동	0.0053 (0.002) **	0.0068 (0.002) **
	소득수준	0.0192 (0.005) ***	0.0302 (0.006) ***
	거주지역	-0.0004 (0.001)	-0.0002 (0.001)
	만성질환	0.0098 (0.002) ***	0.0053 (0.002) **
	건강보험	-0.0157 (0.004) ***	-0.0242 (0.005) ***
	연도	-0.0003 (0.000)	-0.0002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 주관적 건강상태

다음은 2011~2013년과 2016~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평균 격차인 0.3420, 0.3090을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다. 우선 <표 5-31>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보고하였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남성, 중졸 이하, 미취업, 빈곤층, 만성질환자, 대도시 외 거주 비율이 높고, 연령 수준이 높다. 이처럼 장애인은 저소득, 대도시 외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가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를 일정하게 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1~2013년과 2016~2018년을 비교할 때 장애인은 무배우 비율, 미취업 비율, 저소득층 비율이 증가했다.

다음 <표 5-32>에는 주관적 건강 나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2011~2013년에 배우자가 없는 비장애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이 3~4%포인트 가량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5%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에도 약 4~5%포인트 가량 낮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낮아지는데 빈곤층에 비해 중산층, 고소득층일 때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은 9~12%포인트 낮았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2~13%포인트 더 높아졌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성별이나 배우자 유무, 학력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취업 여부, 만성질환 상태에 따른 차이는 더 큰 편이었다. 즉 취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2%포인트 더 낮았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나타난 변화를 비교할 경우 비장애인은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된 반면 장애인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32	0.4154	0.5088	0.4140
	남성	0.4868	0.5846	0.4912	0.5860
연령		44.14	56.05	45.90	58.10
연령 제곱		2220.60	3382.29	2394.00	3638.14
배우자	없음	0.3805	0.3811	0.3963	0.4497
	있음	0.6195	0.6189	0.6037	0.5503
학력	중졸 이하	0.2342	0.5492	0.2028	0.5015
	고졸	0.3219	0.2883	0.3129	0.3151
	전문대졸 이상	0.4439	0.1625	0.4842	0.1834
경제활동	미취업	0.3697	0.5964	0.3627	0.6250
	취업	0.6303	0.4036	0.6373	0.3750
소득수준	저소득층	0.1340	0.3953	0.1263	0.4029
	중산층	0.6454	0.5048	0.6644	0.5281
	고소득층	0.2206	0.0999	0.2093	0.0690
거주지역	대도시	0.4528	0.4364	0.4346	0.4433
	중소도시	0.4615	0.4471	0.4807	0.4478
	농어촌	0.0856	0.1166	0.0847	0.1088
만성질환	없음	0.6316	0.2401	0.5954	0.2141
	있음	0.3684	0.7599	0.4046	0.7859
연도	2011/2016	0.3286	0.3279	0.3302	0.3359
	2012/2017	0.3338	0.3339	0.3329	0.3335
	2013/2018	0.3376	0.3381	0.3369	0.3306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32〉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125 *** (0.003)	0.0093 (0.023)	-0.0149 *** (0.004)	-0.0376 (0.027)
연령	-0.0029 *** (0.001)	-0.0102 * (0.005)	-0.0032 ** (0.001)	-0.0075 (0.005)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 (0.000)	0.0001 *** (0.000)	0.0001 *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329 *** (0.006)	-0.0408 (0.024)	-0.0413 *** (0.006)	-0.0015 (0.027)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417 *** (0.007)	0.0108 (0.031)	-0.0421 *** (0.009)	-0.0235 (0.034)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411 *** (0.007)	-0.0031 (0.040)	-0.0392 *** (0.009)	-0.0917 * (0.043)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414 *** (0.005)	-0.2121 *** (0.027)	-0.0480 *** (0.005)	-0.1888 *** (0.029)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0942 *** (0.008)	-0.0762 ** (0.027)	-0.0959 *** (0.010)	-0.0609 * (0.027)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1119 *** (0.009)	-0.1345 *** (0.044)	-0.1100 *** (0.010)	-0.1963 *** (0.045)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54 (0.004)	-0.0167 (0.027)	-0.0077 (0.005)	-0.0274 (0.028)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69 (0.006)	-0.0070 (0.029)	-0.0065 (0.008)	-0.0316 (0.031)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1230 *** (0.005)	0.3129 *** (0.027)	0.0941 *** (0.005)	0.2399 *** (0.030)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85 * (0.003)	-0.0057 (0.020)	0.0011 (0.004)	-0.0271 (0.020)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48 (0.004)	-0.0273 (0.020)	0.0237 *** (0.004)	0.0071 (0.023)
상수	0.1897 *** (0.017)	0.5200 *** (0.138)	0.2049 *** (0.019)	0.4882 *** (0.136)
F	309.77 ***	72.84 ***	215.59 ***	51.12 ***
R제곱	0.2403	0.2314	0.2208	0.1945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33〉은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의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이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는 각각 0.1472, 0.1423으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계수 효과가 감소하면서 특성 효과는 총 격차의 43%, 46%를 차지한다. 즉, 2011~2013년과 2016~2018년에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차이의 약 43~46%는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로 설명된다. 만약 2011~2013년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13.96%에서 약 15%포인트만큼 더 증가하였을 것이다.

〈표 5-33〉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3420 (0.015) ***	0.3090 (0.015) ***
	특성 효과	0.1472 (0.006) ***	0.1423 (0.007) ***
	계수 효과	0.1948 (0.013) ***	0.1667 (0.014)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12 (0.000) **	-0.0014 (0.000) **
	연령	0.0508 (0.004) ***	0.0529 (0.004) ***
	배우자	0.0000 (0.001)	0.0022 (0.001) *
	학력	0.0130 (0.002) ***	0.0117 (0.003) ***
	경제활동	0.0094 (0.001) ***	0.0126 (0.002) ***
	소득수준	0.0268 (0.003) ***	0.0285 (0.003) ***
	거주지역	0.0003 (0.000)	0.0001 (0.000)
	만성질환	0.0482 (0.003) ***	0.0359 (0.002) ***
	연도	0.0000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근로연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의 격차를 분해한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평균 격차인 0.3045, 0.2670을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표 5-34>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고, <표 5-35>에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2011~2013년에 배우자가 없는 비장애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이 약 4%포인트 가량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5%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에도 약 4~5%포인트 가량 낮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낮아지는데 빈곤층에 비해 중산층, 고소득층일 때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비율은 9~12%포인트 더 낮았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2%포인트 더 높아졌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성별이나 배우자 유무, 학력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반면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만성질환 상태에 따른 차이는 더 큰 편이었다. 일례로 2016~2018년에 비장애인은 취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 낮았는데 장애인은 약 16% 낮았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다음 <표 5-36>에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는 각

각 0.1098, 0.1001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지만, 계수 효과가 감소하면서 특성 효과는 격차의 34%, 37%를 차지한다. 만약 2016~2018년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5.15%에서 15.16%로 10.01%포인트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다.

〈표 5-34〉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12	0.3711	0.4947	0.3627
	남성	0.4988	0.6289	0.5053	0.6373
연령		39.78	48.37	41.06	48.53
연령 제곱		1741.4	2482.31	1855.42	2505.03
배우자	없음	0.3787	0.3998	0.4002	0.4987
	있음	0.6213	0.6002	0.5998	0.5013
학력	중졸 이하	0.1569	0.4325	0.1168	0.3481
	고졸	0.3485	0.3694	0.3359	0.4101
	전문대졸 이상	0.4946	0.1981	0.5472	0.2418
경제활동	미취업	0.3202	0.5134	0.3075	0.5288
	취업	0.6798	0.4866	0.6925	0.4712
소득수준	저소득층	0.0846	0.3249	0.0745	0.3079
	중산층	0.6715	0.5483	0.6913	0.6033
	고소득층	0.2439	0.1268	0.2342	0.0888
거주지역	대도시	0.4604	0.4774	0.4391	0.4705
	중소도시	0.4652	0.4309	0.4865	0.4469
	농어촌	0.0743	0.0918	0.0745	0.0826
만성질환	없음	0.7066	0.3158	0.6782	0.299
	있음	0.2934	0.6842	0.3218	0.701
연도	2011/2016	0.3288	0.3362	0.3323	0.3432
	2012/2017	0.3344	0.3334	0.333	0.3313
	2013/2018	0.3367	0.3305	0.3347	0.3255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35〉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071 * (0.003)	0.0053 (0.032)	-0.0098 ** (0.004)	-0.0736 (0.039)
연령	0.0051 *** (0.001)	-0.0034 (0.009)	0.0067 *** (0.001)	-0.0173 (0.010)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0 (0.000)	-0.0001 ** (0.000)	0.0002 *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423 *** (0.006)	-0.0520 (0.034)	-0.0514 *** (0.007)	-0.0603 (0.041)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457 *** (0.008)	-0.0080 (0.037)	-0.0340 *** (0.009)	-0.0100 (0.045)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486 *** (0.008)	-0.0074 (0.049)	-0.0411 *** (0.010)	-0.0663 (0.053)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400 *** (0.005)	-0.2033 *** (0.035)	-0.0424 *** (0.005)	-0.1632 *** (0.041)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0847 *** (0.010)	-0.0926 * (0.041)	-0.1020 *** (0.012)	-0.0208 (0.040)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0991 *** (0.010)	-0.1537 ** (0.056)	-0.1139 *** (0.013)	-0.1977 *** (0.057)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63 (0.004)	-0.0076 (0.035)	-0.0060 (0.004)	-0.0243 (0.038)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10 (0.006)	-0.0213 (0.043)	-0.0037 (0.008)	-0.0614 (0.044)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1125 *** (0.006)	0.3132 *** (0.030)	0.0906 *** (0.006)	0.2256 *** (0.036)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87 * (0.003)	-0.0252 (0.027)	0.0062 (0.004)	0.0053 (0.027)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42 (0.004)	-0.0427 (0.026)	0.0237 *** (0.004)	0.0218 (0.033)
상수	0.0499 * (0.022)	0.4249 * (0.203)	0.0308 (0.024)	0.6288 ** (0.219)
F	69.09 ***	29.33 ***	39.43 ***	15.23 ***
R제곱	0.1352	0.2186	0.1164	0.1799
사례수	26817	2136	22252	151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36〉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3045 (0.019) ***	0.2670 (0.020) ***
	특성 효과	0.1098 (0.006) ***	0.1001 (0.007) ***
	계수 효과	0.1947 (0.018) ***	0.1670 (0.019)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09 (0.000) *	-0.0013 (0.001) *
	연령	0.0224 (0.003) ***	0.0170 (0.003) ***
	배우자	0.0009 (0.001)	0.0051 (0.002) **
	학력	0.0135 (0.002) ***	0.0100 (0.003) ***
	경제활동	0.0077 (0.001) ***	0.0094 (0.002) ***
	소득수준	0.0220 (0.003) ***	0.0255 (0.004) ***
	거주지역	0.0002 (0.000)	0.0002 (0.000)
	만성질환	0.0440 (0.003) ***	0.0343 (0.003) ***
	연도	-0.0000 (0.000)	-0.0002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격차를 분해한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인 0.2257, 0.1939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표 5-37〉에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고 〈표 5-38〉에 고령층 주관적 건강 나쁨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에 비장애인은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12%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에도 약 9%포인트 가량 낮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도 낮아지는데 빈곤층에 비해 중산층, 고소득층일 때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비율은 8~12%포인트 더 낮았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7%포인트 더 높아졌다. 고령 장애인은 경제활동 여부와 만성

질환 여부 변수만 유의하였는데 계수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5-37〉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0	0.5142	0.5907	0.4995
	남성	0.4060	0.4858	0.4093	0.5005
연령		73.55	73.17	73.98	74.06
연령 제곱		5451.71	5388.35	5519.80	5528.07
배우자	없음	0.3924	0.3392	0.3738	0.3681
	있음	0.6076	0.6608	0.6262	0.6319
학력	중졸 이하	0.7554	0.8093	0.7019	0.7573
	고졸	0.1424	0.1074	0.1795	0.1566
	전문대졸 이상	0.1022	0.0832	0.1186	0.0861
경제활동	미취업	0.7036	0.7813	0.6830	0.7855
	취업	0.2964	0.2187	0.3170	0.2145
소득수준	저소득층	0.4671	0.5524	0.4274	0.5614
	중산층	0.4698	0.4078	0.5080	0.4026
	고소득층	0.0631	0.0398	0.0647	0.0360
거주지역	대도시	0.4018	0.3450	0.4085	0.3980
	중소도시	0.4364	0.4832	0.4474	0.4494
	농어촌	0.1618	0.1718	0.1441	0.1526
만성질환	없음	0.1256	0.0714	0.1146	0.0726
	있음	0.8744	0.9286	0.8854	0.9274
연도	2011/2016	0.3272	0.3095	0.3177	0.3238
	2012/2017	0.3295	0.3352	0.3327	0.3372
	2013/2018	0.3433	0.3553	0.3496	0.3390
사례수		39299	4642	33874	39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38〉 주관적 건강 나쁨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416 ** (0.015)	0.0056 (0.029)	-0.0368 * (0.016)	0.0059 (0.034)
연령	0.0288 (0.018)	0.0953 * (0.044)	0.0553 ** (0.020)	0.0089 (0.047)
연령 제곱	-0.0001 (0.000)	-0.0006 (0.000)	-0.0003 * (0.000)	-0.0000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094 (0.016)	-0.0063 (0.030)	0.0022 (0.017)	0.0524 (0.034)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480 * (0.021)	0.0805 (0.049)	-0.1004 *** (0.020)	-0.0211 (0.053)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1147 *** (0.025)	-0.0666 (0.064)	-0.1205 *** (0.029)	-0.1402 * (0.070)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912 *** (0.015)	-0.2258 *** (0.035)	-0.1161 *** (0.016)	-0.2317 *** (0.035)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0822 *** (0.015)	-0.0439 (0.027)	-0.0476 ** (0.015)	-0.1181 *** (0.033)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1214 *** (0.037)	-0.0348 (0.062)	-0.0374 (0.037)	-0.1231 (0.085)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79 (0.016)	-0.0388 (0.031)	-0.0253 (0.017)	-0.0394 (0.036)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392 * (0.017)	-0.0041 (0.033)	-0.0044 (0.020)	0.0036 (0.036)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2746 *** (0.017)	0.3200 *** (0.058)	0.1908 *** (0.018)	0.3152 *** (0.040)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79 (0.011)	0.0395 (0.025)	-0.0250 * (0.012)	-0.0874 ** (0.028)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129 (0.013)	0.0117 (0.028)	0.0282 * (0.013)	-0.0217 (0.028)
상수	-1.1444 (0.675)	-3.6058 * (1.674)	-2.1742 ** (0.750)	-0.2592 (1.795)
F	71.57 ***	13.38 ***	50.13 ***	25.69 ***
R제곱	0.1070	0.1181	0.1126	0.1374
사례수	12482	2506	11622	2483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39〉에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는 각각 0.0286, 0.0304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으며 총 격차의 13%, 16%로 그 비중은 작았다. 총 격차에서 특성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계수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표 5-39〉 주관적 건강 나쁨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2257 (0.016) ***	0.1939 (0.020) ***
	특성 효과	0.0286 (0.007) ***	0.0304 (0.009) ***
	계수 효과	0.1971 (0.015) ***	0.1635 (0.018)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33 (0.002) *	-0.0034 (0.002)
	연령	-0.0025 (0.003)	0.0021 (0.004)
	배우자	0.0005 (0.001)	0.0000 (0.000)
	학력	0.0039 (0.002)	0.0062 (0.003) *
	경제활동	0.0071 (0.002) ***	0.0119 (0.003) ***
	소득수준	0.0079 (0.002) ***	0.0061 (0.002) *
	거주지역	0.0000 (0.001)	-0.0001 (0.001)
	만성질환	0.0149 (0.003) ***	0.0080 (0.002) ***
	연도	0.0002 (0.000)	-0.0004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라. 우울 증상

다음은 2011~2013년과 2016~2018년 장애인-비장애인 우울 증상 경험률의 평균 격차인 0.1464, 0.1427을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다. 이를 위해 우선 〈표 5-40〉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

였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남성, 중졸 이하, 미취업, 빈곤층, 만성질환자, 대도시 외 거주 비율이 높고, 연령 수준이 높다. 이처럼 장애인은 우울 증상 경험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가 우울 증상의 격차를 일정하게 설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40〉 우울 증상 모형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259	0.4249	0.5198	0.4254
	남성	0.4741	0.5751	0.4802	0.5746
연령		44.87	57.23	46.53	59.84
연령 제곱		2270.70	3475.72	2437.16	3783.93
배우자	없음	0.3564	0.3449	0.3736	0.4146
	있음	0.6436	0.6551	0.6264	0.5854
학력	중졸 이하	0.2233	0.5482	0.1911	0.5008
	고졸	0.3295	0.2915	0.3183	0.3035
	전문대졸 이상	0.4472	0.1603	0.4906	0.1958
경제활동	미취업	0.3506	0.5434	0.3446	0.5692
	취업	0.6494	0.4566	0.6554	0.4308
소득수준	저소득층	0.134	0.3935	0.1246	0.4032
	중산층	0.6468	0.5057	0.6646	0.5263
	고소득층	0.2193	0.1008	0.2108	0.0705
거주지역	대도시	0.4519	0.4452	0.434	0.4489
	중소도시	0.4621	0.4442	0.4814	0.4483
	농어촌	0.086	0.1105	0.0846	0.1028
만성질환	없음	0.623	0.2453	0.5884	0.2271
	있음	0.377	0.7547	0.4116	0.7729
연도	2011/2016	0.3255	0.3246	0.3312	0.3318
	2012/2017	0.333	0.3317	0.3323	0.3373
	2013/2018	0.3416	0.3437	0.3365	0.3309
사례수		36909	3841	31756	33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41〉 우울 증상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311 *** (0.004)	-0.0160 (0.024)	-0.0269 *** (0.005)	-0.0371 (0.025)
연령	0.0018 (0.001)	0.0005 (0.007)	0.0011 (0.001)	0.0009 (0.006)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606 *** (0.007)	-0.1451 *** (0.028)	-0.0676 *** (0.007)	-0.0548 (0.028)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282 *** (0.008)	-0.0072 (0.030)	0.0007 (0.008)	0.0469 (0.033)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404 *** (0.009)	-0.0305 (0.036)	-0.0130 (0.009)	0.0349 (0.043)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239 *** (0.006)	-0.1041 *** (0.027)	-0.0313 *** (0.006)	-0.0996 *** (0.027)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1194 *** (0.010)	-0.0833 *** (0.024)	-0.0959 *** (0.010)	-0.1105 *** (0.028)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1500 *** (0.010)	-0.1696 *** (0.033)	-0.1189 *** (0.011)	-0.2416 *** (0.039)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33 (0.005)	0.0517 * (0.025)	-0.0035 (0.006)	-0.0474 (0.026)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144 * (0.006)	-0.0069 (0.027)	-0.0170 * (0.008)	-0.0245 (0.031)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446 *** (0.005)	0.0618 *** (0.022)	0.0293 *** (0.006)	0.1149 *** (0.031)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24 (0.004)	-0.0084 (0.018)	0.0170 *** (0.005)	0.0017 (0.021)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66 (0.005)	0.0429 * (0.021)	0.0017 (0.005)	-0.0098 (0.019)
상수	0.2179 *** (0.023)	0.3451 (0.203)	0.1875 *** (0.024)	0.2754 (0.164)
F	106.68 ***	23.72 ***	61.98 ***	16.97 ***
R제곱	0.0864	0.1146	0.0646	0.1017
사례수	36909	3841	31756	3318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우울 증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도 <표 5-41>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2011~2013년에 배우자가 없는 비장애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비율이 약 6%포인트 가량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약 2~5%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에도 약 2~3%포인트 가량 낮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도 낮아지는데 빈곤층에 비해 중산층, 고소득층일 때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은 11~15%포인트 더 낮았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4~5%포인트 더 높아졌다.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우울 증상에서 성별, 교육 수준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우울 증상의 차이가 비장애인에 비해 약 8%포인트 가량 더 커졌고,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우울 증상의 차이도 비장애인에 비해 약 7~8%포인트 가량 더 커졌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장애인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각 변수의 영향력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다음 <표 5-42>에는 장애인-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경험률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우울 증상 격차는 각각 0.0778, 0.0677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총 격차의 53%, 47%를 차지한다. 즉, 2011~2013년과 2016~2018년에 장애인-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차이의 약 47~53%는 장애인-비장애인 특성 차이로 설명된다. 만약 2011~2013년 비장애인이 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취약한 특성을 가졌더라면 비장애인 중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약 7~8%포인트 증가하였을 것이다.

〈표 5-42〉 우울 증상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464 (0.012) ***	0.1427 (0.013) ***
	특성 효과	0.0778 (0.005) ***	0.0677 (0.005) ***
	계수 효과	0.0686 (0.012) ***	0.0750 (0.013)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31 (0.001) ***	-0.0025 (0.001) ***
	연령	0.0133 (0.003) ***	0.0162 (0.003) ***
	배우자	-0.0007 (0.001)	0.0028 (0.002)
	학력	0.0127 (0.003) ***	0.0038 (0.003)
	경제활동	0.0046 (0.001) ***	0.0070 (0.001) ***
	소득수준	0.0346 (0.003) ***	0.0300 (0.003) ***
	거주지역	-0.0004 (0.000)	-0.0002 (0.000)
	만성질환	0.0168 (0.002) ***	0.0106 (0.002) ***
	연도	0.0000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우울 증상 경험률에 대한 격차 분해를 근로연령층에 대해 실시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근로연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우울 증상 경험률의 평균 격차는 0.1347, 0.1313이었다. 우선 〈표 5-43〉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고, 〈표 5-44〉에 우울 증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에 배우자가 없는 비장애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비율이 약 6%포인트 가량 낮았고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약 3~5%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에도 약 2~3%포인트 가량 낮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도 낮아지는데 빈곤층에 비해 고소득층일 때 우울 증상 비율은 15%포인트 더 낮았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약 5%포인트 더 높다.

근로연령대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장애인은 우울 증상에서 성별, 교육

수준에 따른 영향은 없었던 반면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더 커졌고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도 비장애인에 비해 더 컸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각 변수의 영향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표 5-43〉 우울 증상 모형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54	0.3778	0.5069	0.3656
	남성	0.4846	0.6222	0.4931	0.6344
연령		40.56	50.00	41.78	50.88
연령 제곱		1794.47	2612.96	1906.31	2696.51
배우자	없음	0.3517	0.3388	0.3742	0.4280
	있음	0.6483	0.6612	0.6258	0.5720
학력	중졸 이하	0.1422	0.4186	0.1026	0.3298
	고졸	0.3577	0.3796	0.3417	0.4026
	전문대졸 이상	0.5000	0.2018	0.5556	0.2676
경제활동	미취업	0.2983	0.4514	0.2880	0.4510
	취업	0.7017	0.5486	0.7120	0.5490
소득수준	저소득층	0.0821	0.3054	0.0710	0.2927
	중산층	0.6745	0.5572	0.6925	0.6095
	고소득층	0.2434	0.1373	0.2365	0.0978
거주지역	대도시	0.4596	0.4900	0.4378	0.4802
	중소도시	0.4661	0.4287	0.4881	0.4493
	농어촌	0.0744	0.0814	0.0741	0.0705
만성질환	없음	0.6990	0.3221	0.6707	0.3220
	있음	0.3010	0.6779	0.3293	0.6780
연도	2011/2016	0.3257	0.3340	0.3334	0.3371
	2012/2017	0.3338	0.3311	0.3321	0.3406
	2013/2018	0.3405	0.3350	0.3345	0.3223
사례수		24967	1723	20676	11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44〉 우울 증상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239 *** (0.005)	-0.0339 (0.032)	-0.0230 *** (0.005)	-0.0183 (0.038)
연령	0.0073 *** (0.002)	0.0107 (0.011)	0.0095 *** (0.002)	0.0100 (0.010)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0.000)	-0.0001 *** (0.000)	-0.0001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601 *** (0.008)	-0.1527 *** (0.037)	-0.0640 *** (0.008)	-0.0599 (0.042)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309 ** (0.010)	-0.0162 (0.032)	-0.0077 (0.010)	0.0504 (0.044)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446 *** (0.011)	-0.0281 (0.044)	-0.0309 ** (0.011)	0.0690 (0.056)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273 *** (0.006)	-0.0829 * (0.036)	-0.0280 *** (0.007)	-0.0909 * (0.041)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1230 *** (0.013)	-0.1086 ** (0.033)	-0.1001 *** (0.014)	-0.0836 (0.043)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1495 *** (0.014)	-0.1916 *** (0.041)	-0.1235 *** (0.014)	-0.2491 *** (0.056)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31 (0.005)	0.0532 (0.031)	-0.0025 (0.006)	-0.0503 (0.036)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189 ** (0.007)	-0.0400 (0.039)	-0.0223 * (0.009)	-0.0327 (0.049)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470 *** (0.006)	0.0675 ** (0.024)	0.0351 *** (0.006)	0.1335 *** (0.036)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09 (0.005)	-0.0272 (0.023)	0.0177 *** (0.005)	0.0271 (0.030)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15 (0.005)	0.0231 (0.027)	0.0020 (0.005)	-0.0039 (0.027)
상수	0.1294 *** (0.031)	0.1693 (0.265)	0.0538 (0.035)	-0.0026 (0.228)
F	34.69 ***	13.30 ***	19.50 ***	6.81 ***
R제곱	0.0579	0.1310	0.0421	0.1121
사례수	24967	1723	20676	1194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 <표 5-45>에는 장애인-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총 격차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우울 증상 격차는 각각 0.0655, 0.0526으로 거의 유지되었는데 이는 총 격차의 49%, 40%를 차지한다. 만약 2016~2018년 근로연령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특성이 동일했다면 비장애인 중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18.25%에서 23.51%로 5.26%포인트만큼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5-45> 우울 증상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347 (0.016) ***	0.1313 (0.019) ***
	특성 효과	0.0655 (0.006) ***	0.0526 (0.007) ***
	계수 효과	0.0692 (0.015) ***	0.0787 (0.018)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33 (0.001) ***	-0.0033 (0.001) ***
	연령	0.0050 (0.003)	0.0014 (0.003)
	배우자	-0.0008 (0.002)	0.0034 (0.002)
	학력	0.0126 (0.003) ***	0.0084 (0.003) **
	경제활동	0.0042 (0.001) ***	0.0046 (0.001) ***
	소득수준	0.0303 (0.004) ***	0.0254 (0.004) ***
	거주지역	-0.0002 (0.000)	0.0002 (0.000)
	만성질환	0.0177 (0.002) ***	0.0122 (0.002) ***
	연도	0.0000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고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경험률의 격차를 분해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 우울 증상 경험률의 평균 격차는 0.0862, 0.0904였다.

우선 <표 5-46>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을 제시하고, 다음으로

〈표 5-47〉에는 고령층 우울 증상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에 배우자가 없는 고령 비장애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고령 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비율이 약 6%포인트 가량 낮았고,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약 3~7%포인트 가량 낮고, 취업한 경우에도 약 3% 포인트 가량 낮다.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도 낮아지는데 빈곤층에 비해 고소득층일 때 우울 증상 비율은 약 19%포인트 더 낮았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은 약 6%포인트 더 높아졌다.

고령 비장애인과 비교할 때 고령 장애인은 우울 증상에서 성별,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은 없었던 반면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더 커졌고 취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도 비장애인에 비해 더 컸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사이에 고령 장애인은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다음 〈표 5-48〉에는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1~2013년과 2016~2018년 총 격차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특성 효과로 인한 장애인-비장애인 우울 증상 격차는 각각 0.0143, 0.0178로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었는데 이는 총 격차의 17%, 20%로 그 비중은 작았다.

〈표 5-46〉 우울 증상 모형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8	0.5262	0.5939	0.5172
	남성	0.4052	0.4738	0.4061	0.4828
연령		73.21	72.79	73.68	73.59
연령 제곱		5398.17	5330.91	5471.87	5454.24
배우자	없음	0.3869	0.3581	0.3704	0.3940
	있음	0.6131	0.6419	0.6296	0.6060
학력	중졸 이하	0.7560	0.8269	0.6967	0.7633
	고졸	0.1438	0.1020	0.1843	0.1512
	전문대졸 이상	0.1001	0.0710	0.1190	0.0854
경제활동	미취업	0.6940	0.7413	0.6683	0.7507
	취업	0.3060	0.2587	0.3317	0.2493
소득수준	저소득층	0.4746	0.5830	0.4308	0.5731
	중산층	0.4647	0.3948	0.5055	0.3985
	고소득층	0.0606	0.0222	0.0637	0.0284
거주지역	대도시	0.4010	0.3491	0.4123	0.4009
	중소도시	0.4362	0.4777	0.4431	0.4467
	농어촌	0.1628	0.1732	0.1446	0.1523
만성질환	없음	0.1245	0.0802	0.1182	0.0814
	있음	0.8755	0.9198	0.8818	0.9186
연도	2011/2016	0.3239	0.3044	0.3184	0.3236
	2012/2017	0.3277	0.3331	0.3333	0.3324
	2013/2018	0.3483	0.3625	0.3483	0.3440
사례수		11942	2118	11080	21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47〉 우울 증상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남성 (ref. 여성)	-0.0659 *** (0.012)	0.0131 (0.036)	-0.0275 * (0.011)	-0.0691 (0.032)
연령	0.0060 (0.015)	-0.0241 (0.050)	0.0118 (0.015)	-0.0607 (0.045)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2 (0.000)	-0.0000 (0.000)	0.0004 *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640 *** (0.014)	-0.1348 *** (0.038)	-0.0981 *** (0.015)	-0.0340 (0.036)
학력 고졸 (ref. 중졸 이하)	-0.0334 * (0.016)	0.0029 (0.086)	-0.0178 (0.014)	0.0846 (0.050)
학력 전문대졸 이상 (ref. 중졸 이하)	-0.0647 *** (0.016)	-0.1088 (0.057)	-0.0129 (0.021)	-0.1205 * (0.045)
경제활동 취업 (ref. 미취업)	-0.0325 ** (0.012)	-0.1525 *** (0.031)	-0.0765 *** (0.011)	-0.1368 *** (0.028)
소득수준 중산층 (ref. 빈곤층)	-0.0924 *** (0.012)	-0.0406 (0.035)	-0.0722 *** (0.012)	-0.1379 * (0.032)
소득수준 고소득층 (ref. 빈곤층)	-0.1875 *** (0.020)	-0.1229 * (0.058)	-0.0433 (0.032)	-0.1977 *** (0.060)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52 (0.013)	0.0609 (0.038)	-0.0184 (0.013)	-0.0251 (0.034)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28 (0.014)	0.0402 (0.035)	0.0045 (0.015)	-0.0115 (0.036)
만성질환 있음 (ref. 없음)	0.0636 *** (0.013)	0.0492 (0.054)	0.0358 * (0.015)	0.0606 *** (0.049)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253 * (0.010)	0.0282 (0.024)	0.0173 (0.010)	-0.0312 (0.025)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605 *** (0.011)	0.0817 ** (0.026)	0.0089 (0.011)	-0.0169 (0.026)
상수	-0.0631 (0.585)	1.0496 (1.899)	-0.3113 (0.590)	2.4876 *** (1.706)
F	45.92 ***	10.11 ***	36.07 ***	10.65 ***
R제곱	0.0787	0.0777	0.0773	0.1075
사례수	11942	2118	11080	2124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확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5-48〉 우울 증상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0862 (0.018) ***	0.0904 (0.017) ***
	특성 효과	0.0143 (0.006) *	0.0178 (0.006) **
	계수 효과	0.0718 (0.017) ***	0.0726 (0.016)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45 (0.002) *	-0.0021 (0.001)
	연령	-0.0013 (0.001)	-0.0002 (0.002)
	배우자	-0.0018 (0.002)	0.0023 (0.003)
	학력	0.0033 (0.001) *	0.0010 (0.001)
	경제활동	0.0015 (0.001)	0.0063 (0.002) **
	소득수준	0.0137 (0.003) ***	0.0093 (0.003) ***
	거주지역	-0.0002 (0.001)	-0.0000 (0.001)
	만성질환	0.0028 (0.001) **	0.0013 (0.001)
	연도	0.0010 (0.000) *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선형화률모형(LPM)을 적용하였으며,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제4절 시사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건의료 격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편이지만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고 격차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 노화 관련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편으로 노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호승희 외, 2018, p. 424).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이 많아 의료 이용이 많은 편인데 질병의 조기검진 측면에서 중요한 건강검진 수진율이 장애인이 더 낮다는 것은 장애인의 질병 발견이 늦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미충족 의료 경험 격차 추이를 살펴본 결과 근로연령층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의 장애인-비장애인 격차는 감소하였지만 이동성 문제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격차는 증가하였고 고령층에서는 전반적으로 미충족 의료 경험이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성 어려움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은 장애인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 감소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 외에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격차는 18세 이상 전체에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연령대를 구분할 경우 근로연령층 집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은 감소했지만 고령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측면에서 노년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양상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상태 격차 추이를 살펴본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와 자살생각 및 계획에서의 격차는 약간 감소하였고 만성질환 이환비율과 우울 증상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전체 분석 대상자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 격차가 일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충족 의료 경험, 재난적 의료비 발생, 주관적 건강 나쁨과 우울 증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¹⁷⁾ 이 장에서 살펴본 지표들은 근로연령층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 격차에서 특성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고령층에서 특성 효과가 설명하는 부분이 더 낮은 것으로

17) 2011~2013년, 2016~2018년으로 결합하여 살펴본 결과로 앞서 살펴본 연도별 추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타났다. 분석에서 포함된 변수들 중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특성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중요한 차이였으나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의료 이용, 건강상태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의 소득 수준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계수 효과를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소득 수준의 회귀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장애인의 소득 수준 개선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 격차 해소 측면에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 방문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제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필요한 사회경제적 자원이 더 많고 그 영향 또한 더 클 수 있다. 장애인이 성인이 사회경제적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제약들(예를 들어 적절한 건강관리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건강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특성 효과, 계수 효과라는 측면에서 모두 근로연령대 장애인,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 장애인의 소득 수준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근로연령층에 비해 고령층 장애인-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는 작은 편이었는데, 근로연령층과 달리 고령 장애인과 고령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는 특성 효과보다는 계수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건강이 생애 전반에 걸친 건강상태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관측되는 요인만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소득 수준이나 만성질환 유무가 고령 비장애인에 비해 고령 장애인의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이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유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서 만성질환의

특성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는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질환을 가질 위험이 더 높았고 사망위험 또한 높았는데 건강행태 중 흡연과 체질량 지수가 장애인의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김지영, 강민욱, 서옥영, 이지원, 2020). 이는 만성질환 관리가 장애인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격차는 고령층에서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급여는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을 망라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특성이었다. 즉, 장애인의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한 낮은 본인부담 지출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겪는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격차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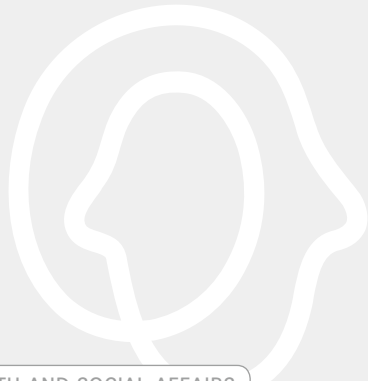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낮은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검진시설이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이유 등이 언급된다. 특정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들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 등도 언급되어 왔다(이희영 외, 2019).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건강권법이 2015년 제정되고 2017년 시행되었는데 장애인이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명문화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또한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의료인 등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진행 등의 사업이 시행되었다(보건복지부, 2017. 8. 18).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의료인의 장애 감수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확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개선 혹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근로연령층보다 고령층에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의료비 부담 격차는 소폭이지만 증가한 양상이었다. 이는 노년기의 높은 빈곤율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노년기 빈곤율이 높은 편인데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경제적 상태가 보다 열악한 반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비 지출은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고 있고 장애인건강권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뿐 아니라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수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건강 수준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과 평가가 필요하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및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가 일부 감소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분해해서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 영역 접근과 함께 사회경제적 특성의 격차를 줄여가는 다방면의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6장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제1절 다차원 빈곤의 차원 및 지표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제3절 다차원 빈곤의 지속과 이행

제4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 분해

제 6 장 장애인 다차원 빈곤

제1절 다차원 빈곤의 차원 및 지표

다차원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을 구성하는 차원을 선정해야 한다. 차원을 구성할 때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원을 구성하게 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Alkire, 2008, p. 89). 선행 연구를 보면 다차원 빈곤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하위 차원으로는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물질 박탈, 사회 관계 등이 고려된다. 소비도 중요한 차원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대부분 교육, 주거, 건강 영역에서 소비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소득 빈곤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다차원 빈곤에서는 소득 외에 대체로 노동, 주거, 건강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 차원의 경우 검토한 모든 국외 연구가 포함하고 있는데, 국내 연구에서는 김경혜 외 (2010), 서병수, 권종희(2013)의 연구만이 교육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 박탈 수준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크고, 교육 박탈은 결국 고용, 소득 등의 타 차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연구에서는 포함하였다. 자산의 경우 반대로 국외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국내 연구는 모두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자산 격차도 클 것으로 예상되어 포함하였다. 사회보장도 포함하는 연구가 많은데, 국외 연구가 건강보장에 한정된 경우가 많은데 비해 국내 연구는 사회보장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차원 중에서 물질 박탈과 사회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차원을 선정하였다. 물질 박탈은 타 영역

에서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회 관계는 박탈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표 6-1〉 선행연구의 다차원 빈곤 차원 구성

구분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 보장	물질 박탈	사회 관계
김경혜, 김준현, 박은철(2010)	○	○	○	○	○	○	○	-	-
최균, 서병수, 권종희(2011)	-	○	○	○	-	○	○	-	○
서병수, 권종희 (2013)	○	○	○	○	○	○	○	-	-
남수정, 황혜선 (2017)	-	○	○	○	○	○	○	-	○
김문길 외(2017)	-	○	○	○	○	○	○	○	○
김순미(2018)	-	○	○	○	○	○	○	-	○
이순미(2018)	-	○	-	○	○	○	-	-	○
Alkire & Foster (2011)	○	○	-	-	-	○	○	-	-
Mitra, Posarac, & Vick(2013)	○	-	○	○	-	○	-	-	-
Whelan, Nolan, & Maître(2014)	-	○	-	-	-	○	-	○	○
Suppa(2015)	○	-	○	○	○	○	-	○	○
Alkire & Apablaza(2016)	○	○	-	○	○	○	-	○	-
Dhongde & Haveman(2017)	○	-	-	-	○	○	○	-	○
White & Yamasaki(2017)	○	○	-	○	○	○	○	-	-
Koohi-Kamali & Liu(2017)	○	-	-	○	○	-	○	-	-
Dhongde(2017)	○	○	-	-	○	○	-	-	-
Mitra & Brucker (2019)	○	○	-	○	-	○	○	-	-

주: 선행연구는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산출한 연구로 제한함. 차원의 분류와 명칭은 이 표에서 제시한 것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차원을 구성한 다음으로는 각 차원에서의 박탈(deprivation) 상태를 정의해야 한다. 한 차원의 박탈 여부는 한 개의 지표로 측정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개의 지표로 측정할 수도 있다. 여러 개의 지표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지표에서 박탈 상태일 경우 해당 차원에서 박탈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국내 선행연구들의 측정 지표를 참고하되, 소득, 노동, 주거, 건강 차원은 앞 장에서 사용한 지표를 주로 고려하였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선행연구를 따르면 특정 영역에서 매우 높은 박탈 비율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박탈 비율이 나타나는 지표는 다차원의 구성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맥락에 맞게 조정하였다.

〈표 6-2〉 다차원 빈곤의 차원과 지표

차원	지표	측정
교육	저교육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
소득	상대적 소득빈곤	균등화 가처분소득 중위값의 50% 미만
자산	상대적 자산빈곤	균등화 순자산 중위값의 50% 미만
노동	노동 취약·배제	-임금근로자: 저임금(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자영업자: 사업소득 적자(0 미만) -미취업자: 실업자 및 근로무능력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① 면적 및 방의 개수, ② 필수 설비 기준, ③ 구조·성능·환경 기준에 하나라도 미달하는 경우
	주거비 과부담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액 30% 초과
건강	주관적 건강 나쁨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
	재난적 의료비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액 10% 초과
사회보장	공적연금 배제	-65세 미만: 취업 상태(무급가족 종사자 제외)이면서 공적연금 미가입·미수급 -65세 이상: 공적연금 미수급
	건강보험 배제	의료급여 비수급자이면서 건강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배제	취업 상태(무급가족 종사자 제외)이면서 고용보험 미가입

주: 모든 지표는 이분(binary)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차원 내 지표가 다수인 경우 한 개 지표 이상에서 박탈 경험이 있을 경우 해당 차원에서 박탈 상태인 것으로 간주함.

우선 첫째, 교육 차원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박탈 상태로 보았다. 국외 연구를 보면 선진국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력(Alkire & Foster, 2011; Dhongde & Haveman, 2017; Mitra & Brucker, 2019),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의 학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Alkire & Apablaza, 2016; Mitra et al., 2013). 또한 국내 연구는 저학력보다는 교육비 지출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김경혜 외, 2010; 서병수, 권종희, 2013). 이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와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의 분석을 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의 학력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저학력의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소득 차원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정한 상대적 소득 빈곤을 박탈 상태로 보았다.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50% 미만을 빈곤 상태로 정의하였다.

셋째, 자산도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상대적 자산 빈곤을 박탈 상태로 보았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가구의 순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미만인 경우를 박탈 상태로 측정하는 경우가 다수였지만 김문길 외(2017)는 상대적 자산 빈곤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빈곤과의 균형을 위해 상대적 자산 빈곤 개념을 채택하였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가구 규모에 따라 균등화한 후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를 자산의 박탈 상태로 보았다.

넷째, 노동 차원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별로 노동 취약 혹은 배제 상태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미취업 상태를 모두 노동 박탈 상태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우 매우 높은 박탈 비율을 보여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 상태별로 노동 박탈을 따로 정의하였다. 우선 임금근로자

는 저임금을 박탈로 보았는데, 앞서 이 연구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시간당 임금이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적자(0 미만)인 경우를 박탈로 간주하였다. 또한 실업자 전체,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근로무능력자인 경우를 박탈 상태로 보았다.¹⁸⁾ 무급가족종사자는 노동 박탈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섯째, 주거 차원에서는 앞서 이 연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분해에 사용한 두 가지 지표, 즉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비 과부담 여부를 사용하였다. 최저주거기준은 주거의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 과부담은 주거의 경제적 적절성을 의미한다.

여섯째, 건강 차원에서도 앞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분해에 사용한 지표 중 주관적 건강 인식과 재난적 의료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건강 인식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로, 재난적 의료비는 가처분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건강 격차 분해에서 고려했던 지표 중 미충족 의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미충족 의료 사유의 측정 범위가 제한적이라 제외하였고, 우울은 상대적으로 결측이 많아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경우를 박탈로 보았다. 사회보장에서의 배제를 측정할 때 판단이 필요한 것은 가입 대상이 아닌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특히 공적연금과 고용보험에서 미취업으로 인한 미가입을 배제 상태로 판단할 경우 상당히 높은 배제 비율이 나타나며, 노동 차원의 박탈과도 차별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취업으로 인한 미가입은 배제로 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에서는 65세 미만은 취업 상태(무급가족 종사

18) 근로무능력은 한국복지패널에서 개인의 근로능력 정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보기 중 ③ 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만 가능), ④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집안일도 불가능)에 응답한 경우를 근로무능력자로 보았다.

자 제외)이면서 미가입 혹은 미수급인 경우를, 65세 이상은 미수급인 경우를 배제로 보았다. 고용보험 또한 취업 상태(무급가족 종사자 제외)이면서 미가입인 경우만 배제로 보았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비수급자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배제로 보았다.

제2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1. 차원별 박탈 비율

우선 <표 6-3>에서 일곱 개 차원별 박탈 비율의 수준을 보면 최근 시점 기준으로 자산과 사회보장에서의 박탈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거와 건강, 그리고 교육, 소득, 노동에서의 박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시계열적 관점에서 변화를 볼 때에도 차원별로 차이가 크다. 자산, 소득, 건강에서의 박탈 비율은 2011~2018년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교육, 노동, 사회보장에서의 박탈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주거 박탈 비율은 이 시기에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표 6-3> 차원별 박탈 비율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	16.27	15.48	15.01	14.54	14.03	13.67	13.37	13.11
소득	15.09	14.82	16.05	14.67	14.70	14.70	14.50	14.89
자산	40.68	40.05	39.18	40.02	39.50	39.47	40.09	39.43
노동	19.05	18.54	19.22	18.66	17.94	17.76	18.40	16.92
주거	31.30	29.88	31.49	25.93	24.13	23.85	21.31	21.55
건강	22.63	23.03	23.10	21.72	21.03	21.91	21.26	23.29
사회보장	39.24	38.38	37.13	36.44	35.66	35.56	35.37	35.6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4〉 장애인-비장애인의 차원별 박탈 비율(전체)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	비장애인	14.46	13.62	13.19	12.71	12.24	11.85	11.51	11.33
	장애인	39.29	39.12	38.26	37.42	36.54	36.11	36.63	35.90
	격차	24.83	25.50	25.07	24.71	24.30	24.26	25.12	24.57
소득	비장애인	13.24	12.90	14.09	12.73	12.75	12.73	12.49	12.68
	장애인	38.71	39.28	41.16	39.16	39.16	38.90	39.69	43.23
	격차	25.47	26.38	27.07	26.43	26.41	26.17	27.20	30.55
자산	비장애인	39.38	38.93	37.95	38.78	38.37	38.45	39.04	38.34
	장애인	57.33	54.27	54.88	55.59	53.75	52.15	53.32	53.41
	격차	17.95	15.34	16.93	16.81	15.38	13.70	14.28	15.07
노동	비장애인	17.41	17.09	17.64	17.17	16.33	16.11	16.77	15.17
	장애인	39.86	37.03	39.20	37.54	38.19	38.14	38.93	39.45
	격차	22.45	19.94	21.56	20.37	21.86	22.03	22.16	24.28
주거	비장애인	30.70	29.31	30.93	25.64	23.69	23.55	21.03	21.25
	장애인	38.94	37.20	38.55	29.42	29.59	27.66	24.78	25.40
	격차	8.24	7.89	7.62	3.78	5.90	4.11	3.75	4.15
건강	비장애인	19.87	20.58	20.57	19.21	18.52	19.41	18.98	20.84
	장애인	57.83	54.21	55.58	53.34	52.60	52.74	49.84	54.78
	격차	37.96	33.63	35.01	34.13	34.08	33.33	30.86	33.94
사회 보장	비장애인	38.93	37.97	36.66	36.09	35.25	35.08	34.79	35.00
	장애인	43.13	43.63	42.95	40.77	40.78	41.47	42.44	43.86
	격차	4.20	5.66	6.29	4.68	5.53	6.39	7.65	8.8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이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해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표 6-4〉를 보면 가장 최근 시점으로 비장애인의 박탈 비율이 가장 높은 차원은 자산 38.34%, 사회보장 35.00% 순인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 54.78%, 자산 53.41%의 순으로 나타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박탈 비율의 격차를 보면 건강 33.94%포인트, 소득 30.55%포인트의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주거와 사회보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박탈 비율 격차는 10%포인트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격차의 변화를 보면 소득과 사회보장의 경우 2016년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박탈 비율 격차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비장애인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장애인의 박탈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자산, 주거, 건강에서의 박탈 비율 격차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자산과 주거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박탈 비율이 감소하는데 장애인의 감소폭이 더 크며, 건강의 경우 비장애인은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의 박탈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표 6-5〉 장애인-비장애인의 차원별 박탈 비율(18~64세)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	비장애인	7.15	6.53	6.05	5.49	5.12	4.63	4.20	3.89
	장애인	26.47	25.91	24.41	24.12	21.85	20.45	21.44	19.85
	격차	19.32	19.38	18.36	18.63	16.73	15.82	17.24	15.96
소득	비장애인	8.29	8.15	8.94	7.47	7.68	7.81	7.28	7.24
	장애인	32.49	33.00	32.33	32.30	30.61	29.74	29.88	34.03
	격차	24.20	24.85	23.39	24.83	22.93	21.93	22.60	26.79
자산	비장애인	38.00	37.79	36.49	37.78	37.68	37.94	38.60	38.21
	장애인	57.40	54.75	54.86	55.99	53.97	51.16	51.72	52.96
	격차	19.40	16.96	18.37	18.21	16.29	13.22	13.12	14.75
노동	비장애인	15.53	15.40	15.61	15.15	14.49	14.00	14.34	12.48
	장애인	36.85	33.60	35.05	33.19	33.94	35.03	36.76	33.16
	격차	21.32	18.20	19.44	18.04	19.45	21.03	22.42	20.68
주거	비장애인	29.96	28.59	30.39	25.46	23.43	23.28	20.58	20.60
	장애인	37.74	37.51	37.70	29.47	30.83	27.25	24.61	23.64
	격차	7.78	8.92	7.31	4.01	7.40	3.97	4.03	3.04
건강	비장애인	14.23	15.01	14.81	13.67	13.25	13.85	13.29	14.47
	장애인	50.52	43.57	46.47	45.81	42.59	42.36	40.64	43.27
	격차	36.29	28.56	31.66	32.14	29.34	28.51	27.35	28.80
사회 보장	비장애인	32.63	31.79	30.55	29.88	28.92	28.82	28.40	28.81
	장애인	26.96	27.63	25.99	21.65	20.46	21.85	23.76	24.41
	격차	-5.67	-4.16	-4.56	-8.23	-8.46	-6.97	-4.64	-4.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6〉 장애인-비장애인의 차원별 박탈 비율(65세 이상)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교육	비장애인	63.83	61.96	60.43	58.80	56.34	55.68	54.02	52.57
	장애인	69.84	67.77	66.26	63.52	63.02	63.53	61.25	61.19
	격차	6.01	5.81	5.83	4.72	6.68	7.85	7.23	8.62
소득	비장애인	46.67	45.27	48.10	46.26	44.19	42.60	42.77	42.83
	장애인	53.55	52.91	59.02	52.63	54.59	54.94	55.59	57.75
	격차	6.88	7.64	10.92	6.37	10.40	12.34	12.82	14.92
자산	비장애인	48.68	46.70	47.60	45.16	42.66	41.48	41.58	39.10
	장애인	57.17	53.23	54.91	54.81	53.35	53.88	55.93	54.13
	격차	8.49	6.53	7.31	9.65	10.69	12.40	14.35	15.03
노동	비장애인	30.12	28.57	31.07	30.08	27.76	28.90	30.82	30.06
	장애인	47.04	44.46	47.60	46.07	45.86	43.59	42.45	49.37
	격차	16.92	15.89	16.53	15.99	18.10	14.69	11.63	19.31
주거	비장애인	35.70	34.20	34.45	26.80	25.33	25.15	23.67	24.85
	장애인	41.79	36.51	40.25	29.31	27.35	28.38	25.05	28.19
	격차	6.09	2.31	5.80	2.51	2.02	3.23	1.38	3.34
건강	비장애인	57.96	58.56	58.61	54.59	51.20	53.14	52.05	56.14
	장애인	75.26	77.30	74.00	68.10	70.65	70.92	64.76	72.92
	격차	17.30	18.74	15.39	13.51	19.45	17.78	12.71	16.78
사회 보장	비장애인	81.51	80.08	77.08	75.66	74.47	73.04	71.96	69.32
	장애인	81.68	78.37	77.21	78.30	77.42	75.82	72.73	74.53
	격차	0.17	-1.71	0.13	2.64	2.95	2.78	0.77	5.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차원별 박탈 비율을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표 6-5〉에 제시한 근로연령층을 보면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자산의 박탈 비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격차가 가장 큰 차원은 건강으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크기는 줄어들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회보장의 경우 오히려 장애인의 박탈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6-6〉에 제시한 고령층은 자산과 주거 영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박탈 비율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으며, 특히 건강과 사회보장에서 박탈 비율이 높다. 자산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의 박탈 비율이 근로연령층보다 다소 낮으며, 주거 차원에서는 고령층이 근로연령층보다 다소 높은 정도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박탈 비율 격차는 근로연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령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많은 차원에서 박탈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연령층과 달리 사회보장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박탈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다음 〈표 6-7〉과 [그림 6-1]은 일곱 개 차원의 평균 박탈 개수를 보여 준다. 가장 최근 시점을 보면 일곱 개 차원 중에서 비장애인의 평균 박탈 개수는 1.55개, 장애인은 2.96개로 나타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평균 박탈 개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거의 유지되고 있다. 연령대를 구분했을 때 고령층의 평균 박탈 개수가 근로연령층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비장애인 박탈 개수의 격차는 고령층보다 근로연령층이 더 크다.

〈표 6-7〉 평균 박탈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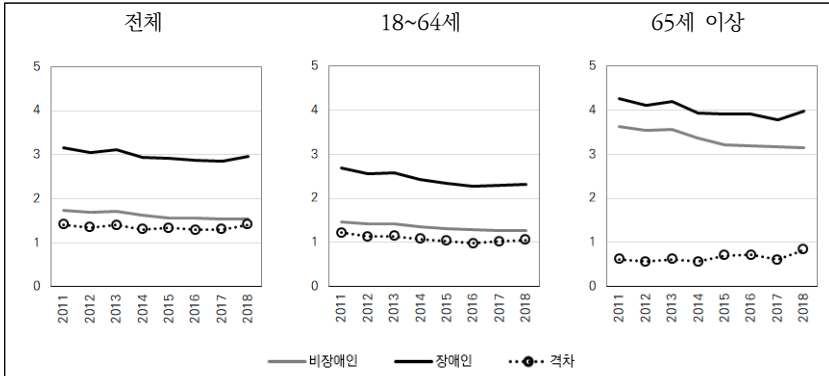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1.74	1.70	1.71	1.62	1.57	1.57	1.55	1.55
	장애인	3.15	3.05	3.11	2.93	2.91	2.87	2.86	2.96
	격차	1.41	1.35	1.40	1.31	1.34	1.30	1.31	1.41
18~64세	비장애인	1.46	1.43	1.43	1.35	1.31	1.30	1.27	1.26
	장애인	2.68	2.56	2.57	2.43	2.34	2.28	2.29	2.31
	격차	1.22	1.13	1.14	1.08	1.03	0.98	1.02	1.05
65세 이상	비장애인	3.64	3.55	3.57	3.37	3.22	3.20	3.17	3.15
	장애인	4.26	4.11	4.19	3.93	3.92	3.91	3.78	3.98
	격차	0.62	0.56	0.62	0.56	0.70	0.71	0.61	0.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6-1] 차원 박탈 평균 개수

(단위: 개)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8〉에서 박탈 개수에 따른 분포를 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20% 이상이 일곱 개 차원에서 하나의 박탈 경험도 없는 반면, 장애인은 1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또한 비장애인의 경우 박탈 개수가 1개인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장애인은 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아 그 차이가 확인된다.

〈표 6-9〉에서는 전통적인 빈곤 측정에 사용되는 소득 박탈과 다른 차원들에서의 박탈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에서 박탈 상태인 경우 자산 박탈인 비율이 71.80%, 소득에서 박탈 상태가 아닌 경우 자산 박탈인 비율이 42.67%로 그 격차는 29.13%포인트에 달한다. 이 격차는 다른 차원과 비교할 때 가장 큰 것으로 소득 박탈과 자산 박탈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준다. 소득 박탈 상태에 따른 박탈률의 차이는 교육과 건강에서도 25%포인트 내외로 크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 소득 박탈 상태에 따른 자산 박탈률의 차이도 크지만, 그보다는 교육과 건강에서의 박탈률 차이가 더 컸다.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 박탈과 다른 차원에서의 박탈의 관계는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표 6-8〉 박탈 개수의 분포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 장 애 인	0개	22.01	22.16	22.58	24.22	25.10	24.23	24.86	24.89
	1개	30.31	31.14	30.85	31.43	31.75	32.96	33.90	33.53
	2개	21.83	21.87	21.76	21.41	21.81	21.50	19.87	20.84
	3개	12.41	12.10	11.69	11.24	10.65	10.83	11.19	10.47
	4개	7.28	7.02	7.03	6.47	5.84	5.82	5.58	5.50
	5개	3.78	3.62	3.61	3.28	3.02	2.92	2.93	2.99
	6개	1.87	1.60	1.87	1.50	1.40	1.32	1.26	1.36
	7개	0.51	0.49	0.60	0.44	0.42	0.42	0.41	0.41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장 애 인	0개	4.68	5.85	6.17	7.89	8.42	7.38	7.36	6.94
	1개	14.80	15.38	14.11	16.79	14.21	18.67	17.46	14.83
	2개	18.45	18.50	17.57	17.03	20.09	17.06	19.98	21.16
	3개	20.11	20.38	22.45	19.38	21.29	20.93	19.61	21.38
	4개	18.73	18.26	16.42	18.85	15.83	17.71	17.05	14.42
	5개	13.37	13.61	13.34	13.27	13.59	10.44	11.23	12.44
	6개	7.74	6.09	8.01	5.04	4.89	6.16	6.14	6.92
	7개	2.13	1.95	1.94	1.74	1.68	1.65	1.18	1.91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9〉 소득 박탈과 다른 차원 박탈의 관계

(단위: %, %포인트)

구분		교육 박탈	자산 박탈	노동 박탈	주거 박탈	건강 박탈	사회보장 박탈
비장애인	소득 박탈	44.64	64.54	29.86	43.56	53.79	52.90
	소득 미박탈	7.82	34.80	14.74	23.01	14.68	33.70
	격차	36.82	29.74	15.12	20.55	39.11	19.20
장애인	소득 박탈	52.24	71.80	45.39	39.57	68.91	46.92
	소득 미박탈	27.48	42.67	33.99	25.76	43.77	39.34
	격차	24.76	29.13	11.40	13.81	25.14	7.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10〉에는 차원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제시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를 포함할 때 소득과 교육이 0.38, 소득과 건강이 0.35, 건강과 교육이 0.32로 상관관계가 높은 편이다. 교육, 소득, 건강의 세 차원은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관계수가 크지 않아 차원 사이의 독립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교육, 소득, 건강 세 차원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소득과 자산(0.29), 노동과 건강(0.22), 교육과 사회보장(0.28)의 상관관계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차원들 사이의 관계성은 장애인이 좀 더 폭넓다고 볼 수 있다.

〈표 6-10〉 차원 결핍 간 상관관계

	구분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
전체	교육	1.00						
	소득	0.38 ***	1.00 ***					
	자산	0.10 ***	0.22 ***	1.00				
	노동	0.17 ***	0.16 ***	0.14 ***	1.00			
	주거	0.07 ***	0.16 ***	0.14 ***	0.09 ***	1.00		
	건강	0.32 ***	0.35 ***	0.09 ***	0.16 ***	0.09 ***	1.00	
	사회보장	0.24 ***	0.13 ***	0.02 ***	0.18 ***	0.04 ***	0.11 ***	1.00
비장애인	교육	1.00						
	소득	0.37 ***	1.00					
	자산	0.09 ***	0.21 ***	1.00				
	노동	0.15 ***	0.14 ***	0.13 ***	1.00			
	주거	0.07 ***	0.16 ***	0.14 ***	0.09 ***	1.00		
	건강	0.30 ***	0.33 ***	0.08 ***	0.12 ***	0.09 ***	1.00	
	사회보장	0.24 ***	0.13 ***	0.02 ***	0.19 ***	0.04 ***	0.11 ***	1.00
장애인	교육	1.00						
	소득	0.25 ***	1.00					
	자산	0.09 ***	0.29 ***	1.00				
	노동	0.12 ***	0.11 ***	0.11 ***	1.00			
	주거	0.08 ***	0.15 ***	0.16 ***	0.05 ***	1.00		
	건강	0.20 ***	0.25 ***	0.11 ***	0.22 ***	0.06 ***	1.00	
	사회보장	0.28 ***	0.08 ***	-0.02	0.04 ***	0.04 ***	0.07 ***	1.00

* p<0.05, ** p<0.01, *** p<0.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 차원빈곤선의 설정과 다차원 빈곤율

〈표 6-11〉에는 일곱 개의 차원에서 차원빈곤선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산출되는 다차원 빈곤율 H , 평균 박탈비 A , 그리고 이 둘의 곱으로 계산되는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차원빈곤선이 1일 때 다차원 빈곤율은 77.45%로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77.45%가 1개 이상의 차원에서 박탈을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1개 이상의 차원에서 박탈 경험을 가진 다차원 빈자의 평균 박탈 개수를 차원 개수인 7로 나눈 평균박탈비는 0.318이 된다. 이 둘을 곱한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24.63%로 나타난다. 차원빈곤선을 높게 설정할수록 다차원 빈곤율은 낮아지고 평균 박탈비는 높아지는데, 최종적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도 차원빈곤선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표 6-11〉 차원빈곤선(k)별 다차원 빈곤율

(단위: %)

구분	k=1	k=2	k=3	k=4	k=5	k=6	k=7
다차원 빈곤율(H)	77.45	46.63	25.47	13.47	6.38	2.43	0.56
평균 박탈비(A)	0.318	0.434	0.557	0.671	0.781	0.890	1.000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	24.63	20.22	14.18	9.04	4.98	2.16	0.56

주: 2011~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차원빈곤선의 설정에 원칙은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근거를 사용하고자 한다. 차원빈곤선에 따라 구분된 다차원 빈자와 다차원 비빈자의 차이를 최대화하는 기준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한 Gordon(2006)과 김경혜 외(2010)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6-12〉에 제시하였다. 분산분석(ANOVA) 모형에서는 다차원 빈곤을 독립변수로 하고 균등화소득과 박탈차원 개수를 종속변수로

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균등화소득을 독립변수로 하고 다차원 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였다. 결과를 보면 차원빈곤선을 3으로 설정할 때 분산분석(ANOVA)의 F 값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 카이제곱 값이 일관되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후에는 차원빈곤선을 3으로 설정한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한다.

〈표 6-12〉 차원빈곤선(k) 설정을 위한 통계적 근거

구분	ANOVA F (다차원 빈곤 → 균등화소득)	ANOVA F (다차원 빈곤 → 박탈차원 개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카이제곱 (균등화소득 → 다차원 빈곤)
k=1	11614.99	63969.23	1711.14
k=2	21932.44	197100.15	4078.46
k=3	22700.68	243566.37	6374.21
k=4	16312.46	155809.04	6024.66
k=5	8816.73	75286.52	5175.07
k=6	3589.17	30049.11	4119.48
k=7	878.42	7791.49	3049.04

주: 2011~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균등화소득은 2018년 화폐가치로 환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 〈표 6-13〉과 [그림 6-2]는 차원빈곤선을 3으로 설정하여 구한 다차원 빈곤율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다차원 빈곤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크지만 평균 박탈비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이로 인해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에서의 격차는 다차원 빈곤율 H 보다는 작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34.13%로 비장애인 11.35%의 세 배에 달한다. 또한 모든 다차원 빈곤 지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2011~2018년 사이에 빈곤 수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13〉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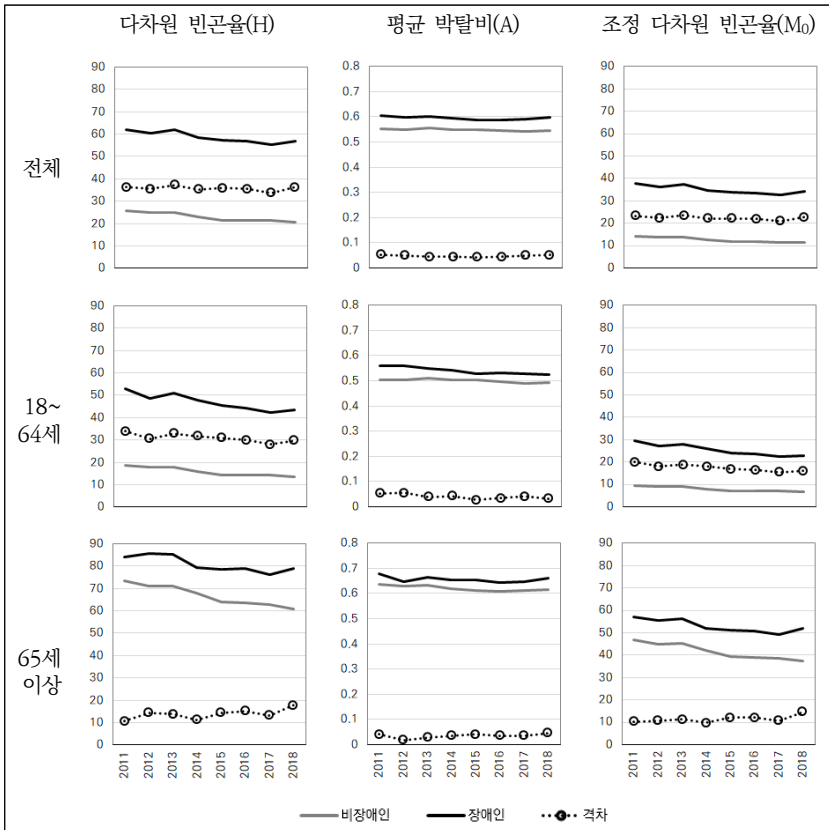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다차원 빈곤율(H)	비장애인	25.84	24.84	24.80	22.93	21.34	21.31	21.37	20.74
		장애인	62.07	60.28	62.15	58.29	57.28	56.90	55.20	57.06
		격차	36.23	35.44	37.35	35.36	35.94	35.59	33.83	36.33
	평균 박탈비(A)	비장애인	0.553	0.550	0.557	0.549	0.548	0.545	0.541	0.547
		장애인	0.606	0.598	0.601	0.594	0.589	0.588	0.591	0.598
		격차	0.053	0.049	0.044	0.045	0.042	0.044	0.049	0.051
	조정 다차원 빈곤율(M ₀)	비장애인	14.29	13.65	13.81	12.59	11.68	11.60	11.57	11.35
		장애인	37.63	36.05	37.33	34.63	33.75	33.48	32.60	34.13
		격차	23.34	22.40	23.52	22.04	22.06	21.88	21.03	22.78
18~64세	다차원 빈곤율(H)	비장애인	18.81	18.06	17.79	15.88	14.43	14.31	14.23	13.48
		장애인	52.80	48.66	50.81	47.65	45.50	44.29	42.33	43.33
		격차	33.99	30.60	33.02	31.77	31.07	29.98	28.10	29.85
	평균 박탈비(A)	비장애인	0.505	0.503	0.510	0.502	0.502	0.497	0.488	0.492
		장애인	0.559	0.558	0.549	0.543	0.528	0.531	0.529	0.525
		격차	0.054	0.055	0.039	0.042	0.027	0.034	0.041	0.033
	조정 다차원 빈곤율(M ₀)	비장애인	9.49	9.09	9.07	7.96	7.24	7.11	6.94	6.64
		장애인	29.51	27.15	27.88	25.87	24.04	23.50	22.38	22.74
		격차	20.02	18.06	18.81	17.91	16.80	16.39	15.43	16.11
65세 이상	다차원 빈곤율(H)	비장애인	73.37	71.02	71.18	67.98	64.15	63.75	62.78	60.97
		장애인	84.18	85.50	85.09	79.19	78.52	78.97	76.05	78.72
		격차	10.80	14.48	13.91	11.22	14.37	15.22	13.27	17.74
	평균 박탈비(A)	비장애인	0.636	0.630	0.634	0.619	0.611	0.609	0.612	0.614
		장애인	0.677	0.648	0.663	0.654	0.653	0.645	0.647	0.661
		격차	0.041	0.018	0.029	0.035	0.041	0.036	0.035	0.047
	조정 다차원 빈곤율(M ₀)	비장애인	46.67	44.72	45.15	42.10	39.22	38.84	38.40	37.45
		장애인	56.98	55.38	56.44	51.80	51.25	50.95	49.18	52.07
		격차	10.31	10.66	11.30	9.70	12.03	12.11	10.77	14.62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6-2]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단위: %, %포인트)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고령층의 다차원 빈곤율이 근로연령층보다 매우 높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고령층이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도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연령층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고령층의 경우

는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장애 상태에 따라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모두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근로 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비장애인과 격차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의 경우 비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더 빨라 장애인과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3. 다차원 빈곤 지수의 분해

Alkire and Foster(2011)가 제안한 조정 다차원 빈곤 지수는 빈곤 지수의 공리를 충족하는 지수로 빈곤을 구성하는 차원별로, 그리고 하위 인구 집단별로 분해가 가능하다.

우선 <표 6-14>에는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대한 차원별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장애인의 경우 다차원 빈곤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단일 차원은 건강으로 나타난다.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34.13%인데, 건강으로 인한 몫이 6.19%포인트이다. 가장 낮은 기여를 하는 차원은 주거 영역으로 2.82%포인트인데, 초기 시점인 2011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차원은 4~5%포인트 정도의 고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양상이다. 비장애인은 전체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11.35%인데, 자산과 사회보장이 각각 2.07%포인트와 2.06%포인트를 기여하고 나머지 차원의 몫은 모두 1%포인트에 그친다.

다차원 빈곤율에 대한 차원별 기여를 근로연령층과 고령층으로 구분해 보면 연령대에 따른 차이도 드러난다. 그 결과는 <표 6-15>에 제시하였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연령대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차원은 자산(4.92%포인트)과 건강(4.27%포인트)인

데, 고령 장애인은 건강(9.22%포인트)과 사회보장(9.19%포인트)으로 나타난다.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달리 건강의 기여가 크지 않고, 고령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같이 건강과 사회보장의 기여가 크지만 교육의 기여도 그에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는 점이 다르다.

〈표 6-14〉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 장 애 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	14.29	13.65	13.81	12.59	11.68	11.60	11.57	11.35
	차원별 조정 빈곤율(H_i/d)	교육	1.61	1.52	1.52	1.38	1.37	1.30	1.29
		소득	1.61	1.56	1.65	1.51	1.49	1.46	1.42
		자산	2.68	2.52	2.51	2.33	2.12	2.12	2.18
		노동	1.66	1.59	1.61	1.59	1.41	1.38	1.44
		주거	2.18	2.03	2.16	1.73	1.57	1.56	1.46
		건강	1.90	1.87	1.86	1.70	1.61	1.69	1.65
		사회보장	2.66	2.55	2.50	2.34	2.12	2.10	2.13
장 애 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	37.63	36.05	37.33	34.63	33.75	33.48	32.60	34.13
	차원별 조정 빈곤율(H_i/d)	교육	5.06	4.89	4.85	4.71	4.65	4.56	4.50
		소득	5.15	5.07	5.49	5.01	4.98	5.02	4.87
		자산	6.48	6.05	6.38	6.10	5.81	5.65	5.68
		노동	4.82	4.59	4.62	4.48	4.52	4.39	4.32
		주거	4.61	4.22	4.53	3.67	3.44	3.37	2.88
		건강	6.66	6.42	6.54	6.17	5.96	6.10	5.66
		사회보장	4.85	4.81	4.93	4.49	4.39	4.39	4.68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차원별 조정 빈곤율(H_i/d)을 모두 더한 값은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과 같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15〉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에 대한 차원별 기여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64세	비장애 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	9.49	9.09	9.07	7.96	7.24	7.11	6.94	6.64
		차원별 조정 빈곤율 (H_i/d)	교육	0.63	0.59	0.57	0.44	0.46	0.38	0.35
			소득	0.90	0.88	0.91	0.78	0.79	0.79	0.71
			자산	2.12	1.99	1.95	1.77	1.58	1.57	1.63
			노동	1.31	1.27	1.24	1.22	1.05	1.00	1.01
			주거	1.80	1.68	1.80	1.45	1.31	1.29	1.19
			건강	1.09	1.08	1.06	0.93	0.88	0.92	0.86
			사회보장	1.65	1.60	1.54	1.38	1.18	1.17	1.20
	장애 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	29.51	27.15	27.88	25.87	24.04	23.50	22.38	22.74
		차원별 조정 빈곤율 (H_i/d)	교육	3.23	2.92	2.83	2.82	2.62	2.41	2.39
			소득	4.18	3.99	4.12	3.87	3.62	3.50	3.21
			자산	5.89	5.42	5.78	5.42	5.12	4.79	4.59
			노동	4.22	3.93	3.79	3.65	3.75	3.68	3.54
			주거	4.20	3.90	4.03	3.47	3.20	3.14	2.64
			건강	5.33	4.74	4.96	4.83	4.26	4.48	4.11
			사회보장	2.47	2.24	2.37	1.83	1.47	1.52	1.91
65세 이상	비장애 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	46.67	44.72	45.15	42.10	39.22	38.84	38.40	37.45
		차원별 조정 빈곤율 (H_i/d)	교육	8.29	7.91	7.79	7.43	7.00	6.86	6.76
			소득	6.35	6.21	6.55	6.17	5.82	5.52	5.55
			자산	6.44	6.15	6.22	5.95	5.48	5.44	5.37
			노동	4.01	3.77	4.07	3.93	3.64	3.71	3.92
			주거	4.78	4.47	4.50	3.53	3.21	3.24	3.02
			건강	7.32	7.19	7.20	6.65	6.14	6.33	6.25
			사회보장	9.48	9.02	8.81	8.44	7.93	7.74	7.54
	장애 인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	56.98	55.38	56.44	51.80	51.25	50.95	49.18	52.07
		차원별 조정 빈곤율 (H_i/d)	교육	9.43	9.19	8.91	8.43	8.31	8.34	7.93
			소득	7.47	7.41	8.27	7.26	7.45	7.69	7.56
			자산	7.88	7.40	7.59	7.42	7.05	7.15	7.44
			노동	6.25	6.02	6.31	6.10	5.92	5.62	5.59
			주거	5.58	4.92	5.53	4.07	3.86	3.79	3.28
			건강	9.83	10.07	9.74	8.81	9.01	8.94	8.18
			사회보장	10.54	10.37	10.10	9.72	9.65	9.43	9.18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차원별 조정 빈곤율(H_i/d)을 모두 더한 값은 조정 다차원 빈곤율(M_0)과 같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음은 조정 다차원 빈곤율을 인구 하위 집단에 따라 분해하였다. 다차원 빈곤의 측정에 이미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하위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개인 특성과 가구 혹은 가구주의 특성을 주로 고려하였다. 분해 결과는 <표 6-16>과 <표 6-17>에 제시하였다.

우선 <표 6-17>에서 장애인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65세 이상일 때, 배우자가 없을 때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높다. 또한 거주지역이 농어촌일 때, 1인 가구일 때, 가구주의 성이 여성일 때, 연령이 60대 이상일 때,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일 때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높다. 이러한 인구 하위 집단에 따른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차이는 비장애인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상은 유사하다(<표 6-16> 참조). 하지만 집단 비율을 고려한 기여도를 보면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여성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지만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기여는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가구주가 60대 이상이거나 초졸 이하인 경우에는 조정 다차원 비율과 집단 비율이 모두 높기 때문에 집단별 기여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경우 인구 하위 집단에 따른 다차원 빈곤 기여도에 편차가 큰 편이다.

〈표 6-16〉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인구 하위 집단별 기여: 비장애인

(단위: %)

구분		집단 비율	다차원 빈곤율	평균 박탈비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H \times A$)	집단별 기여	구성비
		(P)	(H)	(A)		($P \times M_0$)	
전체		100.00	22.85	0.549	12.54	12.54	100.00
성	여성	51.00	27.04	0.568	15.36	7.83	62.46
	남성	49.00	18.49	0.520	9.61	4.71	37.54
연령대	18~64세	86.18	15.84	0.500	7.93	6.83	54.47
	65세 이상	13.82	66.54	0.621	41.30	5.71	45.52
배우자 유무	없음	38.71	27.86	0.572	15.93	6.17	49.19
	있음	61.29	19.69	0.528	10.40	6.37	50.81
거주지역	대도시	44.36	22.59	0.542	12.24	5.43	43.30
	중소도시	47.15	21.33	0.548	11.69	5.51	43.94
	농어촌	8.50	32.64	0.577	18.83	1.60	12.76
가구 규모	1인	7.93	53.15	0.642	34.13	2.71	21.59
	2인	20.81	37.05	0.564	20.91	4.35	34.70
	3인	25.92	16.88	0.517	8.73	2.26	18.05
	4인 이상	45.34	14.44	0.491	7.10	3.22	25.67
가구주 성	여성	14.39	46.78	0.605	28.32	4.08	32.50
	남성	85.61	18.83	0.525	9.89	8.46	67.50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14.84	10.23	0.490	5.01	0.74	5.93
	40대	23.90	14.89	0.498	7.42	1.77	14.15
	50대	33.29	18.21	0.511	9.32	3.10	24.73
	60대 이상	27.97	41.86	0.591	24.75	6.92	55.2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14.02	62.87	0.618	38.83	5.44	43.41
	중졸	10.73	31.86	0.529	16.86	1.81	14.43
	고졸	37.59	18.89	0.503	9.50	3.57	28.48
	대졸 이상	37.66	9.34	0.488	4.56	1.72	13.68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2011~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17〉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인구 하위 집단별 기여: 장애인

(단위: %)

구분		집단 비율	다차원 빈곤율	평균 박탈비	조정 다차원 빈곤율 (M_0 = $H \times A$)	집단별 기여	집단별 기여 구성비
		(P)	(H)	(A)		($P \times M_0$)	
전체		100.00	58.58	0.596	34.90	34.90	100.00
성	여성	41.76	66.87	0.624	41.73	17.43	49.94
	남성	58.24	52.64	0.570	29.99	17.47	50.06
연령대	18~64세	65.29	46.96	0.541	25.41	16.59	47.55
	65세 이상	34.71	80.44	0.656	52.73	18.30	52.45
배우자 유무	없음	40.78	68.82	0.611	42.04	17.15	49.13
	있음	59.22	51.53	0.582	29.97	17.75	50.86
거주지역	대도시	43.97	56.42	0.594	33.53	14.74	42.25
	중소도시	44.65	58.70	0.590	34.61	15.46	44.29
	농어촌	11.38	66.44	0.621	41.29	4.70	13.47
가구 규모	1인	15.94	85.86	0.662	56.87	9.06	25.98
	2인	37.19	66.34	0.604	40.05	14.89	42.68
	3인	23.45	46.19	0.544	25.13	5.89	16.88
	4인 이상	23.41	40.09	0.537	21.54	5.04	14.45
가구주 성	여성	23.04	77.92	0.633	49.36	11.37	32.59
	남성	76.96	52.79	0.579	30.57	23.52	67.41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4.14	35.24	0.527	18.58	0.77	2.20
	40대	13.28	40.70	0.543	22.09	2.93	8.41
	50대	26.34	49.95	0.551	27.54	7.25	20.79
	60대 이상	56.24	68.56	0.621	42.57	23.94	68.60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36.76	82.42	0.650	53.56	19.69	56.42
	중졸	15.19	55.31	0.550	30.43	4.62	13.25
	고졸	29.67	43.16	0.539	23.27	6.90	19.78
	대졸 이상	18.37	38.48	0.521	20.03	3.68	10.55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2011~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제3절 다차원 빈곤의 지속과 이행

이 절에서는 다차원 빈곤의 지속(duration)과 이행(transition)을 분석한다. 이 때 다차원 빈곤은 빈곤과 비빈곤 상태로만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빈곤의 너비를 고려하지 않은 다차원 빈곤 H 를 기준으로 한다.

1. 다차원 빈곤의 지속

우선 <표 6-18>에 2011~2018년의 8년 동안 다차원 빈곤을 경험한 기간을 제시하였다. 비장애인은 8년 중에서 평균 1.83년의 다차원 빈곤을 경험한데 비해 장애인은 4.66년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표 6-18> 다차원 빈곤의 경험 기간(2011~2018년)

(단위: 연수, %)

구분		전체		18~64세		65세 이상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다차원 빈곤 연수(평균)		1.83	4.66	1.21	3.62	4.57	6.12
다차원 빈곤 연수 분포	0개년	49.69	15.81	56.60	22.05	19.38	7.01
	1개년	15.62	7.62	17.22	10.92	8.59	2.98
	2개년	8.02	8.18	8.59	11.03	5.53	4.17
	3개년	5.05	8.63	4.98	10.92	5.36	5.42
	4개년	4.34	3.30	3.82	2.39	6.59	4.58
	5개년	3.47	8.96	2.78	10.50	6.50	6.79
	6개년	2.83	6.17	2.01	8.08	6.43	3.47
	7개년	3.13	9.58	1.81	7.14	8.93	13.03
	8개년	7.85	31.75	2.19	16.99	32.68	52.55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2011~2018년에 모두 관측된 균형패널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8년 중 다차원 빈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도 비장애인은 절반에 가까운 49.69%인데 비해 장애인은 15.81%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8년 동안 다차원 빈곤 상태인 비율도 비장애인은 7.85%에 그치지만 장애인은 31.75%에 달한다.

〈표 6-19〉 집단별 다차원 빈곤의 경험 기간(2011~2018년)

(단위: 연수, %)

구분		다차원 빈곤 연수		1개년 이상		3개년 이상		8개년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전체		1.83	4.66	50.31	84.19	26.67	68.39	7.85	31.75
성	여성	2.16	5.28	54.07	87.94	31.42	74.19	10.89	42.44
	남성	1.47	4.18	46.09	81.34	21.35	63.97	4.45	23.60
연령대	18~64세	1.21	3.62	43.40	77.95	17.59	56.01	2.19	16.99
	65세 이상	4.57	6.12	80.62	92.99	66.50	85.84	32.68	52.55
배우자 유무	없음	2.80	5.48	64.46	89.85	41.20	78.44	15.63	43.45
	있음	1.42	4.01	44.37	79.70	20.57	60.40	4.58	22.45
거주지역	대도시	1.82	4.60	51.45	84.93	27.07	65.68	6.75	30.26
	중소도시	1.72	4.59	47.81	82.44	24.68	70.07	7.59	31.40
	농어촌	2.49	5.18	58.23	88.11	35.48	72.70	14.58	39.12
가구 규모	1인	4.00	6.73	74.94	96.38	55.76	90.07	30.18	62.92
	2인	2.70	5.00	63.96	89.13	41.21	75.42	12.72	33.25
	3인	1.33	3.43	44.25	72.64	19.04	51.31	3.45	16.12
	4인 이상	1.03	3.19	38.97	74.81	14.62	51.01	1.65	13.43
가구주 성	여성	3.86	5.91	76.62	94.22	56.76	83.86	24.98	50.39
	남성	1.46	4.20	45.46	80.49	21.13	62.67	4.70	24.87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0.75	2.29	41.30	66.48	9.02	28.77	0.08	14.56
	40대	0.92	3.61	33.94	82.06	13.34	52.44	1.44	14.24
	50대	1.49	3.43	48.40	74.62	22.13	55.76	3.63	14.08
	60대 이상	3.02	5.29	64.67	88.10	44.27	76.23	17.68	40.83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5.26	6.47	87.78	97.15	74.95	89.71	39.80	58.25
	중졸	2.55	4.55	67.10	84.85	40.04	71.27	8.58	23.87
	고졸	1.50	3.57	51.61	77.39	22.38	53.70	2.86	17.15
	대졸 이상	0.73	2.85	31.64	68.49	9.97	47.08	0.78	7.89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2011~2018년에 모두 관측된 균형패널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근로연령층보다 고령층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차원 빈곤을 경험한 평균 연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오히려 줄어든다. 이는 고령 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경험 연수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표 6-19〉에서는 이러한 다차원 빈곤의 경험 기간을 인구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65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을 경우 다차원 빈곤 경험 연수가 많다. 또한 거주지역이 농촌일 때, 1인 가구일 때, 가구주가 여성, 60대 이상, 초졸 이하일 때 다차원 빈곤 경험 연수가 많다. 이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다차원 빈곤 경험 연수가 높을수록 인구 하위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다음 〈표 6-20〉에서는 다차원 빈곤의 장기 지속을 살펴보았다. 이 때 장기 지속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 연속 다차원 빈곤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2018년 기준 장애인의 장기 다차원 빈곤율은 42.90%로 비장애인 11.56%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비장애인은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다.

〈표 6-20〉 장기 다차원 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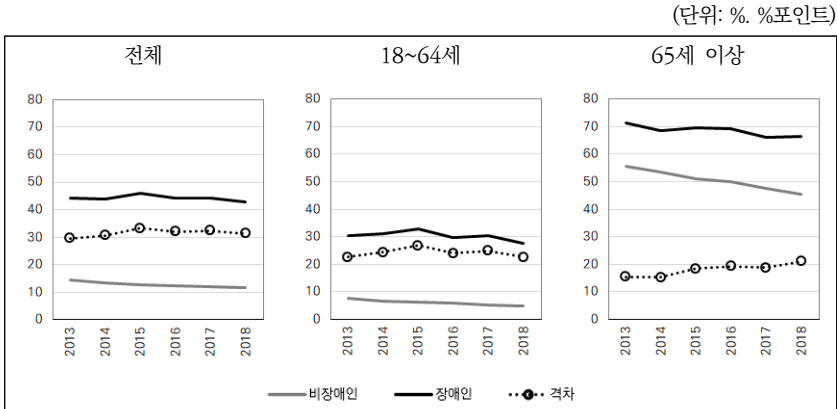
(단위: %, %포인트)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비장애인	14.56	13.41	12.81	12.39	11.89	11.56
	장애인	44.16	44.03	46.15	44.41	44.32	42.90
	격차	29.60	30.62	33.34	32.02	32.43	31.35
18~64세	비장애인	7.73	6.60	6.14	5.76	5.33	5.01
	장애인	30.39	31.06	32.95	29.85	30.28	27.69
	격차	22.66	24.46	26.81	24.09	24.95	22.68
65세 이상	비장애인	55.76	53.39	51.05	50.02	47.40	45.34
	장애인	71.22	68.68	69.47	69.26	66.24	66.38
	격차	15.46	15.28	18.41	19.24	18.84	21.04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장기 다차원 빈곤은 직전 3개년 연속 다차원 빈곤인 경우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3년(기준연도)의 값은 2011~2013년의 상태로 측정함.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기준연도 값을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그림 6-3] 장기 다차원 빈곤



주: 격차는 장애인 수치에서 비장애인 수치를 차감한 값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장기 다차원 빈곤을 연령대로 구분해보면 고령층의 매우 높은 장기 빈곤율이 확인된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기 다차원 빈곤율의 격차에서 근로연령층은 관찰 시기 내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인 반면,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 비장애인의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다차원 빈곤율도 인구 하위 집단별로 구분하고 집단별 기여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21>에 제시하였다. 장기 다차원 빈곤율 또한 1개년 다차원 빈곤율과 인구 하위 집단별 차이에서 드러나는 양상이 유사하다. 이로 인해 집단 비율을 고려한 기여도의 양상 또한 유사하다. 이는 취약한 특성을 가진 인구 하위 집단은 다차원 빈곤의 연도별 경험은 물론 3개년 연속의 장기간 다차원 빈곤 경험에서도 빈곤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21〉 집단별 장기 다차원 빈곤(2013~2018년)

(단위: %)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집단 비율 (P)	장기 다차원 빈곤 (L)	집단별 기여 (P×L)	집단별 기여 구성비	집단 비율 (P)	장기 다차원 빈곤 (L)	집단별 기여 (P×L)	집단별 기여 구성비
전체		100.00	12.75	12.75	100.00	100.00	44.33	44.33	100.00
성	여성	51.75	16.62	8.60	67.46	42.08	53.96	22.71	51.23
	남성	48.25	8.60	4.15	32.54	57.92	37.32	21.62	48.77
연령대	18~64세	84.91	6.08	5.16	40.51	63.36	30.39	19.25	43.43
	65세 이상	15.09	50.26	7.58	59.50	36.64	68.43	25.07	56.56
배우자 유무	없음	35.37	18.45	6.53	51.19	40.90	55.10	22.54	50.84
	있음	64.63	9.63	6.22	48.81	59.10	36.87	21.79	49.15
거주지역	대도시	44.10	11.80	5.21	40.84	44.38	42.72	18.96	42.78
	중소도시	47.42	12.02	5.70	44.72	44.40	43.41	19.27	43.48
	농어촌	8.48	21.72	1.84	14.45	11.22	54.30	6.09	13.74
가구 규모	1인	8.70	41.03	3.57	28.00	17.06	76.38	13.03	29.40
	2인	21.79	22.75	4.96	38.89	37.79	51.39	19.42	43.81
	3인	26.07	7.59	1.98	15.52	23.09	28.66	6.62	14.93
	4인 이상	43.43	5.16	2.24	17.57	22.05	23.81	5.25	11.85
가구주 성	여성	14.65	33.59	4.92	38.60	23.87	65.40	15.61	35.22
	남성	85.35	9.17	7.83	61.40	76.13	37.72	28.71	64.78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14.33	1.73	0.25	1.94	3.30	13.72	0.45	1.02
	40대	22.57	5.58	1.26	9.88	12.32	24.49	3.02	6.81
	50대	32.52	8.15	2.65	20.79	25.83	33.12	8.56	19.30
	60대 이상	30.58	28.09	8.59	67.38	58.55	55.17	32.30	72.87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13.93	50.64	7.05	55.34	36.76	71.64	26.34	59.42
	중졸	10.67	17.37	1.85	14.54	14.61	36.51	5.33	12.03
	고졸	37.05	7.62	2.82	22.14	30.11	28.48	8.58	19.35
	대졸 이상	38.35	2.65	1.01	7.96	18.52	22.02	4.08	9.20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장기 다차원 빈곤은 직전 3개년 연속 다차원 빈곤인 경우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3년(기준연도)의 값은 2011~2013년의 상태로 측정함.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기준연도 값을 적용함. 2013~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2. 다차원 빈곤의 이행

다음으로 다차원 빈곤의 이행을 분석하였다. 다차원 빈곤의 이행은 직전 연도의 다차원 빈곤 상태에서 해당 연도의 다차원 빈곤 상태로의 이행으로 정의하였다. <표 6-22>를 보면, 우선 비빈곤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비장애인이 매우 높고, 빈곤 상태를 유지하는 비율은 장애인이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된다. 이는 장애인의 높은 다차원 빈곤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더욱 주목되는 빈곤 진입(비빈곤 → 빈곤) 비율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비장애인이 7.00%인데 비해 장애인은 10.60%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빈곤 탈출(빈곤 → 비빈곤) 비율 또한 장애인이 8.67%로 비장애인 7.05%보다 다소 높다.

<표 6-22> 다차원 빈곤의 이행

(단위: %, %포인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67.13	67.57	68.35	71.19	71.84	71.77	71.86
	비빈곤 → 빈곤	7.58	8.08	7.05	6.29	6.95	7.28	7.00
	빈곤 → 비빈곤	7.40	7.21	8.35	7.15	6.64	6.47	7.05
	빈곤 → 빈곤	17.89	17.14	16.25	15.36	14.58	14.48	14.08
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28.75	28.50	31.22	34.63	34.84	35.39	34.05
	비빈곤 → 빈곤	10.04	11.91	8.06	7.68	8.91	7.33	10.60
	빈곤 → 비빈곤	10.38	9.60	10.58	8.19	7.97	9.16	8.67
	빈곤 → 빈곤	50.84	49.99	50.13	49.51	48.28	48.11	46.68
격차	비빈곤 → 비빈곤	-38.38	-39.07	-37.13	-36.56	-37.00	-36.38	-37.81
	비빈곤 → 빈곤	2.46	3.83	1.01	1.39	1.96	0.05	3.60
	빈곤 → 비빈곤	2.98	2.39	2.23	1.04	1.33	2.69	1.62
	빈곤 → 빈곤	32.95	32.85	33.88	34.15	33.70	33.63	32.60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빈곤의 이행은 직전 연도에서 기준연도의 이행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2년(기준연도)의 값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의 이행으로 측정함.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기준연도 값을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23〉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의 이행

(단위: %, %포인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64세	비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74.05	74.80	75.71	78.43	79.19	79.14	79.49
		비빈곤 → 빈곤	7.48	7.79	6.79	6.08	6.55	6.86	6.53
		빈곤 → 비빈곤	7.47	7.25	8.27	6.99	6.45	6.38	6.85
		빈곤 → 빈곤	11.00	10.16	9.23	8.50	7.80	7.61	7.13
	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37.44	38.81	40.44	44.03	45.69	47.83	45.69
		비빈곤 → 빈곤	10.42	14.47	9.11	9.08	10.04	7.91	12.62
		빈곤 → 비빈곤	13.27	10.84	12.28	10.56	10.04	9.54	10.96
		빈곤 → 빈곤	38.87	35.89	38.17	36.33	34.22	34.72	30.73
	격차	비빈곤 → 비빈곤	-36.61	-35.99	-35.27	-34.40	-33.50	-31.31	-33.80
		비빈곤 → 빈곤	2.94	6.68	2.32	3.00	3.49	1.05	6.09
		빈곤 → 비빈곤	5.80	3.59	4.01	3.57	3.59	3.16	4.11
		빈곤 → 빈곤	27.87	25.73	28.94	27.83	26.42	27.11	23.60
65세 이상	비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22.10	21.71	23.18	27.88	28.49	30.39	31.02
		비빈곤 → 빈곤	8.21	9.94	8.59	7.55	9.29	9.62	9.53
		빈곤 → 비빈곤	7.00	6.93	8.84	8.11	7.71	6.96	8.15
		빈곤 → 빈곤	62.69	61.42	59.39	56.46	54.51	53.03	51.30
	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10.25	7.83	13.55	17.64	16.32	15.38	15.95
		비빈곤 → 빈곤	9.24	6.80	6.05	5.15	6.97	6.39	7.45
		빈곤 → 비빈곤	4.21	7.12	7.31	3.90	4.43	8.56	5.11
		빈곤 → 빈곤	76.30	78.25	73.09	73.32	72.27	69.67	71.49
	격차	비빈곤 → 비빈곤	-11.85	-13.88	-9.63	-10.24	-12.17	-15.01	-15.07
		비빈곤 → 빈곤	1.03	-3.14	-2.54	-2.40	-2.32	-3.23	-2.08
		빈곤 → 비빈곤	-2.79	0.19	-1.53	-4.21	-3.28	1.60	-3.04
		빈곤 → 빈곤	13.61	16.83	13.70	16.86	17.76	16.64	20.19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빈곤의 이행은 직전 연도에서 기준연도의 이행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2년(기준연도)의 값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의 이행으로 측정함.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기준연도 값을 적용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다만 빈곤 진입 비율을 직전 연도에 비빈곤인 경우로 한정하면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진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빈곤 탈출 비율을 직전 연도에 빈곤인 경우로 한정하면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탈출률

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 진입 비율의 격차는 2018년을 제외하면, 그리고 빈곤 탈출 비율의 격차는 2017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표 6-23〉에서는 다차원 빈곤의 이행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고령 장애인의 경우 근로연령대 장애인에 비해 다차원 빈곤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빈곤 유지 비율이 높고 빈곤 탈출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빈곤 진입 비율 또한 고령 장애인보다 높다. 2018년을 기준으로 근로연령대 장애인은 다차원 빈곤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24% 정도인 반면 고령 장애인은 13% 정도에 그친다. 반면 비장애인은 다차원 빈곤 상태가 변하는 경우가 근로연령층이 13% 정도, 고령층은 18% 정도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다차원 빈곤 상태 변화의 양상이 다르다. 장애인은 근로연령층에서 빈곤 이행의 정도가 큰 반면, 비장애인은 고령층인 경우 빈곤의 이행 정도가 더 큰 것이다.

다음 〈표 6-24〉는 다차원 빈곤 이행 상태별로 해당 기간에 차원별 박탈 상태로 진입한 비율과 탈출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다차원 빈곤 상태의 이행에 어떠한 차원의 박탈 상태 변화가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비빈곤 → 빈곤)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인 차원은 건강이었다. 그 다음으로 노동과 주거의 박탈 진입률이 높았다. 이는 건강, 노동, 주거에서의 새로운 박탈 상태로 인해 다차원 빈곤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빈곤 → 비빈곤)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도 건강이었다. 그 다음으로 노동과 주거의 박탈 탈출률이 높았다. 즉 다차원 빈곤의 진입과 탈출 모두 건강, 노동, 주거 세 영역의 박탈 상태 변화가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건강, 노동, 주거에서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였다.

〈표 6-24〉 다차원 빈곤 이행과 차원별 박탈 이행의 관계(2012~2018년)

(단위: %)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비빈곤 ↓ 빈곤	빈곤 ↓ 비빈곤	빈곤 ↓ 빈곤	비빈곤 ↓ 비빈곤	비빈곤 ↓ 빈곤	빈곤 ↓ 비빈곤	빈곤 ↓ 빈곤
차원별 박탈 진입률	교육	0.00	0.12	0.04	0.07	0.00	0.29	0.00	0.06
	소득	1.47	24.37	1.38	9.24	3.03	26.21	2.68	9.36
	자산	7.88	25.26	2.16	6.90	6.01	23.47	1.30	6.38
	노동	4.69	36.66	2.33	14.00	6.50	35.78	3.24	14.26
	주거	7.72	37.10	2.82	12.79	7.08	33.62	1.06	12.78
	건강	6.70	39.99	2.69	14.32	11.42	45.95	3.01	13.01
	사회보장	4.92	26.37	2.09	6.00	4.87	17.96	1.31	5.25
차원별 박탈 탈출률	교육	0.01	0.01	0.11	0.08	0.00	0.00	0.00	0.15
	소득	1.37	1.64	22.30	9.25	3.12	2.25	22.92	8.88
	자산	8.04	2.13	26.28	6.89	6.59	2.70	23.62	6.53
	노동	4.84	1.54	35.26	12.77	6.70	1.55	39.16	11.74
	주거	8.86	3.55	39.19	14.43	8.71	1.19	34.51	15.53
	건강	6.26	2.08	37.19	13.84	11.70	1.79	47.65	12.43
	사회보장	4.42	3.05	23.68	5.87	4.28	2.06	15.00	4.03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빈곤의 이행은 직전 연도에서 기준연도의 이행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2년(기준연도)의 값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의 이행으로 측정함.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기준연도 값을 적용함. 2012~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25〉에는 다차원 빈곤 이행에 대한 차원별 영향을 연령대별로 제시하였다. 건강, 노동, 주거의 세 가지 차원에서의 박탈 진입과 탈출이 다차원 빈곤의 이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모든 연령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마찬가지였다. 다만 고령층은 건강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표 6-26〉에서 다차원 빈곤의 이행을 인구 하위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차원 빈곤의 위험과 달리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고 오히려 취약 집단의 빈곤 탈출률과 진입률이 모두 낮은 경우도 확인된다. 이는 다차원 빈곤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빈곤의 이행 확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6-25〉 연령대별 다차원 빈곤 이행과 차원별 박탈 이행의 관계(2012~2018년)

(단위: %)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비빈곤 ↓ 빈곤	빈곤 ↓ 비빈곤	빈곤 ↓ 빈곤	비빈곤 ↓ 비빈곤	비빈곤 ↓ 빈곤	빈곤 ↓ 비빈곤	빈곤 ↓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비빈곤	빈곤
18~ 64세	차원별 박탈 진입률	교육	0.00	0.09	0.03	0.03	0.00	0.39	0.00	0.07
		소득	1.34	23.79	1.26	9.52	3.16	26.91	2.73	9.38
		자산	8.09	25.94	2.29	5.71	6.24	24.04	1.44	4.75
		노동	4.71	38.69	2.49	11.82	6.22	37.74	2.96	12.10
		주거	7.83	39.23	3.04	11.26	7.38	35.28	0.79	12.00
		건강	6.24	36.97	2.81	13.69	10.81	46.41	3.59	13.38
		사회보장	4.77	28.12	2.21	8.61	4.25	15.43	0.89	5.14
	차원별 박탈 탈출률	교육	0.01	0.02	0.10	0.06	0.00	0.00	0.00	0.33
		소득	1.29	1.60	22.28	10.39	3.14	2.60	22.51	10.25
		자산	8.27	2.23	26.42	6.02	6.86	2.69	22.51	4.24
		노동	4.85	1.53	36.45	12.16	6.46	1.17	41.29	10.65
		주거	9.02	3.80	41.02	13.17	9.14	1.14	35.67	15.46
		건강	5.91	2.12	35.04	13.36	11.28	1.83	46.78	13.92
		사회보장	4.36	3.28	25.44	8.81	4.11	2.36	13.61	5.57
65세 이상	차원별 박탈 진입률	교육	0.00	0.27	0.07	0.10	0.00	0.00	0.00	0.04
		소득	3.69	27.00	2.09	8.98	2.29	24.29	2.49	9.34
		자산	4.17	22.19	1.45	7.99	4.77	21.89	0.81	7.80
		노동	4.48	27.42	1.42	16.00	8.03	30.36	4.20	16.14
		주거	5.76	27.45	1.66	14.20	5.42	29.01	1.98	13.46
		건강	14.60	53.72	2.02	14.89	14.77	44.67	1.02	12.69
		사회보장	7.48	18.39	1.47	3.61	8.25	24.98	2.74	5.35
	차원별 박탈 탈출률	교육	0.02	0.00	0.20	0.09	0.00	0.00	0.00	0.00
		소득	2.68	1.84	22.43	8.20	2.99	1.29	24.32	7.69
		자산	4.07	1.66	25.51	7.69	5.09	2.74	27.40	8.53
		노동	4.68	1.56	28.71	13.33	8.04	2.60	31.85	12.70
		주거	6.23	2.40	29.20	15.59	6.38	1.32	30.54	15.59
		건강	12.18	1.86	48.96	14.28	14.00	1.71	50.64	11.12
		사회보장	5.34	2.02	13.99	3.17	5.23	1.21	19.73	2.68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빈곤의 이행은 직전 연도에서 기준연도의 이행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2년(기준연도)의 값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의 이행으로 측정함.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기준연도 값을 적용함. 2012~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26〉 집단별 다차원 빈곤의 이행(2012~2018년)

(단위: %)

구분		비장애인				장애인			
		비빈곤 ↓ 비빈곤	비빈곤 ↓ 빈곤	빈곤 ↓ 비빈곤	빈곤 ↓ 빈곤	비빈곤 ↓ 비빈곤	비빈곤 ↓ 빈곤	빈곤 ↓ 비빈곤	빈곤 ↓ 빈곤
전체		70.00	7.17	7.17	15.65	32.55	9.20	9.20	49.05
성	여성	65.76	7.27	7.20	19.78	25.15	8.29	8.26	58.30
	남성	74.48	7.06	7.15	11.31	37.92	9.85	9.88	42.35
연령대	18~64세	77.29	6.86	7.09	8.76	42.81	10.52	11.08	35.60
	65세 이상	26.67	8.99	7.68	56.66	14.08	6.82	5.83	73.26
배우자 유무	없음	63.29	7.81	8.01	20.89	22.22	9.06	8.99	59.73
	있음	73.97	6.79	6.68	12.56	39.69	9.29	9.35	41.67
거주지역	대도시	69.85	7.65	7.53	14.97	34.87	9.31	8.60	47.22
	중소도시	71.88	6.70	6.78	14.64	31.88	9.56	10.05	48.51
	농어촌	60.34	7.31	7.49	24.86	26.17	7.32	8.23	58.28
가구 규모	1인	40.08	7.76	6.99	45.18	8.90	6.12	5.18	79.80
	2인	54.18	9.51	8.67	27.64	25.67	8.72	8.30	57.32
	3인	76.47	6.22	7.13	10.18	44.10	10.88	10.72	34.30
	4인 이상	79.35	6.50	6.52	7.64	49.19	10.50	12.05	28.27
가구주 성	여성	43.92	9.16	9.09	37.83	14.63	7.59	8.14	69.64
	남성	74.42	6.83	6.85	11.89	38.03	9.69	9.53	42.76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83.99	6.27	6.11	3.64	51.86	15.65	12.25	20.24
	40대	79.46	6.05	6.11	8.37	48.82	10.13	11.18	29.87
	50대	74.05	7.13	7.89	10.93	40.13	10.15	11.22	38.51
	60대 이상	50.95	8.55	7.74	32.76	24.25	8.14	7.65	59.96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28.11	8.56	8.37	54.97	11.18	6.70	6.87	75.26
	중졸	58.29	10.22	9.83	21.66	34.13	11.68	10.85	43.34
	고졸	73.18	7.83	8.16	10.83	47.44	9.65	9.62	33.29
	대졸 이상	85.57	5.16	5.02	4.26	49.78	11.42	11.84	26.96

주: 차원빈곤선은 3 이상으로 설정함. 빈곤의 이행은 직전 연도에서 기준연도의 이행으로 정의함. 예를 들어 2012년(기준연도)의 값은 2011년에서 2012년으로의 이행으로 측정함. 연령, 장애 상태, 가중치는 기준연도 값을 적용함. 2012~2018년을 통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제4절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 분해

이 절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를 Oaxaca-Blinder 방법으로 분해한다. 이 때 분해 변수는 다차원 빈곤 H 가 아니라 빈곤의 너비에 따라 조정된 다차원 빈곤 M_0 이다. 소득, 고용, 주거, 건강 영역에서의 격차 분해와 마찬가지로 분석 시점에서 전기에 속하는 2011~2013년과 후기에 속하는 2016~2018년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표 6-27〉 장애인-비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격차 변화(18세 이상)

(단위: %, %포인트)

구분		2011~2013	2016~2018	변화
전체 (18세 이상)	비장애인	13.91	11.51	-2.41
	장애인	37.00	33.40	-3.60
	격차	23.09	21.89	-1.19
18~64세	비장애인	9.22	6.90	-2.32
	장애인	28.18	22.88	-5.30
	격차	18.97	15.99	-2.98
65세 이상	비장애인	45.51	38.21	-7.30
	장애인	56.25	50.73	-5.52
	격차	10.75	12.52	1.77

주: 조정 다차원 빈곤율을 제시함(M_0). 격차 분해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로 제한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우선 〈표 6-27〉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2011~2013년에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37.00%로 비장애인보다 23.09%포인트 높다. 2016~2018년에 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은 33.40%로 비장애인과 격차는 21.89%포인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감소하였는데, 장애인의 감소폭이 더 커서 격차는 줄어 들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격차

는 근로연령층이 고령층보다 크다. 또한 근로연령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초기에 비해 후기에 감소한 반면, 고령층은 격차가 늘었다.

다음 <표 6-28>에는 조정 다차원 빈곤의 격차 분해 모형에 사용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변수를 제시하였다. 다차원 빈곤에 이미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분해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는 개인과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6-28> 다차원 빈곤 모형의 기술통계(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126	0.4200	0.5082	0.4172
	남성	0.4874	0.5800	0.4918	0.5828
연령		44.18	56.35	45.92	58.34
연령 제곱		2223.59	3411.55	2395.98	3660.14
배우자	없음	0.3801	0.3735	0.3965	0.4453
	있음	0.6199	0.6265	0.6035	0.5547
거주지역	대도시	0.4526	0.4376	0.4346	0.4410
	중소도시	0.4617	0.4451	0.4806	0.4496
	농어촌	0.0858	0.1173	0.0848	0.1095
가구원 수		3.3081	2.7244	3.1754	2.5649
가구주 성	여성	0.1350	0.2029	0.1542	0.2618
	남성	0.8650	0.7971	0.8458	0.7382
가구주 연령		52.08	60.00	54.26	63.33
가구주 연령 제곱		2868.93	3762.03	3109.73	4169.55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0.1500	0.3724	0.1320	0.3636
	중졸	0.1129	0.1654	0.1008	0.1388
	고졸	0.3809	0.2813	0.3707	0.3096
	대졸 이상	0.3561	0.1809	0.3965	0.1881
연도	2011/2016	0.3280	0.3283	0.3302	0.3366
	2012/2017	0.3336	0.3342	0.3329	0.3339
	2013/2018	0.3383	0.3375	0.3369	0.3295
사례수		39126	4603	33793	39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29〉 다차원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남성 (ref. 여성)	-0.0277 *** (0.003)	-0.0386 * (0.016)	-0.0246 *** (0.003)	-0.0434 * (0.019)
연령	-0.0059 *** (0.001)	-0.0008 (0.004)	-0.0079 *** (0.001)	-0.0088 * (0.004)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 (0.000)	0.0001 *** (0.000)	0.0001 ***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614 *** (0.006)	-0.1278 *** (0.020)	-0.0557 *** (0.007)	-0.0847 *** (0.021)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87 (0.005)	0.0044 (0.019)	-0.0119 ** (0.004)	-0.0225 (0.019)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43 (0.008)	-0.0109 (0.020)	-0.0100 (0.007)	-0.0584 ** (0.022)
가구원 수	0.0026 (0.002)	-0.0087 (0.009)	0.0050 * (0.002)	-0.0229 ** (0.009)
가구주 남성 (ref. 여성)	-0.0416 *** (0.009)	0.0033 (0.028)	-0.0371 *** (0.008)	-0.0296 (0.025)
가구주 연령	-0.0093 *** (0.001)	-0.0048 (0.006)	-0.0109 *** (0.001)	0.0026 (0.005)
가구주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0 (0.000)	0.0001 *** (0.000)	-0.0000 (0.000)
가구주 중졸 (ref. 초졸 이하)	-0.1425 *** (0.011)	-0.2038 *** (0.024)	-0.1437 *** (0.012)	-0.1742 *** (0.026)
가구주 고졸 (ref. 초졸 이하)	-0.1853 *** (0.010)	-0.2196 *** (0.026)	-0.1856 *** (0.011)	-0.2013 *** (0.025)
가구주 대졸 이상 (ref. 초졸 이하)	-0.2356 *** (0.010)	-0.2300 *** (0.032)	-0.2150 *** (0.011)	-0.2444 *** (0.029)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45 (0.003)	-0.0202 (0.011)	-0.0008 (0.003)	-0.0191 * (0.009)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27 (0.003)	-0.0115 (0.012)	-0.0043 (0.003)	-0.0096 (0.011)
상수	0.6675 *** (0.028)	0.5892 *** (0.172)	0.7269 *** (0.026)	0.6042 *** (0.141)
F	612.57 ***	60.11 ***	439.19 ***	61.20 ***
R제곱	0.3871	0.3481	0.3828	0.3802
사례수	39126	4603	33793	3982

* p<0.05, ** p<0.01, *** p<0.001

주: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표 6-28〉),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조정 다차원 빈곤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모형(〈표 6-29〉)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Oaxaca-Blinder 격차 분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30〉에 제시하였다.

우선 2011~2013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총 격차는 23.09%포인트로 나타난다. 이를 분해하면 특성 효과가 11.89%포인트, 계수 효과가 11.20%포인트로 유사한 크기로 나타난다. 2016~2018년에는 총 격차가 21.89%였는데, 특성 효과가 11.67%, 계수 효과가 10.23%로 나타난다. 개인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격차 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구조적 효과 등으로 발생하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 또한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6-30〉 다차원 빈곤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2309 (0.011) ***	0.2189 (0.011) ***
	특성 효과	0.1189 (0.007) ***	0.1167 (0.007) ***
	계수 효과	0.1120 (0.009) ***	0.1023 (0.009)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26 (0.001) ***	-0.0022 (0.001) ***
	연령	0.0865 (0.005) ***	0.0803 (0.006) ***
	배우자	-0.0004 (0.001)	0.0027 (0.001) *
	거주지역	0.0000 (0.000)	0.0001 (0.000)
	가구원 수	-0.0015 (0.001)	-0.0031 (0.001) *
	가구주 성	0.0028 (0.001) **	0.0040 (0.001) ***
	가구주 연령	-0.0182 (0.002) ***	-0.0159 (0.003) ***
	가구주 교육수준	0.0523 (0.004) ***	0.0507 (0.005) ***
	연도	0.0000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특성 효과를 세부 분해한 결과를 보면 개인의 연령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 분포가 같았더라면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격차는 약 8%포인트 정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구주 교육수준 분포가 같았더라면 조정 다차원 빈곤율 격차가 약 5% 포인트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이 특성 효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며, 이는 2016~2018년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구주의 연령 분포가 같았더라면 격차가 오히려 증가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다.

다음은 연령대를 나누어 격차 분해를 한 결과이다. 우선 근로연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특성 분포(〈표 6-31〉), 그리고 조정 다차원 빈곤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표 6-32〉)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격차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33〉을 보면, 근로연령층의 경우 2011~2013년에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총 격차는 18.97%포인트인데, 이 중 특성 효과는 6.62%포인트, 계수 효과는 12.35%포인트로 나타난다. 2016~2018년에는 총 격차 15.99%포인트 중 특성 효과는 5.14%포인트, 계수 효과는 10.85%포인트였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특성 효과로 포착되는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고 계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특성 효과의 세부 분해 결과를 보면 역시 개인의 연령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2011~2013년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령 분포가 같았더라면 격차는 4.43%포인트 줄어들었을 것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구주 교육수준의 분포가 같았더라면 격차는 4.02%포인트 줄어들었을 것이다. 2016~2018년에도 개인 연령과 가구주 교육수준이 특성 효과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2011~2013년에 비해 그 크기는 작아졌다.

〈표 6-31〉 다차원 빈곤 모형의 기술통계(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005	0.3770	0.4940	0.3671
	남성	0.4995	0.6230	0.5060	0.6329
연령		39.81	48.63	41.08	48.80
연령 제곱		1743.65	2504.96	1856.75	2526.74
배우자	없음	0.3782	0.3892	0.4005	0.4923
	있음	0.6218	0.6108	0.5995	0.5077
거주지역	대도시	0.4602	0.4802	0.4391	0.4672
	중소도시	0.4654	0.4277	0.4863	0.4495
	농어촌	0.0745	0.0921	0.0746	0.0833
가구원 수		3.4641	2.9672	3.3579	2.8658
가구주 성	여성	0.1137	0.1839	0.1313	0.2450
	남성	0.8863	0.8161	0.8687	0.7550
가구주 연령		49.43	55.26	51.16	58.23
가구주 연령 제곱		2551.60	3172.88	2732.20	3518.79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0.1040	0.2920	0.0816	0.2764
	중졸	0.1080	0.1775	0.0916	0.1347
	고졸	0.4023	0.3254	0.3911	0.3565
	대졸 이상	0.3857	0.2051	0.4357	0.2325
연도	2011/2016	0.3282	0.3372	0.3324	0.3442
	2012/2017	0.3342	0.3336	0.3329	0.3318
	2013/2018	0.3376	0.3292	0.3347	0.3240
사례수		26676	2106	22185	15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32〉 다차원 빈곤 모형 추정 결과(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남성 (ref. 여성)	-0.0181 *** (0.003)	-0.0264 (0.022)	-0.0117 *** (0.003)	-0.0153 (0.026)
연령	-0.0007 (0.001)	0.0162 ** (0.006)	-0.0018 (0.001)	-0.0017 (0.007)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0.000)	0.0001 *** (0.000)	0.0001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736 *** (0.008)	-0.1756 *** (0.028)	-0.0566 *** (0.008)	-0.1550 *** (0.031)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097 * (0.005)	0.0086 (0.024)	-0.0118 ** (0.005)	-0.0324 (0.024)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037 (0.010)	0.0116 (0.028)	-0.0086 (0.008)	-0.0508 (0.033)
가구원 수	0.0040 (0.002)	-0.0013 (0.011)	0.0039 (0.002)	-0.0020 (0.012)
가구주 남성 (ref. 여성)	-0.0447 *** (0.010)	-0.0171 (0.035)	-0.0378 *** (0.009)	-0.0612 (0.034)
가구주 연령	-0.0019 (0.002)	0.0072 (0.007)	-0.0052 *** (0.002)	0.0045 (0.006)
가구주 연령 제곱	-0.0000 (0.000)	-0.0001 (0.000)	0.0000 (0.000)	-0.0001 (0.000)
가구주 중졸 (ref. 초졸 이하)	-0.1180 *** (0.013)	-0.1842 *** (0.031)	-0.0940 *** (0.015)	-0.1644 *** (0.037)
가구주 고졸 (ref. 초졸 이하)	-0.1548 *** (0.012)	-0.2071 *** (0.034)	-0.1312 *** (0.013)	-0.1759 *** (0.033)
가구주 대졸 이상 (ref. 초졸 이하)	-0.2019 *** (0.012)	-0.2101 *** (0.041)	-0.1569 *** (0.013)	-0.1981 *** (0.035)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029 (0.003)	-0.0280 (0.014)	-0.0011 (0.003)	-0.0174 (0.013)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17 (0.003)	-0.0200 (0.016)	-0.0037 (0.003)	-0.0148 (0.016)
상수	0.3684 *** (0.042)	-0.0424 (0.265)	0.4134 *** (0.041)	0.3814 (0.240)
F	78.86 ***	19.43 ***	36.46 ***	16.48 ***
R제곱	0.1566	0.2250	0.1092	0.2304
사례수	26676	2106	22185	1500

* p<0.05, ** p<0.01, *** p<0.001

주: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33〉 다차원 빈곤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18~64세)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897	(0.012) ***	0.1599	(0.013) ***
	특성 효과	0.0662	(0.006) ***	0.0514	(0.005) ***
	계수 효과	0.1235	(0.011) ***	0.1085	(0.012)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022	(0.001) ***	-0.0015	(0.000) **
	연령	0.0443	(0.004) ***	0.0262	(0.003) ***
	배우자	0.0008	(0.002)	0.0052	(0.002) **
	거주지역	0.0003	(0.000)	0.0004	(0.000)
	가구원 수	-0.0020	(0.001)	-0.0019	(0.001)
	가구주 성	0.0031	(0.001) **	0.0043	(0.001) **
	가구주 연령	-0.0183	(0.003) ***	-0.0137	(0.003) ***
	가구주 교육수준	0.0402	(0.005) ***	0.0324	(0.005) ***
	연도	0.0000	(0.000)	0.0000	(0.000)

* p<0.05, ** p<0.01, *** p<0.001

주: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마지막으로 고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에 대한 격차 분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6-36〉을 보면, 고령층의 경우 2011~2013년에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총 격차는 10.75%포인트인데, 이 중 특성 효과는 1.10%포인트, 계수 효과는 9.64%포인트이다. 2016~2018년에는 총 격차 12.52%포인트 중 특성 효과는 2.32%포인트, 계수 효과는 10.20%포인트였다. 근로연령층에 비해 특성 효과의 크기가 더욱 작다.

특성 효과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세부 분해 결과에서도 각 특성의 기여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특성 효과를 대부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2013년의 경우 고령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구주 교육수준 분포가 같았더라면 격차가 2.64%포인트 줄어들었을 것이고, 2016~2018년에는 2.72%포인트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는 전체 특성 효과의 크기보다 큰 것이다.

〈표 6-34〉 다차원 빈곤 모형의 기술통계(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성별	여성	0.5943	0.5137	0.5907	0.4998
	남성	0.4057	0.4863	0.4093	0.5002
연령		73.55	73.19	73.98	74.06
연령 제공		5451.59	5390.84	5520.04	5527.85
배우자	없음	0.3929	0.3393	0.3736	0.3677
	있음	0.6071	0.6607	0.6264	0.6323
거주지역	대도시	0.4015	0.3448	0.4082	0.3977
	중소도시	0.4367	0.4831	0.4476	0.4496
	농어촌	0.1618	0.1721	0.1442	0.1527
가구원 수		2.2591	2.1944	2.1180	2.0692
가구주 성	여성	0.2786	0.2446	0.2864	0.2894
	남성	0.7214	0.7554	0.7136	0.7106
가구주 연령		69.90	70.37	72.24	71.73
가구주 연령 제공		5003.24	5048.27	5296.93	5241.92
가구주 교육수준	초졸 이하	0.4598	0.5479	0.4238	0.5072
	중졸	0.1458	0.1390	0.1545	0.1456
	고졸	0.2372	0.1852	0.2523	0.2323
	대졸 이상	0.1573	0.1280	0.1693	0.1149
연도	2011/2016	0.3268	0.3088	0.3176	0.3240
	2012/2017	0.3298	0.3356	0.3325	0.3374
	2013/2018	0.3434	0.3556	0.3499	0.3386
사례수		12450	2497	11608	24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35〉 다차원 빈곤 모형 추정 결과(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비장애인	장애인	비장애인	장애인
남성 (ref. 여성)	-0.1261 *** (0.009)	-0.0844 *** (0.019)	-0.1088 *** (0.009)	-0.1014 *** (0.022)
연령	0.0513 *** (0.011)	0.0535 * (0.027)	0.0581 *** (0.011)	-0.0200 (0.026)
연령 제곱	-0.0002 *** (0.000)	-0.0003 (0.000)	-0.0003 *** (0.000)	0.0002 (0.000)
배우자 있음 (ref. 없음)	0.0186 (0.016)	-0.0332 (0.023)	-0.0131 (0.017)	-0.0199 (0.026)
거주지역 중소도시 (ref. 대도시)	-0.0142 (0.011)	-0.0103 (0.023)	-0.0141 (0.011)	-0.0161 (0.024)
거주지역 농어촌 (ref. 대도시)	-0.0257 * (0.010)	-0.0596 ** (0.023)	-0.0227 (0.013)	-0.0654 ** (0.025)
가구원 수	-0.0225 *** (0.006)	-0.0173 (0.012)	-0.0210 ** (0.007)	-0.0323 * (0.013)
가구주 남성 (ref. 여성)	0.0091 (0.016)	0.0211 (0.028)	0.0085 (0.017)	0.0024 (0.026)
가구주 연령	-0.0179 *** (0.003)	-0.0095 (0.007)	-0.0182 *** (0.005)	0.0073 (0.009)
가구주 연령 제곱	0.0001 *** (0.000)	0.0001 (0.000)	0.0001 ** (0.000)	-0.0001 (0.000)
가구주 중졸 (ref. 초졸 이하)	-0.1746 *** (0.015)	-0.2330 *** (0.031)	-0.1945 *** (0.016)	-0.1672 *** (0.031)
가구주 고졸 (ref. 초졸 이하)	-0.2790 *** (0.013)	-0.2503 *** (0.034)	-0.2694 *** (0.014)	-0.2453 *** (0.033)
가구주 대졸 이상 (ref. 초졸 이하)	-0.3657 *** (0.018)	-0.2731 *** (0.043)	-0.3686 *** (0.017)	-0.3450 *** (0.043)
연도 2012/2017 (ref. 2011/2016)	-0.0152 ** (0.005)	-0.0079 (0.011)	0.0011 (0.006)	-0.0181 (0.012)
연도 2013/2018 (ref. 2011/2016)	-0.0091 (0.006)	0.0022 (0.013)	-0.0067 (0.006)	0.0011 (0.013)
상수	-1.0515 * (0.471)	-1.1906 (1.069)	-1.3990 ** (0.452)	0.9803 (1.009)
F	166.97 ***	17.82 ***	215.11 ***	23.92 ***
R제곱	0.3971	0.2834	0.4317	0.3238
사례수	12450	2497	11608	2482

* p<0.05, ** p<0.01, *** p<0.001

주: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표 6-36〉 다차원 빈곤 격차에 대한 Oaxaca-Blinder 분해(65세 이상)

변수		2011~2013	2016~2018
총 격차 분해	총 격차	0.1075 (0.013) ***	0.1252 (0.015) ***
	특성 효과	0.0110 (0.009)	0.0232 (0.011) *
	계수 효과	0.0964 (0.011) ***	0.1020 (0.011) ***
특성 효과 세부 분해	성별	-0.0102 (0.003) ***	-0.0099 (0.003) ***
	연령	-0.0037 (0.004)	0.0023 (0.005)
	배우자	0.0010 (0.001)	-0.0001 (0.000)
	거주지역	-0.0009 (0.001)	-0.0002 (0.000)
	가구원 수	0.0015 (0.001)	0.0010 (0.001)
	가구주 성	0.0003 (0.001)	0.0000 (0.000)
	가구주 연령	-0.0032 (0.002)	0.0028 (0.002)
	가구주 교육수준	0.0264 (0.007) ***	0.0272 (0.008) ***
	연도	-0.0002 (0.000)	0.0001 (0.000)

* p<0.05. ** p<0.01, *** p<0.001

주: 괄호 안은 원표본가구를 군집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군집 표준오차(clustered standard errors)를 제시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 제언

제3절 연구의 한계

제 7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에 대해 그 수준과 변화, 그리고 원인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삶의 격차는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4대 정책 영역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4대 정책 영역은 소득, 노동, 주거, 건강으로 선정하였고, 다차원적 격차는 여기에 교육, 자산, 사회보장을 포함해 7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Oaxaca-Blinder의 격차 분해법, 그리고 Alkire-Foster의 다차원 빈곤 지수를 사용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 7~14차(2011~2018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득 격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1년 장애인의 가처분소득은 비장애인 대비 66%에서 2018년 63%로 낮아졌다. 특히 노동소득에서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비장애인의 노동소득 증가 속도를 장애인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노동소득 격차의 확대를 공적 이전소득이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연금을 포함한 장애 관련 급여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또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

제로 개편된 이후 그 효과가 커졌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비장애인은 공적 연금을 포함한 노령 관련 급여의 역할이 큰 반면,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포함한 장애 관련 급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빈곤율에서의 장애인-비장애인의 격차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나며 감소 추세는 발견되지 않았다. 중위소득의 50%, 혹은 30% 어느 빈곤선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의 빈곤율은 비장애인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난다. 고령층의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곤율 격차는 근로연령층보다 작지만 전반적인 빈곤 수준은 매우 높고 그 격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만 빈곤한 자의 빈곤 정도, 즉 빈곤의 깊이를 의미하는 빈곤갭에서는 중위소득의 50% 기준을 사용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중위소득의 30% 기준을 사용하면 빈곤 장애인의 소득이 빈곤 비장애인의 소득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소득에 대한 격차 분해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소득 격차의 약 60%가 특성 차이로 설명된다. 높은 연령, 작은 가구원 수, 저학력, 미취업 등 소득과 부적 관계를 갖는 특성을 장애인이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의 낮은 학력과 높은 연령으로 인한 소득 격차가 컸다. 빈곤율에서도 장애인-비장애인 격차의 약 54%가 특성 차이로 설명되며, 역시 학력과 연령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풀이되는 계수 효과 역시 소득 격차의 약 40%, 빈곤율 격차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었다.

2. 노동 격차

노동의 양을 보여주는 고용률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대체로 유지되다가 2015년 이후 커지고 있다. 2015년 전후로 비장애인의 고용

률은 증가한 반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다소 낮아졌기 때문이다. 노동의 질을 보여주는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에서 2018년 기준 비장애인은 약 1만 7천 5백 원, 장애인은 약 1만 3천 9백 원으로 그 차이가 크다. 또한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노동시간이 짧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의 임금은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정의된 저임금에서도 장애인의 저임금 비율은 비장애인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난다. 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저임금 비율은 감소하고, 그 격차도 다소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률 격차는 22~26%포인트 정도로 큰데, 이중 8~10%포인트가 특성 차이로 설명된다. 이때 건강상태와 연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로 볼 수 있는 계수 효과는 고용률 격차의 과반을 차지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저임금 비율 격차 17~18%포인트 중에서도 특성 차이에 의한 격차는 10~12%포인트로 나타난다. 연령, 학력과 같은 개인 특성과 함께 직종, 종사상 지위와 같은 일자리 특성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률 격차에서 차지하는 계수 효과의 비중은 저임금 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커서 노동시장 내부의 장애차별보다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장애차별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 주거 격차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주거의 물리적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2011년 약 33%에서 2018년 약 21%로 감소하였고, 장애

인의 감소 속도가 더 커서 비장애인과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최저주거기준의 세부 요소인 면적 및 방의 개수, 필수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의 미달 비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의 미달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주거의 경제적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RIR)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2011년 약 9%에서 2018년 약 6%로 감소하였고, 장애인의 감소 속도가 비장애인보다 다소 빨라 격차는 감소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의 경우 연령대에 다른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고령층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이 중복된 ‘결합 주거빈곤’인 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지만 2018년의 경우 비장애인이 0.55%인데 비해 장애인은 1.21%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는 크지 않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의 경우 2011~2013년에 4.41%포인트에서 2016~2018년에 2.62%포인트로 감소하였고, 그 중 절반 정도를 특성 효과가 차지하고 있다. 특성 효과에서는 가구원 수, 학력, 연령, 주택 점유 형태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가구원 수의 영향은 격차와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확률이 높는데 장애인의 가구원 수가 비장애인보다 더 작기 때문이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의 격차 역시 크기가 작으며 4.98%포인트에서 2.95%포인트로 감소하였다. 다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달리 총 격차에서 특성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크다. 특성 효과에서는 가구원 수, 연령, 경제활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4. 건강 격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는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미충족 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건강상태 영역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로 살펴 보았다. 우선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의 비율이 높으나 그 격차는 최근 감소하고 있었다. 다만 미충족 의료의 이유를 구분해보면 장애인은 이동상 제약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비율이 높고 비장애인과 격차도 컸다. 특히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격차는 감소 추세인 반면 이동상 제약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격차는 증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 비율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며 그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은 비장애인의 4배 수준으로 높다. 다만 그 격차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고령층의 장애인-비장애인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격차는 근로연령층보다 작는데, 이는 고령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 역시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 영역인 우울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가 확인된다. 장애인은 우울 점수는 물론 우울 증상 비율에서도 비장애인보다 심각한 상태가 확인되며, 특히 우울 증상 비율은 비장애인의 2배 이상이다.

미충족 의료 경험의 경우 장애인-비장애인의 격차는 5%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은데, 그 중 특성 효과가 3% 내외를 차지하며 분석 후기 시점에 계수 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의 격차는 14~15%포인트 정도로 크며 특성 차이에 의한 격차가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 효과에서는 장애인의 낮은 소득 수준과 높은 만성질환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나쁨 비율은 30%포인트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는데, 특성 효과보다는 계수 효과의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 효과에서는 연령, 만성질환, 소득 수준의 영향이 크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증상 비율의 격차 또한 14%포인트 정도로 크며,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특성 효과 중에서는 소득 수준이 우울 증상 비율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다차원 빈곤

다차원 빈곤은 교육, 소득, 자산, 노동, 주거, 건강, 사회보장의 7개 차원으로 측정하였으며, 3개 차원 이상에서 박탈 상태인 경우를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다차원 빈곤의 규모를 보여주는 다차원 빈곤율에서는 비장애인 20~26%, 장애인 57~62% 정도로 격차가 컸지만, 다차원 빈곤의 너비를 보여주는 평균 박탈비에서는 격차가 크지 않았다.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조정 다차원 빈곤율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3배에 이르는 격차가 확인된다.

다차원 빈곤에 각 차원이 미치는 영향을 분해했을 때 장애인의 경우 건강 박탈이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장애인은 자산과 사회보장 박탈의 기여가 컸다. 인구 하위 집단별로 분해했을 때, 장애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65세 이상일 때, 배우자가 없을 때, 거주지역이 농어촌일 때, 1인 가구일 때, 가구주의 성이 여성일 때, 연령이 60대 이상일 때,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일 때 조정 다차원 빈곤율이 높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인구 하위 집단에 따른 다차원 빈곤 기여도에 편차가 큰 편이다.

다차원 빈곤을 지속과 이행 관점에서도 분석하였다. 우선 다차원 빈곤의 지속을 보면 2011~2018년의 8년 동안 비장애인은 평균 1.83년, 장애인은 평균 4.66년의 다차원 빈곤 경험이 나타나며, 8년 중 다차원 빈곤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장애인은 49.69%, 장애인은 15.81%에 불과하다. 직전 3개년 연속 다차원 빈곤으로 정의한 장기 다차원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장애인 42.90%, 비장애인 11.56%로 나타나 격차가 크다. 고령층의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근로연령층에 비해 높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오히려 근로연령층이 더 큰데, 이는 고령 비장애인과 또한 장기 다차원 빈곤율이 높기 때문이다.

다차원 빈곤의 이행에서는 빈곤 진입(비빈곤 → 빈곤)의 비율과 빈곤 탈출(빈곤 → 비빈곤) 비율 모두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빈곤 진입 비율을 직전 연도에 비빈곤인 경우로 한정하면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진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고, 빈곤 탈출 비율을 직전 연도에 빈곤인 경우로 한정하면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 탈출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 진입한 경우 높은 박탈 진입률을 보인 차원은 건강, 노동, 주거, 반대로 장애인이 다차원 빈곤에서 탈출한 경우 가장 높은 박탈 탈출률을 보이는 차원도 건강, 노동, 주거로 나타나 세 차원의 연동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조정 다차원 빈곤율의 격차는 21~23%포인트로 매우 큰데, 격차 분해 결과 특성 효과와 계수 효과의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성 효과에서는 개인의 연령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보이며, 두 가지 특성이 특성 효과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또한 개인 및 가구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격차 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구조적 효과 등으로 발생하는 설명되지 않는 격차(계수 효과) 또한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제2절 정책 제언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책 제안은 소득, 노동, 주거, 건강 네 영역에서의 개별적 대응과 여러 영역의 복합적 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정책 영역별 사회정책의 대응

첫째, 소득 영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그것을 공적 이전소득이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소득 재분배 기제가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때 어떠한 소득보장 급여가 어떠한 집단의 소득 격차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로연령층의 경우 장애인을 표적화한 장애급여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일반 공공부조 급여가 소득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소득보장의 마지막 수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장애급여의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수준과 좁은 급여대상 범위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장애급여의 보장수준에서는 큰 개선이 있었던 만큼 급여대상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급여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장애급여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여 장애인을 유리하게 채우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연구의 분석 결과와 같이 극빈층의 경우 장애인의 소득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급여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에서 공제하지만 소득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소득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는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 소득보장의 수준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과 같다(오욱찬, 이재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소득 안전망으로 다른 모든 공적 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빈곤한 자에 대해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러한 소득감소 보전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현 상황에서 극빈 장애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치일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공적연금을 비롯한 노령급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점이 주목된다. 공적연금이 성숙하면서 노인의 소득 수준은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은 노후소득보장 급여를 확보하지 못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장애인연금과 같은 조세 방식의 장애 소득보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공적연금의 장애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선택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대폭적인 구조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세 방식의 장애 소득보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둘째, 노동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노동 격차

의 상당 부분이 장애차별로 인한 것이고, 장애차별의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지만 실제 그 효과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오욱찬, 2015).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차별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은 현행 법 체계가 장애차별의 범위를 협소하게 보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조치가 미흡한 탓이 크다. 장애차별 중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직접차별 외에, 입증은 어렵지만 파급효과는 큰 간접차별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미이행과 같은 차별은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나 사법부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오욱찬, 김성희, 서정희, 심재진, 오다은, 2018).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기본 권리인 만큼, 국제기구가 제시하고 있는 차별금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장애차별이 더 심각함을 보여주었으나,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장애차별도 심각하고 최근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금, 승진 등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장애차별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장애차별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입증하기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장애차별 또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인데, 차별금지 외에도 장애인의 고용 진입 단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성도 높다. 장애인 고용정책이 일자리의 양적인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셋째, 주거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는 아파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택 공급의 영향과 주거복지정책의 영

향이 혼재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 6%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어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의 경우 근로연령대 장애인과 고령 장애인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고령 장애인이 약 10%에 달하여 근로연령대 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관점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그런데 고령 장애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비 자체의 과중 때문이기도 하지만 낮은 소득 때문이기도 하다. 주거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2015년에 그 대상도 확대되었다. 반면 고령 장애인의 소득 수준은 비장애인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의 주거비 과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 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거비 지원 기준이나 최저주거기준에서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인 격차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는 편의시설의 설치나 이동의 편의성, 그리고 활동지원사와 같은 돌봄 제공자의 존재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최소 기준이 더 높을 수 있다. 또한 필수 설비나 구조·성능·환경에서의 최소 조건은 장애인의 신체기능이나 건강 수준을 고려하면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이를 고려하면 장애인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주거비 지원이나 주거환경 개선의 기준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장애인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넷째, 건강 영역에서는 장애인이 보유하는 손상의 존재로 인해 기본적으로 건강 수준이 낮다고 해도 건강 유지를 위한 자원이나 접근성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우선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에

서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 제한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 경감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개별화된 이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여러 지표에 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 분해에서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의 강화가 장애인의 건강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직접적인 소득 보장 외에도 건강관리 지원과 같이 건강 관련 자원의 부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의료접근성 강화는 물론 장애인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2. 다중격차에 대한 사회정책의 대응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여러 차원에서 다중적 박탈 경험을 가진 장애인의 비중과 그러한 다중적 박탈을 장기간 경험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으며 그 격차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다차원 빈곤에 대한 이러한 분석에서는 격차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각 차원들이 서로 연관된 고리를 발견하고 그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중격차에 대한 크게 세 가지의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차원별 박탈의 연계 구조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장애인의 다차원 빈곤에서 건강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차원 빈곤 진입과 탈출에서 건강-노동-주거의 결합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차원에서 박탈 경험의 선후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박탈 경험을 고려

할 수 있다. 우선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실업 등 노동에서의 박탈이 발생하고 소득 감소로 인해 주거비 과부담과 같은 주거에서의 박탈이 이어지는 경우이다. 또한 실업과 같은 노동 박탈이 소득 감소로 이어져 의료비와 주거비의 과부담을 연쇄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와 고용 유지 정책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건강 박탈이 발생한 경우 노동과 주거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노동 박탈이 발생한 경우 재취업 지원을 통해 그 유지 기간을 최소화하고 의료와 주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상병으로 인한 장기간 유급휴가 지원이나 상병급여의 도입, 실업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재취업 지원의 강화, 장애인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강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여러 차원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집행 구조에서의 개편이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동일 부처 내에서도 정책 영역별로 담당 부서가 다른데, 부처 및 부서 사이의 칸막이와 분절적 사업 수행은 이러한 복합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단적인 예로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 제시된 70개의 세부 추진과제 중 두 개 부처가 공동 관리하는 추진과제는 3개, 두 개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추진과제는 8개에 그친다(관계부처합동, 2018). 이마저도 세부 내용을 보면 해당 세부 추진과제에서 양 부처나 양 부서의 사업 내용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공동 집행하는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일례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추진과제의 담당은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과(건강보험정책국)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애인정책국)

인데(관계부처합동, 2018, p. 59), 이는 추진과제의 내용이 양 부서가 각각 담당하는 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 확대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의 확대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수립하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의 한 개 부서에서 타 부서나 타 부처의 사업계획을 취합한 후 내용에서 일정한 조율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의 한 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한 이러한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러 부처를 동시에 관할하고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 예를 들면 국무조정실이나 사회보장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종합계획의 수립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때 영역별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시행의 책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고, 종합계획의 심의, 감독, 평가의 권한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둔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한다.

셋째, 앞서 제시한 장애인 정책의 기획·집행의 구조 개편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대응이라면,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다중적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대한 일선 공공 전달체계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일선 전달체계 역시 정책 영역별로 분절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각 정책 영역별로 전달체계가 별도로 구성된 것은 물론이고 동일 정책 영역 내에서도 사업에 따라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용 영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영과 일반 고용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직업재활 서비스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담당하며, 그 중에서도 직업재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법인에 위탁하고 있다. 보조기기의 경우에도 8개의 세부 사업이 있고 4개 부처에서 각기 다른 기관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지원센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식으로 하위 인구 집단에 따라 전달체계가 구분되기도 한다.

그런데 장애인 정책의 일선 창구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부족하더라도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최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추진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책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욕구가 부상할 때마다 해당 욕구에 대응하는 장애인만의 별도 전달체계를 신설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일선의 공공 전달체계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전달체계를 신설하기보다는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 전달체계 내에서 장애인 또한 중심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전략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 이때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통합사례관리사 등 장애인의 특수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개별 정책 영역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그러한 격차를 수준과 변화, 그리고 원인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응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다중격차의 작동 구조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기존 다차원적 빈곤의 담론을 넘어서 차원 간 박탈의 연계 구조와 작동 방식을 밝히는 것이 다중격차의 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다중격차 담론에 입각한 새로운 분석 방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다차원 빈곤에 이행과 지속, 그리고 다차원 빈곤과 차원별 이행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차원 간 관계의 작동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장애인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연령대에 따른 분석을 추가하였지만, 장애 정도나 유형과 같은 장애 특성에 따른 장애인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는 못했다. 물론 이는 분석 자료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지만, 향후에는 장애 특성에 따른 다중격차, 혹은 다차원 빈곤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이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박탈과 그 격차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물론 한국복지패널은 현재로서는 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하지만 일부 시점에서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의 특성이 급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 모집단의 추세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했다.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석하였지만,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 채택한 지표 측정 방식에 따라 타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 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의 측정 방법을 채택하려 노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해당 지표의 구체적인 측정 방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21-144.
- 강병구, 강신욱, 윤명수. (2008).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석. 경제발전연구, 14(1), 95-119.
- 고용노동부. (2020. 4. 20.). 장애인 고용 30년, 장애인 고용률 2.92% 달성.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 에서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351-37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04). 최저주거기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173호. [http://www.law.go.kr/행정규칙/최저주거기준/\(2004-173,20040615\)](http://www.law.go.kr/행정규칙/최저주거기준/(2004-173,20040615)) 에서 2020. 6. 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http://www.law.go.kr/행정규칙/최저주거기준/\(2011-490,20110527\)](http://www.law.go.kr/행정규칙/최저주거기준/(2011-490,20110527)) 에서 2020. 6. 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a). 주거기본법, 법률 제16391호. <http://www.law.go.kr/법령/주거기본법> 에서 2020. 6. 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b). 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32호. <http://www.law.go.kr/법령/주거기본법시행령> 에서 2020. 6. 3.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91호.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 에서 2020. 6. 3.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한국의료패널 4~11차 원자료. 권연화, 최열. (2018). 1인가구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거상하향 이동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99, 97-112.

- 김경미, 김동기, 유동철, 신유리. (2013).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 연구. *직업재활연구*, 23(1), 47-64.
- 김경혜, 김준현, 박은철. (2010). 다차원적 빈곤 관점에서의 서울시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동기, 이웅.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7, 129-147.
- 김동배, 유병선, 신수민. (2012).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4), 1041-1061.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정, 감신, 이원기. (2017). 가구의 가계소득분위에 따른 의료비지출 분포의 불평등 실태와 과부담 의료비 관련요인. *보건정보통계학회지*, 42(3), 232-240.
- 김성희, 이연희, 오옥찬, 황주희, 오미애, 이민경, ... 이선우. (2017a).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희, 황주희, 김용진, 노승현, 이동석, 정희경, ... 이민경 (2017b). 장애인의 건강한 삶 정착을 위한 건강권 증진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진. (2019).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추이와 함의. *보건복지포럼*, 268, 74-85.
- 김순미. (2018). 노인가구의 소득빈곤과 다차원빈곤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6(2), 175-193. doi: 10.6115/fer.2018.014
- 김승연, 김세림, 이진석. (2013). 주거환경이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34, 109-133.
- 김연수, 김혜윤. (2018). 개인의 성별이 재난적 의료비 지출 여부에 미치는 영향: 세부집단분석을 통한 젠더적 접근. *보건행정학회지*, 28(4), 369-377.
- 김예지. (2020. 7. 2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임금 현황. 김예지 의원실 보도자료.

- 김용창, 최은영. (2013).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48(4), 509-532.
- 김유진, 김경미, 유동철. (2017).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의료이용 및 질병특성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696-706.
- 김지영, 강민욱, 서옥영, 이지원. (2020). 장애인의 만성질환, 건강행태 및 사망 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분석. *보건사회연구*, 40(2), 121-150. doi: 10.15709/hswr.2020.40.2.121
- 김진희, 이상록. (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 김창엽. (2009). 건강보장의 이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 김태완. (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 164, 20-29.
- 김현중, 강동우, 이성우. (2010).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한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수준 변화와 지역간 격차, 1995~2005. *농촌계획*, 16(1), 49-62.
- 김혜승, 김태환. (2008a). 최저주거기준과 최저주거비부담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소요추정. *국토연구*, 59, 223-245.
- 김혜승, 김태환. (2008b).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 *국토*, 320, 96-107.
- 김호진, 박혜원, 임예직, 조경민, 전영환, 김언아. (201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김환준. (2013). 우리나라 빈곤가구의 빈곤지속기간에 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5(3), 183-206.
- 남수정, 황혜선. (2017). 여성 가구주 가계의 다차원 빈곤: 남성 가구주 가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8(1), 59-75.
- 남찬섭. (2009). 장애인 교육수준의 실태와 그 배경: 장애발생연령을 중심으로 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53-180.
- 노승철, 이희연. (2009).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507-520.

- 문정화, 강민아. (2016).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와 영향요인: 취약계층 행동모델 적용. 보건사회연구, 36(2), 480-510.
- 박신영. (2012). 우리나라의 주거빈곤 실태. 보건복지포럼, 184, 33-46.
- 박정민, 오욱찬, 이진민. (2015).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빈곤가구의 주거취약 유형화와 관련요인. 사회복지연구, 46(2), 101-123.
- 박정민, 허용창, 오욱찬, 윤수경. (2015).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7(2), 137-159.
- 박진영, 정기택, 김용민. (2014). 중·고령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연구. 보건행정학회지, 24(1), 56-70.
- 박혜원, 김원호. (2019). 중·고령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 및 빈곤결정요인 분석: 비장애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3), 119-143.
- 방하남, 이영면, 김기현, 김한준, 이상호. (2007). 고용의 질: 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배병우, 남진. (2013). 서울시 거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능력 분석. 서울도시연구, 14(1), 23-38.
- 배연희, 김한나. (2015). 한국 노인의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2년~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대한통합의학회지, 3(4), 79-90.
- 배화옥, 김유경. (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55-76.
- 백승주, 금현섭. (2013). 불평등의 다차원적 접근: 측정 및 활용. 한국정책학회보, 22(2), 283-312.
- 보건복지부. (2017. 8. 18.).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 격차 해소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 에서 인출.
- 서병수, 권종희. (2013). 한국 다차원 빈곤의 종단분석: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실현능력접근. 사회보장연구, 29(3), 195-224.
- 손민성, 김한결, 이현실, 최만규. (2018). 복합만성질환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및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전환점(cut-off point) 예측. 보건

- 경제와 정책연구, 24(3), 49-75.
- 신진욱, 정세은, 장지연. (2016). 다중격차의 사회적 균열 구조와 사회정책적 대응. 동향과 전망, 97, 81-110.
- 신한얼, 고재인, 심은혜, 김홍수. (2019). 한국 노인 미충족 의료 관련 요인의 체계적 고찰.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5(1), 29-52.
- 어수봉. (1996).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 노동경제논집, 19(1), 69-100.
- 오욱찬. (2011).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 격차 분석. 사회보장연구, 27(1), 1-25.
- 오욱찬. (20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방법과 정책적 의미. 장애와 고용, 23(4), 5-28.
- 오욱찬. (20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고용효과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27, 47-72.
- 오욱찬, 김성희, 서정희, 심재진, 오다은. (2018).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욱찬, 이재은. (2016).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국민연금연구원 편, 단기연구과제1. 전주: 국민연금연구원.
- 오지현, 여유진. (2009). 한국복지패널로 본 주거복지 지표. 보건복지포럼, 158, 30-38.
-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 영향 분석: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동철. (2016). 장애인의 나이들어감에 따른 건강의 변화와 정책방향: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3(1), 23-46.
- 유동철, 홍현정, 김경미, 김동기, 신유리. (2013).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2, 183-206.
- 유동철, 김동기, 김경미. (2016).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51, 73-93.
- 유완식. (2007). 장애인의 소득분배구조와 근로연계 소득지원방안 연구. 장애와

- 고용, 17(2), 107-136.
- 유창민. (2016). 한국복지패널로 본 한국 성인의 건강궤적과 예측요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집단 내, 집단 간 불평등 정도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1), 440-472.
- 유창민. (20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 불행평 정도: 2006년부터 10년간의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150-183.
- 윤병준. (2016). 사회경제적 계층별 주관적 건강수준의 차이.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1(1), 35-42. doi: 10.21032/jhis.2016.41.1.35
- 윤상용, 김태완. (2009). 장애인가구의 빈곤 실태 및 장애 추가비용의 빈곤 영향력. 재활복지, 13(1), 61-83.
- 이다은, 서원석. (2019a).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요인 분석. 주거환경, 17(4), 75-89.
- 이다은, 서원석. (2019b).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한 최저주거기준미달 지속기간 영향요인 분석. 국토연구, 100, 45-60.
- 이동영. (2017). 장애인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프로그램의 빈곤감소효과에 대한 연구: FGT지수를 활용한 요인분해분석의 적용. 한국장애인복지학, 37, 87-120.
- 이선우. (2009).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따른 빈곤율 비교: 삶의 수준 접근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40(4), 431-452.
- 이선우. (2010).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수준 비교: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부담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2), 1-21.
- 이성재. (2007).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요인의 특성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12), 269-276.
- 이순미. (2018).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52(4), 243-293.
- 이유진, 신정우. (2018). 재난적 의료비 신규 발생 가구의 결정요인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4(4), 25-45.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한나. (2012).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연구: 집중지수 분석을 이용한 비장애인과의 비교.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한나, 박단비. (2012).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 박탈경험, 고립감 및 생활만족도 연구: 서울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 재활복지, 16(1), 1-23.
- 이현주, 정은희, 이병희, 주영선. (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재, 허순임. (2017). 노인의 미충족 의료 경험의 결정요인: 가구 유형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2), 85-108.
- 이희영, 정효선, 한진옥, 김자영, 박현춘, 서수인, ... 이푸름. (2019). 경기도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개발 연구: 도내 장애인의 필수의료 접근성 분석. 성남: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 임세희. (2014).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 및 특성의 변화(2005-2011). 사회보장연구, 30(3), 215-244.
- 임세희. (2015).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 결정요인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2(4), 43-73.
- 임세희. (2016). 주거비 과부담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8(3), 29-50.
- 임세희. (2018).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 차이. 한국사회정책, 25(3), 75-101.
- 임세희. (2019). 주거빈곤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71(4), 7-30.
- 임세희, 박경하. (2017).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한국사회정책, 24(4), 31-62.
- 임세희, 이봉주. (2009). 최저기준 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연구, 40(3), 243-265.
- 임재현. (2011). 주거빈곤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1), 279-304.
- 임형백, 민성희, 이성우. (2009). 최저주거기준으로 측정한 출신지별 주거수준의 차이, 1980-2000.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 55-78.
- 전상인. (2008). 도시화와 아파트 주거문화.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47-74.
- 정은희, 최유석. (2014). 아동거주가구의 빈곤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잠재집단 분석을 이용한 유형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129-139.
- 정준호, 전병유. (2016). 다중격차지수와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 동향과 전망, 97, 45-80.
- 정해식, 김수완, 안상훈. (2014). 다차원적 불평등의 세대간 특성: 현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63, 337-369.
- 조윤화. (2014).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25, 5-32.
- 조혜진, 김민정. (2014). 한국 중고령 가계의 주거부담 결정요인. 소비자정책교육 연구, 10(2), 19-37.
- 주재홍, 김휘준, 장지은, 박은철, 장성인. (2020). 2018 미충족의료율과 추이. 보건행정학회지, 30(1), 120-125.
- 진미윤. (1998). 도시 근로자가구의 주거비 지불능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6(2), 33-60.
- 최균, 서병수, 권종희. (2011). 차원계수방식에 의한 다차원적 빈곤 측정. 한국사회복지학, 63(1), 85-111.
- 최민혁, 김아름, 윤태호. (2018a).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불평등과 영향요인: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4), 2105-2119.
- 최민혁, 황인경, 윤태호. (2018b).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에 미치는 영향

- 요인: 주관적 건강수준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 1021-1035.
- 최열, 권연화. (2014). 노년층의 Social Network에 따른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결합선택 분석. *국토계획*, 49(5), 137-150.
- 최옥금. (2006).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2), 227-252.
- 최은영, 김용창, 권순필. (2012). 2011년 신기준에 의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시·공간적 변화(1995~2010년). *부동산학연구*, 18(4), 171-195.
- 통계청. (2020a). 소득분배지표 이해하기: 작성방법과 각 지표의 용어를 중심으로. <http://meta.narastat.kr> 에서 2020. 6. 9. 인출.
- 통계청. (2020b).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08). 건강 형평성 측정방법론. 파주: 한울아카데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복지패널 7~14차 원자료(beta2). <https://www.koweps.re.kr>에서 2020. 5. 7. 인출.
-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장애인일자리 사업개요. https://www.koddi.or.kr/service/work_intro.jsp 에서 2020. 9. 30. 인출
- 호승희, 김예순, 양정희, 은선덕, 박재민, 송이슬, ... 이은주 (2018). 2018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서울: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홍백의, 김혜연. (2007).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 및 원인. *한국사회복지학*, 59(3), 125-146.
- 황규성. (2016). 다중격차: 다차원적 불평등에 관한 개념적 시론. *동향과 전망*, 97, 9-44.
- 황수경. (2003).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노동정책연구*, 3(1), 141-169.
- Aday, L. A., & Anderson, R. (1974). A framework for the study of access to medical care. *Health Services Research*, 9(3), 208-220.
- Alkire, S. (2008). Choosing dimensions: The capability approach and

- multidimensional poverty. In Kakwani, N., & Silber, J. (Eds.), *The many dimensions of pover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89-119.
- Alkire, S., & Foster, J. (2011). Counting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7-8), 476-487. doi: 10.1016/j.jpubeco.2010.11.006
- Alkire, S., & Santos, M. E. (2013). Multidimensional approach: Poverty measurement & beyo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2(2), 239-257. doi: 10.1007/s11205-013-0257-3
- Alkire, S. & Apablaza, M. (2016).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urope 2006-2012: Illustrating a methodology. Oxford Poverty &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PHI) Working Paper 74, University of Oxford.
- Allin, S., Grignon, M., & Le Grand, J. (2010). Subjective unmet need and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in Canada: What are the equity implic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70(3), 465-472. doi: 10.1016/j.socscimed.2009.10.027
- Araar, A. (2009). The hybrid multidimensional index of inequality. CIRPÉE Working Paper 09-45, Interuniversity Centre on Risk, Economic Policies, and Employment.
- Baldwin, M. L., & Johnson, W. G. (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1), 1-19. doi: 10.2307/146053
- Baldwin, M. L., & Johnson, W. G. (1995).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Industrial Relations*, 34(4), 555-577. doi: 10.1111/j.1468-232X.1995.tb00388.x
- Blinder, A. S. (1973). Wage discrimination: Reduced form and structural estimat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8(4), 436

- 455. doi: 10.2307/144855
- Braveman, P. (2014) What are health disparities and health equity?: We need to be clear. *Public Health Reports*, 129(Suppl 2), 5-8. doi: 10.1177/00333549141291S203
- Chaplin, R., & Freeman, A. (1999). Towards an accurate description of affordability. *Urban Studies*, 36(11), 1949-1957. doi: 10.1080/0042098992692
- Cotton, J. (1988).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2), 236-243. doi: 10.2307/1928307
- Dhongde, S. (2017). Assessing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among the elderly in the USA. In White, R. (Ed.), *Measur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deprivation: Incidence and determinants in developed countrie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55-270.
- Dhongde, S., & Haveman, R. (2017). Multi-dimensional deprivation in the 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3(2), 477-500. doi: 10.1007/s11205-016-1379-1
- Emerson, E., Madden, R., Robertson, L., Graham, H., Hatton, C., & Llewellyn, G. (2009). Intellectual and physical disability, social mobility, social inclusion & health: Background paper for the Marmot review Centre for Disability Research, Lancaster: Lancaster University. http://eprints.lancs.ac.uk/26403/1/Disability_Social_Mobility_Social_Inclusion.pdf 에서 2020. 10. 5. 인출
- Emerson, E., Madden, R., Graham, H., Llewellyn, G., Hatton, C., & Robertson, H. (2011). The health of disabled people and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ublic Health*, 125(3), 145-147.

doi: 10.1016/j.puhe.2010.11.003

- Fairlie, R. W. (2005). An extension of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o logit and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0(4), 305-316. doi: 10.3233/JEM-2005-0259
- Fortin, N., Lemieux, T., & Firpo, S. (2010). Decomposition methods in economics. NBER Working Paper 1604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Gardeazabal, J., & Ugidos, A. (2004). More on identification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4), 1034-1036. doi: 10.1162/0034653043125239
- Gordon, D. (2006).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overty. In Pantazis, C., Gordon, D., & Levitas, R. (Eds.),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Britain: The millennium survey*, Bristol: The Policy Press, 29-70.
- Hallock, K. F., Jin, X., & Barrington, L. (2014). Estimating pay gaps for workers with disabilities: Implications from broadening definitions and data sets. ILR School, Cornell University. <http://digitalcommons.ilr.cornell.edu/articles/1167> 에서 2020. 9. 30. 인출.
- Healthy People 2020. (2020). Disparities. <https://www.healthypeople.gov/2020/about/foundation-health-measures/Disparities> 에서 2020. 5. 15. 인출.
- Hulchanski, J. D. (1995). The concept of housing affordability: Six contemporary uses of the housing expenditure-to-income ratio. *Housing Studies*, 10(4), 471-491. doi: 10.1080/02673039508720833
- Jann, B. (2008). Th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for linear regression models. *The Stata Journal*, 8(4), 453-479. doi: 10.1177/1536867X0800800401
- Jenkins, S. P., & Rigg, J. A. (2004). Disability and disadvantage:

- Selection, onset and duration effects. *Journal of Social Policy*, 33(3), 479-501. doi: 10.1017/S0047279404007780
- Jewkes, M. D., & Delgadillo, L. M. (2010). Weaknesses of housing affordability indices used by practitioner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1), 43-52.
- Jones, M. (2016). Disability and labor market outcomes. IZA World of Labor 253,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doi: 10.15185/izawol.253
- Jung, H. S., Kim, S. W., & Ahn, S. H. (2014). Multidimensional inequality in South Korea: An empirical analysi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8(2), 170-191. doi: 10.1111/aswp.12034
- Kidd, M. P., Sloane, P. J., & Ferko, I. (2000). Disability and the labor market: An analysis of British mal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9(6), 961-981. doi: 10.1016/S0167-6296(00)00043-6
- Kim, K. M., Kim, D. K., & Yoo, D. C. (2016). Social ex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2), 761-773. doi: 10.1007/s11205-015-1123-2
- Koohi-Kamali, F., & Liu, R. (2017). US multidimensional poverty by race, ethnicity and motherhood: Evidence from Pennsylvania census data. In White, R. (Ed.), *Measur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deprivation: Incidence and determinants in developed countrie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23-254.
- Mitra, S., Posarac, A., & Vick, B. (2013). Disability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 multidimensional study. *World Development*, 41, 1-18. doi: 10.1016/j.worlddev.2012.05.024
- Mitra, S., & Brucker, D. (2019). Monitoring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Economics Bulletin*, 39(2), 1272-1293.

- Neumark, D. (1988). Employers'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e estimation of wage discrimin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3(3), 279-295. doi: 10.2307/145830
- Oaxaca, R. L. (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709. doi: 10.2307/2525981
- Oaxaca, R. L., & Ransom, M. R. (1994).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61(1), 5-21. doi: 10.1016/0304-4076(94)90074-4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 Gross earnings: Decile ratios: Incidence of low pay.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oi: 10.1787/lfs-data-en
- Parish, S. L., Saville, A. W., & Taylor, S. J. (2006). Women with cognitive limitations living in the community: Evidence of disability-based disparities in health care. *Mental Retardation*, 44(4), 249-259. doi: 10.1352/0047-6765(2006)44[249:WWCLLI]2.0.CO;2
- Reimers, C. W. (1983).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Hispanic and black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4), 570-579. doi: 10.2307/1935925
- Schur, L., Han, K., Kim, A., Ameri, M., Blanck, P., & Kruse, D. (2017). Disability at work: A look back and forward. *Journal of Occupational Rehabilitation*, 27(3), 482-497. doi: 10.1007/s10926-017-9739-5
- Sen, A. (1980). Equality of what? In McMurrin, S. M. (ed.), *The 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220.

-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Amsterdam: North-Holland.
- Solar, O., & Irwin, A. (2010). A conceptual framework for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Discussion Paper 2 (Policy and Practi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Document Production Services.
- Suppa, N. (2015). Towards a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for Germany. Oxford Poverty & Human Development Initiative (OPHI) Working Paper 98, University of Oxfor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CESCR]. (1976).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ESCR.aspx> 에서 2020. 4. 30. 인출.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CESCR]. (1991). General comment No. 4: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art. 11 (1) of the Covenant). https://tbinet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INT%2fCESCR%2fGEC%2f4759&Lang=en 에서 2020. 4. 30. 인출.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 (200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ohchr.org/EN/HRBodies/CRPD/Pages/ConventionRightsPersonsWithDisabilities.aspx> 에서 2020. 4. 30. 인출.
- Wagstaff, A., Flores, G., Smitz, M. F., Hsu, J., Chepynoga, K., & Eozenou, P. (2018). Progress on impoverishing health spending in 122 countrie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The Lancet: Global Health*, 4(2), E180-E192. doi: 10.1016/S2214-

109X(17)30486-2

- Whelan, C. T., Nolan, B., & Maître, B. (2014).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in Europe: An application of the adjusted headcount approach.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4(2), 183-197. doi: 10.1177/0958928713517914
- White, R., & Yamasaki, S. (2017).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the native- and foreign-born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2010-2014 American Community Surveys. In White, R. (Ed.), *Measuring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deprivation: Incidence and determinants in developed countries*, Cham,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183-222.
- Whitehead, M. (1992). The concepts and principles of equity and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2(3), 429-445. doi: 10.2190/986L-LHQ6-2VTE-YRRN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governance/eb/who_constitution_en.pdf 에서 2020. 12. 24. 인출.
- Xu, K., Evans, D. B., Kawabata, K., Zeramdini, R., Klavus, J., & Murray, C. J. (2003).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The Lancet*, 362(9378), 111-117. doi: 10.1016/S0140-6736(03)13861-5
- Yun, M. S. (2004). Decomposing differences in the first moment. *Economic Letters*, 82(2), 275-280. doi: 10.1016/j.econlet.2003.09.008
- Yun, M. S. (2005). A simple solution to the identification problem in detailed wage decompositions. *Economic Inquiry*, 43(4), 766-772. doi: 10.1093/ei/cbi053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제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국제사회보장리뷰」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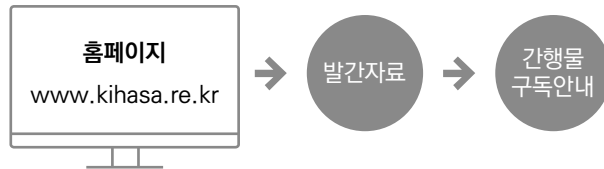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02-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02-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